2021
비판사회학회 대학원생 워크숍 자료집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14:30-17:20

장소: Zoom 회의실

<목 차>

1-1. 청년

김경민(중앙대)	열악한 주거권과 주거환경에 따른 청년의 정신건강	2
최고훈(중앙대)	청년 여성의 독립과 자원으로서 주거복지정책: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중심으로	9
임재연 서울대)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 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29
이상희(연세대)	캐주얼 섹스 '게임'에서의 규칙과 능숙한 플레이어 되기: 데이팅 앱 '틴더'로 이성애 섹스를 하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50

1-2. 담론, 공간, 연결

유윤열(성공회대)	한국 시민운동의 포스트 담론 경향 비판: 탈(脫) 사례를 중심으로	73
임정빈(경상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	85
김종훈(서울대)	서울시 PC방의 공간분포 분석과 유형화	112
김태현(서울대)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 국내 학부 성악 전공자 대상 파일럿 인터뷰를 중심으로	145

2-1. 여성, 소수자

류다현(이화여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생존과 이탈 경향 및 요인 분석: 생존분석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159
신민주(전북대)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혼합연구: 전라북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182
김지혜(전북대)	트위터의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이분화된 인종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열돔 현상을 식힐 수 있었을까?	209
박재승(중앙대)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주변화 현상: 독립 영화감독의 경험을 중심으로	227

2-2. 노동, 개발

이다은(이화여대)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소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241
신양희(만하임대)	Do firms make us poor? Effects of corporate behaviors on labor insecurity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e U.K, Germany, Sweden, and Italy	258
이시림(연세대)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자본주의	270
김명지(제주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개발주의 비판적 검토	279

세션 1-1. 청년

사회: 김명수 (서울대)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김경민 (중앙대)	열악한 주거권과 주거환경에 따른 청년의 정신건강	김명수 (서울대)
최고훈 (중앙대)	청년 여성의 독립과 자원으로서 주거복지정책: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중심으로	조은주 (명지대)
임재연 (서울대)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 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영미 (연세대)
이상희 (연세대)	캐주얼 섹스 '게임'에서의 규칙과 능숙한 플레이어 되기: 데이팅 앱 '틴더'로 이성애 섹스를 하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지현 (서울대)

열악한 주거권과 주거환경에 따른 청년의 정신건강

중앙대 사회학과 석사수료 김경민

서론 및 문제제기

2016년 3월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이하인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사업자에게 층수제한을 풀고, 용적률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형성하겠다는 의도였다[2]. 그러나 이렇게 개발 이익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개발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한된 평수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집어넣기 위해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으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2019년 9월 1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청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16~35㎡(5~11평)이고 1인 가구는 40㎡이상의 주택평형에는 애초에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머무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의견과 몇 천 단위 보증금임에도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3]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전에 고시원에 머무는 걸 생각하면 감지덕지”라거나 “평생 눌러 살 생각이냐”, “돈 벌어서 큰 곳으로 이사 가면 된다”[4]는, 주거권에 대해 매우 협소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주거권은 201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거기본법으로 명시되었으나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취약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인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규제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거세입자의 주거권이 매우 불안정하다. 또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최저주거기준 외에 살만한 집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한국도시연구소 2018;에서 재인용). 주거권(housing right)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주거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 주거기반시

1) 오마이뉴스, 2016. 04. 23,「박원순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위험한 이유」, 검색일: 2021. 8.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592

2) 매일경제, 2019. 07. 12,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3년간 입주 ‘0’」, 검색일: 2021. 08. 1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7/511615/?openLinerExtension=true

3) 실제로 2020년을 기준으로 구의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46만 원,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614만 원에 월세가 46만 원,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의 신혼부부용은 8446만 원에 월 65만 원의 임대료가 들었다.

4) 한겨레, 2019. 09. 25, 「젊으니까 좁은 데 살아도 괜찮다고?」, 검색일: 2021. 08. 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375.html & SNS 트위터 검색: 청년 역세권 until:2019-10-30, 검색일: 2021. 08. 16

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주거비)지불가능성, 거주적합성(최저주거수준의 확보), 접근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을 포함하고 있는데(하성규 1999), 한국에서 이러한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서 주거를 기본권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부의 축적의 결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송제숙 2016, 김도균 2018, 김명수 2019). 또한 청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이행기', '미래 결혼 이행기'로 보는 시각(홍혜은 2020)은 주거취약계층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되며, 청년이 겪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도 청년주택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은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가는 사다리의 개념이지 평생 사는 주택이 아니다.[5)]"라고 언급하면서 청년에게 놓여 있는 주거권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주거환경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측정되지만 개인이 살아가는 구조적·역사적 맥락에 따른 집합적 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된다(김중백 2013;에서 재인용). 또한 정신건강 중 우울은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나타내며(Mirowsky and Ross 2003), 이러한 불평등을 드러냄으로써 불평등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소음과 채광, 환경오염 등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 주거안전과 침입문제, 집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좋은 이웃관계, 경계존중, 주택유형과 거주층과 같은 주거의 질, 주거안정성, 실내주거환경의 지속적인 적설성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Evans et al. 2000, Evans 2003, Bonnefoy 2007, 최병숙, 박정아 2012, 정은희·임은정·채철균 2017, 김영주·곽인경, 2020). 또한 이러한 주거환경이 가구 경제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음(Evans et al. 2000, 최병숙 외 2012, 성준모 2013,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2015)을 볼 때, 주거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기반과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분석대상 그 가구의 경제지위 및 가구소득 등과 같이 소득 중심으로 불평등을 분석할 뿐, '자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 조명한 연구가 거의 없다. 현재의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분배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며,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이병훈 2017). 특히, 신광영(2016)은 한국의 중장년 세대(49~59세) 내의 기회불평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소득은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주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유비율이 높아졌는데,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가 매우 컸음을 볼 때 청년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우울을 분석할 때 자산역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청년에게 주거환경에 따른 정신건강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주거권은 사회경제적 기반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후, 특히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불평등은 이성애 정상가족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

5) 비즈한국, 2019. 08. 29,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기대와 우려」, 검색일: 2021. 08. 17,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8427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청년의 주거

청년 가구주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비오(2019)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8.9%였으며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는 경우는 24.7%, 주거 빈곤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주 가구는 33.1%였다. 또한 청년들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월세로의 전환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특히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가구는 비독립 청년이나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았다. 1인 청년 가구의 약 31%가 임대료로 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주거비 과부담 경험을 하고 있었다(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이들은 소득과 주거 안정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응답자의 20%는 중증 이상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거나 월세, 독거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높았다(김영주·곽인경 2020).

그러나 청년을 상대로 하는 민간 및 정부의 주거시설 공급 및 정책을 살펴보면, 전일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학사 등 임시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수사회시설이나 최저주거기준에 겨우 충족되는 원룸 공급 및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원형태는 청년 중에서 신혼부부가 대표 계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청년 가구의 특성을 따로 표집 하는 문제, 청년 특성을 밝은 미래의 이행 가능성과 앞으로 남은 긴 생산시기로 보는 시각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른 주거 문제와 분리해내려는 시도와 함께 주거권 사각 지대에 존재하는 청년의 존재를 지우게 된다(홍혜은 2020).

따라서 청년의 주거형태는 다양하며 사회적 독립 이행의 상태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취업준비나 직업훈련 등 생활 형식의 다변화로 생계와 주거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정세정, 김태완·김문길·정해식·김기태·주유선·강예은·최준영·송아영·김용환 2020에서 재인용).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여부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주거환경과 우울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및 지하거주지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정은희 외 2017).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 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인구의 1/4, 빈곤층에서는 1/3이었으며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에 부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실내 주거환경의 특성들은 개인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저소득가구의

부적절한 실내 주거환경 요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울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Kim, Yoo & Shin, 2012; Park, Heo, Oh, & Yoon, 2015; 정은희 외 2017에서 재인용). 또한 자가주택 비소유집단이 자가주택 소유집단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았고(Harris et al. 2003),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은 안정적 주거환경을 가진 사람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Gilman et al. 2003).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 물리적 주거환경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3. 가구소득과 우울 *보충필요

가구의 직접적인 소득 및 지출 관련 변수들은 우울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매우 많다. 가구소득(김광혁, 김예성 2008; 성준모, 2010a; Beard, Tracy, Valhov, & Galea, 2008; Proctor et al., 2008; Tracy, 2008), 가구 경제지위 조건(박현식 2008; 이현주, 강상경, 이준영 2008), 가구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박현식, 2008; 엄태완, 2008; 성준모, 2010b), 나이, 교육수준, 가족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족특성 요인(이현주 외, 2008; 성준모, 2010a/2010b; Ansseue et al., 2008; Miech & Shanahan, 2000; Koster et al., 2006; Tracy, 2008; Vishal & Dinesh, 2008) 등을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성준모 2013;에서 재인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을 패널 회귀 분석한 연구(성준모 2013)를 살펴보면, 가족수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가 우울의 지속에 영향이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위 획득이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변수인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꾸준한 증가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가구원이 지각하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가 우울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연구방법 및 가설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84년 11월 1일생~2000년 10월 31일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섬 지역, 특수사회시설의 경우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추출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8)를 기준으로 통계청 집계구 리스트를 활용하여 추출한 300개 집계구에서 평균 10가구를 조사하였고, 표본의 층화는 총 52개의 층이며, 행정구역(시도, 권역, 동부·읍면부)의 경우, 1차로 8개 특별·광역시, 9개 도 지역으로서의 층화를 거쳤고, 2차는 9개도 지역의 동부·읍면부로의 층화를 거쳤다. 특히 집계구 유형(아파트, 일반)의 경우, 시도별로 30가구를 우선할당 후 전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추정과 지역별 추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의 단위는 1차 추출단위로 각 층에서 집계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고, 2차 추출단위로 각 표본 집계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단위는 표본 가구 내 청년 1인이며, 가구 내 청년이 2인 이상인 경우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대상자가 되어 최종적으로 총 3,018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됨으로써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심각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문항 중 '② 비교적 잘 지냈다', '⑦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를 역코딩하였다. 또한 점수범위 1~4를 0~3으로 변경하여 점수를 합산하였고, 총점이 60점이 되도록 합산한 점수에 20/11을 곱하였다. 환산된 합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임상적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전겸구·이민규 1992). 척도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0.86으로 응답신뢰 정도가 높았다.

2) 독립변수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 간 비교

<표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증 위험군에 따른 검정결과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만원

구분		전체표본	우울증 위험군 여부		t/F검정
		전체	우울증 위험군	일반군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남	1,572(53.04)	326(20.74)	1,246(79.26)	
	여	1,446(46.96)	380(26.28)	1,066(73.72)	
나이	19~24세	1,135(37.38)	242(21.32)	893(78.68)	
	25~29세	988(32.14)	237(23.99)	751(76.01)	
	30~34세	895(30.49)	227(25.36)	668(74.64)	
지역	서울	641(21.36)	129(20.12)	512(79.88)	
	인천/경기	946(31.46)	240(25.37)	706(74.63)	
	비수도권	1,431(47.18)	337(23.55)	1,094(76.45)	
장애 여부	있음	44(1.57)	17(38.64)	27(61.36)	
	없음	2,974(98.43)	689(23.17)	2,285(76.83)	

학력	고졸이하	658(21.02)	190(28.88)	468(71.12)	
	대학 재학/휴학/수료	861(28.86)	170(19.74)	691(80.26)	
	대졸이상	1,499(50.12)	346(23.08)	1,153(76.92)	
취업 상태	취업자	1,874(60.95)	436(23.27)	1,438(76.73)	
	실업자	163(5.52)	54(33.13)	109(66.87)	
	비경제활동인구	981(33.53)	216(22.02)	765(77.98)	
청년 가구 형태	청년부부가구	402(13.32)	86(21.39)	316(78.61)	
	청년독립1인가구	547(18.12)	162(29.62)	385(70.38)	
	청년독립기타가구	118(3.91)	20(16.95)	98(83.05)	
	청년비독립가구	241(7.99)	70(29.05)	171(70.95)	
	청년부모동거가구	1,672(55.40)	351(20.99)	1,321(79.01)	
	기타	38(1.26)	17(44.74)	21(55.26)	
주거관련					
주택 유형	주택	1,139(37.74)	275(24.14)	864(75.86)	
	아파트	1,549(51.33)	334(21.56)	1,215(78.44)	
	오피스텔	119(3.94)	32(26.89)	87(73.11)	
	비거주 주거형태	108(3.58)	31(28.70)	77(71.30)	
	기숙사	103(3.41)	34(33.01)	69(66.9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576(52.22)	307(19.48)	1,269(80.52)	
	전세	583(19.32)	142(24.36)	441(75.64)	
	보증금 있는 월세	607(20.11)	175(28.83)	432(71.17)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	173(5.73)	60(34.68)	113(65.32)	
	무상	79(2.62)	22(27.85)	57(72.15)	
실평수		22.74(9.83)	21.50(9.53)	23.11(9.89)	
주거환경상태합계		18.75(4.20)	17.72(4.67)	19.06(4.00)	
경제상황					
총 생활비		18.75(4.20)	217.21(108.50)	250.15(116.10)	
월세(로그)		3.37(0.57)	3.30(0.60)	3.37(0.55)	
근로/사업소득		455.79(258.35)	397.15(230.05)	473.31(263.75)	
공적이전소득(로그)		3.39(0.71)	3.34(0.85)	3.40(0.67)	
사적이전소득(로그)		4.28(0.82)	4.23(0.91)	4.30(0.78)	
총소득		469.12(244.83)	414.05(214.40)	485.58(250.92)	
청년주택부채액(로그)		8.68(0.94)	8.44(1.16)	8.75(0.84)	
주관적 인식					
우리나라 신뢰도		5.09(1.73)	4.50(1.81)	5.26(1.67)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		6.48(1.72)	6.56(1.90)	6.46(1.67)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 합계		66.79(10.45)	61.73(11.82)	68.31(9.53)	
아노미 합계		23.04(3.87)	20.91(3.73)	23.68(3.68)	
어제 행복도		6.80(1.76)	5.71(1.98)	7.12(1.55)	
주관적 건강상태		4.28(0.68)	4.03(0.80)	4.35(0.63)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본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2) 취업상태의 분류의 경우, ①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함,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함, 직장은 있으나 일시휴직 중 ②실업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③비경제활동인구: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였음

3) 청년의 가구형태 분류의 경우, ①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 ②청년독립1인가구: 본인이 가구주임 ③청년독립기타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가 35세 이상 부부가구 등 ④청년비독립가구: 청년비독립 1인가구, 청년비독립 기타가구 ⑤청년부모동거가구: 부모동거 청년가구, 부모동거 청년 기타가구 ⑥기타: 기타가구(조손가구, 친인척 동거 등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가구)로 분류하였음

4) 주거주택유형의 경우, ①주택: 일반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②아파트 ③오피스텔 ④비거주 주거형태: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고시원, 쪽방, 기타 ⑤오피스텔로 분류하였음

5) 총 생활비=식비+주거비(월세+주거관리비)+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통신비+교통비+문화여가비

6) 총 소득비=근로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소득

청년 여성의 독립과 자원으로서 주거복지정책: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최고훈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이 주거 복지정책을 활용해 어떠한 주택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이 청년 여성에게 어떻게 자원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 단지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화성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서울경제」, 2020.12.11.).

>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모두발언, 강조는 인용자).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택의 물량 자체가 적으며[6], 청년의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박미선 외, 2017: 19).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7],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국가의 책무로 설정하게 되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주거복지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

6)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인근의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박미선 외, 2017: 19). 이한솔 (2018: 35)이 제시하는 <청년임대주택 투쟁사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이는 2011년 서대문구 공공기숙사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싸고도 갈등은 지속된다 (같은 글, 35~36). 흥미로운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하거나 건전한 지역 문화가 퇴폐된다는 등의 주장을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서, '청년들에게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무의미하기에 반대한다'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은 청년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같은 글, 36).

7)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원석 (2013)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남원석, 2013: 49).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터·움막 등, PC방·만화방,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홍수·호우 등의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저침 제3조 제1호). 반면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모두발언과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호명되기도 한다.

공급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주거 지원의 방향을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1만호의 청년주택, 25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0년 3월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더 강화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해 청년주택 35만호, 신혼부부 주택 40만호까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2020b: 15~16). 또한 주거지원망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보완의 과제를 설정해, 청년-신혼부부-출산 (다자녀)-고령층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0a: 5~11). 이는 2020년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목표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설정한 것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청년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어왔는가? 청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정책인가? 그리고 정책 대상인 청년은 이러한 생애주기에 기반한 공급의 확대를 반가워하고 있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설정한 청년이 과연 누구를 뜻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게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2020c: 27). 주거사다리 구축의 기반에는 주거 소유와 정상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김경서, 2021).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이행을 돕는 정책은 청년의 주거 욕구를 단일화할 뿐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일부 중산층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한 이성애 중심의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정상성의 틀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같은 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성 청년의 위기로 상상되는 N포는 '근대적 젠더 관계에 기반한 생애주기의 표준'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은경, 2015: 10) 모든 청년의 문제로 표상되며, 주거정책은 이러한 위기에만 대응하는 정책으로서만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주거복지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성조 (2019)는 청년 세대 담론이 경제적·정치적 국면에서 부각된 것과 달리, 재생산의 위기와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이들과 괴리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젠더 불평등은 남녀 갈등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어버렸으며, 청년 여성의 문제는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에 통합되지 못하고 '여성'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같은 글). 청년 여성은 원가족의 가부장적 질서 속 섹슈얼리티의 통제나 돌봄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열악한 주거 시설로 몰리게 된다 (권민지, 2018). 그럼에도 주거정책은 몰젠더적 관점에서 청년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분리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8]. 주거정책은 특정 젠더에 특혜 (preference)를 주지 않는 중립적인 것처럼

8) 대표적인 것이 여성안심주택이다. 2013년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한 여성안심주택을 개발했다 (한승연·강미선, 2018).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청년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로, 청년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한다 (같은 글, 4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북 제천의 여성 전용 도서관, 청년 여성만 입주 가능케 한 안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공고문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지자체는 남성 도서 서비스 이용을 허가하거나 공고문에 남녀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여성신문」, 2021.07.10.). 여성전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문제인지, 혹은 여성의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

보이며 모든 사람의 욕구를 동등하게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젠더에 따라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권력 관계가 내제해 있다 (Chan & Kennett, 2011: 1). 그렇기에 청년주거복지정책에 청년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젠더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이 몰젠더적 관점에서 청년의 위기 대응책으로 작동한 것에 주목하며, 청년 여성의 주택실천에서 주거복지정책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인 청년 여성의 차원에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민달팽이유니온, 2020), 주거복지정책을 실제 이용한 청년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주거복지정책은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해, 이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만 서술된다 (권민지, 2018: 274~275). 청년 여성이 주거복지정책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의 사용이 청년 여성의 궁극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고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 여성의 실제 삶과 정책의 연결점을 찾으려고 한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하는 청년 여성을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으로서 간주하고, 이들의 주택실천에서 정책과 청년 여성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 등으로 규정되는 청년이 아니라, 이행기로서 독립의 상태로 나아가는 청년이 주거복지정책을 사용할 욕구가 크며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자원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은 가족의 자원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고병진·김리나, 2018: 74~75), 선행연구들은 청년 여성의 독립과 남성 청년의 독립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민우·이나영, 2011). 독립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지만, 특히 주거, 일, 가족형성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연결된다 (변금선, 2021: 56).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 남성과 달리 청년 여성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의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어떻게 자원화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원이라는 의미를 확장해, 청년 여성의 주택실천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이 어떻게 자원화가 되고 있는가 (자원화가 되지 못하는가)를 넓은 의미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청년 여성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들의 주거불안은

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글).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즉,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포괄적으로 청년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여성의 안전 문제에만 집중해 청년 여성에게 부가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의 방향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거 복지 담론 (housing welfare discourse)'에 대한 비판과도 이어진다. 주거 복지 담론은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여성의 취약성을 부각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han & Kennett, 2011: 3). 사회구조적으로 몰젠더적인 주택 시스템 자체에 반기를 들기보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근본적인 여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Marcuse, 1989; Watson, 1986; 같은 글, 3에서 재인용).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권민지, 2018: 277-278). 이는 주거복지정책이 청년 여성의 문제라고 쉽게 인식되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홍혜은 (2020: 15)은 청년의 주거권이 '일상의 영위, 안전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장된 주거권의 정의를 참고해 주거복지정책이 단순히 주거의 공간을 구하고, 주거의 질 (안전, 평수, 위치, 월세 등 부담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미래에 궁극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려고 한다. 주거복지정책이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가족 구성 등과 관련한 청년 여성의 미래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독립과 공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으로서 주거복지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1. 청년 여성은 독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독립의 과정에서 청년 여성에게 집 (주거 공간의 확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해 독립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의 주택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세부 질문이 포함된다.

2-1.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은 왜 주거복지정책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2. 주거복지정책은 청년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거복지정책은 청년 여성에게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청년 여성의 생애 전망 (가족과 집)에 어떠한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미치지 못하는가)?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책에서 청년을 살펴보는 하향식 (top-down) 방식이 청년을 단일한 주체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청년의 이질적인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을 파악해 청년 여성에게 독립의 의미, 독립과 공간의 관계, 그 속에서 주거복지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이 청년 여성에게 어떠한 자원으로서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주거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집과 주거복지정책

1) 주택과 집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뜻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주택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주택(house)은 기본적인 자연 현상 (비·바람 등)에서부터 자연재해 (지진·해일 등)에 이르기까지, 취약한 인간을 보호해주는 물리적인 건물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거 (housing)로써 가구 (household) 단위가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보장받는 프라이버시의 장 (place of privacy)이 되거나, 주변의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문화적인 계층을 가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입지 (location)를 결정짓기도 한다. 게다가 안정적 기반을 위한 투자수단인 고가의 재산 (property)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2020c: 30).

고가의 재산으로서의 의미는 특히 한국에서 강조되는데, 이는 내 집 갖기의 열망으로 이어진다. 박해천 (2013)은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버블과 아파트의 관계를 이용하여, 4·19세대, 유신세대, 386세대들이 각각 아파트 구매 행위를 '중산층의 경제적인 아버지로 거듭나는 기회'로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준다.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이것이 개인에게 돌아오면, 개인은 이를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값이 뛰면 이것이 다시 아파트 소유자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굴레 속에서 아파트를 계급 상승의 자원으로서 이용해온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박해천, 2013: 19).

그러나 집은 단순히 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만 파악될 수 없다 (Zavisca&Gerber, 2016: 2). 강남 3구는 모든 공공재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그곳에 산다는 것은 교육 등 '경제, 사회적 입지'를 갖추려고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 또한 노인 복지가 부실한 한국에서는 이것이 노후 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경향신문」, 2021.04.13.). Pattillo (2013) 또한 주택은 단순히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들을 합친 것 이상이며, 그 가격 내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의 질이나 주변 편의 시설, 범죄율 등이 자본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는 세금, 치안, 기반 시설과 같은 것들이 이루고 있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attillo, 2013: 512). 즉, 주택은 물질적 자산,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한 사회적 토대, 가족 형성이나 재생산의 중심지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거 소유의 욕망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Zavisca & Gerber, 2016).

그러나 이러한 주택 (house)을 집 (home)의 의미와 혼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lunt와 Dowling (2006: 2~3)은 주택 (house)과 가정 (household)은 집 (home)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중 하나이며, 이들 각각만으로 집 (home) 안의 사회-공간적인 (socio-spatioal) 관계와 감정을 포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집은 장소들을 연결하고 교차시키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루는 '공간적 상상력 (spatial imaginary)'에 해당한다 (같은 글, 1). 어떤

사람에게 집은 소속감이나 편안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같은 글, 1). 페미니스트들은 아늑한 공간으로 보이는 집이 사실은 폭력 등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공간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Bowlby et al., 1997: 343). 또한 집은 젠더 역할에 따라 그 공간 안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나 자격을 규범적으로 설정하면서,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한다 (같은 글, 344).

2) 주거권과 주거복지정책

주거기본법에서의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주거기본법 제2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right to adequate housing)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측정하는 주거 권리 지수 (The Housing Rights Index, HRI)는 이러한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UN-HABITAT, 2018: 6). 거주기간 보장 (security of tenure), 서비스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of services), 비용 감당 정도 (affordability), 주거 적합성 (habit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위치 (location), 문화 접근성 (cultural adequacy)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글).

1995년 UN의 주거권에 대한 보고서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한 주택을 건설한 의무는 없지만, 일부 집단 (홈리스 등)의 부적절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종균, 2011: 30~31). 또한 국가는 전반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거 상태가 부적절한 사람은 자신의 주거권을 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같은 글). 이러한 의무는 주거복지정책에도 이어져, 주거복지정책은 물리적 (최소한의 주거 조건)이면서도 심리적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화) 조건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 정의된다 (Paglione, 2006: 124-125; 강창현, 2006; 임해린, 2021: 7에서 재인용).

주거복지정책에 주거 불안정 집단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는 '중산층 자산 만들기 신화'로 변질되어 진행되었다 (조형근, 2021: 85). 노태우 정부의 10년 후 분양 전환 사원임대주택부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화되어왔고, 오히려 빈곤층이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같은 글, 85~86). 도시 중산층 가족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규범 (housing norms)에 대한 사고 (하성규, 2000; 신유진, 2020에서 재인용)가 주거복지정책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거사다리로서 작동하는 주거복지정책은 이성애 부부 중심의 정상가족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적이다.

Chan과 Kennett (2011)은 전통적으로 주택 시스템과 도시 계획 내에 가정 이상 (domestic ideal)과 가족 이데올로기 (familial ideology)가 작동해왔다고 이야기한다. 주택 과 도시 설계에서 가정 이상 (domestic ideal)은 사적 공간 (집)보다 공적 공간 (일)을 분리하고 후자를 더욱 중시함으로써, 여성의 가사 부담을 가중하고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같은

글, 5~6). 가족 이데올로기 (familial ideology)는 주택 정책과 자원이 가족 단위 (family as unit) 중심에 기초하면서, 이성애 중심의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비관습적 (unconventional)으로 여겨지는 가족 유형-1인 가구 여성, 나이든 여성, 레즈비언 등-을 주변화한다는 것이다 (같은 글, 6). 또한 전통적으로 주택 자산 (housing wealth)은 가계 자산 (family wealth)로 여겨지면서 남성이 이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Smith, 1990; 같은 글, 6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주거 공간 마련을 발판으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의 과업을 달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해 왔다. 그럼으로써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을 달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청년만 정책 대상으로서 포함해 왔다는 한계를 지녀왔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주거복지정책이 실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권의 실체를 폭로해왔다. 김경서 (2021)는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하며 주거권이 소유권과 등치되어 있으며, 정상가족 중심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주거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서 작동해왔다고 이야기한다. 홍혜은 (2020)은 청년이 여타의 복지 수혜자들과 달리 결혼의 상태로 이행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되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주거복지정책에서 청년의 주거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년의 '일시적인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상의 안정성 속에서 청년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글).

규범적 시공간성 (normative spatio-temporality)

생애과정 관점 (life-course perspective)은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사건들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와 맥락으로 구성해내는 것을 뜻한다 (Johnson & Crosnoe, 2003; 변금선, 2021: 51에서 재인용; 이순미, 2013: 6).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구성되는 발달과정 중 하나로서, 이는 연령 역할 (aging roles)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적이다 (변금선, 2021: 52; 이순미, 2013: 6; Mayer, 2009: 413). 청년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는데, 그 중 성인이행기 (transition to adulthood)는 청년을 나타내는 관점 중 하나이다 (변금선, 2018: 8). Dewilde (2003: 118)은 이행 (transition)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애과정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로 정의한다. 이는 사건 (event)이나 통과 (passage)와 달리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 (같은 글, 118),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이를 예측하기 쉽고 개인 (친구나 친척) 혹은 사회적 (국가와 같은 복지 제도) 자원이 이를 포괄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글, 125).

자율성과 독립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서 청년은 이행기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변금선, 2021: 56). 이행기 청년은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순차적이라기보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순서가 바뀌는 형태 (결혼 후 취업 등)를 보여주기도 한다 (같은 글, 59~60). 이행기라는 경험은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은 특히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얻게 되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다양한 사회적 과업을 해내야 하는 시기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행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글, 56). 청년은 특히 다양한 사회적 임무-취업, 결혼, 출산, 독립 등-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받는 시기이다 (같은 글, 57). 이러한 의미에서 Dewilde (2003: 118) 또한 이를 규범적 이행 (normative transition)으로 명명했다. 이는 청년이라고 시기에 도입하게 되면 당연하게 결혼, 출산 등을 해야 정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홍혜은, 2020: 15~16).

규범적 시공간 (normative spatio-temporality)은 규범적인 체제로서 생애과정을 간주하고, 이를 공간과 접목시킨 개념이다 (정민우·이나영, 2011: 113). Halberstam (2005)은 정상성이라는 것이 중산층의 재생산적 시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혼한 부부와 여성의 생물학적 시계에 맞춘 재생산 시간 (The time of reproduction),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적인 규칙들을 위한 가족 시간 (Family time), 가족 관계를 통해 가치나 선(善)의 개념이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유전의 시간 (The time of inheritance)을 의미한다 (같은 글). Halberstam (2005)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유지되는 가족, 이성애, 재생산 제도에 반대하여 시공간의 퀴어 사용 (Queer uses of time and spac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Halberstam의 논의에서 공간의 개념을 부각시킨 것이 규범적 시공간 (normative spatio-temporality)인데, 이는 시간에 따라 생애 과정을 분류한 뒤 (생애과정의 시간화) 이를 공간 (주거 형태)과 연결시킨 개념 (생애과정의 공간화)이다 (정민우·이나영, 2011: 113). 즉, 이렇게 함으로써 생애과정은 각 단계에서 개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규범화시키게 된다 (같은 글, 113).

규범적 시공간은 제도와 상징의 차원 모두에서 작동하는데 (같은 글, 114),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도적 차원이다. Leisering과 Leibfried는 (1999: 24; Dewilde, 2003: 121에서 재인용) 사회정책이 생애 과정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국가가 생애과정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특히 사회 계층이나 젠더에 기초한 특정 규범 모델로 정책을 구성해, 이것이 생애 과정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젠더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Leisering·Walker, 1998; Leisering·Leibfried, 1999; Dewilde, 2003: 121에서 재인용).

현재 주거복지정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분리되어 있다. 행복주택을 예로 보았을 때,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구성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구성원'을 뜻하며, 여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같은 나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결혼 여부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분리되는 것이다. 청년을 이와 같이 나이와 미혼여부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청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을 사회적 연령으로서 '과업에 따라 정해지는 상대적 연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변금선, 2021: 57), 이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성이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과업을 아직 행하지 못했지만 이후 해낼 것이라고 믿어지는 주체로 구성된다.

Ⅲ. 선행연구

청년과 주거복지정책

1) 청년 주거복지정책 현황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현상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야기했고, 이는 서울에서 주택의 물량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Gelezeau, 2007: 87~89, 권순필·최은영, 2018: 31). 1962년 시작된 주택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부터 (1972~76) 매년 50만 호의 대규모 주택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다 (Gelezeau, 2007: 90~91). 이러한 주택정책의 경향은 1980년대 말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정책은 복지보다 경제의 논리에 의해 움직였다 (김혜승, 2011: 73).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주택은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복지의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같은 글, 73~74). 그러나 주거복지의 문제는 주택종합계획 (2003~2012)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력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같은 글, 74).

주거복지정책에서 청년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임해린, 2021: 21~22). 이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청년 문제가 주거와 문화, 사회 참여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민달팽이유니온, 2020: 1). 그 전 청년의 문제는 정책의 영역에서 일자리 문제와 등치되어 논의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유례없는 대졸 실업자로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서복경, 2021: 413). 청년의 실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큰 문제로 간주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거의 매년 쏟아냈다 (같은 글, 414). 청년의 실업 문제는 계속해서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일자리가 아닌 다른 청년의 문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이는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에게 주택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최선영 외, 2020: 58). 문재인 정부 또한 취임 후 2017년 국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청년의 주거 문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했다 (김민정, 2018: 13~14).

그러나 권민경 (2021)은 청년이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부각된 것이 인구감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9]에서부터 저출산과 관련해 청년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권민경, 2021: 316; 최선영 외, 2020: 58).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자리 등을

9) 2002년 '가임여성 평균 출산 자녀수가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라는 통계청의 발표 이후,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로 떠오르게 된다 (김영미, 2018: 105). 그 결과로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글, 105). 1년 뒤 2006년 6월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이 시작된 이래, 5년 단위의 계획이 계속해서 시행 중이다 (같은 글, 105).

포함한 청년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는 청년의 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된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권민경, 2021: 323~324). 청년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결혼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분석하에 (같은 글, 324), 청년의 주거 문제도 함께 부각 되었다 (최선영 외, 2020: 5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는 청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토대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권민경, 2021: 326).

2) 청년 여성 대상의 주거복지정책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시작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이농한 미혼여성 근로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근처에 기숙사를 건립한 정책으로서, 1981년 새마을성금으로 200세대를 건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마민지·김예빈, 2016: 105; 류만희·최영, 2005: 332; 엄숙희, 2007: 22). 여공으로 불린 이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사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공단 주변의 자취방을 얻어서 지냈다 (마민지·김예빈, 2016: 104; 박은경, 1992: 22~23). 그러나 사내기숙사는 시설이 열악해 건물 붕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민지·김예빈, 2016: 103~104), 공단 주변의 자취방은 무허가 주택에 방을 쪼개어 두 평 미만의 방에 6명 이상이 합숙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같은 글, 111~112; 박은경, 1992: 23). 이러한 피해는 여공에게 특히 집중되어 나타났다 (마민지·김예빈, 2016: 104).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남자 근로자 절반 정도의 임금밖에 벌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1992: 23~24).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로공단 근처 철산리 (현재 광명시 철산동)에 미혼여성 근로자 대상의 기숙사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으며 (마민지·김예빈, 2016: 105), 이는 1992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4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것까지 이어졌다 (류만희·최영, 2005: 332; 엄숙희, 2007: 22).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여성 임대 아파트 '다솜마을[10]'처럼 여전히 미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산시의 '한마음임대아파트'처럼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경우도 존재한다 (「중앙일보」, 2017.11.07.).

반면 여성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를 선언하고 (한승연·강미선, 2018: 43), 여성의 안전을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으로 택배를 받는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편의점과 연계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안심지킴이 집과 같은 정책을 제공해 왔다 (장진희·김연재, 2016: 40~41). 서울시는 이를 주거에도 확대해 미혼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1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11]을 천왕동에 건설한다. 여성안심주택은 주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무인택배함,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한승연·강미선, 2018: 43~44). 현재 SH에서 공급하는 천왕동 여성안심주택[12]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소행주 (소통이

10) https://www.isdc.co.kr/operBusiness/dasom.asp 검색일: 2021.08.15.
11)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50400 검색일: 2021.08.15.

있어 행복한 주택)가 건설한 신내동 여성안심주택[13]이 있다 (같은 글, 43). 그러나 여성안심주택 등 여성 청년만을 위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여성안심주택에 대한 연구는 도시안전지표와 지역여성안전지수를 이용해 여성안심주택에서 안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한 한승연·강미선 (2018)의 연구가 유일하다.

3) 청년과 주거복지정책 연구

청년의 주거복지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청년의 주거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선기 외, 2016: 53). 배병우·남진 (2013)의 경우 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서울시 소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다. 전세·월세 여부, 기숙사 거주 여부가 이에 높은 영향을 주기에, 연구자들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숙사를 지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글, 36~37). 최은영 (2014)은 기존의 통계 자료들–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1인 청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비율은 높으나 양적·대상 계층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같은 글, 54~58). 임해린 (2021)의 연구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양적 분석과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하여, 주거복지정책이 주거비부담을 낮추고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양적 데이터를 기반하여 청년들의 주거현황을 분석하였기에, 청년 주거에 대한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선기 외, 2016: 57). 임해린 (2021)의 연구는 심층면접을 병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을 상세히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효과를 여전히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또한 이들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젠더 관점을 결여해, 청년주거복지정책이 젠더에 따라 어떤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과 주거복지정책의 관계에 주목해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이 왜 정책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과정의 청년과 집

청년의 독립 개념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김소영 (2017: 215)은 독립을 성인기 이행과 달리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완전히 홀로서기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독립이 이처럼 결과로써 경제적인 의존 관계를 완전히 끝맺음하는 것과 달리, 성인기 이행은 재정적인 자원을 받아가면서 독립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같은 글). 반면 고병진·김리나 (2018: 74)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공간적 분리로 정의한

12) Retrieved from https://url.kr/6kmnrc 검색일: 2021.08.15.
13) Retrieved from https://url.kr/v4e59x 검색일: 2021.08.15

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구분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분류해서 독립을 이해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글). 정민우·이나영 (2011, 106~107)은 사회적인 악조건 (청년 실업 등) 속에서도 독립은 청년이라면 해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이면서도, 물질적 (공간적,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파악한다.

청년의 불안정한 주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년을 주거불안계급 (권민지, 2018; 박미선, 2017)로 정의해, 청년의 주거불안정성이 어떻게 독립과 관련되어 어려움을 낳는지 보여주었다. 박미선 (2017)의 연구에서는 Standing의 노동중심의 불안계급 (precariat) 개념에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더해서 청년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간주한다. 연구에서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상태를 '주택탐색과 계약과정에서 겪는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생애단계 이행의 불안정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청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박미선, 2017). 권민지 (2018)의 경우 주거불안계급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젠더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 여성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재정의한다. 권민지 (2018: 273)는 주거불안계급으로서 청년 여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성과 도시 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며, 이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독립적인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단순히 불안정성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 여성들은 일시적인 독립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동 주거를 찾는 등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같은 글, 287~288).

특히 선행연구들은 독립의 양상이 성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여성이 공간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성별화된 규범과 가사·돌봄노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민우·이나영, 2011: 118~121). 독립의 경험은 주거불안계급인 여성 청년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지만 독립을 단선적인 과정으로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비혼 여성의 독립 경험은 자신의 공간을 꾸며나가며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지향하지만, 이러한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기에 다시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고병진·김리나, 2018). 혹은 경제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같은 글). 하지만 독립의 경험은 세대주가 되어 세금이나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면서, 아내나 딸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한다 (같은 글, 79).

독립 과정에 있는 청년과 집에 관련된 연구는 청년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간의 독립을 이루어내기 힘들지만, 그렇게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범에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 여성은 원가족의 성적 규범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지만, 사회구조적 원인들이 주거불안계급으로서의 그들의 독립을 불완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한정적으로 나마 자신을 시민의 자리에 위치시키거나, 대안을 찾아 자신의 독립 서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의 독립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을 주거복지정책과 연결하려고 한다. 김진영·이현정 (2020)의 연구가 독립 과정에 있는 청년이

주거를 마련하면서 주거복지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청년이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지 보여주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 그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청년 여성의 독립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독립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이 어떻게 자원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Ⅳ.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중 주거복지정책을 이용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이 생물학적 나이를 기반으로 청년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중요한 삶의 단계 중 하나인 독립의 시기에 있는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2018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사무소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발간된 《청년과 인권 (Youth and human rights)》 보고서에서 간주하는 청년의 의미와 상통한다 (윤태영 외, 2020: 103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청년은 '고정된 연령 집단이라기보다는 ... 삶의 지나가는 한 단계 (rather than a fixed aged group ... is a transitory phase of life)'로 정의된다 (같은 글, 103에서 재인용). 청년을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지자체나 정책별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모두 다르다. 또한 시기에 따라 청년의 나이는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참고로 청년맞춤형 임대주택은 이전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청년계층의 입주자격을 정의하던 것을 2020년부터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홍혜은, 2020: 13), 이는 청년의 나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금선, 2021: 51). 특히 나이는 정책의 영역에서 대상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는데, 그로 인해 청년을 특정 시기로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태영 외, 2020: 103; 변금선, 2021: 51). 본 연구도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이 시기적으로 경험하는 독립에 초점을 맞춰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독립은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분리를 이루어내고, 이후에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의한다. 이때 청년 여성은 독립이라는 과정은 공유하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가족과 집의 의미를 각자 다르게 구성하는 주체로서 파악한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와 집의 의미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다르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즉, 비혼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1인 가구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차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구상해 나가고 있는,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 여성을 섭외할 예정이다. 그리하

여 이들에게 주거복지정책이 어떠한 부분에서 자원화되는지 (혹은 자원화되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림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2020: 1~2).

주거복지정책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주택 지원으로 나뉜다 (민달팽이 유니온, 2020: 1~3). 주거비 지원은 청년이 부담하는 월세나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며, 금융 지원은 주택을 임차할 때 내는 전세금·월세·보증금 등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며, 주택 지원은 청년이 살 수 있도록 주택 자체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같은 글, 1~2).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한 통계청의 이슈보고서 (권순필·최은영, 2018: 44~45)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거빈곤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가구는 2005년 34.0%에서 2015년 37.2%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심각한 청년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왔다. 서울 이외의 지역 중 대표적으로 부산은 드림아파트[14], 경기도는 따복하우스[15]라는 명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미선 외, 2017: 18). 따복하우스의 경우 따복전세지원사업[16]도 함께 운영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글, 18) 이러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외에도, 본 연구는 현재 청년 여성 대상의 서울시의 천왕동 여성안심주택과 신내동 여성안심주택, 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14) https://www.busan.go.kr/young/house03 검색일: 2021.06.20.
15) http://www.gh.or.kr/business/welfare/ddabok02.do 검색일: 2021.06.20
16) http://www.gh.or.kr/business/welfare/ddabok04.do 검색일: 2021.06.20

다솜마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 여성을 섭외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공간은 여성만을 위한 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들이 '여성'인 것에 집중해 안전 등에 훨씬 더 중점을 둔 공간이기도 하다. 청년으로서 독립의 욕구를 가진 청년 여성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청년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혹은 오히려 제약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일럿 심층 면접은 2021년 6월 12일에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2명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했다. 그러나 청년 전체에서 청년 여성으로 연구 참여자를 수정하였기에, 남성 청년 1명의 인터뷰는 분석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참여자 1은 주거복지정책을 7년째 이용하고 있다. 대학교 1-2학년 때까지는 학교 앞 신축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했다가, 이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6년 동안 LH 대학생 전세임대 (현재 청년 전세임대 제도[17])로 이름 변경)을 이용했다. 이후 최근 1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18])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현재의 집에 거주 중이다. 참여자는 비혼 여성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1인 가구이지만 이후에 자신과 같은 비혼의 전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공동체 주거 형태를 꿈꾸고 있었다.

참여자 2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척집,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경험한 후, 부모님께 5000만원을 지원받아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신의 오빠와 함께 집을 얻어 생활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19])을 이용해 2000만원을 대출했으나, 현재는 이를 상환한 상태이다. 참여자 2 또한 비혼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후기 청년기'로 명명하면서 이후 빈곤한 중년 여성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 나이	직업	거주형태	경제적 독립의 정도
참여자 1	27	석사 수료	전세	X
참여자 2	36	박사 수료	전세	O

〈표 1〉 심층 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활용한다. 연구 참여자는 경제적 독립의 정도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거주 형태 (월세/전세), 직업 (수입/안정성), 거주 지역, 이용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종류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섭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미혼의 청년 여성으로 한정한다. 신혼부부 중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아직 받으면서 독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주하는 독립의 과정에 있는 청년은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상상하고 있는 단계에 해

17)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검색일: 2021.06.20
18)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검색일: 2021.06.20
19)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검색일: 2021.08.16

당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추후에 아이를 낳는 등의 가족 형성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족의 상태를 이미 꾸린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정의와 같이 미래의 가족을 구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의 특성상 결혼 여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분리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지인들을 섭외하는 등의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주거복지정책의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청년 주택 정보 카페> 등에서 면접자를 모집하거나, 민달팽이 유니온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참여자를 구해 최소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1대 1로 진행하며, 각 참여자마다 최소 2회 정도를 진행한다. 각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 정도로 인터뷰한다. 인터뷰 사전에 녹취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고지한다. 이후 인터뷰 이후에는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터뷰는 청년의 독립과정, 독립과 집 (공간)의 의미, 그리고 주거복지정책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 (semi-structured question)지를 바탕으로 인터뷰한다. 반구조화된 질문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크게 독립의 과정, 주거복지정책 이용, 주거복지정책의 자원화 양상이라는 틀을 가지고 질문을 참여자에게 던진다. 하지만 반구조화된 질문의 특성상 큰 틀을 정해놓을 뿐, 참여자에게 풍부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한다 (강성례·김주현, 2018: 80~81).

대주제	세부 질문
독립의 과정	독립의 의미, 독립의 과정에서 집 (공간)의 의미, 독립의 과정에서 주거복지정책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독립 이후 자신의 생애전망에 대한 상상 (가족, 집)
주거복지정책 이용	주거복지정책을 사용한 이유, 주거복지정책에서 기대했던 바 (충족 여부), 주거복지정책에 만족/불만족했던 점,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주거복지정책 자원화 양상	주거복지정책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적, 심리적 등), 자신의 생애전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표 2〉 반구조화된 질문의 주요 내용

부록 1: 연구의 한계 및 고민되는 지점

첫째, 선행 연구들은 원가족과의 관계 (의존 등)나 지원 여부에 따라 독립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가족과 청년 여성의 관계에서 주거복지정책이 자원으로서 더해질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의 이질성에 주목하는 것은 연구의 큰 목적 중 하나이기에 젠더 관점으로 정책과 청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여성을 동질적인 주체로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주거복지정책

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 여성 내부에서의 이질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과 청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이용하는 청년 여성의 경험은 정책의 특성으로 인해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층위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청년 여성을 위한 주거정책을 이용하는 청년 여성으로 대상을 좁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강성례·김주현. 2018. '4장 질적 자료수집 Ⅱ: 개인 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 면담'. 『질적 연구 수행하기』. 수문사.

고병진·김리나. 2018. 「규범으로서 독립의 실천과 갈등: 서울 거주 20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1). 69-100쪽.

국토교통부. 2020a. 『2020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b.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 주거복지로드맵 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c.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부.

권민경. 2021. '12장 인구감소시대의 청년 살이'. 『청년연구자 되기 (청년학개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권민지. 2018.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28 (3). 271-301쪽.

권순필·최은영. 2018.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KOSTAT 통계플러스》. 28-47쪽.

김경서. 2021. 「그 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 수 있나요? -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의 교차성에 주목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발표문 (2021년 3월 19일). 41-43쪽.

김민정. 2018.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개선 평가 연구: 공급자보조 주거 복지정책과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기·구승우·김지수·정보영·박경국·채태준. 2016. 「청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동향의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청년허브 보고서.

김소영. 2017.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9(3). 213-240쪽.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103-152쪽.

김진영·이현정. 2020. 「청년의 독립주거 마련과 거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17-1034쪽.

김혜승. 2011. '3장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남원석. 2013.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47-71쪽.
류만희·최영. 2005. 「근로자 복지시설 사업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결정요인: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와 보육시설」. 《사회복지정책》. 22(8). 325-349쪽.
마민지·김예빈. 2016.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본 청년 주거사: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주택 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2016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93-125쪽.
민달팽이유니온. 2020. 「주거빈곤청년 주거상황 심층조사: 서울시 청년주거밀집지역 1개동을 대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4). 110-140쪽.
박미선·강미나·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박은경. 1992. 「미혼근로여성의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해천. 2013.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배병우·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23-38쪽.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1). 7-41쪽.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변금선. 2021. '2장 "이행기 청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청년연구자 되기 (청년학개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서복경. 2021. '15장 정책적 실천과정으로서 청년정책 연구: 현황과 과제'. 『청년연구자 되기 (청년학개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서종균. 2011. '1장 주거복지와 주거권'.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신유진. 2020.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 (living together)'-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꾸리기 (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엄숙희. 2007. 「미혼여성근로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정서적 안정 비교연구 - 근로자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태영·박이대승·정준영. 2020.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순미. 2013.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구젠더체계 - 1955-1974년 출생코호트의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한솔. 2018. 「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임대주택 반대여론과 청년주거」. 《월간 복지동향》. (6). 32-38쪽.
임해린. 2021.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진희·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 여

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정민우·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사회》. 105-145쪽.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9쪽.
조형근. 2021.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말하기, 그리고 함께 말하기」. 《문화과학》. 106. 76-97쪽.
최선영·오신휘·박종서. 2020.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7. 5-61쪽.
한승연·강미선. 2018. 「여성안심주택을 통한 주거환경 안심의 의미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2). 42-45쪽.
홍혜은. 2020.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월간 복지동향》. (257). 12-18쪽.

2. 해외 문헌

Blunt, A. & Dowling, R. 2006. *Home*. Routledge.
Bowlby, S., Gregory, S. & McKie, L. 1997. "Doing Home": Patriarchy, Caring, and Spa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0(3). pp.343-350.
Chan, K.W. & Kennett, P. 2011. Introduction: Women and housing systems In P. Kennett & K.W. Chan, *Women and Housing: An International Analysis*. pp.1-10.
Dewilde, C. 2003. A life-course perspective on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 (1). pp.109-128.
Gelezeau, V. 2007.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Halberstam, J.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Mayer, K.U. 2009. New Directions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pp.413-33.
Pattillo, M. 2013. Housing: Commodity versus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9. pp.503-31.
UN-HABITAT. 2018. *The Housing Rights Index: A Policy Formulation Support Tool*.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Zavisca, J.R. & Gerber, T.P. 2016. The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Political Effects of Hous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 pp.12.1-12.21.

3. 신문 기사

「경향신문」. 2021.04.13. "'내 집' 열망은 오직 불로소득 욕망에서 비롯됐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01115001&code=940100#csidxf42a8d2b091e0ea86338e9dd0731d76
「서울경제」. 2020.12.11. “文, 동탄 행복주택 방문…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 만들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N4NECJR
「여성신문」, 2021.07.10. “‘여성전용은 남성 차별’...여성들 분노한 인권위 권고, 어떻게 봐야 할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8
「중앙일보」, 2017.11.07. “안산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내년 철거…행복주택 건립” https://news.joins.com/article/22092305

4. 연설문
문재인. 2020.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모두발언.”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2819

5. 인터넷 사이트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경기주택도시공사. 검색일 2021.06.20. http://www.gh.or.kr/business/welfare/ddabok02.do
다솜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검색일: 2021.08.15. https://www.isdc.co.kr/operBusiness/dasom.asp
드림아파트. 부산광역시. 검색일 2021.06.20. https://www.busan.go.kr/young/house03
신내동 여성안심주택. 공동체주택플랫폼. 검색일: 2021.08.15 Retrieved from https://url.kr/v4e59x
여성안심주택. 서울주거포털. 검색일: 2021.08.15.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50400
전세보증금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검색일 2021.06.20. http://www.gh.or.kr/business/welfare/ddabok04.do
천왕여성안심주택. 공동체주택플랫폼. 검색일: 2021.08.15. Retrieved from https://url.kr/6kmnrc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주거포털. 검색일: 2021.08.16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청년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색일 2021.06.20.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검색일 2021.06.20.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수료

임 재 연

이 글은 한국 청년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그들의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족가치관을 결혼, 출산, 성 역할 규범 등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유형의 분화 및 그것이 그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의 18~39세 청년 표본을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LCA)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1) 평등주의(60%) (2) 가족주의(30%) (3) 가부장주의(10%)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즉,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개인주의·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현행 제도상 가족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그들의 미래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적 가족가치관은 부정적 출산 의향보다 유보적, 긍정적 출산 의향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은 부정적 출산 의향을 상대적으로 더 높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을 낮추고 있음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을 보유하는 청년들이 출산을 희망하기 어렵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청년, 출산 의향, 가족가치관, 평등주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I.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부터 OECD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이하에 진입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1.0명 밑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0.9명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0). 이처럼 전례 없는 초저출산 흐름은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전국 분기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가장 낮았던 4분기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8명으로 0.6명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 2021).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에서 두 명의 성인이 만나 그 절반도 아닌, 절반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만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일 것이다.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급격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 노인인구가 최대 40%에 육박하는 사회에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무역 적자 심화, 노인빈곤의 심화, 노인 부양 필요성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이삼식·최효진, 2014). 즉, 현재과 같은 인구변동 추이가 별다른 대안 없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미래를 향한 잠재력은 현저히 낮고 노인을 위한 지출만 기형적으로 높은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변화의 핵심은 청년세대다.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며 미래의 재생산과 성장을 책임질 청년세대는, 그러나, 역사상 출산에 가장 소극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N포세대'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주거난, 취업난 등 구조적 어려움 속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 가족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중앙일보, 2021/3/4). 불안하고 희망 없는 미래 앞에서, 큰맘을 먹고 저질러야 하는 가족형성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김석호, 2021). 또한 몇 해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청년토크'에서는 다수의 청년들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통한 전통적 가족형성 방식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8/9/2). 또한 최근에는 청년들 내부에서 심화된 젠더 갈등과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인한 관계 맺기 축소로 가족형성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어려움을 내포한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그리는 미래의 생애전망은 그들의 출산 의향에 반영된다. 청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미래에 대한 투사를 모두 반영하여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김석호 2021). 즉, 청년들의 미래 자녀 출산 의향은 구조적 맥락 속에서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과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점점 더 많은 연구들(Billari et al, 2009; Ajzen & Klobas, 2013; 최효미, 2017; 홍성희, 2020; 임병인·서혜림, 2021)이 출산 의향에 주목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역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가운데 (신윤정 외 2020), 청년 세대의 출산 의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한 복잡한 문제 상황과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을 결정 짓는 요인일까?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자원, 개인적 특성,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출산 의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Ajzen & Klobas, 2013).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윤석, 2016; Brinton & Lee, 2016; 조윤명·김영미, 2020; 김석호, 2021). 그런데 많은 연구들에서 가치관은 주로 성 역할 규범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비혼, 비출산 등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 방식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태도는 남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인식만을 바탕으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 제도 전반

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한국 청년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그들의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을 결혼, 출산, 성 역할 규범 등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유형이 그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해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이 어떤 세부 유형들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유형이 그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 수준에서 밝힘으로써 출산 행위와 관련된 기존 논의의 공백을 메우고,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경험적 논의

1.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이란 개인이 미래에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며, 이는 실제 출산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출산 의향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활발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던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이에 따른 관련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윤정 외, 2020). 하지만 출산 행위를 연구함에 있어 출산 의향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출산 의향이 인구학 연구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였으며 (Schoen, 1999; Billari et al, 2009)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에 기여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Ajzen & Klobas, 2013)도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출산 의향에 대한 연구의 현실적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사이의 괴리와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출산 의향에 대한 연구 없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제 출산으로 실현하는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인지, 혹은 희망하는 출산 자체가 줄어서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은 출산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 정책 역시 희망하는 출산과 실제 출산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신윤정 외, 2020). 출산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 학술적 논의의 공백과,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때 출산 의향의 형성과 그것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국내 연구들(최효미, 2017; 신윤정 외, 2020; 조윤명·김영미, 2020; 홍성희, 2020; 임병인·서혜림, 2021)이 출산 의향에 주목하고 있다. 최효미

(2017)의 연구는 출산 의향이 결혼 의향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연구의 대상임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 출산 의향은 결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자녀의 필요성과 기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 출산 의향은 실제 출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지표임이 확인되었다 (신윤정 외, 2020). 이처럼 출산 의향의 학술적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일련의 연구들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홍성희(2020)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중 성별, 가치관, 정책 등의 요인이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의 결정 요인임을 밝혔다. 조윤명 · 김영미(2020)는 변화하는 젠더규범이 청년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임병인 · 서혜림(2021)은 가족가치관이 기혼과 미혼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출산 의향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집단은 바로 청년들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생물학적 제약에 있다. 임신과 출산에는 생물학적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의 가임 연령인 15~45세 내에서 연구 집단을 설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청년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청년들의 출산 의향은 구조적 맥락에 놓인 청년들의 취약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서바이벌 그 자체를 삶의 법칙으로 내면화한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된다 (김홍중, 2015). 점점 더 가혹해지는 구조적 요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청년들에게 출산을 꿈꾸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재생산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투사를 모두 반영하기에 복합적이고 장기적 속성을 지닌다 (김석호, 2021). 따라서 청년들의 출산 의향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생애전망에서 청년들이 자녀를 희망하는 것이 현 사회구조 속에서 얼마나 가능한지를 드러내주는 사회적 지표가 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출산 의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출산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출산 의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적 성향들은 출산에 대한 행동적,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을 형성하고, 이는 개개인의 출산 의향 형성에 기여하여 실제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준다 (Ajzen & Klobas, 2013). 즉, 출산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이다. 김석호(2021)의 연구에서도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가족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근본적인 좌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석호, 2017),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청년들을 가족형성에 이토록 회의적이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적일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나 보육 정책에 치중했던 기존의 접근이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청년 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사회

과학에서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2.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통합적 접근

출산 혹은 출생(fertility)에 대한 사회과학의 접근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먼저 경제적 접근은 경제학자 베커(Becker)(1960)의 논의에 바탕을 둔다. 이 입장에서는 자녀를 일종의 재화로, 출산을 비용-편익 계산에 따르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이에 따르면 근대 서구 산업사회의 낮은 출생률은 농경사회에 비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줄고, 각 자녀의 양육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져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접근에서는 경제학적 논리로 포착될 수 없는 문화적 요인이 출생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제2의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게 되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행동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학적 전환이 발생하였다 (van de Kaa, 2002). 이 입장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저출생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물질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다.

한편 문화적 접근에는 두 가지 갈래가 더 있는데, 선호 이론과 성 형평 이론이 그것이다. 먼저 선호 이론(Preference Theory)에서는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를 꼽는다. 이 이론은 여성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강조하는데, 여성들은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따라 가정 중심(family-centered), 일 중심(work-centered), 적응적(adaptive)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이 고용, 출산, 구조적 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을 결정 짓는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선호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Hakim, 2000). 선호 이론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저출산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 중심적 삶의 방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성 형평(Gender Equity) 이론에서는 개인적 선호보다 사회 제도의 성 형평 정도를 통해 저출생을 설명한다. 이때 '성 형평'은 사회적, 정치적, 재생산의 권리와 노동 분업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하는 젠더 시스템의 불평등이 해소된 정도를 뜻한다. 이 이론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등 개인-지향적(individual-oriented) 사회 제도 내에서의 성 형평 정도와 가족 제도 내에서의 성 형평 정도,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출생률에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가족 제도 내에서의 성 형평 정도가 낮은데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형평 정도가 높아지면 출생률이 감소하며, 이와 달리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성 형평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가족 제도 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경우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McDonald, 2000).

지금까지 소개한 이론들은 모두 출생률의 변화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면서도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설명의 논리를 경제적 방식과 문화적 방식으로 구분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

인한다. 한 개인의 삶의 경로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출산 행위를 설명할 때, 어느 한쪽의 설명방식에만 기대는 것은 단편적인 설명만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선택의 타당성을 따져보는데, 그 방식에는 비용-편익 계산은 물론 자신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관의 점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형성과 재생산이라는, 삶의 복합적 영역이 한 데 녹아 있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설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다중평형(Multiple Equilibria) 모델에 잘 드러난다. 다중평형 모델(Esping-Andersen & Billari, 2015)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성 형평 이론의 논의를 따라가면서도, 사회 전체의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과 개개인의 비용-편익 계산이라는 경제적 요소 역시 포함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이론 프레임은 사회 규범의 효과를 간과하는 경제적 환원주의나, 전체 사회의 문화만으로 개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생태학적 오류를 모두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 행위와 전체 사회의 변화 방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설명력을 갖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다중평형 이론의 견지에서 이후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중평형 이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률 변화의 핵심 추동 요인은 여성 교육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 변화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여성 혁명(female revolution)의 진전으로 새로운 평등주의(egalitarian) 규범이 일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성원 전통적 성별분업 모델에 입각해 살아가던 안정적 평형상태는 불안정한 평형상태로 진입한다. 불안정한 평형상태에서는 타인, 즉 자신이 선택할 파트너의 행동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없어 출생률이 감소한다. 평등주의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지배적 규범이 되면 사회는 다시 안정적 평형상태에 진입해 출생률이 상승하고, 이는 파레토 최적이 될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 곡선'의 형태를 띤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러한 다중평형 모델의 타당성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양적 분석 결과, 성 역할에 있어 전통사회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출생률 저하가 뚜렷하고, 성 평등이 확산된 국가일수록 평등주의와 출생이 정적 관계를 맺는, 성 역할과 출생율의 U자형 관계가 확인되었다 (Arpino et al, 2015). 다중평형 모델의 이 같은 설명논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은 한국이 평등주의 확산의 초기 단계인 불안정한 평형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삼식 외, 2016). 이러한 거시적 설명에 덧붙여 김영미(2015)는 평등주의의 저조한 확산이 낮은 출산율에 기여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노동시장의 조건들을 통해 규명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 사회에서 출산 의향은 평등주의의 사회적 확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조건과 연계하여 개개인의 미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

출산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과 다중평형 이론에 따르면, 출산 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은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 연구는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윤석, 2016; Brinton & Lee, 2016; 조윤명·김영미, 2020; 홍성희, 2020).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성 역할 규범으로 제한된다. 즉, 대다수의 연구는 남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인식만을 바탕으로 출산 행위를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그러나 비혼, 비출산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는 부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 제도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출산 의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이혼, 동거, 출산, 성 역할 규범 등 가족 제도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전반적인 가치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결혼, 동거, 이혼, 성 역할 분업, 임신중절 등에 대한 가치를 묶어 '가족 가치'로 정의한 은기수·이윤석(2005)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비슷하게, 진미정·한준·노신애(2019) 역시 결혼, 이혼, 동거, 출산 관련 7개 문항을 활용해 가족가치관을 정의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족가치관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출산과 출산 의향을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에서 발생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윤석·김필숙·심규선(2016)에 따르면 포괄적 가족가치관에 대한 고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단일한 가족가치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련의 연구들은 한 사회 내부에서 가치관의 이질적인 분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질성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단초가 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Knight & Brinton (2017)은 전통주의와 대비되는 평등주의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차원이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채민진(2019)의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성 역할 태도가 세부적인 유형을 가지며, 이것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조윤명·김영미(2020)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지는 성 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조할 때,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역시 집단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가설 1-1).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화될 것인가? 오늘날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움트고 있음은 사뭇 분명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이 전통주의의 변형으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가정에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의 역할까지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일 지향적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sm)가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Brinton & Lee, 2016)와, 한국의 청년들이 변형된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조윤명·김영미, 2020)을 참조할 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년

들에게는 평등주의보다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가설 1-2).

한편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홍성희(2020)에 따르면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출산 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임병인·서혜림(2021)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족 가치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성역할 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을 높였지만, 양육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출산의향을 낮췄다. 즉, 전통적 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결과는 혼합되어 나타난다. 한편 조윤명·김영미(2020)는 여성들에게 가정과 일터의 의무를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변형된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여성들의 출산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여성들에게 육아와 노동을 모두 요구하는 일 지향적 보수주의 관념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rinton & Lee(2016)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즉, 이중 역할을 전제하는 보수적 가치는 출산 의향과 행위를 저해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조할 때, 전통적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 수준의 신념인지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치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즉, 개개인이 전통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한 가치관이 사회적 수준에서 만연할 경우 전체 사회의 출산은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후자의 설명은 앞서 언급한 다중평형 이론으로 포섭할 수 있다. 즉, 한 사회 내에서 전통주의가 우세하고 평등주의가 상대적 열위일 경우 그 사회의 출산율은 낮아진다. 한편 개인적 가치로서 전통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가설 2-1),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가설 2-2).

III. 자료와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활용할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제작된 전국 단위의 사회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출산 의향을 묻는 문항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문항을 모두 포함하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8년 KGSS 자료의 전체 표본은 1,031명이나, 본고의 연구 집단은 청년이므로 전체 표본 중 18~39세 연령 구간[1]에 해

1) '청년'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고용부 청년 구직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18~34세인데 청년기본법 제정안에서 청년은 19~39세,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 기준에서 청년은 15~34세이다. 또 청년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과 부산의 청년은 15~29세인데 반해 광주와 여수의 청년은 19~39세이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적게는 15세부터 많게는 39세까지 유동적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습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을 18~39세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음을 밝힌다.

당하는 관측값들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본 311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311)

	연령 (세)					
성별	18~20	21~25	26~30	31~35	36~39	N
여성	18	41	22	33	35	149
남성	22	47	38	29	26	162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청년들의 가족가치관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분석기법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이다. 잠재집단, 혹은 잠재계층분석은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을 가려내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미 존재하는 여러 관측변수(indicator variable)들을 활용하여 개인들을 어떤 공통적 특성을 보유하는 집단으로 묶어내고자 할 때 LCA가 사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로 도출된 집단을 잠재집단(latent class)이라 부른다.

본고는 가족가치관을 결혼, 이혼, 동거, 출산, 성 역할 규범 등 가족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KGSS 자료에서 결혼, 동거, 임신중절, 성 역할,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11개의 문항을 관측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들은 <표 2>에 기술되어 있다. 5점 척도라고 표기한 한 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답범주가 '전적으로 찬성(1),' '상당히 찬성(2),' '약간 찬성(3),' '찬성도 반대도

<표 2> 가족가치관 유형 잠재집단분석에 활용된 관측변수 문항들

분류	문항 내용
결혼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 (역코딩)
동거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역코딩)
임신중절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으면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 (역코딩)
성 역할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5점 척도)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도 좋지만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다
	여성이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
가부장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아님(4),' '약간 반대(5),' '상당히 반대(6),' '전적으로 반대(7)'로 이루어진 7점 척도 문항들이다. 이밖에도 성 역할에 대한 문항 1개('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가 있었으나, 내용상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거의 유사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을 위해 위 변수들을 이항변수화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7점 척도인 10개 변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1),' '상당히 찬성(2),' '약간 찬성(3)'을 묶어 '찬성(1)'으로, 나머지 '찬성도 반대도 아님(4),' '약간 반대(5),' '상당히 반대(6)'를 '비찬성(0)'으로 코딩하였다. 결혼, 동거, 임신중절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다른 문항들이 모두 전통적 가족 형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역코딩으로 응답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맞춘 뒤 위 과정에 따라 이항변수 처리하였다. 5점 척도인 1개 변수에 대해서는 '찬성(1),' '약간 찬성(2)'를 묶어 '찬성(1)'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님(3),' '약간 반대(4),' '반대(5)'를 '비찬성(0)'으로 코딩하였다. 물론 응답범주 중간에 위치한 '찬성도 반대도 아님'을 '찬성'으로 볼지 '반대'로 볼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응답자가 '찬성'을 선택하지 않은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각 관측변수의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찬성'에 포함시킬 뚜렷한 이유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비찬성'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석에서는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가족가치관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거나 낮추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명변수로 활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성별(여성 0, 남성 1), 연령, 교육수준(고졸,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주관적 계층의식(1~9), 고용 상태(비고용 0, 고용 1), 결혼 상태(미혼, 기혼, 이혼/사별, 동거), 종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이며, 이중에서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는 범주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에서는 가족가치관 유형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 의향은 '미혼과 기혼 중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귀하는 장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의 3개로, 범주들 간 위계나 순서가 없기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설명변인으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족가치관 유형과 더불어 앞 문단에서 언급한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 의향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응답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18~39세 전체 청년 표본 311명 중 무자녀 집단인 250명만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되었다.

IV. 분석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08년과 2018년 KGSS 자료를 활용해 가족가치관의 시계열 변화를 간략히 추적해보겠다.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한 모든 관측변수 문항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2008년 자료에는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이 3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문항들만을 활용하였다. 2008, 2018년 자료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들은 성 역할 규범 관련 문항 2개('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와 가부장제 관련 문항 1개('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이며, 각 문항에 대한 연도별 응답의 기술통계는 <표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가족가치관의 시계열 변화

문항	년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	반대 (%)	응답자 수 (명)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 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008	26.76	22.94	50.31	654
	2018	5.49	19.61	74.90	255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008	48.64	24.92	26.44	590
	2018	9.41	14.12	76.47	255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 되어야 한다	2008	72.59	11.64	15.77	653
	2018	35.29	20.00	44.71	255

주: 자료: KGSS 2008, 2018

가족가치관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2008, 2018년의 응답결과를 참조할 때,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이 커다란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해서는, 2008년 26.76%이던 동의 비중이 2018년에는 5%대로 급격히 줄었고, 반대 비중은 24.59%p 늘었다. 또한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거 약 절반에 달하던 동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반대 비중은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끝으로 가정 내 아버지의 권위의 무조건적 존중에 대해서는, 72.59%이던 동의 비중이 절반 수준인 35.29%로 줄었으며, 반대 비중은 약 3배 증가하였다. 즉,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1. 가족가치관의 세부 유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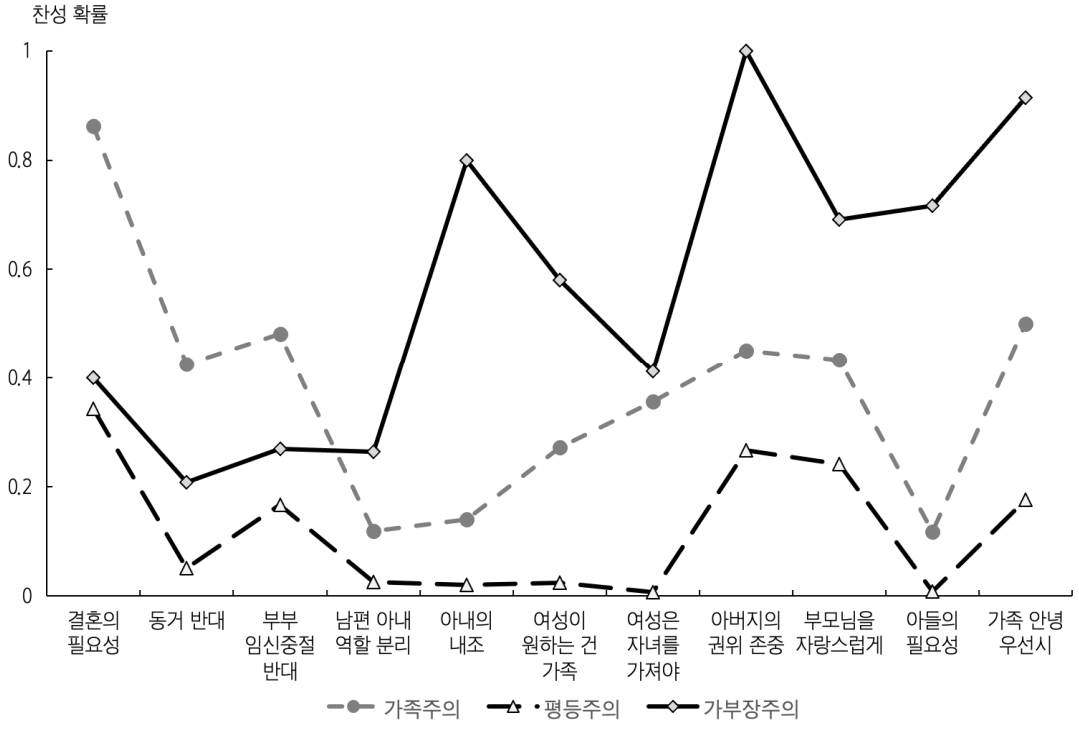
첫 번째 분석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을 세부 유형으로 나눠보았다. 앞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재코딩된 11개의 관측변수 문항들을 가지고 Stata 17을 활용해 잠재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의 개수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치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살펴볼 때, BIC는 집단 개수가 작을수록 낮아졌지만 AIC는 집단

개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AIC보다는 BIC를 바탕으로 모델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AIC 역시 모델을 선정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방법론 문헌들(Burnham & Anderson, 2004; Kuha, 2004)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AIC와 BIC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낮은 3개 집단 모델을 최종 채택하였다. 최종 선정된 3개 집단 모델에 대한 한계평균(marginal means)과 한계확률(marginal probabilities)을 토대로 각 가족가치관 유형의 세부 문항별 찬성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집단 개수에 따른 잠재집단분석 사후분석 결과치

집단 개수	LL ratio	p > chi2	AIC	BIC	
2개	604.325	1.000	3238.388	3324.403	
3개	544.981	1.000	3203.044	3333.937	최종 채택
4개	505.710	1.000	3187.773	3363.543	

[그림 1]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잠재집단분석 결과: 문항별 찬성 확률



그래프 상 검은색 점선으로 나타난 '평등주의' 유형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다. 평등주의자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동거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부부의 임신중절에 반대할 가능성도 가장 낮다. 즉,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

을 가진 청년들은 남녀가 혼인을 통해 결합해 아이가 생기면 인공유산 없이 출산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부부의 성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평등주의자들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동의 확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계를 잇기 위한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0에 수렴했다. 즉 이 유형에 속한 전체의 60%의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전통적 형태의 가족제도와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어서, 그래프에서 회색 점선으로 나타난 '가족주의' 유형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이들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동거와 임신중절에 대한 반대 비율 역시 세 집단 중 가장 높다. 즉, 평등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가족주의 유형에 속하는 청년들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제도를 옹호한다. 부부의 성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평등주의 유형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찬성 확률을 보였다. 그중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 또는 자녀라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찬성 확률을 보였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04~0.5 수준의 찬성 확률을 보였으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0.12의 매우 낮은 찬성 확률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가족주의적 가족가치관을 가진 전체 1/3가량의 청년들은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분리 규범에는 반대하지만, 현행 가족제도에 따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난 '가부장주의' 유형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가장 작은 집단이다. 이들은 결혼의 필요성 인식, 동거와 임신중절에 대한 반대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성 역할 규범과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세 집단 중 가장 높다. 특히 성 역할에 대한 문항 중 아내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 확률이 1에 수렴했고,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찬성 확률을 보였다. 즉, 전체 청년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가부장주의적 가족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은 현행 가족제도에 대한 옹호 성향은 크지 않으나, 성 역할과 가족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청년 세대의 가족가치관은 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평등주의(60%), 가족주의(30%), 가부장주의(10%) 순으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이 이질적인 유형으로 분화될 것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한다. 그런데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위 결과에서는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가설 1-2는 지지되지 못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제도적 가족을 옹호하는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하게 지지하는 가부장주의 유형은 전체의 10%, 30%에 해당하는 상대적 소수였고, 평등주의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다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현행 제도상 가족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가치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청년들이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Stata 17의 'predict' 명령어를 활용해 응답자들을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배정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가족가치관은 가족주의, 평등주의, 가부장주의 세 가지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이며, 준거는 평등주의이다. 설명변인으로는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계층의식, 결혼 상태, 종교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결과를 로짓계수가 아닌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Ratio, RRR) 형태로 제시하였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가치관 유형에 미치는 영향: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준=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	
	RRR	s.e.	RRR	s.e.
성별 (남성=1)	2.743***	0.897	3.105**	1.569
연령	1.092**	0.038	1.100*	0.056
교육수준 (기준=고졸)				
2/3년제 대학	0.256**	0.135	0.188**	0.137
4년제 대학	0.427**	0.166	0.314**	0.173
대학원 이상	0.220**	0.153	0.485	0.411
계층의식	1.200*	0.117	1.201	0.174
고용여부 (고용=1)	0.728	0.245	0.407*	0.202
결혼 상태 (기준=미혼)				
기혼	0.739	0.335	2.096	1.398
이혼/사별	0.690	0.891	2.663	3.971
동거	0.520	0.660	4.337	4.921
종교 (기준=무교)				
불교	1.539	0.799	2.930*	1.863
기독교	4.143***	1.601	2.536	1.445
천주교	0.968	0.456	0.681	0.555
상수	0.016***	0.016	0.005***	0.007
LR χ^2	61.990			
d.f.	26			
n	306			

주: * p<0.10, ** p<0.05, *** p<0.01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적 혹은 가부장주의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이 남성일 경우,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평등주의보다 가족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가 약 2.7배 높았고,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는 약 3.1배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은 평등주의 유형에 비해 가족주의 유형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를 각각 10%가량 높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높아질수록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 고졸 응답자들에 비해,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가 각각 74.4%, 57.3%, 78% 낮았다.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이 각각 81.2%, 68.6% 낮았다.

이어서 계층의식, 고용여부, 종교는 가족가치관 유형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식의 경우,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를 20% 높였다. 고용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등주의보다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가 약 60% 낮았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에 속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기준인 무교에 비해 기독교는 평등주의보다 가족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를 약 4.14배 높였고, 이 관계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불교는 평등주의보다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상대위험도를 약 2.9배 높였다. 모든 상수항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가족가치관 유형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분석에서는 가족가치관 유형과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종속변수는 '있다,' '모르겠다,' '없다' 세 가지 응답범주를 가지는 미래 자녀 출산 의향이며, 준거는 '없다'이다. 설명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등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더해 가족가치관 유형을 투입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결과를 상대위험비(RRR)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준인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 유형은 미래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없다')에 비해 유보적('모르겠다')이거나 긍정적인 태도('있다')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유형은 출산 의향에 대해 '없다'보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를 약 29배 높였고, '있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는 약 7배 높였다. 다음으로 가부장주의 유형은 출산 의향에 대해 '없다'보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를 약 247배 높였고, '있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는 약 17.5배 높였다. 즉, 가족가치관이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일 경우, 가족가치관이 평등주의인 경우에 비해 미래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유보적이거나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평등주의자들은 가족주의, 가부장주의 유형에 비해 출산 의향에 있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도 연령과 결혼 상태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

수록 출산 의향에 대해 '없다'보다 '있다'고 응답할 상대위험도가 약 14% 낮았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의향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다. 결혼 상태의 경우, 결혼을 한 사람들이 미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유보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은 출산 의향에 대해 '없다'보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가 약 162배, '있다'라고 응답할 상대위험도가 약 4.2배 높았다. 이혼/사별의 경우, 미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유보적 태도를 보일 상대위험도가 약 41.8배 높았다. 모든 상수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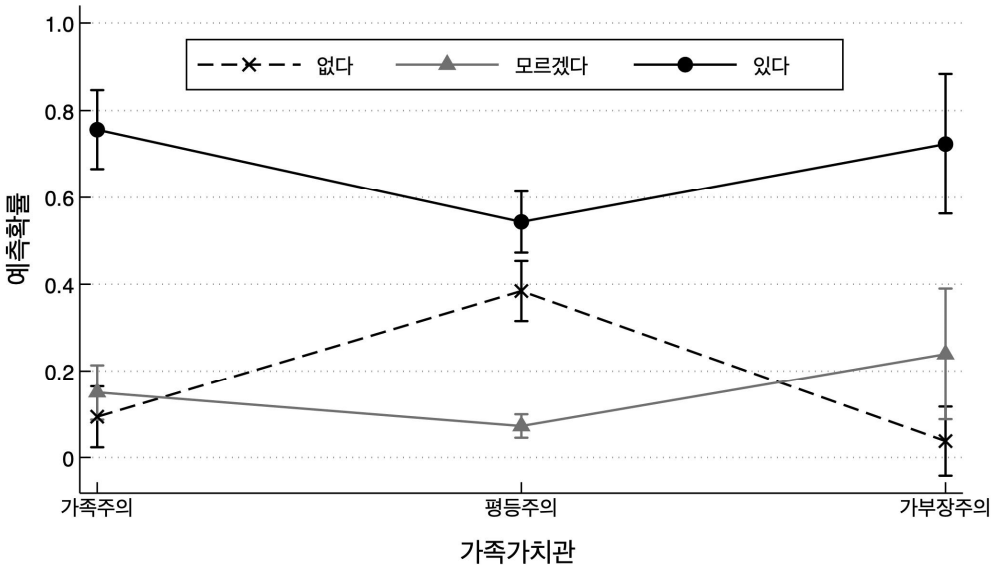
<표 6> 가족가치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 의향: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준=없다	모르겠다		있다	
가족가치관 (기준=평등주의)	RRR	s.e.	RRR	s.e.
가족주의	28.970***	28.699	7.060***	3.658
가부장주의	247.012***	402.937	17.469**	21.652
성별 (남성=1)	0.388	0.301	1.760	0.607
연령	1.052	0.082	0.863***	0.036
교육수준 (기준=고졸)				
2/3년제 대학	1.270	1.455	1.410	0.901
4년제 대학	0.320	0.346	0.928	0.461
대학원 이상	1.067	1.667	4.568	4.399
계층의식	1.294	0.311	1.129	0.124
고용여부 (고용=1)	0.797	0.668	1.688	0.683
결혼 상태 (기준=미혼)				
기혼	162.089***	172.474	4.171**	2.997
이혼/사별	41.819*	81.915	0.000	0.003
동거	0.000	0.000	0.448	0.512
종교 (기준=무교)				
불교	6.275	7.454	1.841	1.328
기독교	0.453	0.435	1.141	0.599
천주교	0.546	0.557	1.032	0.526
상수	0.003**	0.009	16.247**	18.396
LR χ^2	136.500			
d.f.	30			
n	250			

주: * p<0.10, ** p<0.05, *** p<0.01

[그림 2]는 Stata 17의 'margins' 명령어를 활용해 각 가족가치관 유형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한계확률을 예측해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세

[그림 2]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출산 의향의 예측확률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다. 특히 가족주의 유형은 출산 의향에 있어서 가장 확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래 출산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모두 매우 낮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확률은 가장 낮으면서 부정적인 응답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평등주의 유형의 경우 유보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 확률이 4배가량 높았으며, 긍정적인 응답 확률은 0.6에 못 미쳤다. 한편 가부장주의 유형은 긍정적인 응답에 있어서는 가족주의 유형과 비슷하게 높았지만, 유보적 응답의 확률이 부정적 응답의 확률보다 조금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다항 로지스틱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 유형인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는 평등주의 유형에 비해 출산 의향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한계확률을 살펴볼 때도 가족주의와 가부장주의 유형의 긍정적 출산 의향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평등주의 유형의 부정적 출산 의향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 2-1와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 2-2가 모두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미래 자녀 출산을 고려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이 청년 세대의 가족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것이 그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은 평등주의(60%), 가족주의(30%), 가부장주의(10%)로 분화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 대다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현행 제도상 가족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 청년들이 각 가족가치관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평등주의에 비해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췄다. 셋째, 가족가치관은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가족가치관은 부정적 출산 의향보다 유보적 또는 긍정적 출산 의향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반대로, 평등주의자들은 부정적 출산 의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칫 평등주의가 문제의 원인이므로 전통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에 대한 온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부터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멀어졌다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참조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선택지일 것이다. 또한 다중평형 이론에 따르면 평등주의적 가치가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한 이상 전통사회로 회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의 전반적 확산은 오히려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를 참조할 때, 위와 같은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오히려 평등주의자들이 출산을 희망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평등주의자들의 긍정적 출산 의향이 타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그림 2] 참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즉, 중요한 문제는 평등주의의 척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을 보유하는 것이 자유로운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제약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미(2015)의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는 노동시장의 조건이 여성들의 선호 실현을 막은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요인의 결합이 야기하는 종합적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밝힐 수 없었지만, 최소한 청년들이 보유하는 가족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이 향후 인구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이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의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청년들의 60%가 지지하는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동거에 매우 친화적이고 결혼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

식하는 만큼, 법적 혼인을 전제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포섭이 이들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주로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여러 한계를 지닌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수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 표본은 잠재집단분석의 경우 311명, 출산 의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250명이었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 출산 의향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국내 데이터가 매우 한정적이었기에 다소 적은 수의 표본임에도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더 큰 청년 표본을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평등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밝힐 수 없었다. 평등주의자들이 정말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원하지만 구조적·현실적 이유로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는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답해야 할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호 (2017) “한국 청년 꿈-자본 개념의 구성과 측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75-193.

김석호 (2020)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미출간원고.

김영미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31(3): 1-30.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신윤정·이명진·전광희·문승현 (2020)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이삼식·최효진 (2014)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자영 ... 이윤석·천현숙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석·김필숙·심규석 (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조윤명·김영미 (2020) “생계부양자모델 전환기의 젠더규범과 출산 의도: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43(4): 69-97.

진미정·한준·노신애 (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가족과 문화》 31(1): 166-188.
채민진 (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학교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49-55.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21) 《2021년 3월 인구동향》 .
홍성희 (2020) “남녀의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과 계획 자녀수의 영향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2): 69-87.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Arpino B., Esping-Andersen, G., & Pessin, L.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Becker, G. S.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Billari, F. C., Philipov, D., & Testa, M. R. (2009) “Attitudes, Norms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Explaining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439-465.
Brinton, M. C. & Lee, D.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Burnham, K. P. & Anderson, D. R. (2004) “Multimodel Inference: Understanding AIC and BIC in Model Selec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3(2): 261-304.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Hakim, (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3): 349-374.
Knight, C. R. &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Kuha, J. (2004) “AIC and BIC: Comparisons of Assumptions and Performanc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3(2): 188-229.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van de Kaa, D. (2002)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6th Welfare Policy Semina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당장 생존 급한데'…초경쟁사회, 90년대생은 출산이 두렵다" <중앙일보> 2021/3/4.
"연애·결혼·출산 안 하는 이유는…청년들의 토로" <연합뉴스> 2018/9/2

캐주얼 섹스 '게임'에서의 규칙과 능숙한 플레이어 되기
: 데이팅 앱 '틴더'로 이성애 섹스를 하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이상희

1. 들어가며

생애주기 담론에서 청년의 섹스는 규범적인 것으로 얘기되며 청년은 섹스의 주체이자 때로는 섹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나이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1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연구'에 따르면 20대는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연령대로, 여성은 흥미가, 남성은 파트너가 없어서 하지 않거나 못했다.[1] 청년의 섹스리스 상황을 보여준 연구의 결과는 '3포 세대' 논의와 유사하게 여유 없는 사회나 저출산 담론, '젠더 갈등'과 함께 주목되었다. 청년들은 주목받아야 할 정도로 섹스를 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섹스가 가능한 공간은 늘어나고 있다. 낯선 사람들끼리 성적인 기류를 만들기도 하는 클럽이나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 주점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엔 언제나 존재하며 모텔은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 경쟁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나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며, 한국 사회에서 모바일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하 '데이팅 앱')은 불건전한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진다(윤덕환 외, 2019). 어떤 청년들은 분명 섹스를 하고 있다.

본 글은 데이팅 앱 '틴더Tinder'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20~30대 청년 여성에 주목한다. 불법 촬영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성폭력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일상에 실재하는 일이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공포와 불안이다. 남근주의적 성 규범 속에서 섹스하는 여성은 낙인을 뒤집어쓴 '창녀'나 지배당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며, 여성의 섹스는 이성연애 안에서 상대방과 분위기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섹스로 이해되기도 한다(Cahill, 2017). 이 여성들은 이성 연애 규범 밖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고, 연애의 낭만과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한다. 이들도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낯선 이와의 성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안다. 그럼에도 '그냥 하고 싶어서' 앱을 켠다. 출산은 당연히 아니고, 강한 결속의 관계를 바라지도 않는 이들의 섹스는 기대하는 미래가 없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틴더로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청년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틴더 앱을 삭제한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서,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도 있지만 불쾌하거나 폭력을 경험해 그만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만난 여성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성폭력 피해가 있었거나 만남 중 이와 관련해 공포를 느꼈거나 불쾌한 순간

1) BBC 코리아, (2021. 07. 06), "성인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 왜?', www.bbc.com/korean/news-57733853 (접속일자 2021.08.15)

을 겪었다. 이들은 틴더를 그만하는 것이 아닌 지나간 과정을 되짚고 사용의 전략을 바꾸며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다. 틴더 공간과 사용의 방식을 분석함을 통해 연구자는 어떠한 재미가 이 섹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와 함께 낯선 이와의 섹스를 둘러싼 다층적 긴장을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020년도에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심층 면접과 (디지털)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에 들어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모집됐다. 첫 번째로는 총 4명의 연구자 지인으로 연구 과정 초기에 이들을 통해 앱의 분위기와 진행방식, 만남의 형태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틴더를 통해 직접 구인한 경우로, “캐주얼 섹스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을 구해요:)”라고 적어 놓은 자기소개를 보고 온 참여자들이다. 주로 이성간 만남을 위해 사용되기에 여성인 연구자가 직접 여성 사용자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남성 지인에게 부탁해 동일 방식으로 인터뷰이를 구해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총 16명으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인을 통해 연락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친구나 섹스 파트너로, 총 9명을 소개받았다. 이 중 남성 면접자는 4명이다.

남성 인터뷰이를 구하는 과정은 꽤나 지난했다. 틴더를 통해 연락한 30명 중 거진 한 명의 남성과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거의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이후 거절당했다. 본 연구의 남성 인터뷰이들이 집단적 대표성을 가진다거나 사용에서의 유의미한 경향성을 얘기해 준다고 보긴 어렵다. 많은 남성이 자신의 자기소개에 섹스 파트너를 구한다고 써놓고 있지만 본 연구의 남성 인터뷰이 4명은 자신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적어놨다. 그러나 본 글이 캐주얼 섹스를 하는 여성을 주제로 하나 이성간 성교를 다루는 만큼 남성 역시 본 연구에서 주요한 행위자다. 따라서 남성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연구자가 참여관찰 과정에서 대화하거나 만났던 사람들과 여성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후술하겠으나 섹스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는 자기소개는 특정한 사고를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틴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남성 참여자를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소개를 수정한 채 몇 사람을 인터뷰 목적 없이 만났다. 여러 사용자들의 경험을 듣는 청자인 동시에 직접적 사용자라는 위치는 이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들과 분위기, 대화의 방식과 재미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게 했다. 틴더 참여관찰과 함께, 집단적 반응을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여초 커뮤니티 A와 남초 커뮤니티 B에서 틴더에 대해 어떤 글들과 반응들이 올라오는지를 관찰했다.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보다 게시물 내용이나 글의 작성자가 본인의 감정을 설명하는 모습은 다소 과장 되어있다. 특히, 댓글과 함께 집단적 놀이문화처럼 소비되어 극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사회적 담론과 상호작용하기에 이를 완전히 가상으로 치부할 순 없다. 다만 연구자가 각 커뮤니티의 역사를 오랫동안 따라가기보단 틴더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들을 이해해갔기에 두 사이트의 작성자들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는 않았다.

3. 소셜 데이팅 앱 '틴더' : '문란'하고 '가벼운' 사람들의 섹스 공간

소셜 데이팅 앱 '틴더'는 위치기반서비스 중심의 실시간 데이팅 서비스로 2012년에 미국에서 출시되었다. 다소 모호한 구분이나 데이팅 앱은 연애나 결혼처럼 특정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앱과 만남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 글에서 다루는 틴더는 만남의 목적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지도 않고 사용자가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도 사진, 나이, 닉네임으로 최소화 되어있다. 사용 목적이 유연하고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는 점은 틴더가 유독 '캐주얼'한 앱으로 인식되는 이유기도 하다. 관계의 가벼움을 일컫는 '캐주얼 casual'은 헌신과 상호노력을 전제한 연애 관계의 대척점에 있다. 캐주얼 섹스는 서로를 잘 모르거나 낭만적 친밀성이 없는 관계에서의 성행위로(Garcia et al., 2012), '캐주얼한 관계'는 '연애는 하지 않지만 섹스는 하는 관계'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는 캐주얼 관계라는 표현 대신 '가벼운 관계'라고 주로 사용되며 '무거운', '진지한' 관계가 이 반대에 있다. 앞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이 모두가 캐주얼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틴더 사용자들의 자기소개에서는 "진지한 관계"나 "연애"부터 "FWB[2]/ONS[3]", "동네친구", "실제 만남 x, 카톡 친구만" 등 앱을 사용하는 다양한 목적이 적혀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림 1] 틴더 설정 화면

[그림 2] 프로필 카드 (출처: 틴더 홈페이지)

틴더의 모든 것은 한 장의 카드로부터 시작된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성별과 나이, 상대방의 물리적 거리차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카

2) 'Friends With Benefit'의 약어로 친구이나 이익(섹스)이 있는 관계로, 연애 관계로 호명하진 않지만 섹스를 하는 상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3) 'One-Night Standing'의 약어로 일회적인 섹스 파트너 관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원나잇'으로 줄여 사용된다.

드가 기기 화면에 뜬다([그림 2]). 카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연 사진으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사진의 구성, 사진에 부여된 분위기와 이미지 등 시각적 감각이다. 사용자는 [그림 2] 하단에 있는 아이콘 'x'나 하트 모양을 눌러 싫음과 좋음을 표현할 수도 있으나, 프로필을 왼쪽으로 밀어 '싫어요NOPE'를, 오른쪽으로 밀어 '좋아요LIKE'를 표시할 수 있다. 카드의 전체 배경을 차지하는 사진 왼쪽 하단에 이름, 나이, 자기소개, 직장, 학교가 적혀 있으며, 화면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밀기만 해도 다음 카드가 등장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밀어서 표현하는 '스와이프swipe' 기술은 카드 선택 시 시선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카드 선별 속도를 높인다.

사용자 카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보단 이미지와 추상적이고 즉각적 감각에 집중한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른 데이팅 앱인 '위피'나 '아만다'의 경우 사용자의 객관적 정보(학력, 직업 등)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 입력이 필수거나 보고자 하는 상대방의 성격, 외형 등을 선택하는 반면에 틴더는 거리와 성별만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정보들은 직업, 학교를 제외하곤 감각적 정보다. 사진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 좋아하는 가수, '브런치', '타로점'과 같이 나의 관심사와 취향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해시태그'는 상대방의 분위기를 상상하게 한다. 곧, 사용자들은 '나'의 정보를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닌 자아연출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기호를 드러낸다.

서구권에서 틴더의 캐치프레이즈는 "매치. 채팅. 데이트Match. Chat. Date"로 틴더에서 제공하는 만남의 형식이다. 이에 반해 데이팅 앱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는(윤덕환 외, 2019) "친구를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4]"을 강조하며, '가벼운' 사람들의 '불건전'한 원나잇 앱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다. 사용자들도 앱과 캐주얼 섹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고 있다. 성별을 불문하고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틴더 알람을 꺼 놓고, 일과 시간에는 확인하지 않으며, 사용 사실도 공공연히 얘기하지 않는다.

낭만적이지 않은 관계에서의 섹스는 사회적 규범과 맞물려 불건전함으로 이해되며 특히, 여성들은 이 속에서 '틴더 하는 여자애'로 낙인 된다. 사회적 정상성normality에 따르지 않는 부정적 속성으로의 낙인stigma은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별하며 불명예 효과를 광범위하게 만든다(고프먼, 2009). 낯선 사람과 섹스한다는 사실은 곧바로 그들을 '문란'하고 진중치 못한 사람으로 만든다. 성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는, 성폭력 피해가 불가피하고 언제든 예상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강간 문화rape culture(호연, 2019) 속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폭력에 자신을 내던지는 여성이자 언제나 성행위에 동의해주는 '쉬운' 여자가 된다. 이들의 개별적인 행동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규범적 이성애 연애 관계 밖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번 섹스한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존재는 축소된다.

20~3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A 커뮤니티에서 틴더가 얘기되는 방식은 틴더 사용자들이 놓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틴더로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 드는 생각'이라는 한 사용자의 질문에 5분만에 36개의 댓글이 달렸다. '걍 만나나 보다'를 비롯한 9개의 반응을 제외한 나

4) 틴더 블로그, '[Part 2] 틴더, 서울 시내를 점령하다!',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036524&memberNo=42159897 (2021.07.17. 접속)

머지는 '한심', '더럽다', '성병 있겠네', '난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야' 등으로 이들은 '문제'가 있고 지양해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섹스와 연애는 흥미로운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남자친구/남편과의 섹스, 오래된 지인과 섹스 후 연애하게 된 얘기처럼 특정한 관계 안에서의 섹스 얘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직장과 관련된 얘기에서는 일 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동료와 상사에 대한 비난과 친구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싶다는 욕망과 필요성에 관한 글도 왕왕 올라오지만, 이들의 욕망과 삶은 다른 이들에게 가볍거나 한심한 것이 아닌 공감되는 글이다. 상호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은 관계, 일시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만난 관계 자체가 틴더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관계가 섹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점에서 낙인화가 이루어진다. 저 글은 틴더로 '연애하는 사람'에 대한 글이지만 이 공간 자체가 성병과 폭력의 장소이기에 이를 사용하는 여성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다.

낙인은 캐주얼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시선만이 아니다. 캐주얼 섹스를 하는 남성 역시 여성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낮잡아 보기도 한다. 남초 사이트 B에선 캐주얼 섹스를 "돈 안 내는 성매매" 정도로 인지하고, 여성들을 '아무나와 자는 여자'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여성들은 상대방을 거절하고 "걸레 같은 년"이나 "다른 사람이랑은 자는데 나랑은 왜 안 자?"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연구자 역시 인터뷰이를 구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주 이런 일에 맞닥뜨렸다. 이들에게 '섹스를 연구하는 여성'은 성욕이 강하고 언제나 섹스할 의사가 있는 존재다. 대체로 거절 이후 더 이상의 답변은 오지 않지만 종종 거절의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답장이 오거나, 자신이 그렇게 매력이 없냐는 식의 짜증 섞인 말을 듣곤 했다. 이들은 섹스의 의사를 물었으나 제안한 것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에 그들은 억울하고 이유를 알고 싶다.

책임감이 적은 섹스는 부정적 인식과 문란의 낙인을 만들지만, 동시에 대다수의 여성 연구참여자들이 이 섹스를 하는 이유다. 이들은 자신의 어떻게 인식되는 지도 알고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당한 여성들은 캐주얼 섹스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사용을 숨겨 낙인을 최대한 피하고 남성을 최대한 골라내 자신의 다양한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고프먼(2009)은 낙인 집단은 부정한 평가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거나, 낙인의 요소로부터 거리를 두며 낙인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한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낙인을 마주하거나 낙인에 대항한다고 얘기한다. 이 '문란하고 가볍고 쉬워진' 여성들도 '걸레'로 이 낙인을 수용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문란한 사람은 아님을 강조하며 자신을 거리두기도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특정 상황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낙인의 수용이 아닌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규범적 섹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며 자신이 "걸레"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것으로 이 섹스를 얘기한다

'가벼운 만남'이 가지는 중요한 규칙은 싫다고 한 것을 또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 자신이 보여준 삶 외에 다른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들의 만남은 직장동료 관계와 유사하다. 서로가 알아야하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알고자 하면 불편하다. 친밀감의 정도를 쌓는 것은 좋으나, 이는 필요한 친밀성이고 정해진 부분

이상에 갑자기 들어와선 안 된다. 친해져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주말에 같이 등산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건 관계적 특성과 친밀함 정도에 따라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기본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이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으며, 불만은 생계 문제로 대충 넘겨지거나 삭여야 한다. 틴더하기는 의무도, 필수도 아니고 생계도 얽혀 있지 않다. 싫은 사람과 꾸역꾸역 만날 필요도 없고 불편함을 감당할 이유는 더 적어진다. '그러할 이유가 없다'는 상태의 공유는 관계의 신호가 된다.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관계는 끝난 거다. 다시 연락할 명분은 없으며, 눈치 없는 사람만 다시 연락한다. 상대방이 보여준 삶의 영역이 아닌 곳에 갑자기 깊숙이 들어가지도, 상대방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예상되지 못한 만남의 무게를 얹었다면 그의 관계는 끝날 수 있다.

4. 게임의 규칙과 플레이어 실천

'틴더하기'는 크게 프로필, 스와이핑, 메시지, 데이트, 섹스,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나'는 프로필을 만들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스와이핑 해 매치가 되면 틴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다. 직접 만나는 약속까지 잡았다면 데이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이후, 섹스를 한다. 섹스는 궁극적인 단계일 순 있지만 오르가즘이 이 과정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각 단계들은 그 자체의 재미와 동학을 가진다. 모든 단계는 하나의 게임 '스테이지'처럼 기능하며 각 단계는 그 다음과 연결되고, 게임의 조건과 재미는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다. 최종 보스를 죽여 게임의 끝을 보는 것이 플레이어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이 재밌어야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나'는 잠시 지루하더라도 궁극적으론 재밌어야 한다. 여성 사용자들에게 '상대방이 '충분'한 지 판단하기'는 이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임무로 플레이어들은 각 단계 시스템과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적합성은 단연 '재미'다. 상대방에 따라 사용해야 할 전략과 보상이 달라지기에 이 '게임'의 규칙과 보상은 고정 되어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규칙 안에서 행위자들은 움직인다. 한 게임은 몇 시간 내에 끝나기도 하며 때로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된다.

4.1. 프로필

프로필은 대화의 포문을 연다. 프로필을 서로 '좋아요' 해야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도 있지만,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특징을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프로필은 이 만남의 재료다. 프로필 만들기는 일종의 전략 게임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곧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이 말이 어떻게 읽히는 지와 함께 이 프로필에 반응할 타겟을 예측한다.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좋아요'할 지를 예측하고, 현재 자신의 틴더하기가 재미가 없다면 프로필을 수정해 더 다양한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수정한다. 6년째 틴더를 사용하는 A(32)는 이전에 'FWB'를 프로필에 적어 놓았다가 지금은 '동네 친구'로 수정했다. 성적인 기대는 동일하지만, 성적 파트너를 구한다고 적어 놓았을 때 계속 대화의 주제가 성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자 소개를 바꿨다. 모든 과정이 연결된 하나의

‘놀이’일 때, 그에게 곧바로 진행되는 섹스는 틴더의 재미를 반감한다. 이때 A의 동네 친구는 ‘편하게 만나 성적인 기대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 섹스를 할 수도 있는 사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프로필 만들기가 원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언어 게임이라면 프로필 보기는 특정 이미지를 뽑아 내기 위한 추론의 과정이다. 프로필은 제시된 형식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사진과 짧은 글이라는 고정된 형태로 제시한다. 여성 사용자들은 프로필을 보며 상대방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을 유추한다. 공통점이 없는 낯선 타인들은 대화가 가능한 소재를 하나하나 찾아야 할 때, 사진은 단순히 외형이 아닌 ‘상대방’을 알려준다. 똑같이 술을 먹는 사진이어도 정적인 느낌으로 앞에 술잔이 놓인 것과 동적인 자세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은 상대방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어떠한 곳에서 어떤 자세나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지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유추하게 할 뿐 아니라 성격을 상상할 수 있게 하기에 대화 내용의 진행방식이나 대화에서의 태도 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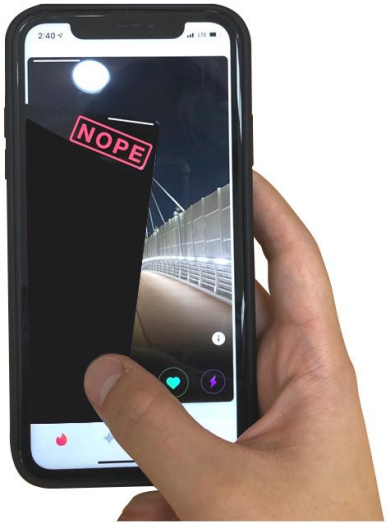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배열한다. 프로필은 자신이 얼마나 상황에 유연하고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다른 사용자의 프로필에서 느낀 감각과 틴더 경험은 자신의 프로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용자의 자기소개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자세히 올려 놨고 부정적 서술의 반복이 ‘나’에게 그를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했다면, 자신의 프로필에 적어놨던 부정적 표현은 긍정적 표현으로 바뀐다. 반대로 메시지를 재밌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상대방의 프로필에 있었다면 이 경험을 녹여 프로필을 변경한다.

4.2. 스와이핑

틴더의 핵심적 기술인 스와이핑은 사용자들에게 일상과 분리된 장소감을 만든다. 이용자 활동의 기초를 점유하는 플랫폼(서르닉, 2020)은 플레이어들에게 성긴 규칙을 제시하며 행동을 유도한다. ‘나’는 무한정으로 나오는 카드를 처음 손을 올려놓았던 위치를 옮기지 않고 계속 고를 수 있다. 빠른 평가는 매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매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카드 평가의 기회를 주기에 선별 속도는 빨라진다. 더불어 ‘나’는 타인의 평가를 알 수 없다. 상대방의 ‘좋아요’만 알 수 있는 ‘나’는 쉬지 않고 평가한다. 일방적인 선택자라는 착각은 사용자 사이의 위치를 재배치한다. 실제로는 같은 규칙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가 움직이지만, 환상 속에서 동적이고 온전한 내 시선의 흐름은 주체적 감각으로, 타인은 정적이고 제시된 정보 더미로 경험된다.

놀이화로 인해 ‘틴더하기’의 목적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다. 소액대출 P2P 플랫폼을 연구한 인류학자 라오Rao(2021)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채무의 상품화가 행위자 간의 거리감을 만들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재설정한다고 분석한다. 타인의 채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의 도덕적 책임을 재구성하고 금융적 주체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한다(ibid.; 103). 투자자 정체성은 이 관계가 타인의 빚으로 형성되었다는 자각을 가리며, 이 비인격화depersonalized 과정은 행

위자들의 도덕성 붕괴를 예방한다(ibid.; 111). 틴더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카드화(물화)와 끊임없는 카드 제공은 다른 행위자를 카드로 축소하며 놀이의 감각을 만들고 사용자들에겐 (게임) 플레이어와 같은 정체성을 만든다. 겉모습 평가를 무례하다 여기는 '나'는 유도된 비인격화의 과정을 겪으며 틴더를 일상과 분리한다. 이는 관계에 대한 도덕률을 변화시켜 이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답장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무디게 한다.



[그림 13] 스와이핑 (연구자 사진) : 처음 핸드폰을 잡은 손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상대방을 고를 수 있다. 다른 움직임은 최소화된 채 화면 틀 안에서 시선만 이동한다.

B(22)의 이야기는 스와이핑이 추동하는 감각이 가져다주는 의식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틴더에서 사용자 간의 위치는 타인을 비인격화 하는 과정에서 잡힌다.

> "은근히 인스타(그램) 보는 거랑 비슷하게 멍하게 넘기게 되지 않아요? 하루종-일 매칭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알맹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인 거죠. [매칭 잘되지 않아요?] 아, 근데 유독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오래 안 하다가 하면 나한테 라이크가 쌓이잖아요. 그럼 넘기자마자 매칭될 수도 있고, 넘기고 나중에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스와이핑을 빨리하면 그 사람이 아직 누를 기회가 없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맛이…, 아! (깔깔대면서 손으로 무릎을 치며) 이거 낚시네! 아, 이게 또 그게 진짜 낚시 같네. 중독성 있다니까! 틴더 앱이 안정성이 진짜 별로잖아요, 앱이 다 렉 걸리고 그래서 카톡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진동 손맛은… 진짜 잘 만든 거 같네요. [게임 같은 설명이네요.] 근데 그 진짜 게임 같은 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다양하게 현타[5]가 오는 거 같아요. SNS 많이 할 때 느끼는 현타가 하나 있고, 매칭이 잘 안 되면 드는 현타가 있고, 게임에 중독된 거 같은 데에서 오는 현타가 또 있는 거 같고. [저는 사람 평가를 되게 쉽게 하게 되니까 오는 현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좀 극복한 거 같아요(웃음). 무게를 안 두는 거죠.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진이나 프로필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랑은 뭐 연애할 수 있을 것 같고, 취향이 매력적이고 '나랑 잘 맞

5)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로 헛된 꿈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를 깨닫게 되는 때(네이버 국어사전). '현자 타임'의 줄임말로 초기 인터넷상에서는 사정 이후 찾아오는 무념무상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자극이나 무언가에 몰두한 순간이 끝난 이후 자신이 무얼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까지 더 너르게 사용된다. 본문에서 인터뷰이의 '현타 온다'는 말은 한창 스와이핑을 잘하고 있다가 무의미한 것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은 순간적 기분의 감각이다.

는다,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프로필이 웃기면 넘기고, 별로다 하면…." (B, 22)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 목적을 얘기할 때 더 도드라지는 감정은 성적 충동보다 심심함이다. 따로 해야 할 것은 없고 시간은 때우고 싶고, 사람 구경하는 재미는 있고, 그러다가 만날 사람이 생기면 좋고, 섹스하면 더 좋다. 설령 오늘 누구와 자야겠다는 일념으로 틴더를 하더라도 스와이핑을 하다 보면 마치 남의 SNS를 보듯 멍하니 보게 되고, 잘생긴 사람의 카드는 틴더의 '좋아요'가 아닌 인스타그램의 '좋아요'처럼 누른다.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잘 생겼다는 순간적 인상이 더 큰 것이다. B에게 스와이프는 기본적으로 프로필이 괜찮은 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빠른 카드 회전에서 그는 대체로 누구를 '좋아요'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카드는 당연히 어디선가 거절당하고 있겠지만, 거부됨은 경험되지 않는다. 일방적 평가는 이 순간을 결과가 없는, 미래성 없는 시간으로 위치시킨다. 인과적이지 않고 책임이 없는 나만의 스와이핑은 이 행위를 놀이로 위치시킨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가상'의 놀이는 B에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부담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비인격화된 개인의 정보는 '고르기'에 사용자를 더 몰입하게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고작 카드를 평가하는 행위이며, 설령 인격으로 정보를 인지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과정과 생각을 모른다. 이때 B는 낚시꾼으로, 상대는 피동적 대상인 물고기가 된다.

4.3 메시지

서로 '좋아요'를 보내 매칭 되었다면 이젠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프로필에 고작 한 장의 얼굴 사진만 올렸거나, 자기소개에 '안녕!'과 같은 것을 적었다면, 이 대화는 '매뉴얼'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매뉴얼 대화'는 인사, 사는 곳, 직업,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로 마치 일종의 사용 규칙처럼 모든 사용자가 주고받는 문답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가 임의로 부른 대화 방식이다. 순서만 다르고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구성된 질문들이 오가기에 다소 따분한 대화라는 의미로 붙인 '매뉴얼 대화'는 상대방이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아냈거나 이 순간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언제나 종료된다. 유사한 대화의 반복이 상대방을 지루하게 해서도 있지만, 이때 다뤄지는 소재들은 생각보다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 부적합하다. 인사를 하고 어디 사는지 묻고 뭐하는 사람인지 묻고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전공을 묻고 인류학과라고 대답한다. 모든 메시지들은 이어지지 않고 각각의 질문으로 조각나 있다. 인류학과까지 알게 되었으면 다음에 물을 법한 개인 정보는 별로 없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일 외에는 잘 모르기에 인류학과를 잇는 질문도 쉽지 않다. 그러고 받은 답변들은 『호모 사피엔스』를 읽어봤다는 당황스러운 말이나, 대뜸 '그렇다면 인류애가 좋냐'는 망한 농담(이길 바라는 말)이다. 호모 사피엔스에 얹을 말도 없고, 아마 상대방도 알고 한 얘기도 아닐 것이고, 틴더에서 사피엔스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 인류애는 망한 농담이니 결국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야 하는 건 오롯한 나의 몫이었다.

4.3.1 고유성과 인격 부여

재미가 틴더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명제라면, 이전 단계들과 다르게 여기선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유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스와이핑 체계 안에서 자신은 정적으로 제공된 카드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이 대화의 재미를 서로가 끌어가야 한다. 플레이어에겐 대화를 흥미롭게 이끌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대화는 이 상황에 '나'를 몰입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많은 카드 중 하나가 아닌 고유성과 인격을 받는다.

섹스로의 빠른 도입은 한편으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화 순간의 재미는 없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목적은 어떠한 지,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될 지를 추측하는 과정과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재미다. 탐색하고 추측하고, 이 추측을 기반으로 다른 전략을 세우고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재밌으며 이 긴장감은 섹스에 대한 기대를 배가한다. 재미는 몰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몰입할 수 없는 플레이어는 해당 게임에서 이탈한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하더라도 몰입하지 못하면 시간은 지루하게 간다. 대화는 인위적이지 않아야 하기에 앞의 말을 발판삼아 점진적으로 메시지를 나눠야 한다. '갑자기' 성적인 주제가 나오면 대화는 붕 뜬다. 급작스러운 주제 변경은 대화 자체의 재미와 긴장감이 중요한 사람들에겐 특히나 상대방이 대화에 충실히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대화는 이미 멈췄고 몰입은 깨졌다.

분위기의 깨짐이 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앞서 언급했듯 대화는 둘만의 것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 능숙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대화도 섹스도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은 금방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상대방이 상상하는 가능성들과 경쟁한다. 상대방의 기대엔 객관적 지표가 없으며, 익명의 것들은 경쟁할 수 없다. 프로필에 적어 놓은 나의 이름은 상대방에게 무수한 정보 중 하나다. 특징 없는 것들은 그냥 수많은 유사한 것 중 하나다. '나'는 아주 사소하더라도 나만의 특별함을 상대방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이름이 아닌 '웃긴 애'처럼 그냥 특징적인 감상일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각은 우리 둘만의 고유한 순간을 만드는 초석이 되며, 만남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늘어나는 메시지만큼 조합할 수 있는 정보들의 양은 많아지며, 내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영역도 커진다. 추측과 추리는 상대방에 대한 흥미를 돋운다. 알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유적인 재미이자, 추리의 성공은 짜릿함, 대화의 여유와 자연스러움을 가져온다.

프로필 심사를 지나 서로에 대한 인상이 생기면 비로소 상대방은 카드 더미 밖으로 나온다. 더 이상 일방적인 평가는 없다. 카드를 골라낸 '나'는 여전히 평가와 거르기를 하고 있지만 솎아내야 되는 것들의 성질은 달라졌다. '카카오톡'과 같이 별도의 개인 메신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책무가 부과된다. 개인 메신저는 '일상의 장소'다. 서로 모른다는 것, 언제든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개인 메신저는 온전히 분리된 도덕률의 장소가 아니다. '나'는 틴더의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개인 메신저는 상시 확인한다. 개인 메신저는 틴더와 일상 경계에 서있다. 일상 규칙의 침입은 가상적 공간에서 만난 익명적 존재에 실체성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메시지 초반, '사라진' 상대방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이곳은 그런 공간이다.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잘 얘기하다가 사라진 상대를 얘기하는 인터뷰이들의 말엔 의아함과, 때로는 짜증이 섞인다. 어떤 사용자들은 메시지가 끊긴 이유를 찾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사라진 이유가 자신이 충분히 웃겨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한 어떤 남성은 "여자들은 자신이 웃겨 주길 바란다"며 짜증을 낸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상대방이 떠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대화가 끊기면 더 이상 상대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물어볼 사람도, 추측할 방안도 없다. 감정을 쏟아내다 이들은 다시 '그냥 이런 공간'이라는 평으로 돌아간다. 그들 역시 대화의 흐름이 끊긴 거 같아서, 귀찮아져서, 직장이 바빠져서, 재미가 없어져서, 더 잘 통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이 께름칙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답장하지 않는다. 대화의 초반과 무르익은 시점의 도덕과 감정은 다를 지라도 이곳은 그런 공간이기에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을 찾을 뿐이다.

4.3.2 '유해한' 남성 거르기

[그림 16]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streetfighter.com/how-to-play/, 2021.08.15. 접속)

사용자들은 상대방 공격에 줄어들고, 소진 시 패배하는 '체력 게이지'(①), 상대방을 공격할 시 늘어나며 다 차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필살기 게이지'(⑦)처럼 서로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플레이 시간은 시스템적으로 고정되거나 플레이 방식으로 인해 제한된다. 플레이 시간의 제한으로 퍼즐 게임에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다. 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상대도 움직이는 전투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반격해야 하기에 길게 고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일대일 격투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나'의 움직임은 상대방이 빠르게 플레이할수록 빨라진다. 상대방의 타격 속도보다 느리면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서로가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이면 시간 내에 승부를 볼 수도 없고 몰입도가 떨어진다. 시간은 긴박감을 만들며 이 순간에

몰두하게 해준다. 틴더 메시지에서부터 정적인 카드는 움직이는 상대가 된다. 메시지 보내기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길게 고민해서는 안 된다. 반응은 상대방의 속도와 함께 가며 적절한 움직임은 이 순간에 몰입하게 해준다.

시간적 제한과 함께 정보 역시 제한된다. 모든 플레이어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나'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없다. 격투게임 플레이어들은 제시된 캐릭터 정보를 통해 캐릭터의 공격 방식, 기술을 알 수 있고 캐릭터별 장단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캐릭터별 '공략법[6]'을 익히고 실제 플레이에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관찰한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도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 예측과 함께 상대방이 예측하는 '나'를 예측해야 하는 모순에 봉착한다. 게임은 인지적 과정을 수반하지만 시간과 정보의 제약으로 이들의 합리성은 제한된다. 요구되는 반응 속도가 빠르기에 기술의 체현과 '감'도 중요해진다. 필승 공략이 있더라도 몸에 베인 움직임과 순간적 판단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순간적 예측과 움직임은 이성적 작업인 동시에 감각적이고 반사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적확한 판단은 기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틴더는 '게이지'처럼 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없고 정해진 공략법도 없으며 누군가를 패배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이곳은 현실의 정체성과 일정 유리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적 장소지만 완전한 가상이 아니다. 여성들은 젠더 위계 구조의 불안과 위험을 감각한다. 이들은 정보를 조합하고 추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걸러내지만 시간적 제약은 정보 판별에 한계를 만든다. 이중적 예측을 시도하더라도 상대방도 움직이기에 주어진 행동은 충분히 고려될 수 없고 지나친 고려는 흐름을 끊어 재미를 반감한다. 공통적 목적이 재미일 때, 더군다나 '나'는 면접처럼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응을 주고받아야 한다. 제한적 조건 속에서 추론은 몸의 감각을 요구한다.

여성 사용자들은 자신의 '촉'으로 '쎄한' 사람을 또다시 거른다. 직관적 감각인 '촉'과 '쎄함'은 인지적 판단 과정이 아니다. "'쎄함'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동안 만들어진 경험의 빅 데이터가 주는 경고"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말은 '쎄함'을 가장 잘 설명한다. 찰나의 부정적 감각을 당신은 지나치면 안 된다. 이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라고 나의 인생이 친히 보내주는 경고다. 제한된 위험과 실존하는 위험 속에서 촉은 판단 과정의 일부를 차지한다. 쎄한 상대방은 인과적 판단 없이 걸러진다. 앞서 기술한 B(22)는 본인의 거르기 과정을 재확인하던 연구자에게 "듣고 보면 저도 그런 식으로 뉴런이 연결된 거 같기는 한데…그냥 싫어서 안 누른"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며 자신을 "병아리 감별사"라고 얘기한다. 촉감과 시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병아리의 성별을 파악해 '살릴' 병아리를 고르는 감별사처럼 이들 역시 손과 눈의 익숙한 경험적 감각을 사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쎄한' 남성을 거른다.

스와이핑 단계부터 촉은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격을 줄 사람을 바쁘게 지목한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은 크게 (1) '물리적 (성)폭력을 가할 사람', (2) '지나친 자기애로 이 상황을 일방

6) 사전적으로는 남을 공격하여 그 소유물을 빼앗는 방법을 의미하나 게임 상에서는 게임의 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

적으로 자신이 가져갈 사람', (3) '편협함으로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 사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각은 분리되어 감각되기도 하지만 유사한 시나리오 아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이 '촉'은 적확한 판단으로 평가되나 걸러진 사람은 말이 없기에 이것이 정당한 판단인지 선입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인지와 감각은 판단의 과정에서 구분되지 않고 얽혀 있다. 틴더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진이지만 본 연구의 여성 참여자들이 이미 '싫어요'를 누른, 헬스장에서 찍은 4장의 사진을 올려진 카드는 대표적으로 쎄한 사진이다. 일상적 장소인 헬스장이 부정적 정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상자와 같다.

(3) : 몸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X는 '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함의 기준이 몸인 X는 외형만을 중요 대화 소재로 가져갈 것이며,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단일한 기준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할 것이다.
(2) : X는 스스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자신의 괜찮음을 뽐내고자 할 것이다. 대화는 결국 '괜찮은' X의 몸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X는 일방적 화자, 나는 방청객이 될 것이다.
(1) : 남성의 몸만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격적'일 것이며 지배적인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종합〉 : X와의 대화와 섹스는 재미도 없고 그는 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럴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X는 폭력적이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상자의 내용은 메시지도 아닌 사진 평가 과정으로, 해당 남성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는 폭력적인 글은 적지도 않았고, 사진은 그가 일상적으로 가던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특정한 몸의 형태를 만들어 사진으로 기록하는 '바디 프로필'이 유행하는 요즘, 헬스 하는 사진은 특이한 일도 아니고, 아마 X는 '보기 좋은 몸'이 섹슈얼한 분위기를 줄 거란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의 억울함대로 사진 자체엔 문제가 없다. 다만 단편적인 이미지는 특정 주제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며, 이 이미지가 적합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지에 대한 여성 인터뷰이들의 대답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상대방을 주로 묘사하는 방식엔 흥미로운 코드가 공유된다. "(내가) 리드할 수 있는", "말을 잘 듣는",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남성의 사회적, 육체적) 조건을 과시하지 않는" 남성, 소위 '전통적 남성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선택된다. 성별 이분법 안에서 '강한', '거친', '지배적인', '이성적인', '능동적인', '자아self', '적극적인positive'은 대표적으로 남성성과 연관되었다고 간주되는 의미들로 '여성적인 것'은 이에 종속된 형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정희진, 2011). 여성들은 근육 많은 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남성성'만' 읽히는 대상과 만나길 거부한다. 실제 그 남성이 지배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이 만남의 특징으로 돌아가보면 이들은 '그러할' 이유가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 유해할 남성과의 만남을 굳이 시도할 이유가 없다. 틴더하기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유희적 시간은 좋아야 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에 더해 이미 거절한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갈 기회는 없기에 자신의 판단은 재평가되지 않기에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것 같은 상대방은 배제된다.

"(섹스를 잘한다고 강조하는 애들은) 섹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얘기 궁금하지도 않고, 아, 물론 못하는 건 관심 있어요. 근데 뭐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못하면. 크다 이런 것도. 저열 플러스 믿을 수 없음 플러스 자의식 과잉!!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거 같다?] 네네.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알 바인가 싶어요. '왜 내가 그걸 궁금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자신에 대한 어필이라고 생각하지?' 뭐 이런 거. 물론 작으면 궁금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다들 크고 다 휴지심이래요. 짜증난다고 진짜. 근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 그리고 너무 무지한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자도 질의 크기나 경부 길이도 다 다르고 큰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경부 길이가 짧고 이러면 파열될 수도 있고 질병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이해가 거의 없이 자기가 자기들 사이에서 답습한 파워 다이나믹을 그대로 보여주는." (C, 28)

C에게 성적 이야기를 다른 대화보다 먼저 꺼내거나 성적인 요소들만 강조하는 대화를 하는 남성은 "섹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 5년차 틴더 유저 D(28)도 모든 이야기를 성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거나 성기와 '잘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하게 얘기한다. 필승 공략은 없다. 몸과 몸의 자극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성관계는 상호의 반응을 충실하고 빠르게 관찰해야 하는 영역이다. 성기를 강조하는 상대방은 자신에 취해 파트너를 타자화 할 것이며, 성기 강조는 상대방과의 섹스가 그의 삽입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곧, 여기서 걸러지는 '유해한' 남성은 팔루스 중심적 남성성phallo-centric masculinity을 드러내는 남성으로 이해된다. '남근phallus'이 페니스가 아닌 이에 부여된 일련의 의미들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의미할 때(루빈, 2015; 122~123), 이들은 포식자적predatory 남성으로 이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피해와 착취로 여겨진다. 이 평가는 섹스에 선행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적 경험이 완성될 것이고 이를 자신이 충분이 이끌 수 있다는 남성의 강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이 남성을 '무능력한' 섹슈얼리티 행위자로 상상하게 한다. 결과까지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분명한 목적(섹스)이 있으면 스몰토크 하는 그 과정이 되게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밌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그리고 틀에 맞춰진 얘기만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 사진에 프랑스가 있다 이러면,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뛰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그 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언제든 사용하는 그런 형식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a, 남, 32)

남성들 역시 자신이 유해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한다. 대화에 주도적인 참여자 되기와 섹스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로 이루어진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나 꼭 그렇지도 않다.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필수적으로 타인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반응과 참여가 동시에 필요하기에 주도적인 대화 참여자는 지배적일 수 없다. 영업직 회사원 a는 퇴근 시간이 늦고 불규칙하다. 틴더를 처음 사용하던 2017년도에 그는 성적인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함"을 느꼈다. 나의 기대감은 당연히 항상 충족될 수 없다. 강한 성적 기대감은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키기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기분이 "처지"는데, 대의 불일치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에겐 "대화가 재밌게 흘러간다면" 그것만으로 틴더의 재미는 충분하다. 이에 더해

2016년부터 틴더를 사용한 패션업계 종사자 b(남, 33)는 자신의 방법이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안다. 그는 목적(섹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을 아끼고자 성적인 제안을 메시지로 하지만 바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깝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바로 섹스하자는 메시지가 오면 “남자인 저도 그런데(무서운데) 상대적으로 더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메시지를 나누며 이들은 낮은 수준일지라도 일종의 신뢰를 쌓는다. 서로의 반응과 텍스트에 집중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유대를 형성하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유해한 남성 거르기는 사회적 위계 안에서 자신의 조건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앎에도 자신의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를 선택한 사람으로 위치된다. 추론과 대화는 재미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에게 전가된 플레이의 조건으로 존재하며 존재적 위협에 대한 자기관리는 개인의 몫이 된다. 여성들은 틴더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나’를 온전히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과 반응을 계속 파악해야만 하는 멀티 플레이어로 위치되길 강요받는다. 여성들이 각각의 플레이를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이 공간에서의 성적 재미는 현실화된다. 이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응답 능력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미시적 반응을 포착해야 하는 순간으로 여기는 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4.4 (유사) 데이트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면 (유사) 데이트가 진행된다. 간단히 차를 마시거나 술 한 잔을 나누고, 어떤 이들은 밥을 먹기도 한다. 틴더 데이트는 연애 관계 안의 만남은 아니지만 유사한 만남의 형식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성적 긴장감을 목표로 한다. 데이트의 재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모호함에서 오는 긴장감이다. 데이트의 질문도 직접적이어선 안 되고, 추파는 ‘선’을 넘어선 안 된다. 관계가 데이트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긴장감은 연애 이전 단계인 ‘썸’과 유사하다. 친구도 연인도 아닌 ‘썸’에는 배타적인 결속력도, 연애 관계의 책임감도 없다. 어떤 관계에도 소속되지 않기에 이 관계성은 불안정하지만, 정해진 것이 없기에 이들은 이 순간에 더 집중한다. 사회적 책임이 규정되지 않은 썸의 관계는 규범적 이성 연애 관계에 비해 부정적 시선을 덜 받는다(양동옥, 김경례, 2017).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 데이트는 규범적인 낭만성의 틀은 참고하지만 연애 규범은 요구될 수 없다. 성긴 틀은 행동 반경을 자유롭게 하며, 평소 연애 관계에서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유효성’ 확인이다. 여성에게 성적 매력의 자기계발과 자기구성이 중요해진(이희영, 2010) 동시에 보편적 삶의 위기감 속에서 개인의 불안 관리 능력은 사회적으로 더 요구된다(벌랜트, 2015).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틴더를 하기보단 대체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긴 특정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 주변에서 자신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무능력의 순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몸으로 자신이 생각될 때, 빠르고 확실한 자극과 직설적인 매력 확인, 그러나 관계적 부담은 없는 이 상황은 자신의 유효함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2017년부터 틴더를 사용한 E(26)는 사용 초기엔 섹스 자체보다 처음 만난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는 호기심이 좋았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는 나를 원하는” 틴더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매력의 유효함은 빠르게 확인되는 반면 실제로 만나더라도 자신과의 여타 접점이 없기에 실수에 대한 상대적 부담과 상처는 덜하다. 자기계발의 사회에서 나의 모든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 원인처럼 여겨질 때, 접점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주변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하며 관계적 압박감을 줄인다

F(25) 역시 마찬가지다. 4남매 중 장녀인 그는 오랜 기간 콜센터 정규직과 대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 쉬지 못했다. 이전에도 그러하긴 했으나 대학을 졸업한 현재, 코로나19로 부모님의 수입이 줄면서 임금의 대부분을 가계 살림을 위해 사용한다 그는 자신이 아무 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 때 더 많이 틴더를 사용한다. 그에게 일상은 주어진 것들을 아등바등 해내야 하는 영역으로 선택권이 없는 반면 틴더는 F에게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은 원하는 남성을 고르고, 그 남성은 호의적이다. 재미가 없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해볼 수 있다. 설령 그 친절이 섹스를 목적으로 베풀어져도, 자신의 통제감이 ‘진실’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섹스는 재밌고 자신에게도 재밌는 섹스는 자신에게도 목적이다. 유효함의 확인은 실존적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상의 불안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할 때 회피성에만 주목해 상황을 읽어갈 순 없다. 자신의 일상과 미래와 분리된 이 만남은 일상에 다른 순간을 만들며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4.4.1 “티키타카” : 의도적 균형 유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Krüger&Splide, 2020)과 재미의 결합은 상대방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한다. ‘나’와 상대방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기에 이 공간에서 사람은 흥미로워져야 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터뷰이들의 공통된 말은 이 만남이 긴장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G(32)는 연애보다 더 많은 기술과 노력이 여기서 요구된다고 얘기한다.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반응과 대화를 적절히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은 이 관계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이다. 모든 개인은 주어진 무대(사회)에서 연기하는 사람이지만(고프먼, 2016) 앱을 통해 만난 낯선 사이끼리 인위적이지 않은 대화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다소 모순적인 바람은 자연스럽고 충실한 고도의 연출과 연기를 요구한다. 자연스러운 연기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신호로 구성되어야 하기에 이성애 규범적 연애 각본은 이 때 참고지점이 된다.

> “연락을 하면서 ‘아! 자야지’ 이런 느낌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되게 나한테 호기심, 이제 흥미를 주는 사람인지를 대화하면서 판단하고,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된 이후에 전혀 그 친구가 먼저 권하지도 않았고 그 잠자리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다음에 또 만나자는 식으로 되다가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였죠. 분위기로만 가는, 상대방을 잘 모르는 섹스는 별로였던 거 같고. 대화를 좀 며칠 동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중략) 섹슈얼한 목적을 적어 놓은 사람이랑은 별로 자고 싶지도 않고 물론 간편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성욕이라든지 그냥 자고 싶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사람이 너무 재미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전혀 줄 여지가 없으니까. 머리에 그것만 찬 남자한테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

요. 대부분의 여성이 그렇지 않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딜도를 사지. 왜 걔를 만나서." (H, 25)

우연히 가게 된 모임이 재밌어 홀로 상경해 3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는 I에게 이곳의 대화는 "죽음의 티키타카"다. 낯선 사람과 대화의 공백을 만들지 않고,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몸짓과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내고, 나의 말만 하지 않고 상대방도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이 순간은 쉽지 않다. 동시에 상대방 역시 자신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빈 공간과 상상의 영역을 마련해주고 대답자-질문자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가 이미 자연스럽다면 필요 없지만, 때로는 이러한 몸짓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며 분위기를 형성하고 대화의 속도감을 올린다. 그의 말대로 오르가즘만을 원했다면 딜도로 자위를 하는게 더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다. 자연스럽고자 행하는 의도적 연기는 상대방의 옆자리에 가도 되고, 손을 잡기에 충분히 괜찮은, 자신의 매력을 상대방이 알아내고 서로가 서로를 꼬시기에 충분히 친밀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완전한 가상의 연출이거나 목적만을 위한 반응은 아니다. 친밀한 상황의 연출은 혼자 할 수 없다. 친밀함은 관계적 감각이기에 상대방도 그 신호를 읽어내고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관계는 연애가 아니기에 수행해야 할 각본 역시 모호하다. 어지럽혀진 각본에 의해 상대방의 기대와 신호는 포착되기 어렵고 예측은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관심과 반응은 항시 관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흥미는 아무 연결점이 없는 이 사이를 지탱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서사를 만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관계성은 온전히 연기만으로 성취할 수도, 수단일 수만도 없다.

흥미로운 대화인 티키타카는 동일한 수준과 질문의 대화 다발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발판삼아 쌓아지는 대화다. 대화의 핑퐁을 유지하려면 지나치게 공을 강하게 치는 사람도 약하게 치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던지는 이야기들에 따라 반응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힘을 빼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힘이 빠져가고 있는지는 빠르게 인지돼야 한다. 대화의 점진적 쌓임을 위해서 점점 강하게 공을 넘길 수 있지만 강하게 쳐도 되는, 속도를 내도 되는 한계 지점은 명확히 존재한다. 무엇이든 혼자 앞서 나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게를 지우지 않아야 하는 규칙 아래에서 한계는 시스템상으로, 상대방과 나에 의해 설정 당해진다. 즉, 가벼운, 부담이 없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공간적 이해는 평등해지기 위한 협의의 과정이라기보단 조율을 하지 않기 위한 균형 유지 작업으로 균형적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을 만든다.

4.4.2 구별짓기

경제인류학자 살린스Sahlins(2014)에게 일반적 호혜가 즉각적 보답을 바라지 않는 주고받기의 과정이라면 균형적 호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동등한 가치나 효용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이러한 주고받기에서 사회관계는 물질적 흐름에 더 의존하며 덜 '인격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얘기된다.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비/물질적 흐름의 균형성을 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되기 전에 상시적으로 조정한다. 대화와 감정, 돈의 흐름은 계산될 수 있는 균형성 안에서 이해된다. 데이트에서 지불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된다.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 관계

를 바라며 여성은 고르는 위치기에 '희소성의 원칙'에 입각해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과 지불이 남성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자신에게 부담을 만들 수 있기에 같이 지불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부담하기에 의례적으로 이 관계에서도 남성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커피나 맥주 한 잔과 같이 부담이 적은 것만 받는다. 결제를 한 사람은 일종의 '채권자'로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한 발언권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여성들에게 빚진 사람owed person이 되지 않겠다는 감정은 자신이 강하게 성애화sexualized되었다고 느껴질 때 강화된다. 일방적인 큰 지출은 '관계를 매개하는 유효한 경제적 실제(젤라이저, 2005; 379)'를 초과하며 사전에 설정된 각각의 섹스를 분리하는 기준을 모호하게 한다.

> "친구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재밌고 잘 맞는 애들이면 만나고 근데 말해봤는데 너무 아저씨 같고 너무 거기(섹스)에만 몰두하고 그러면 차단해요. … 지금 (오래된 파트너) 두 명은 계속 카톡을 하거든요. 일어났다, 알바 갔다.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근데 그런 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하루에 답장을 한 번 한다거나 섹스 얘기 나올 때만 오도도도 한다든가. 그러면 좀 그렇죠. 만나기를 정할 때, 당일에만 하고 연락이 쏙 없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하냐고 물어보면 차단해요. [친구처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다가 만나면 어색하더라고요. 현타가 와요. 너무 도구로 서로가 보는 느낌 (침묵). [어떤 느낌이에요?] 엄마한테 미안한…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이 많기는 하잖아요. 찔린다고 해야 하나? 찔리는 느낌. [사회적 시선 때문에 받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별로인 거 같아요. … 지금 만나는 애들이랑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만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 만나자고 하고 만나고 그랬던 거 같아요. 별말 안 했던 거 같고.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오래 만나는 애들은 오래 얘기를 하고 만났던 거 같아요. 말이 통하니까 그것(섹스)도 할 수 있는 거고." (J, 25)

J는 본인의 얼굴은 올리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외형과 '진지한 관계 안함'이라는 말을 자기소개에 적어 놨다. 그는 메시지의 초반부터 성적인 대화를 하지만 섹스만을 위한 대화와 만남은 거부한다. 대화의 재미보다도 이것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나치게 돈을 많이 지불하거나 돈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성매매-캐주얼 섹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자신의 성이 구매 당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애정을 보여주는, 공평하지 않은 감정은 '연애 관계의 섹스-캐주얼 섹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부담감을 준다. 비/물질적인 것들의 흐름은 참여자들이 섹스의 의미를 정의하지 못하더라도 이 섹스와 다른 섹스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이 구별은 다시 자신의 관계 지도에 데이트를 위치시키고, 자신이 할 행동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을 구분한다.

돈의 흐름은 반대로 일종의 전략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K(26)는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모텔비를" 자신이 낸다. 희소성의 원칙이 애당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지불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불이 곧 권력으로 이해되는 것, 지불을 했다는 사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여러 문화적 기제를 경유하지만 통상적 연애 각본과 다른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동등한' 가치를 경유한 '공평한' 관계의 균형은 비가시적이며 단순비교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균형적 호혜의 유지를 통한 구별짓기는 틴더하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섹스를 가능하게 한다.

4.5 섹스하기

> "(제게) 섹스 자체는 '위험'이었어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섹스하는 상황이. 남성 자체가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섹스가, 누군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만질 수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원나잇 같은 건 더 생각도 안 했었는데. … (19년도에 처음으로 틴더에서 만난) 토머스랑 (할 때), 그 더러운 고추를 밖에서 빨았어요. 뭐, 어쨌든 그날 이후로 걔랑 짤이었어. 그날 이후로 고추에 대한 포비아가 좀 없어졌어요. 한 번 보니까. 그전까지는 본 적도 없거든요, 실물로.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액은 맛이 별로다'란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전까지 생각할 때는 불알이 달린 것도 징그럽고, 내 거가 더 익숙하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 (L, 30)

낯선 이는 '나'에 관한 얘기를 들을 곳이 없다. 오직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전체다. 이 섹스가 나의 평판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여성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 혹은, 흥미롭지만 잘 시도해보지 못하거나, 않는 모습을 연기해 본다. '패널티'가 없기에 설령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다음 번의 시도와는 관계가 없다. 성공한 행위는 특정 공간에서 수행된 단발적 연기가 아닌, 나중에 어느 순간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페르소나로, 혹은 일상과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의 지점으로 이동된다. 이때 틴더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자기-실험'의 장소를 제공한다.

실험실은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공간이자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다. L은 28살에 틴더로 만난 남성과 첫 섹스와 첫 연애를 했다. 그전까지 그에게 남성과의 섹스는 '위험' 그 자체로, 누가 나를 만진다는 상상은 불쾌하고 때로는 공포로 다가왔다. 상대방과 쉽게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이 상황을 일상과 분리될 수 있는 순간으로 위치시킨다. 연속적인 '나'의 삶과 분리된 공간 형성은 부정적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섹스에 호기심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었다. L의 결론적인 평가는 이 공간이 실험실임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 그에게 상대방과의 섹스는 실패였다. 상대방이 예상대로 '위험'이어서가 아니라 "더러운" 고추와 "맛이 별로인" 정액 때문이다. 그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실험 결과, 섹스는 위험도 쾌락도 아닌 그저 그런 일이었다.

규범적 이성 연애 안에서의 섹스와도 캐주얼 섹스는 실험적 성격으로 비교된다. 연애 안에서의 성관계도 즐거움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진전과 상호에게 관계의 안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에(이안나, 2013) 종종 성관계는 상호의 욕망과는 별개로 상황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성관계가 상황적으로 주어지기에 이를 거절하는 건 더 큰 부담을 필요로 한다. 전제된 규칙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결합할 때 여성의 성적 욕망은 주로 상황, 분위기, 상대방에 "반응 responsiveness"하는 섹슈얼리티로 그려진다(Angel, 2021).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혹은 좋은 관계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관계가 곧바로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상황과 성적 재미가 항상 공명하진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상황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성행위는 젠더

화 되어있다.

성별을 불문하고 연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이들이 일회적인 성관계보다 장기적인 섹스 파트너를 선호했다. 앞선 과정을 반복하며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건 미지의 일이며, 일정의 서사와 규칙을 공유한 관계는 다양한 섹스의 재미를 가져온다. 첫 섹스에서 서로는 몸의 감각을 공략하고 공략된다. 감각 공략은 기민한 살핌과 빠른 반응을 통해 가능하다. 상대방의 반응은 성적 긴장감과 공략자의 재미를 고조시킨다. 따라서 일방적인 공략은 없다. 응시 되고 만져지는 쾌락을 인정하지 못하면 섹스는 지속될 수 없다. 종종 여성 인터뷰이들은 삽입 섹스의 고통을 얘기한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밑에 누워 성기를 받고 있다고 자각되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섹스를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퀴어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 M(25)은 "글 쓸 때는 (삽입 섹스에) 의미를 두지만, … 여기에 내 존재 자체의, 내가 정복당하는지 아닌 지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요구하는 것만 하는 상대방은 지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 섹스, 어떻게 보면 가장 능동적인 듯한 섹스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리더Reader(2007)에게 행위자agent는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며 능동적일 수만은 없으며, 저항을 견딘다. 컵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컵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ibid.; 588)처럼 섹스에서 응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응시 된다. 삽입이 곧바로 자신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며, 응시가 곧바로 비윤리적 폭력인 것도 아니다. 피학적 성향의 섹스를 하는 N의 이야기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제가 마조히스트라서 좋아하는 플레이를 바이오(자기소개)에다가 써 놨어요. 성향자[7]가 아닌데 라이크를 누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소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사디스트적인걸 제가 요구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사디스트가 아닌데 스팽킹을 요구하거나 브레스 컨트롤[8]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다. 근데 만나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섹스를 하면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느낌이라.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바닐라 섹스[9]만 취향인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 때 확 식어서 그만하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 [다들 그렇겠지만 상대방의 섹슈얼한 반응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런 걸 정말 즐기고 거기서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랑, 때려 달라 해서 때리는 사람이랑 (다르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자기 걸로 넘어가야겠다는 게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 …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때릴 때 표정이 흥분되는 표정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를 때의 표정이어서. 이건 정말 아닌 거 같다 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섹스 중에서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섹스 중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N, 31)

상대방에게 맞고 목을 졸리는 마조히스트 여성 N의 섹스는 가장 수동적이고 무능력하며 타자화 되어야 한다. M은 기존의 관계에서 폭력적으로 제압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학적인 성향이 없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폭력으로 읽으며 그를 거절했다. N은 상대방에게 맞고, 상대방은 M을

---

7) 구속Bondage, 훈육Discipline, 지배/굴종Dominance/Submission, 가학/피학Sadism/Masochism적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성향자'로 부른다.
8) 브레스 컨트롤breath control은 목을 조르거나 도구를 사용해 강제적으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행위다.
9) 별도의 BDSM 성향이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때리며 흥분하며, M은 그 사람을 보고 쾌락을 느낀다. 그의 섹스엔 응시가 얽혀 있으며 무력해 보이는 목 졸림은 재미를 만들어내는 재료이자 흥분 자체다. N의 감각이 읽히는 것처럼 그 역시 상대방의 반응을 읽어내며 폭력과 흥분을 구분한다. N은 이 섹스의 행위자다. 앞서 언급한 F(25)에게도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와 피드백이다. 그는 남성이 섹스의 과정에서 많은 표정과 신음을 내길 바란다. "혼자서 막 하고 있"어 자신을 공략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반응을 이끄는 건 재미다. F는 펠라티오와 같이 구체적 성적 기술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기도 하지만 자신의 반응으로도 타인의 반응을 이끈다.

5. 나가며 :

성적 낙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의 섹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중요한 게임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낯선 남성은 자신의 다른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플랫폼의 유도 하에 여성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며 섹스와 성을 둘러싼 재미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본 글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노력을 알고 있고 이 과정에 이미 익숙한 사용자다. 이들은 어느 순간 익숙해졌지만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고 신호를 분별해가는 작업을 잘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낙인과 마주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며 때로는 이 위험을 긴장감으로 읽어내고 낙인은 마음 속에서 무시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캐주얼 섹스는 이 여성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것'이다. 끊임없이 제시되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반해 '그냥'이란 답변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섹스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이외의 답은 어렵다. 서두에 밝힌 것과 같이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성적 폭력과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들은 위험을 이미 알고 있고 때로는 경험한다. 사회적 부정성과 불안을 중심으로 한 성적 논의를 통해 분명히 우리는 보다 안전한 섹스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캐주얼 섹스는 불안을 감수하는 섹스로 매우 충동적이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며 재미는 계산된다. 특정한 섹스가 어떤 감정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섹스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자장을 보여주며, 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논의되어야 한다. 이때,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집단화된 낙인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보다 입체적으로 섹스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참고 문헌>

고프먼, 어빙(Goffman, E.) (2009). 『스티그마』(윤선길, 정기현 역). 한신대학교출판부

_____ (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진수미 역). 현암사

서르닉, 닉(Srnicek, N.) (2020). 『플랫폼 자본주의』(심성보 역). 킹콩북

루빈, 게일(Rubin, Gayle) (2015) “여성 거래 : 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 『일탈』 (신혜수, 임옥희, 조혜영, 허윤 역). 현실문화

벌랜트, 로렌(Berlant, L.). “잔혹한 낙관주의”, 『정동이론』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갈무리

살린스, 마샬(Sahlins, M.) (2014). 『석기시대 경제학』 (박충환 역). 한울아카데미.

일루즈, 에바(Illouz, E.) (2013). 『사랑은 왜 아픈가』 (김희상 역). 돌베개.

윤덕환, 채선애, 송으뜸 (2019). “사교 및 소셜데이팅 앱(어플)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1-27.

이안나 (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텔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여성학연구, 23(1), 41-73.

이희영 (2010).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6, 181-219.

정희진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 교양인

젤라이저, 비비아나(Zelizer, V.) (2009). 『친밀성의 거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역). 에코리브르

호연(강호연). (2019). 그것을 ‘강간문화’로 부른다는 것은. 함께가는 여성, 227, 3-5.

Angel, K. (2021). *Tomorrow sex will be good again : women and desire in the age of consent*. London; Brooklyn; Verso Books.

Garcia, J. R., Reiber, C., Massey, S. G., & Merriwether, A. M. (2012). Sexual hookup culture: A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 Journal of Division 1,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2), 161-176.

Krüger, S. & Spilde, A. C. (2020). Judging books by their covers - Tinder interface, usage and sociocultural implication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3:10, 1395-1410.

Rao, Y. (2021). Dreaming like a market: The hidden script of financial inclusion in China's P2P lending platforms. *Economic Anthropology*, 8: 102-115.

Reader, S. (2007). The Other Side of Agency. *Philosophy*, 82(4), 579-604.

BBC 코리아, (2021. 07. 06), “성인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 왜?’, www.bbc.com/korean/news-57733853 (접속일자 2021.08.15)

틴더 블로그, ‘[Part2] 틴더, 서울 시내를 점령하다!’,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036524&memberNo=42159897 (2021.07.17. 접속)

세션 1-2.
담론, 공간, 연결

사회: 김철식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유윤열 (성공회대)	한국 시민운동의 포스트 담론 경향 비판: 탈(脫)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태(고려대)
임정빈 (경상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	이기홍(강원대)
김종훈 (서울대)	서울시 PC방의 공간분포 분석과 유형화	김철식(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서울대)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 국내 학부 성악 전공자 대상 파일럿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인관(숭실대)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포스트담론 경향 비판: 탈(脫)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본)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유윤열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 시민운동이 드러내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포스트담론의 수용이 이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변곡점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볼 수 있다. 87년 체제[1)]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시작된 97년 체제[2)]와 함께 한국의 사회체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분석단위이다(김종엽, 2009). 즉, "80년대는 모두가 사회주의자였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모두가 포스트담론으로 경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김동춘, 2000: 389)."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100여년이 지난 한국사회의 근대성 속에 결여된 역사성의 구조 속으로 끊임없이 포섭[3)]되는 사건으로서의 포스트담론 수용만으로는 한국 사회심층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극복의 길을 찾고자 한다.

근본적인 한국사회 심층의 문제는 일제 식민지화에 따른 강요된 근대화와 8·15 이후 이어진 분단체제[4)],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일본을 배우자던 세력들이 다시 미국화로 노선변경 후 근대화를 주도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국가이념으로서 냉전 논리의 내면화된 반공주의 아래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민주권 등이 연결된 것은 서구의 압박에 의한 따라잡기 식 근대화의 결과였다(김동춘, 2015). 결국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체제는 시민 주체성[5)]의 결여와 폭력적 지배체제의 골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 "한국사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개발독재 시기에서 본격적인 민주화시기(민주주의 이행 혹은 민주개혁의 시기)로 전환 되었다(조희연, 2009:75)." 또한, "'87년 체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관계, 갈등을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9:75)."

2) 김호기(2009)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87년 체제의 연장인 민주화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화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화 시대는 2000년 낙선운동과 2002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3) 포스트담론 이해의 출발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쉬르(Saussure)의 구조주의에서 통시성(사건)은 공시성(구조)으로 끊임없이 포섭되는 것으로 전제한다(에이스케 고마츠, 2018).

4) 백낙청, 1997,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 안병직(2006)은 '허구로서의 분단체제'란 글에서 백낙청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한다.

5) 주체성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본사람들의 주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인들의 주체성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

폭력적 지배체제는 소위 87년 체제로 불리는 정치적 민주화 시기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같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들이 넘쳐난다. 이미 일과 삶의 균형이란 표현의 전제는 '일'을 괴로운 것의 전형으로써 상징한다(우석훈, 2018). 일이 괴로운 몇 가지 이유는 전근대적인 직장문화 즉, 폭력적 지배체체인 군사정권 시절의 수직적 문화의 잔존과 그 문화 안에서 드러낼 수 없는 개인성을 드러낼 수 없는 억압적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군대는 물론, 소위 시민 사회운동 단체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다. 즉, 역설적으로 '일=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느 곳에서도 좋아하는 것으로 여길 수 없는 문화 또한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김동노(2013)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된 것은 전문성 추구로 인한 지식세력에 의한 장악을 얘기하면서, 비전과 철학의 부재를 주장하며, 공공성의 담론과 시민들을 다시 운동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을 임무로 본다. 홍세화(2010)[6]도 세력 관계의 변화가 근본적이며, 세력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공성과 사회정의는 요원한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은 비전과 철학의 부재이며, 세력 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7] 추구를 주요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세력관계란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8]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세력균형론은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무정부 상태'를 가정한 국제체제의 국가 행위 전략이론으로 출발했다. 세력균형론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1차 목표로 간주하여 서로 끊임없는 대립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견제 상태다. 이러한 세력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무정부 상태를 가정하는 국제정치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법치에 근거한 정부가 존재하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세력 관계의 균형 또는 우위를 추구함은 경험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향점은 될 수 있어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본질로 역할 할 수는 없다[9].

이러한 세력대결이 장으로써만 작동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연구는 90년대 한국사회에 수용된 포스트담론을 원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담론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에 수용됐으며,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즉,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로서는 이 사건은 시민사회 운동진영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며, 인식론적 단절에 가까운 외부

들의 자율성 중심 주체성에 비해서 자율성 측면에서 낮지만, 관계주의 측면에서 개인이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난다(허태균, 2015).

6) 상지대 사태와 세력관계(한겨레, 2010, 5,11).

7) "부르주아계급의 헤게모니는 자유주의의 권리의 창안과 이의 역사적인 확장을 통해 가능했다면, 조절사회는 헤게모니의 내부로 통합될 수 없는 '급진적/근본적 필요'로서의 권리의 창안과 이의 실현을 위한 집합의지의 구성을 통해 실현된다(장훈교, 2014: 87)."

8) Hans. J. Morgenthau(1950)는 『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자로서 합리주의적, 실증주의적 관점의 이론과 실천 관계를 비판하며, 국제정치에 있어서 과학적 인식에 대한 회의주의를 기반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전재성, 1999). "세력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긴장(Spannungen, tension)이 법적분쟁(Stretigkeiten, dispute)과 결부되는 경우를 강조하면서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이를 '정치적 분쟁'이라 불렀다(니시 다이라(西平等), 이경미, 2016).

9) "세력균형의 변화 즉, 세력배분을 둘러싼 싸움과 결부된 '정치적 분쟁'에는 국가 위신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적 자원에 대해 배분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동 개발을 결정하는 등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해결방법이 매우 어려워진다(니시 다이라(西平等), 이경미, 2016:87)."

적 변화로 정의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의 서문에서 "선진국의 학생들보다 더 빨리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기웃거리고 있거나…(김동춘, 1995: 5)."라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트라우마 극복으로써 관계주의와 심정중심주의가 '장기지속[10]'성을 가진 국가폭력으로부터 구조화된 것이라면, 90년대의 한국사회 포스트담론의 수용은 시민사회 운동에 있어서 '중기지속'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raudel의 주장처럼 장기지속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구조적 틀로써 존재하며, 포스트담론의 수용과 같은 변화가 중첩[11]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장기지속이 심층의 구조에서 흐르며 중기지속의 변화들을 끊임없이 포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지속 즉, 구조로 존재하는 국가폭력의 결과물로써 관계주의와 심정중심주의를 심층에 놓고, 사건으로써 구조에 끊임없이 포섭되어지는 포스트담론의 수용 이후 한국사회 시민운동에 접근하고, 2차 데이터를 통한 기술통계로 시민운동의 확장성, 실재성 이율배반(Antinomy)[12]의 역할로 작동하는 탈(脫)진실, 탈(脫)정치, 탈(脫)과학, 탈(脫)지성, 탈(脫)시민운동의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 이론적 논의: 한국 시민운동의 이율배반 성격

2.1 시민운동의 기존연구와 그 접근방식

한국사회 시민운동 분석의 공통적 경향은 1987년 6월 항쟁의 절차적 민주주의 획득 이후, 사회내부로부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다원적 분화[13]와 함께 80년대부터 90년대를 시민운동

---

10) 브로델(Braudel)은 역사의 지속을 네 종류의 시간대로 나누었다. 첫째, 초장기지속(très longue durée), 둘째, 중세, 근대와 같은 장기지속(longue durée), 셋째, 콩종튀르(conjoncture)는 주기 또는 경향적 사건들의 유기적 집합인 중기지속, 넷째,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먼지에 비유한 단기지속이다. 장기지속은 오랫동안 변치 않으며 인간생활 자체를 제약하는 구조로서 작동하는 역사(지리적 환경, 기후조건, 사회경제적 구조, 지적전통 등)이며, 중기지속은 시간적으로 10년~50년 정도 지속되는 사회적 현상, 사회집단의 변화, 정서적 문화적 변화 등을 말한다(김홍식, 2012). 한국의 포스트담론 역사학은 브로델을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프랑스 학계는 브로델을 재해석하며, 폴 리쾨르(Paul Ricoeur)르의 「시간과 이야기」,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역사의 이름들」,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등은 브로델의 역사학 관점을 근대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다르다는 시각을 견지하며, 오히려 그대 사회과학으로부터의 전환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원, 2004).

11) Bhaskar는 이것을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되는 것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에 적용한다. 중층결정(Over determination)은 본래 Althusser가 『모순과 중층결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12) "보통 안티노미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정신의 내적 갈등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Kant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사용한 의미는 이러한 보통의 의미보다 제한된 것이다. Kant가 사용한 의미는 세계전체의 인식을 다루었을 때에 우리 이성이 봉착하는 이성의 내적 분열 상태를 말한다(배학수, 1983: 1)." 우리는 세계에 대해 부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라는 등등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해 볼때가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기묘한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세계에 끝이 있다"는 답과 "세계에 끝이 없다"는 모순된 답이 둘 다 참인 듯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곤란한 처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모순된 두 명제는 어느 하나가 참이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어야 함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이 세계전체의 인식을 다루어 나갈 때는 우리의 상식과는 판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13) 자본 대 노동의 구도에서 벗어나, 환경, 인권, 반전,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분화된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다.

의 성장 및 전환의 시기로 본다는 것이다(한완상, 1992; 박형준, 1995, 1998, 2001; 장상환·정진상, 1994; 강문구, 1995; 이교정, 1995; 원종찬, 1995; 유팔무, 1995, 2001; 정태석 외, 1995; 조희연, 1993, 1997, 2001, 2004a, 2004b; 장동진, 1995; 김성국, 1998, 2001; 문순홍, 1998; 이신행, 1998; 이시재, 1998; 양한순, 1998; 조주현, 1998; 김동춘, 2004; 문형욱, 2000; 조대엽, 1995, 2000; 김정훈, 2001; 김호기,2001; 손호철, 2001; 조희연·조현연, 2001; 장상환, 2001; 주종환, 2001; 홍일표, 2001; 정수복, 2002; 정태석, 2007).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1990년의 시민운동은 첫째, 시민운동의 한국적 이론의 정립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담론 간의 결합 또는 비판·충돌·타협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서구이론으로서의 신사회운동론의 한국사회 도입에 있어 현실적합성 문제, 넷째, 민중담론으로서 한국사회 노동운동 진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면서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시기였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시민운동 영역에서 가장 큰 성과로 취급받고 있는 사례 중 2000년도의 "총선연대는 1·2차에 거쳐 모두 100명의 낙천대상자를 선정 발표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고천을 받지 못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22명을 집중 낙선대상자로 지목,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실제 낙선까지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한겨레21, 2000. 04. 20.)." 또한, 총선시민연대는 그동안의 시민운동이 서울(중앙)에 집중된 현상을 광역단체별로 연대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분명했다. 하지만 낙천·낙선 대상선정은 했어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총선연대 활동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당선운동은 벌이지 못했다(한겨레21, 2004). 앞서 기존연구의 우려대로 민중진영과 연대실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이것은 중산층 운동으로서 기층 민중에 대한 배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사례 중 2000년 4월 6일 부천 원미마을지역에서 이사철(한나라당) 의원의 낙선운동은 지지자들과의 충돌로 포기됐다(한겨레21, 2020). 시민운동의 한계로서 비슷하거나 세력우위의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맥을 못 추는 세력싸움일변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세력싸움 일변도의 문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내적 모순 또는 자기폐쇄성을 드러낸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 인터뷰(2004)에서 관계자는 "총선연대가 처음부터 언론의 주목에 고무되고 보수진영에게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치우쳐 전술을 잘못 선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주노총 등을 초반활동에서 배제한 것은 앞으로 뼈아픈 반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총선연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원성이라는 양날의 검이 작용한 문제는 대전충남지역의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낙선대상 선정의 일방적 발표가 총선연대의 여권과 밀착설로 이어지면서 반전의 국면으로 지역주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한겨레21, 2004). 또한 지역정보, 정서, 시민단체들 간의 역량 차이로 행동의 일치성에 한계를 가졌다.

2.2 전쟁정치 헤게모니의 지속적인 포스트담론 포섭

2.2.1 냉전시기 문화적 과업의 갈래: 포스트담론 구조의 세계화

1947년 7월 26일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CIA가 창설되었다. 냉전시기에 미국정부는 서유럽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 지원(마셜플랜)은 물론, 문화 선전선동활동(cultural propaganda)이라는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원[14]을 진행 했으며, CIA는 20년 넘게 실체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서유럽에서 대규모의 자금경로와 문화조직 등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사상전'으로써 정의하고 잡지, 서적, 학술회의, 세미나, 미술전시회, 콘서트, 시상식 등의 문화적 무기를 비축 및 유지하였다 (Saunders, 1999).

흔히들 포스트담론의 철학자들이 프랑스에 기반을 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근대성을 비판한 프랑스 사회철학을 그것의 뿌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 사회철학의 기원이 아닌, 포스트담론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담론은 미국 방식의 사유체계로 한국 사회에 수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유의 미국화' 과정이었으며, 포스트담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미국의 발원을 전제로 하는 담론이다(진태원, 2012; 2019).

미국 철학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 분석철학[15]과 맥을 함께 한다. 포스트담론 철학자로 분류[16]되는 로티(Rorty)는 1980년대부터 분석철학을 비판하고,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이하 실용주의)을 주창했다(Rorty, 1961; 이형대, 2005; 김동식, 2002; 2008). 실용주의는 절충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실용주의는 경험론과 공리주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합리론과 독일 관념론 등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엄정식, 1996; 김동식, 2008). 퍼스(Peirce)는 실용주의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하면서, 스코투스(Scitus)의 실재론[17]과 칸트(Kant)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김영태, 2004).

진태원(2019)은 한국사회에 포스트담론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용어, 사상, 담론이었으며, 갑자기 그 시대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을 두고 '인식론적 단절' 또는 '절단'으로 볼만한 변화로 본다.

---

14) "이 비밀 첩보 작전의 중심에는 1950년부터 1967년까지 CIA 요원 마이클 조셀슨(Michael Josselson)이 주도했던 세계문화자유회의(Congress of Cultural Freedom, CCF)가 있다. 활동 기간 동안의 성과는 엄청났다. 활동이 가장 활발했을 즈음, 이 단체는 35개국에 지부를 두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으며, 유력 잡지 20종 이상을 발행했다. 또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고, 뉴스 통신사를 소유함과 동시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 컨퍼런스를 조직했으며 음악가와 미술가들에게 수상기회와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서유럽의 지식인들을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매혹에서 벗어나 '미국의 방식'(the American way)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Saunders, 1999: 15-16)."

15)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탄생한 빈 학파에 의해 논리실증주의 또는 논리 경험주의를 제창하였다. 흄의 철학을 계승한 이들은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이며,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형이상학을 몰아내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이들의 원칙은 과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경험적 내용과 형식의 논리성이었다. 빈 학파는 1930년대 나치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독일로부터 시카고 대학에 자리 잡은 카르납(Carnap)은 미국에 논리실증주의를 전파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참고로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도그마"로 논리실증주의에 비판을 가한 콰인(Quine)은 화이트헤드(Whitehead)의 제자이기도 하다(Muniz, 1997).

16) 김동식(2002); 이형대(2005).

17) Duns Scotus, Johannes(1266~1308)는 철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의 후반에 발전한 스콜라 철학의 마지막 주자였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와 동시대를 살았다. 아퀴나스가 신앙의 토대위에 철학적으로 신증명을 하고자 했던 반면, 스코투스는 철학을 토대로 신 증명을 하려고 했던 차이가 있다(Scotus, 2010). 참고로 스코투스는 불필요한 가정(실재)을 덧붙이지 말라는 '오컴의 면도날'로 경험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William of Ockham, Occam, 1280~1349)의 스승이기도 하다.

2.2.2 한국사회 전쟁정치의 구조와 현실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18]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유신체제의 지배질서로서의 소위 '빨갱이 담론'에서 시작된 '간첩 만들기'이며, 이것은 최근[19]까지도 이어졌다. 간첩 만들기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생각의 통일성을 강요하며, 이것은 전체주의의 그림자이며, 국가폭력은 김근태와 같은 민주화 운동가만이 아닌,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정신과 육체에 고통으로 남는다(김동춘, 2013).

이러한 양상은 시민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른바 '조국사태'로 까지 치달은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실형이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우,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동의를 했다[20]." 이러한 전쟁정치의 폭력 양상은 <표Ⅱ-1>의 은유로서의 폭력이며, 현재 한국사회의 현상은 87년 이전의 국가폭력의 '장기지속'적 상황만으로는 설명되기 쉽지 않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분열의 연속성에서 전쟁정치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지만, 87년 이전의 연속성을 포함하면서 달라진 현재의 상황이 90년대에 수용된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석틀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정세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중기지속'으로서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2 전쟁정치에 배태된 관계주의와 심정중심주의

다원주의의 확장으로 발현된 시민운동 또한 내부와 외부의 전선은 필연적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정된 형태에서 행동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는 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Hall, 2021). 이것이 한국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존재하는 애매하고, 우회적인 고맥락(high context)[21]의 문화는 이성이 아무리 뛰어난 고고한 사람일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정치의 구조적 상황으로 끊임없이 포섭되는 이러한 고맥락의 문화는 저맥락을 구사하는 집단 또는 사람과의 충돌은 물론, 심리적인 괴리감의 관계에서 다른 의견, 다른 주장, 다른 행동과 행위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듯, 상대방과 나 또는 상대집단과 우리집단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약간 틈을 경험하면서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같은 집단 내에 속한 사람들끼리도 끊임없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지속하며 고맥락의 게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동양권을 같은 고맥락의 문화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일본이 가진 조직을 중시하는 집단주의[22]와 한국의 관계주의[23]는 확연하게 다르며(허태균, 2017), 이것은 시민단체

18) 국가폭력이란(state violence)이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며, 사회 구성원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행위이다(조희연; 조현연, 2002).

19) 홍강철씨는 2013년 8월 입국한 뒤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동안 독방에 갇힌 채 조사를 받은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이에 2020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한겨레, 2121. 2. 7.).

20) 유창선(2020. 12. 24.)이 '폴리뉴스'에 기고한 칼럼 중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광경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쪽 진영을 대표하던 어느 교수는 이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동참을 독려했다."

21) 맥락(脈絡)의 한자 뜻은 사건과 물건 따위가 서로 관련되어 이어져 있는 관계이다. 단어자체도 관계성의 뜻을 갖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이다.

의 구성원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관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관계와 본질적 성격이 충돌할 때,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고맥락의 의사소통이 보편 정서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의 본질과 자신의 심정을 인정받고자[24] 하는 끊임없는 투쟁적 상황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권위주의적 한국사회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국가의 내/외부로 상정된 적에 대한 폭력이 존재했다면, 시민사회가 발전한 다원주의 사회의 시민운동 내부로부터 스스로 내/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로부터 끊임없이 적(비정상)의 테두리에 들지 않기 위해, 현상과 본질의 왜곡 즉, 관계주의와 심정중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않은지, 그 결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다시 말해서 시민운동의 특정집단의 사유화 현상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2.4 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의 사건: 포스트담론 수용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세력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1987년 6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거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적·질적으로 확장되고는 있으나 운동세력의 분절적·고립적 상황은 여전하고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대항 헤게모니 세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윤상우, 2010). 한국 사회운동은 1987년을 기점으로 억압적 통제에서 헤게모니적 통제[25]로 이행되면서 국가로

---

22) "그들은 진짜집단과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 공식적인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에서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 손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기계와 같이 정확하게 행동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조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과거 조직에 해를 끼친 사람은 할복을 했던 문화의 배경에도 바로 이런 집단주의가 있었다(허태균, 2017: 158)."

23) "한국인에게는 조직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즉, 집단주의보다는 관계주의다. 조직과 회사 같은 거대 시스템보다는 바로 내 앞과 옆에 앉아 있는 동료와 상사, 부하직원과의 일대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때로는 공적인 관계와 역할보다 사적인 관계가 우선한다. 한국 사회가 수직적이라고 하지만, 만약 조직적 수직체계만 중요시해왔다면 한국 사회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만 하면 되는 훨씬 단순하고 살기 쉬운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관계적' 수직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조직에서 몇 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내 지위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경 쓰이는 '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한국인 심리학' 연구의 선구자인 고 최상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바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도구까지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체면이다.' 체면을 세워주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일을 하는 이유도 회사나 조직의 성공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찾으려 한다. 즉, 조직에 충성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일본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옆의 상사와 동료에 충성하고, 타인과의 일대일 관계에 더 충실하다. 어찌 보면 이런 한국인의 관계성은 양날의 칼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람과 조직의 이해가 상충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조직에 해를 끼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ㅗ직에 해가 되는 부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허태균, 2017: 158-160)?"

24) 문화인류학과 "심리학에서는 서구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한다. 저맥락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의 본질이 정확성에 있고, 메시ㅣ 자체의 내용이 명확하며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저맥락 사회에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드러나는 행동이나 명시적인 말, 계약서, 공식적인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허태균, 2017: 202-203)." "고맥락의 사회에서는 "행동의 바탕에 항상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진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권한다. 아니, 강요한다.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부르고, 일한 경험들을 통해 '눈치'라는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다. 이런 고맥락적 의사소통의 특성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중시하고 '심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심정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사회적 덕목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심정주의 때문이다(허태균, 2017: 203)."

25) 노중기(1995).

부터 자율성의 측면이 강화된 한국의 사회운동은 분화되기 시작한다(김정훈, 2004a; 조희연, 2008; 서휘원, 2020).

1990년대 전후로 형성 또는 재편된 시민운동단체를 살펴봐도 현재까지도 위상과 세력 면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운동단체로 볼 수 있는 1989년 경실련,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은 노동(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된 한국 사회운동은 성격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강문구, 1992; 김세균, 1992). 사회 변혁의 민중운동 지향세력은 시민운동의 개량주의를 비판하고, 시민운동 지향세력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민운동론이 대두됐다(조희연, 1993; 유팔무, 1993; 유팔무·김호기, 1995; 유팔무, 1999; 권태환·임현진·송호근, 2001).

이른바 다원주의 시민사회론은 1990년대 노동(민중)운동과 신 사회운동의 성격 논쟁에서 나왔으며, 신 사회운동론에서는 구사회운동(노동운동)과 신 사회운동의 차별성, 불연속성, 단절성이 강조되며,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사회운동론을 대안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포스트담론의 근대성 비판, 행위수단의 문화적인 것과 맥락을 함께한다(Offe, 1993; Scott, 1994). 진태원(2019)은 1990년 전후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

하지만 포스트담론은 이러한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측면만 수면 위로 다루어 졌고, 후자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었다고 본다(진태원, 2019).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은 배타적 대립의 관계로서 설정되었고, 포스트담론은 자신의 지적·정치적 근거로서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관성에서 분리되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거나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담론을 제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소비 담론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진태원, 2019: 54)."

이광일(2008)은 1987년 급진노동운동세력들이 자생적 노동자 투쟁에 압도당했으며, 노동운동 중심의 탈주체성 및 탈 물질주의의 각종 포스트 주의와 이에 영향을 받은 보수적 시민운동과는 또 다른 측면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본다. "물론 포스트 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공백으로 남긴 이론적, 실천적 지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진노동운동과 연대하기보다 대중운동과 무관한 강단이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영역과 밀착되어 있었다(이광일, 2008: 392)." 다시 말해서 포스트담론의 쟁점들이 자유주의적 시민운동과 결합하였고, 급진노동운동의 정치적 고립으로 결과 되어 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한국사회의 신 사회운동으로서 나타난 포스트담론에 대한 시각이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포스트담론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것이다. 한 사례로서 1985년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은 2008년에야 프랑스어로 번역 되었는데, 이것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역시 2000년 이전까지는 프랑스에서 뒤늦게 관심 영역에 들었음에 대한 간접 증거이다(진태원, 2019).

2.2.5 전쟁정치 구조의 끊임없는 포섭: 시민운동의 포스트담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겪은 대량실업과 이어지는 고용불안의 지속 상태에 있는 한국 사회

는 만성적인 경제전쟁 상태에 빠져있으며,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폭력, 학교현장의 학생들 배제 등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전형적인 국가폭력의 일종이면서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속 시장규율과 동일한 논리구조에 동작하고 있다(김동춘, 2014).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 현장의 곳곳에선 '6·25'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경쟁의 트라우마로써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는 국가폭력의 '장기지속'의 상황 하에서 '세계화'라는 사건으로서 냉전종식과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때,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도 나왔는데, "질레트사의 회장인 자이언(Alfred M. Zeine)은 외국을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발회사인 리복은 '리복이라는 행성에는 국경이 없다(On planet Reebok, there are no boundaries)'라는 광고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김덕호, 2005: 171)." 즉 '세계화는 미국화와 동일시(김덕호, 2005)'되며, 이것은 최소한 일방적이고 완전 동일한 전 세계의 미국화는 아닐지라도 미국 중심적 메시지(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세계화이면서 수용자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비대칭적 성격으로 파악 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세계화의 중심성에 사상적 세계화는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 "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 혜성같이 등장해 대중화되었던 '똘레랑스' 담론이 어쩌면 당시 막 자리 잡고 있었던 새로운 자유주의적 통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을 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를 특징짓던 '전쟁 담론'의 빈 공간을 메우며 진보주의자들의 언어로 자리 잡았던 '똘레랑스'는, 어쩌면 사회의 보편적 적대를 부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적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급진적 담론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자유주의적 통치와 일종의 공모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Brown, 2010: 337)"

Brown(2010)은 한국사회에 수용된 포스트담론 중 '관용'의 중립성 신화가 프로테스탄트 규범에 깊숙이 매몰되어 있으며, 미국 자유주의 관용담론의 중핵에 위치한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의 관념 즉, '관용 할 수 있는 주체'와 '관용 불가능한 주체'에 대한 기준으로써 자유주의와 탈근대 담론을 교묘하게 결합시킨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의 포스트담론의 수용과 미국 경제철학의 근원인 자유주의 사상은 교직(交織)가능한 것을 뛰어넘어, 마치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처럼 교호(交好)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의 영역확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깊이 천착하여 시민운동의 실재에 접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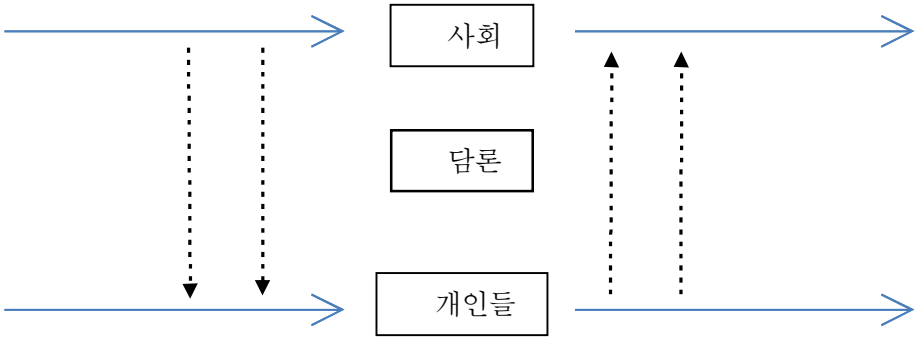
3장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방법

3.1.1 연구의 분석 접근방식: 구조(무의식), 담론, 행위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을 포함해서,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운동, 2019년 서초동·광화문 집회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과거 수많은 변화는 우연성에 의한 무의식적인(비 목적론적) 인간들의 행위 결과로 재생산 되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행위는 일반적 의식에 따른 노동과 생산이기도 하다. 이것이 실천의 이중성이다. 구조의 이중성은 사회가 인간 행위의 존재조건인 동시에 재생산 결과임을 나타낸다.

[그림 Ⅲ-1]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



자료: Bhaskar(1989)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을 수정함.

사회구조는 인간들의 행위 없이 재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는 인간들에게 달려 있다. [그림 Ⅲ-1] 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은 이것을 나타낸다. 사회 변형에 있어서 물리적 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정한 사회변형이 가능하다고 본다(Bhaskar, 1989). Einstein(1949)은 『Monthly Review』 에서 과학은 목적 창조와 목적이 인간에게 주입되는 것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목적을 이루는 역할 즉,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로서의 과학과 과학적 방법론은 인간 행위를 통해서 사회구조를 변형하게 된다.

3.1.2 2차 자료 유형과 개념화

이러한 맥락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가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비영리 섹터 전체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공석기·유지연, 2017), 전반적으로 1990년 후반 이후 등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중이 높다(황덕순, 2009)는 점과 시민사회단체 확장의 지표로써 시계열데이터 관리·접근성·확보의 상황을 볼 때, 대표성[26]이 인정될 수 있다.

2차 자료의 ②는 "집회신고 후 집회개최 및 미 개최 현황"과 "한 해 동안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일별 횟수"이다. 자료는 경찰청 공개된 정보를 사용했다.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20년까

26) 주로 '관변단체'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1980)에 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1989),한국자유총연맹(1989) 등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3대 국미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김대중 정부(1999~2003년) 당시 60억 원(연12억), 노무현 정부 (2004~2008년) 13억 원(연3억)으로 감소하는 추세 였으나, 이명박 정부(2009~2013년)에 들어 219억 원(연44억)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박근혜 정부(2014~2017년)의 국민운동단체 보조금도 194억 원(연49억)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경향신문, 2017.4.21.; 공석기·유지연, 2017: 40)."

지 동일하게 누적되었으며, 집회신고서와 1일 기준 집회 횟수, 개최 횟수, 미 개최 횟수를 통해서 미 개최율과 살펴보고자 한다.

2차 자료의 ③은 “연도별 전체집회 발생건수와 경찰관 부상자 수”이다. 본 데이터는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통해서 확보하였으며, ‘전체집회 발생 건수’ 대비 ‘경찰관 부상자 수’를 통해서 1993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집회 발생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관의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3.2 사례선택 및 분석계획

3.2.1 질적 연구방법의 에스노그라피

비판적 실재론의 에스노그라피는 역행추론의 방법을 거치는데, 이론적 구성을 거쳐 모형화된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에스노그라피의 개인과 세밀하며 지속적인 접촉은 역행추론의 과정을 촉진하며, 이것은 첫째, 사건을 다층적이며 인과적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고, 둘째, 구조와 형성적 기제 탐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셋째, 유물론적 역사관과 함께 계층화의 발현으로서 존재를 탐구한다(Rees, C. & Gatenby, M, 2014).

3.2.2 면접조사 계획

면접조사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타 연구의 인터뷰도 참조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 면접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면접조사 계획

번호	이름	영역	연령	주제
1~7		학생운동		포스트 담론의 수용
8~15		노동운동		포스트담론 수용과 노학연대 인천노동자 대학(1990~1995 해산)
16~24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내적 모순
24~30		일반시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자의 시선

※면담 질문지는 부록1 참고.

3.2.3 사례분석: 전쟁정치와 포스트담론의 사회심리학적 영향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탈(脫)진실, 탈(脫)정치, 탈(脫)과학, 탈(脫)지성, 탈(脫)구조, 탈(脫)시민운동 등 6가지 사례분석으로 진행된다. 본 사례들을 이런 상황들이 한국사회에 수용된 포스트 담론의 상대주의 경향 결합하면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퍼져 있으며, 대부분의 것들을 보편적 근거로부터 탈각해 버리는 문제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보편성으로부터의 탈각은 마치 자신들의 사례만을 특수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며, 인간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해석에서 벌어지는 이율배반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또한 아무리 개인들의 주관성이 각자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 또는 존재론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학문, 정치 등은 이렇게 각자 다른 개인들로부터 사회가 가져야하는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유지 또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Ⅲ-2> 분석 사례들

	사례	반(反)사례	검증 도구
탈(脫)진실	2019년 서초동 집회	2019년 광화문 집회	데이터 분석
탈(脫)정치	2019년 대변인 사퇴 2021년 정책실장 사퇴		
탈(脫)과학	2021년 코로나 백신 광범위한 부작용	백신 안정성 주장	과학적 검증
탈(脫)지성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생물학 이론 적용의 부적절함	생물학의 반론
탈(脫)구조	2020년 성추행사건에 대한 여성운동의 이중성		
탈(脫) 시민운동	2019년 동물 단체 '케어' 사태 2020년 '정의연' 사태		객관성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수료

임정빈

I. 연구 목적 및 문제의 제기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통섭』(Wilson, 2005)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통합과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재천 외, 2011; 김명희, 2015b: 268; 김세균 외, 2018). 통합과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지식의 파편화를 낳고 학제 간 연구를 방해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소통 불가능을 야기하는 칸막이 학문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송성수, 2009: 26).

일찍이 찰스 퍼시 스노우(Charles Percy Snow)는 195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례 강연에서 '두 문화와 과학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과학 문화와 인문 문화 사이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지적했다. 대체로 인문학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문사회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노우는 이를 '두 문화(Two Cultures)'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후 두 문화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사이의 갈등과 격차를 의미하는 핵심어로 통용되었다. 인문사회적 성찰성 없는 과학기술은 맹목이요, 과학기술적 합리성 없는 인문사회는 공허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Snow, 1996; 이영희, 2010: 69-70; 김세균 외, 2018: 15).

윌슨의 문제의식도 이와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윌슨은 사회과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보는 많은 인문·사회과학자들의 반발을 산다(Wilson, 2005; 최재천 외, 2011: 16-26; 김세균 외, 2018: 9). 윌슨의 통섭(統攝)[1]론은 그의 『사회생물학』(Wilson, 1975)에서 행해졌던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며 사회와 인간을 생물학적(소위 '자연적') 논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자칫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Rose, 1993; 이남인, 2009; 이영희, 2010: 77; 박만준, 2012: 318; 김명희, 2015b; 한선희, 2017).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주장했을 때 이는 생물학자들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김세균 외, 2011: 75). 비록 윌슨이 자신은 생물학적 근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전쟁이나 범죄 등을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

1) 통섭은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는 뜻이다. 최재천이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번역한 통섭이라는 단어는 거느릴 통(統)에 잡을 섭(攝)을 쓴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통섭을 융합·통합 등의 통상적 의미를 뜻하는 신조어쯤으로 인식했다. 통할 통 자가 아닌 거느릴 통을 사용하여 환원주의 및 생물학적 제국주의의 성격을 함의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최재천 외, 2011: 19-21, 246; 강신익, 2012: 34)

연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어떤 사회현상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만 강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긴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Gould, 2009: 365-368). 윌슨은 인간 문화나 도덕도,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형성된 후성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ilson, 2005: 264-289).

윌슨의 입장은 생물학적 사회생물학 또는 환원주의적 통섭론이라 말할 수 있는데(김세균 외, 2018: 9), 이러한 입장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진화심리학을 들 수 있다. 소위 일반인들은 진화심리학에 매력을 느끼거나 신뢰감을 보내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진화심리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문제는 대중을 향한 많은 진화심리학 책들이 과언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여남에 관해 생물학적 특성이 서로 어떻게 다르다든지 하는 담론들이 그렇다(Buss, 2012; 권용주, 2013: 4장). 진화심리학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가부장적 문화를 옹호하거나 강화한다고 본다. 진화심리학이 완전히 쓸모없는 기획이라는 것까진 아니지만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세균 외, 2015: 119-121; Ruti, 2017: 21).

한편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대립쌍으로 사회적 힘만을 자립화하는 환원주의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환원주의도 존재한다. 예컨대 장애 문제를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통로 등 인프라 부족의 결과로만 간주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문제로 환원하며 손상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거나, 장애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만 보아 오명 찍기의 결과물로만 여기는 식이다. 이런 환원주의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으나 한 수준의 인과성, 하나의 계기의 인과성만 강조하며 다양한 수준의 설명들을 통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Bhaskar, 2020: 84-85).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해 강신익(2012)처럼 기존 사회생물학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생물학을 도모하며 자연계의 상호부조에 주목하고 생명사회학이라 이름짓자는 입장도 있다. 강정한(2013) 또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이 아닌 생물학적 사회이론들이 꽃 피어나는 것에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보며 새로운 사회생물학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처럼 생물학적 환원주의도, 사회구성주의적 환원주의도 아닌 입장으로의 통합을 요구하는 입장은 많다(Trigg, 2007: 243; Blackmore, 2010; 최재천 외, 2011: 49-50; 김세균 외, 2015: 122).

기존의 통섭론은 학제간 연구를 추동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를 생물학으로 환원하며 생기는 사회구조의 소거라는 문제와 그로 인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조장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분과주의와 환원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통섭 논제에 대한 관심이 강한 걸 감안하면,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제간·간학문적 연구 등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다. 한국의 학문공동체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히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요청되는 것이다(김세균 외, 48-49).

현대의 통섭 논쟁에서의 병목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 사회과학의 전통을 정초한 고전 사회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연주의 사회과학[2]의 가능성을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역사를 보면 사회과학이란 것 자체가 근대 자연과학의 연

구 성과에 고무되어,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에 적용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Coser, 2018: 27).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았으며, 둘의 입장이 윌슨의 자연주의와 다른 점은 사회과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의 풍토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없다는 반(反)자연주의[3] 패러다임이 강하다. 이러한 반자연주의적 입장 혹은 방법론적 이원론이 의외로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암묵적 실천의 기반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필자가 본 연구의 방법론적 관점으로 도입한 비판적 실재론이라는 과학철학은 일찍부터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반(反)자연주의를 비판하며, 다학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왔다(Bhaskar, 2020: 4장). 또한 자연과학에 대한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왜곡을 교정하는데 노력해왔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통합과학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도와줄 길라잡이로도 작용할 수 있다(Benton and Craib, 2-3장).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이 엥겔스의 사회과학철학에 대한 재해석과 결합될 때 더욱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선다. 그동안 마르크스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엥겔스의 기여는 저평가되거나, 엥겔스의 자연주의가 마르크스와 융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마르크스의 자연주의가 반(反)자연주의로까지 오해되는 편향이 발생하곤 했다(Foster, 2016: 480). 이를 극복하는 것도 이 글이 기여하려는 바 중 하나다.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에까지 확장하고자 했던 엥겔스의 시도는 그 결과물을 봤을 때 비록 좌충우돌했던 측면도 있지만, 지식의 통합을 화두로 삼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겨줬다고 재평가할 수 있다(Foster, 2016: 480-489). 이는 오늘날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항해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및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학문적 성취를 상보적 관점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해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이의 연속성에 주목할 것인지 단절에 주목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둘을 단절적으로 보는 입장은, 『독일 이데올로기』(Marx and Engels, 2019)를 마르크스와

2) "사회과학철학에서 '자연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삶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주의 논쟁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방법론적으로 통일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자연과학에 적용된 과학적 방법과 절차가 사회과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자연(과학)주의(naturalism)와 반자연(과학)주의(anti-naturalism)는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고전 사회학 패러다임 내에서 전자의 입장을 맑스와 뒤르케임에서 볼 수 있(다). ... 자연주의 사회과학은 인간과학에 적용된 실증주의적 자연주의나 인간과학에 자연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反)자연주의와 달리 실재론적 자연주의를 견지하는 사회과학을 말한다."(김명희, 2017: 15-16)

3) "사회과학에서 반(反)자연주의는 인간이 자연적 사실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믿음을 일컫는다."(김명희, 2017: 547).

같이 쓴 전기의 엥겔스는 문제 삼지 않으나 『반뒤링론』(Marx and Engels, 1994), 『자연변증법』(Engels, 1990a)을 썼을 때의 후기 엥겔스는 마르크스로부터 멀어졌으며 마르크스주의를 속류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즉 엥겔스에 대한 비판자들은 전기 엥겔스와 후기 엥겔스 사이에 인식론적 단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후기 엥겔스 문제와 관련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반(反)자연주의로 가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이다. 물론 모든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반발하며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처럼 위치 지었다. 둘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환원주의적 자연주의가 되는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이다. 셋째, 환원주의도 반(反)자연주의도 아닌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둘 사이를 독해하는 입장이다.

1.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 : 반(反)자연주의

마르크스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를 사상하는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사고한 반면, 후기 엥겔스는 환원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4]. 한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이런 비판이 일었다. 예컨대 임지현(1984)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차이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에 대한 관점에서도 비롯되는데, 마르크스는 다윈에게 비판적이기도 했던 반면 엥겔스는 일관되게 다윈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임지현 1984: 164-168). 임지현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다윈의 진화론이 목적론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임지현 1984: 155), 다윈이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Thomas Robert Malthus)의 영향을 받았고 부르주아적이라는 점에서 비판했다.

임지현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와 다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통념적 해석은 여전히 많다. 마르크스주의에 사회적 다위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마르크스가 다윈에게 자본론을 헌정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되풀이된다(Foster, 2016: 434). 다윈에게 생존경쟁이 있었다면, 마르크스에게 계급투쟁이 있었다며 갈등을 변화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둘의 공통점을 찾기도 한다[5](임지현, 1984: 137-139; Marcy, 2009: 72-75; Callinicos, 2009; Foster, 2016: 419-420).

다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Foster, 2016: 395)와 달리, 자신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 비추어보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진 않았다. 다윈이 쓴 글 중에는 스펜서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있다(Darwin, 2014: 54, 78; 임지현, 1984: 157-160). 이런 점들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신과 다윈을 이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임지현, 1984: 161-162). 임지현은 엥겔스가 후기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했던 진화론, 자연주의 등의 힘에

4) 후기 엥겔스에 대해 비판했으며,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시조로 여겨지는 책은 게오르크 루카치(Georg Lukacs)의 『역사와 계급의식』(Lukacs, 2015)이다.

5) 마르크스의 이론은 다윈의 생존경쟁 이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까지 있기도 하다. 『종의 기원』이 1859년에 출간되었고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마르크스가 다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자신의 이론을 형성했다는 주장들은 근거가 약하다.

기대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다(임지현, 1984: 164-169).

이처럼 후기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분리하고 후기 엥겔스에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이러한 비판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2. 공통점을 강조하는 입장 : 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이 입장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를 위시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엥겔스를 과도한 자연주의로 해석하며 그를 통해 마르크스 또한 받아들인 관점이다. 소위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 예다(Foster, 2016: 475; 사사키, 2020: 11; 임승수, 2020 참고). 하지만 후기 엥겔스에 대한 해석 자체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와 차이가 없고, 다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계보에선 오히려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이 실질적으로 갈리는데, 서구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를 반(反)자연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를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로 독해하는 경향이 있다[6].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김민정(2011)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연변증법을 거부한 이유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인간과 분리된 독립된 세계는 없고 모든 사물은 인간의 사회적인 주관의 산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원웅(2020)도 자연에도 변증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엥겔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관점이기도 했다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봤고 그래서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완전히 별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가지 점에서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첫째,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 사실과 대치되게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분리시킨다. 둘째,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반(反)자연주의에 빠져 있다[7].

이들 입장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처럼 자연주의자 마르크스를 반(反)자연주의로 해석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들 또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하게 마르크스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자체에 변증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하려는 시도에 마르크스를 위치짓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反)자연주의적 해석과 대비하여 환원주의적 자연주의 관점의 마르크스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 입장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입장은 반환원주의적

---

6) 이 같은 해석의 양편향은 사회과학을 한편에서는 "초(超)자연주의적 실증주의", 다른 한편에서는 "반(反)자연주의적 해석학"으로 보는 이원론적 분열과도 관계되어 있다.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조야한 19세기 실증주의를 거부했지만, 실재론과 유물론을 거부하고 사회 세계의 관계들이 전부 인간의 실천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자연·물리의 영역은 실증주의에 양도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연과학에 대한 실증주의적 이해를 조장했다(Foster, 2016: 37).

7) 그러나 김민정, 이원웅과 같은 매체에서 발표한 한선희(2017)가 인간이 자연선택 같은 생물학의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변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이들의 입장은 확고하게 반(反)자연주의인 것이 아니라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반(反)자연주의를 오가며,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관점을 유지하진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자연주의다.

3.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이 입장은 마르크스를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도 아니고 반(反)자연주의도 아닌,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로 파악함으로써 양 편향을 극복하고자 한다.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실재론의 창시자인 로이 바스카(Roy Bhaskar)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곧잘 준생물학적 고려에 의지하여 역사적 유물론을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독일 이데올로기』 등에서 인간의 신체 조직 및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나머지 자연과의 관계를 주목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연-사회관계의 단지 한 측면, 즉 기술만을 고찰하여 인간이 자연을 점유하는 방식을 서술하면서, 자연이 인간들을 재점유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생태학, 사회생물학 등의 주장은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했다(Bhaskar, 2007: 255). 하지만 바스카는 후기 엥겔스에 대해서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Bhaskar, 2007: 238 참고).

이제까지 선행연구 검토에서 소개한 세 가지 입장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후기 엥겔스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것이다. 관련한 사상사적 쟁점을 요약하자면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가 엥겔스가 해석한 마르크스주의를 속류화시켰고, 서구 마르크스주의는 그 점과 후기 엥겔스를 동시에 비판했으며,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로부터 후기 엥겔스를 분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후기 엥겔스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로 규정되거나, 적어도 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차 문헌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과학철학의 지원을 필요하다. Ⅲ장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적 성취를 해석할 방법론으로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론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

이 연구가 기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관점으로 도입한 메타이론은 비판적 실재론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주류 사회과학철학으로 군림해왔던 실증주의와 협약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Bhaskar, 2020: 7-8; Keat and Urry, 1993; 이기홍, 2019). 이하에서는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비판적 실재론과 구별되는 실증주의와 협약주의를 살펴봄으로써 그와 변별되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경험주의(경험적 실재론)다. 경험적 실재론은 경험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말하며, 경험주의는 경험한 것만이 확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경험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새로 발견한 심해어가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해있을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너진다. 극단적인 형태의 경험주의가 아닌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는 생각도, 우리가 책으로만 접한 나폴레옹이나 세종대왕이 존재했다고 흔히 믿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험세계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주의에 휩쓸리곤 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과,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사회구조나 기제를 사고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경험적 규칙성에 의해 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검증주의를 낳기 쉽다. 담배의 사례를 생각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모두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흡연은 폐암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인과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생각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엄격한 경험주의는 많은 과학적 사실과 이론적 타당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Keat and Urry, 1993: 50-51; Blaikie, 2015: 49-50, 86; 이기홍, 2019: 155-160).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귀납과, 일반화된 명제를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연역이 경험적 영역에만 머물고 기제, 사회구조 등을 고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귀납과 연역 자체는 과학 활동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가 한계를 갖는 것이다(Blaikie, 2015: 114-115). 예컨대 인간은 모두 죽지만, 이 명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례들을 수집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이나 노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인과성으로서의 법칙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증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철저한 분리다. 이는 사실의 차원과 가치의 차원은 엄격히 분리되며 섞일 수 없고, 사실에 관한 (과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가치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실증주의의 전형적인 도그마다. 사회과학은 사실을 다루고 인문학은 가치를 다룬다는 사고도 실증주의의 영향이다. 그러나 가치도 사회적 실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사회과학 활동에서 장애를 낳을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 천동설을 비판할 때는 천동설을 비판하는 것이지 지구 보고 왜 태양 곁을 도냐고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사회과학에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제이론을 비판할 때는 이론을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비판적 실재론에서 사실-가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주장하는 설명적 비판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낡은 신념과 이론을 버리게 된다. 이때 제거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이다(Bhaskar, 2021: 64-66).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어떤 사회과학적 주장을 펼치는데 있어 주저한다면, 이는 사회과학에서 큰 손해가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과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가치중립성의 신화를 깨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허위의식 같은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Benton and Craib, 2014: 93).

이 절에서 설명한 실증주의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친화성을 가진다. 실증주의는 자연주의와 혼동되어 동의어인 것처럼 쓰이곤 했다(Keat and Urry, 1993: 22). 이와 관련하여 19세기의 실증주의와 20세기의 실증주의는 다른 것이었으며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고전적 실증주의(자연주의)와 에른스트 마하(Ernst Mach) 이후의 신실증주의(이른바 논리경험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김명희, 2015a: 263; Blaikie, 2015: 205). 이 글에서 말하는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실증주의와 동일하다.

실증주의는 하나의 과학의 논리만이 있으며 '과학'이라는 이름을 열망하는 모든 지적 활동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기저적인 주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들' 역시 이름값을 하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많은 실증주의자들은 사회과학이 현재는 '미성숙'하지만, 결국 과학의 방법론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통일'이라는 이상은 방법론적 통일에 더하여, 모든 과학을 하나의 기본적인 과학으로, 체계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성취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환원은 이를테면 생물학의 개념들을 화학의 개념들에 입각하여 정의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에서 시작하여 화학,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과학들이 앞의 과학들로 환원되는 과학의 위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Keat and Urry, 1993: 47-48).

윌슨의 통섭 또한 이런 식의 환원주의를 견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물리학적 환원주의와 윌슨 같은 생물학자들의 다른 점이 있는데, 생물학의 발현적 힘[8]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의 발현적 힘은 인정하나 사회학의 발현적 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윌슨이 일관성이 없고, 윌슨의 논리대로라면 물리학으로 모든 과학을 환원해야 하며, 그러지 않는 윌슨의 환원주의는 결국 모순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최재천 외, 2011: 107-145).

윌슨과 보편적인 실증주의 사이의 또 하나의 차이는 윌슨이 도덕에 대한 과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Wilson, 2005). 앞서 말했듯 윌슨은 후성규칙으로 사회에 대한 모든 것, 도덕과 인간 문화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윌슨과 보편적인 실증주의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윌슨이 생물학자로서 생물학의 발현적 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윌슨이 말하는 도덕에 대한 과학은 도덕이 사회적 실재의 창발성과 관련있다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차이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Watters, 2011: 363).

보편적인 실증주의와 윌슨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환원해야 된다는 윌슨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윌슨은 큰 틀에서 보아 실증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윌슨에게는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자연주의의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를 과잉자연주의라고도 칭할 것이다.

윌슨은 또한 사회과학의 독자적 차원을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성, 관계적인 사회적 실

8) 발현적 힘은 창발성이라고도 한다. 아래 층위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상위 층위의 속성을 말한다. 예컨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지만 수소와 산소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발현적 힘을 가진다. 생물학에서도 발현적 힘은 관건적이다(Bhaskar, 2021: 48; Benton and Craib, 2014: 74).

재의 발현적 속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입장은,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 행위를 사회적 요인에 의거해 설명하지 않고 진화심리학, 뇌과학, 신경생리학 등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제외한다. 그 결과 예컨대 신경생리학은 이유나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서 한계를 갖게 된다.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비가 우리를 젖게 만들기 때문이고, 비가 내리는 걸 일기예보를 통해 예측하며 상점에서 우산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뇌에서의 화학작용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Bhaskar, 2020: 80-81).

이상으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가 실증주의라는 과학철학과 친화성을 가진다는 걸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반(反)자연주의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협약주의라는 과학철학을 살펴보겠다.

2) 협약주의

협약주의(Conventionism)는 사회구성주의라고도 불린다(이기홍, 2019: 56). 협약주의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비판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험의 이론의존성이다. 경험은 이론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안경을 보고, 안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안경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원시인은 안경을 봐도, 안경이라는 걸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론은 불확실하지만 경험은 확실하다는 검증주의는 설득력이 약해진다(Blaikie, 2015: 54-57; 이기홍, 2015: 268; 이기홍, 2019: 92-96).

둘째,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이다.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교과서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은 흔히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대부분은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 실험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어떤 이론의 예측과 경험이 불일치하더라도 많은 경우 항상 '사연'이 존재하며 그 사연이 반드시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이기홍, 2015: 269; 이기홍, 2019: 96-100). 이 또한 실증주의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경험의 이론의존성과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은 실증주의가 60년대 이후 주류 과학철학에서 파산한 이유들로 꼽힌다(Blaikie, 2015: 125; 이기홍, 2019: 92).

요컨대 실증주의가 경험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험으로 이론을 시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협약주의는 경험이 이론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론의 진위는 판단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약주의의 이런 입장은 경험이 이론의 기초이며 심판이라는 (또는 이어야 한다는) 실증주의의 견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 다만 경험과 이론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의 진위를 판별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물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경험만이 이론의 근거이며 판단기준이라고 전제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증주의 과학관의 (객관적) 경험과 (주관적) 이론의 구분을 유지한다(이기홍, 2019: 140).

한편 사회과학에서 많은 구성주의자들은 자연과학은 실증주의적이나 사회과학은 실증주의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은 실증주의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인간의 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의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Weber, 2017; Winch, 2011). 이처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양분하는 입장은 반(反)자연주의로 귀결된다. 자연과학은 설명하고, 사회과학은 이해한다. 자연과학은 법칙정립적이고, 사회과학은 개별기술적이다(민병

원, 2012: 353). 이는 곧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증주의의 한 측면인 사실 판단/가치 판단의 분리를 답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약주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 및 과학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며 '진리는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머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인 패러다임이 다르면 서로 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중에 어떤 패러다임이 옳은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한다. 비록 쿤은 과학의 발전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쿤의 과학철학적 입장은 상대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패러다임에 따라 진리가 바뀌며 어느 패러다임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면, 객관성은 실종되는 것이다. 협약주의가 과학자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에도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점은 옳게 지적했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과학 활동의 어려움이라는 지장을 초래했다. 협약주의의 안내대로라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학자 사회에서의 협잡 정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Keat and Urry, 1993: 87-95; Blaikie, 2015: 149-151; 이기홍, 2019: 142-145). 이 점은 주류 과학철학에서 실증주의가 파산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증주의가 기능하는 한 이유다(이기홍, 2019: 146). 자연과학에서는 폐쇄체계를 형성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과학철학에 대한 훈련이 적어도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협약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실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측면만 바라보게 되면 생리적/생물학적 수준이 소거된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한 책으로는 『이갈리아의 딸들』(Brantenberg, 2016)을 들 수 있다. 소설책이지만 이 책은 사회구성주의를 잘 묘사했기 때문에 거론할 만하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갈리아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뒤바뀐 모권제 사회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잘 그려낸다. 필자는 『이갈리아의 딸들』의 문제의식이나 모권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갈리아의 딸들』은 매우 훌륭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건 바로 "왜 어떤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가 되고, 또 왜 어떤 사회는 모권제 사회가 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할, 여성 억압의 기원을 밝혀낸 엥겔스의 작업과는 대비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주의의 두 가지 한계를 짚을 수 있다.

첫째,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진 않는다. 둘째, 애초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성되도록 만든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설명은 (사회구성주의의)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즉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인식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동적 대상이 있다는 실재론적 전제가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 논의의 맥락에서 문제의 현상을 야기한 생물학적 차원의 요인을 지워버리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야기한다.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짚자면 예컨대 장애 문제에 있어서 '손상' 부분이 지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왜 어떤 사람은 특정 환경에서 장애를 겪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겪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Bhaskar, 2020: 84-85). 즉 사회가 자연 안에 있고 자연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자연주의 관점으로부터 자연이 없는 사회과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협약주의의 입장에서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는 오류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반(反)자연주의를 제기하며 양측의 비판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 우리는 실증주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협약주의-반(反)자연주의의 대립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자연주의 논쟁은 사회과학에 자연과학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냐는 방법론적 차원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과 인식론을 포괄하는 과학철학상의 문제기도 한 것이다. 특정한 방법론은 특정 존재론과 특정 인식론과 친화성을 가지며 유기적인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실증주의가 오직 하나의 실재만 존재하며 정확한 소견은 하나뿐이라는 피상적인 실재론의 존재론과, 인간이 외부 세계를 직접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 인식론을 가지는 이유다(Blaikie, 2015: 68-87).

통섭 논쟁에서는 과잉자연주의 및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에서는 사회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잉자연과학주의적 독단이 발견되며 반(反)자연주의에서는 자연/인간, 사실/가치 이분법의 틀에 따라 자연과학/사회과학을 이분법적으로 틀 짓는 모습이 관찰된다[9]. 역설적이게도 양쪽 모두 실증주의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과잉자연주의/반(反)자연주의라는 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자들조차도 대안적인 사회과학철학에 준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실증주의적 용어를 재사용하며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비판적 실재론은 그 한계를 넘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서 반환원주의적 통섭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길라잡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실증주의와 협약주의, 두 가지 과학철학의 장점을 실천적으로 종합하고 단점을 지양하고자 하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3) 비판적 실재론

비판적 실재론은 초월적 실재론과 비판적 자연주의의 축약어다. 자연/인간, 자연과학/사회과학, 유물론/관념론, 결정론/자원론, 과학/철학, 사실/가치 등의 이분법을 기각하기 때문에 분과학문 체계라는 칸막이 학문을 타파할 통섭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김명희, 2014; 52-53; 김명희, 2015b: Bhaskar, 2020: 4장). 비판적 실재론의 방법론적 유용성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초월적 실재론

초월적 실재론은 초월적 관념론, 경험적 실재론과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실재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예컨대 인류가 알기 전에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과학관, 세계관과 부합한다. 초월은 경험이나 현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초월적 관념론과 달리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9) "전통적으로 실증주의 과학철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현상의 설명에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 즉 자연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므로,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이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신을 물질로 인간을 자연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침으로써 - 궁극적으로 과잉자연주의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반대하여 반(反)자연주의 전통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그 대상의 차이에 따라 연구방법 또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입장은 인간과 자연, 자연 현상과 사회·역사 현상을 폭력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자연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자발적 활동으로 서술하게 되므로, 자원적 행위이론으로 귀결될 위험에 놓인다."(김명희, 2015a: 263-264; 김진업, 2010).

흔히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엥겔스에 따르면, 유물론과 관념론은 존재의 선차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Engels, 2008). 우리 외부에 초월적인 관념적 존재인 신, 혹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초월적 관념론이 된다. 실재론도 우리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플라톤(Plato)처럼 현실 세계가 이데아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관념론적 실재론이 된다. 이와 달리 존재의 선차성 문제에서 유물론적 관점을 승인하는 실재론이 바스카의 초월적 실재론이다. 이는 실증주의적이지 않은 형태의 자연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사회과학도 비경험주의적인 과학 모형의 관점에서 과학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Benton and Craib, 2014: 86).

실재에 대한 지식도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바로 자동적 차원과 타동적 차원이다. 자동적 차원은 실재하는 객체를 의미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여 실재하는 자동적 대상이다. 타동적 차원은 사유 속의 객체를 의미한다. '생각의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이다. 타동적 차원은 협약주의에서 지적한 과학의 사회적 차원과 연관된다. 그리고 대상을 인식으로 환원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야기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자동적 차원과 타동적 차원을 구분하는 비판적 실재론은 이러한 혼동을 막아준다. 또한 타동적 차원의 지식을 도구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선행하는 지식을 배워야 하며 그것을 도구로 과학적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실재론은, 과학을 '지식에 의한 지식의 사회적 생산'으로 정의한다(Benton and Craib, 2014: 223-224; 이기홍, 2017; Bhaskar, 2021: 42-44).

이러한 초월적 실재론의 존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철학적 존재론이다. 경험적 실재론을 전제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초월적 실재론에서는 실재를 실재/현상/경험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실재는 현상을 포함하며, 현상은 경험을 포함한다. 현상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실재란, 기제(가능성)를 의미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가능성은 모두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현상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상의 영역은 경험의 영역보다 크다. 즉 실재는 현상보다 크거나 같고, 현상은 경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나 실재와 현상, 경험이 같아지는 것은 기제가 고립되어 있는 폐쇄체계 속에서나, 혹은 신 같은 존재에게나 가능할 것이다(Benton and Craib, 2014: 215-216; 이기홍, 2019: 152-155; Bhaskar, 2021: 48; Archer 외, 2005a: 43 참고).

이러한 철학적 존재론은 실험 활동을 옹호하는 적절한 과학철학이다. 즉 왜 실험실 같은 '폐쇄체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기제가 실험자의 활동과 믿음에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험이라는 활동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Benton and Craib, 2014: 214-215). 사회는 개방체계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실험을 하기 어렵지만, 대신 실험과 유사한 병리적 사례·역사적 사건 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마찬가지의 의미로써 '과학적'일 수 있다(Durkheim, 2019: 146). 이러한 관점은 자연주의 사회과학을 옹호한다[10].

10) "... 비판적 실재론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실증주의보다 실재론에 의해서 더 잘 서술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자들에게 자연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 실재론은 자연과학의 방법인 실험을 경험

또한 과학적 방법으로 귀납과 연역뿐만 아니라 초월적 논증도 있음을 강조한다. 초월적 논증은 '어떤 것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누군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은행체계와 화폐경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경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Benton and Craib, 2014: 212). 초월적 논증은 귀납적 논증이나 연역적 논증과 달리 경험의 영역에서 실재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제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그것이다.

초월적 논증은 가추(가설 추론)와 역행추론으로 나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이를 행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땅이 젖은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걸 관찰하지 않았음에도 밤새 비가 내렸다고 추론한다. 이것이 가추다. 그리고, 밤새 요정이 와서 오줌을 싸고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타당하지 않고 설명력이 약한 가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역행추론이다. 이 방법은 흔히 연역과 혼동되지만, 일반화된 명제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인 연역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연역추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아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역은 전제가 확실하면 타당하지만, 새로운 기제를 찾아낼 수는 없다. 수학이 공리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는 흔히 구분되는 이유다. 물론 가추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추론된 가설은 오류 가능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실험과 실천에 의해 경험의 영역과 기제의 영역을 오가며 한계는 지양될 수 있다. 초월적 논증은 귀납이나 연역과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유용하고 필수적인 방법이다(Blaikie, 2015: 115-116; 이기홍, 2019: 191-215). 이 글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분석할 때도 우리는 그들이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등에서 초월적 논증 또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월적 실재론의 존재론적인 두 번째 큰 특징은 세계가 개방체계이며, 층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론이다. 이는 세계는 물리학적 층위/화학적 층위/생물학적 층위/사회학적 층위/심리학적 층위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존재론적 깊이를 고려한 층화된 세계관이다. 실증주의와 다른 점은 물리학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뒤의 것은 앞의 것을 전제한다. 생물학적 층위는 물리적 층위와 화학적 층위를 전제하며, 사회학적 층위는 생물학적 층위를 전제한다. 앞의 것이 없으면 뒤의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화학은 생물학을 설명하고 생물학은 사회학을 설명하지만, 화학은 사회학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왜 윌슨이 사회과학을 생물학으로 환원해야 하지만 사회과학을 물리학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는지도 설명해준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은 사회에 제약을 가한다. 인간 사회의 일부 일반적인 기제들은 인간이 긴 유년기를 보낸다거나 인간이 본능에 의해 부여받은 방식을 벗어나 생산해야 하는 필요를 가진다는 점 등으로 설명된다. 물론 모든 사회적 기제가 생물학에 의해 직접 설명될 수는 없으며 대부분

적 규칙성의 확인으로 이해하는 포퍼-헴펠 모델과 달리 실험의 원리를 반경험주의에 입각해 설명한다."(김명희, 2015b: 273)

의 사회적 기제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에 고유한 것이다(Collier, 2010: 196-198; Benton and Craib, 2014: 217-223; Bhaskar, 2021: 70-71). 예컨대 인간 사회는 수백 년 전부터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아왔다(Archer 외, 2005b: 131). 이 이론은 층화 이론 혹은 층위 이론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관점은 생물학적 기제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준생물학적 고려를 염두에 두면서도, 문제의 현상을 야기한 사회적 힘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사회이론을 전개한 연구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2) 비판적 자연주의

사회에 대한 과학철학인 비판적 자연주의는 사회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관계적 존재는 사회와 개인들의 구별되는 두 층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사회적 층위의 인과적 힘은 물리적・생물학적 층위로 환원될 수 없고, 정신적 층위의 인과적 힘은 사회적 층위로 환원될 수 없다(김명희, 2015b: 286). 또한 사회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지만 인과적으로 상호의존한다(Bhaskar, 2021: 57). 인간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물상화론, 사회를 인간으로 환원하는 것은 자원론이다. 비판적 실재론에서, 둘은 각각 상향 융합과 하향 융합이라고 불린다. 사회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시키는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은 중앙 융합이라고 명명된다. 비판적 자연주의는 이들과 구별되는 입장이다(Archer, 2005b: 8장; Bhaskar, 2021: 58-59).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비판적 자연주의는, 사회는 인간을 사회화하고 인간은 사회를 변형 및 재생산한다고 본다(Bhaskar, 2021: 59). 사회구조는 인간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인간을 제약한다. 예컨대 돈을 빌리려면 화폐 제도와 신용 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인간이 어떤 범죄적 행위를 하려 할 때면 사회는 강제성을 발휘하며 인간 행위를 제약한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회가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가 있고 나서야 인간이 있는 것이다(Durkheim, 2019: 1장).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잔은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지만 '인간(人間)'[11]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에 의존하는 것처럼 사회(구조)도 인간에 의존한다. 바스카에 의하면, 사회적 객체는 자연적 객체와 마찬가지로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과적으로 인간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객체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바스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다(Bhaskar, 2015: 64 참고).

① 시공간 의존성 : 사회구조들은 자연적 구조들과 달리 단지 상대적으로만 지속적일 것이다(그러므로 그것들이 근거짓는 경향들은 시간-공간에 걸쳐 불변적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12].

11) 인간(人間)은 한자로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을 쓰며 '사람 사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② 행위 의존성 : 사회구조들은 자연적 구조들과 달리 그것들이 지배하는 행위들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개념 의존성 : 사회구조들은 자연적 구조들과 달리 그들의 활동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관념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언어'가 사회적 삶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자연과학과의 이러한 차이들은 사회과학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비록 자연과학은 실험실 같은 폐쇄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작업을 하기 용이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실재의 개념 의존성 및 행위 의존성은 사회과학적 작업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행위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삶에 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회과학적 사유를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삶의 이러한 해석학적 차원은 사회과학을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사회구조가 단지 상대적으로만 지속적이라는 사실도 사회구조가 실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것이 지속하는 기간이나 그것이 발생하는 공간적 한계가 그것을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Benton and Craib, 2014: 231).

이러한 비판적 자연주의와 변별되는 입장들을 통섭과 관련지어 보면 한쪽에는 윌슨의 환원주의라는 과잉자연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반(反)자연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자연주의는 과잉자연주의적 환원주의와 인문학 내의 반(反)자연주의적 해석학 각각의 한계를 넘어 과학성과 인문성을 매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과학철학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명희, 2014: 52; 김명희, 2015b: 268-269).

(3) 공시 발현적 힘의 유물론

발현적 힘의 유물론은 유물론이지만 환원주의적 유물론과 달리 발현적 힘을 인정한다. 이러한 철학적 전제 위에서 인간에게는 물리학적 층위/화학적 층위/생물학적 층위/사회학적 층위/심리학적 층위가 있다는 존재론적 깊이를 고려한 층화된 세계관의 관점이 승인된다. 공시 발현적 힘의 유물론은 각 층위의 기제가 공시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생물학적 기제와 사회학적 기제가 동시에 발현하여, 똑같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때 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Bhaskar, 2021: 64). 이는 생물학 혹은 사회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생물학 및, 생물학적 기제와 사회학적 기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이론에서 생물학적 기제를 취급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의 준거점도 제공해준다.

---

12) 그러나 바스카의 시공간 의존성은 자연적 구조는 영원불변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바스카의 주장은 사회구조가 자연적 구조보다 보통 상대적으로 더 시공간 의존성이 강하다는 정도로 수정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enton and Craib, 2014: 230).

요컨대 이 글은 비판적 실재론의 초월적 실재론, 비판적 자연주의, 층화 이론 및 공시 발현적 힘의 유물론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연주의를 재해석하는 분석의 관점으로 도입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문헌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자연주의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Ⅴ장에서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중심으로 엥겔스의 반환원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Ⅳ. 마르크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이 장에서는 마르크스의 반환주의적 자연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마르크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가 갖는 특징들을 고찰하려 한다. 그다음 Ⅴ장에서 엥겔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를 살펴보고, 이 장에서 고찰한 마르크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상호보완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비 고찰을 위해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한다.

1. 『독일 이데올로기』: 두 사람의 출발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하나의 과학을 주장했다.

> "우리는 단지 하나의 유일한 과학만을 알고 있다. 그것은 역사과학이다. 우리는 역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역사는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측면을 분리할 수 없다. 인간이 현존하는 동안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서로를 전제한다."(Marx&Engels, 2019: 44)

하나의 과학을 강조하며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서로를 전제한다는 이 대목을 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통섭의 학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통합적 사고를 개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역사유물론이라고 불리게 되는 관점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발전되고 정립되었다. 인간이 먹어야 산다는 점, 식욕처럼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높은 단계의 욕구가 발달한다는 점, 이에 따라 노동 분업이 발달한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Marx and Engels, 2019: 67-69).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또한 더불어 언어가 강조되는 것은 후기 저작까지 이어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특징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노동을 하면서 자연을 변형시키고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자기 자신을 재생산 및 변형한다는 마르크스의 물질대사론,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 두뇌와 언어를 발달시키고 독특한 사회 체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엥겔스의 인류학적 관점은 모두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는 기본적 역사유물론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2. 경제학 비판 : 『자본론』을 중심으로

마르크스는 역사유물론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데 이때 자연주의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 다음은 『자본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 "[우리가 인류문명의 초기에 수렵민족들 사이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인도공동체의 농업에서 볼 수 있는] 노동과정의 협업은, 한편으로 생산 조건의 공동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이 [마치 개개의 꿀벌이 벌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씨족 또는 공동체의 탯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Marx, 2015a: 455, 강조는 필자)

개미 연구자인 윌슨이 인간 사회를 얘기할 때 개미 비유를 드는 것처럼, 마르크스도 벌의 비유를 든다. 마르크스나 윌슨이 생물학적 유추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마르크스와 윌슨의 차이는 생물학적 유추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생물학적 유추를 사용하거나 생물학적 사유를 곁들이는 건 오히려 유효한 설명 수단이 되거나, 사회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사례로, 『자본론』에는 생물학적 고려도 나온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인간도 할 수 있다는 '인간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은 가치 법칙이 성립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마르크스는 가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어떤 인간 사회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생산물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총노동이 있으며, 각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의 분배가 필요함을 주장한다(Marx, 2015a: 99-101; Heinrich, 2016: 69). 이는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천 명이 사는데 만 명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거나, 백 명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진 않다. 또한 의복, 주거 등도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분업이 가부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물려받은 신분에 따라 분업이 정해진다(Marx, 2015a: 100-101). 반면에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노동력을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짓는다. 이처럼 노동력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위치짓는 건 개미나 벌 같은 다른 사회적 동물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개미나 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 내에서 자기가 할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업이 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제 사회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곡물을 잘 만드는 사람은 곡물을 만들고, 포도주를 잘 만드는 사람은 포도주를 만든다. 그것이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용가치라는 측면에서 극대화되는 곳에서 각자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총가치는 증대하지 않지만 사용가치는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13](Marx, 2015a: 205-206).

---

13) 사용가치와 가치는 다르다. 가치는 상품 교환에서 본질적인 척도로 기능하며,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시간이다(Marx, 2015a: 47). 물론 인간이 자연 자원을 개량하는 시도는 항상 성공하리란 필연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Marx, 2015c: 844-845), 인간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발전시킨다는 점은 타당하다.

이는 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전 시기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지를 설명해준다.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높였다는 마르크스의 관점은 멜서스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Malthus, 2011: 20). 이에 따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면 그들은 육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낳을 거고, 식량 부족으로 파멸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었다(Malthus, 2011: 483-488).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멜서스는 절대적 과잉인구를 주장한 것이다(Marx, 2015a: 864, 960). 반면에 마르크스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주장했다. 이 상대적 과잉인구란 쉽게 표현하면 산업예비군이다. 상대적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력이 자본 측의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이기 때문이다(Marx, 2015a: 25장).

즉 '산업예비군'이 '사회 문제'라는 걸 마르크스는 적절하게 지적했다. 멜서스가 '육욕'이라는 생물학적 층위의 기제를 과잉인구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마르크스는 거기에 사회적 요인을 대치시킨 것이다. 마르크스는 멜서스의 생물학주의에 대비되게, 사회적 층위의 발현적 속성을 적절하게 사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윤율 저하와 관련해서도 멜서스나 그의 영향을 받은 고전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생기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강조했다. 즉 자연적 요인을 강조한 것이다. 생산성 저하로 식량의 가격이 오르면 생계비도 증가하는데, 리카도는 임금이 생계비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리카도는 임금 몫의 증대로 이윤율이 저하된다고 본 것이다(Callinicos, 2020: 343).

반면에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좋은 기계를 도입해 남들보다 빠른 시간으로 상품을 생산한 결과 얻는 특별잉여가치(Marx, 2015a: 433-434)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14]된 결과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으로 보았다. 멜서스와 리카도가 자연적인 요인에서 이윤율 저하의 원인을 찾았다면, 마르크스는 사회적 요인에서 찾은 것이다(Marx, 2015c: 3편; Callinicos, 2020: 342-365).

위에서 살펴본 마르크스와 멜서스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Ⅳ장에 나타난 마르크스와 멜서스의 차이

	마르크스	멜서스
생산성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승	하락(한계수확체감의 법칙)
과잉인구	상대적 과잉인구	절대적 과잉인구
과잉인구의 원인	사회적 요인(자본주의 사회 운동법칙: 이윤 추구)	자연적 요인(생물학적 조건: 육욕)
이윤율 저하의 원인	사회적 요인(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자연적 요인(한계수확체감으로 인한 노동력 가격의 상승)

14)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란, 생산수단 대 노동력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적 구성이 높아져 노동자가 기계보다 많아지면 불변자본 대 가변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치 구성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Marx, 2015a: 836).

Ⅴ. 엥겔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이 장에서는 Ⅳ장에서 고찰한 마르크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를 고려하며 그것과 엥겔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한다. 또한 엥겔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가 윌슨의 사회생물학과 대비되는 사회학적 사회생물학&반환원주의적 통섭의 가능성을 갖는지도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마르크스는 다윈의 부르주아적인 면에 비판적이기도 했던 반면 엥겔스는 일관되게 다윈을 옹호했다는 임지현(1984)의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1. 엥겔스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후기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속류화시켰다고 많이 지적된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을 반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오히려 엥겔스의 후기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과 연관된 논지인, 마르크스는 다윈에 부정적이기도 했던 반면 엥겔스는 시종일관 긍정적이었다는 주장을 검토해보자(임지현, 1984 참고). 이는 엥겔스가 과잉자연주의에 빠졌는지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뒤링론』에 나오는, 다윈과 생물학과 관련된 엥겔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 "... (다윈의 - 필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론은 동물계와 식물계 전체에 적용된 맬더스의 이론이다. **잘 살피지도 않고 소박하게 맬더스의 학설을 받아들인 다윈의 실수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자연에서 감지한 데는 어떠한 맬더스의 안경도 필요치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목요연한 사실이다.**"(Marx&Engels, 1994: 76-77, 강조는 필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처럼 엥겔스도, 멜서스의 이론을 잘 살피지도 않고 자연계에 적용한 다윈의 약점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임지현(1984)의 주장과 달리, 엥겔스는 일관되게 다윈을 옹호하지 않았고 마르크스와 같은 이유로 다윈을 비판했다. 비판의 핵심은 다윈이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이다. 임지현도 이 대목을 다루지만(임지현, 1984: 168) 그는 엥겔스의 "다윈의 실수가 큰 것"이라는 언급을 상략하고 "멜서스의 안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언급만을 강조하며 다윈을 옹호하기 위해 엥겔스가 멜서스주의의 그림자를 벗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분리하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도 다윈을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멜서스주의적 측면을 비판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다윈 평가가 상반된다는 관점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Marcy, 2009: 75).

『자연변증법』도 후기 엥겔스가 마르크스와 엇나가며 마르크스주의를 속류화한 저작으로 지적받지만, 마르크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진척된 작업이었다(한형식, 2010: 120). 『자연변증법』에서 엥겔스는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야심 찬 시도를 진행한다. 『자연변증법』의 한 장인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의 역할」의 인용문을 보자.

"손의 형성 및 노동과 함께 시작된 자연에 대한 지배는 매번 새로운 진보가 이루어질 때마다 인간의 시야를 확장시켰다. 인간은 자연대상들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내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사회성원들을 더욱 긴밀히 결합시켰다. 즉 그들 사이에서는 상호 지원, 공동협력의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 협력의 유용성이 모든 개별 성원들에게 의식되었다. 한 마디로 생성중의 인간들은 서로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할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 **우선 노동,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함께 언어 — 이 두 가지는 한 원숭이의 두뇌가 모든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크고 더 완성된 인간의 두뇌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그 이행의 가장 본질적인 두 추동력이다.** 그러나 두뇌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그 다음 도구, 즉 감각기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달되어 갔다. 언어가 그 점차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상응한 청각기관의 섬세화를 동반했던 것처럼, 두뇌 일반의 발전은 감각 전체의 섬세화를 동반했다."(Engels, 1990a: 169-171)

엥겔스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노동 그리고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엥겔스의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자들에게도 인정되었다(Gould, 2009: 296-300).

노동과 언어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요 관점이다. 위 인용문의 내용은 당대 생물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접한 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생물학적 층위가 사회적 층위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층위가 생물학적 층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의 역할」에서는 인간이 육식을 함으로써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이 고기를 익혀 먹게 됐다는 것이 강조된다. 인간은 음식을 변형시키고, 식량 생산을 위한 도구를 발달시킨다. 그에 따라 인간의 음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영양이 풍부해져 두뇌가 발달하며 문명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도 이어지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제부터 다룰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엥겔스의 인류학적 관점 및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이라는 함의를 더 상세히 다뤄보겠다.

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5]은 엥겔스의 대표작이다. 후기 엥겔스가 저평가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가사국기』만은 그 위상이 높이 서 있다. 제목 그대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과 함께 성차별의 기원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엥겔스가 이 책에서 한 기여는 현대 인류학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 책과 다름이 밝혀졌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부정되지 않았다(김민재 외, 2019: 70). 『가사국기』의 「1장 선사시대 문화의 단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야만

1) 낮은 단계: 인류의 유년기. 수렵 채집.

15) 이하 『가사국기』로 줄인다.

2) 중간 단계: 불을 사용. 어류 등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남.

3) 높은 단계: 활과 화살의 발명. 짐승 고기가 일상적인 음식이 됨.

2. 미개

1) 낮은 단계: 토기 제조법을 터득하면서 시작. 저장 가능.

2) 중간 단계: 가축, 관개를 통한 식용작물 재배, 돌 건축 등.

3) 높은 단계: **철광석을 제련하고 문자를 이용하면서 문명으로 이행**. 가축이 끄는 철제보습날 등장. 대규모 농업 즉 농경이 가능하게 됨.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엥겔스가 인류의 발전을 '음식'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도구의 발달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 또한 『자본론』에서, 인간 역사를 고찰할 때 도구의 재료를 기준으로 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로 시대를 구분하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Marx, 2015a: 241). 엥겔스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잡식동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며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국기』의 「2장 가족」을 보면, 엥겔스는 구속 없는 성교가 지배하는 원시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엥겔스 당대에는 인류의 성생활의 이러한 초기 단계를 부인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물계의 사례를 들었다. 예컨대 조류는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엥겔스에 따르면 조류의 일부일처제는 인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하는 사례다. **왜냐하면 인류는 조류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간이 속한 포유류의 경우에서 우리는 무규율 성교, 군혼 비슷한 것, 일부다처제, 단혼제 등 온갖 형태의 성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엥겔스는 생물학적 진화 계통을 근거로, 인간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자연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Engels, 2012: 51-52). 그러면서도 동물 사회가 인간 사회를 유추하는 데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보정적 가치일 뿐이라고 제한했다(Engels, 2012: 56). 이 같은 엥겔스의 관점은 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생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생물학, 즉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엥겔스의 성차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원시시대에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평등했고, 또한 성평등한 사회였다. 그러다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잉여생산물이 생기면서 변화한다. 생산력의 향상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과 노예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전사인 남성들의 권력이 강해지게 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남성의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에 따라 여성을 성적으로 독점하는 제도가 발달한다. 왜냐하면 집단 성교를 하면 여성은 자기 자식을 알 수 있지만, 남성은 자기 자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Engels, 2012: 104, 280-282).

여기서 엥겔스는 임신 및 출산과, 생산력이라는 두 조건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은 원시 사회에서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성차별을 낳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고 잉여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계급 사회가 출현하자 동시에 성차별이 출현했다. 생물학적 층위에서의 기제와 사회적 층위에서의 기제가 상호작용하고 결합되어 공시 발현한 것이다.

엥겔스의 이 같은 관점은 인간이 보유한 여러 특징들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거나, 인간은 자연적 요인에 지배된다거나, 사회적 요인이 생물학적 요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입장과는 분명 대치되는 입장을 보여준다.

Ⅵ. 나가며

이 글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 마르크스의 자연주의와 엥겔스의 자연주의, 그리고 윌슨의 자연주의와 서구마르크스주의 혹은 인문학적 해석학의 반(反)자연주의의 특징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마르크스/엥겔스/윌슨/서구마르크스주의 혹은 해석학의 자연주의 차이

	마르크스	엥겔스	윌슨	서구마르크스주의 혹은 해석학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물질대사 강조)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환원주의적 자연주의	반(反)자연주의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관계	하나의 과학 주창(반환원주의 강조)	하나의 과학 주창(반환원주의적 '통섭' 노력)	환원주의적 통섭(생물학적 환원주의)	반환원주의 및 통섭 반대
전문 분야	인간과학 일반, 특히 경제학	인간과학과, 생물학 등 자연과학	생물학	인간과학
사회적 차원	사회적 요인 강조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지만 생물학적 요인도 상당히 고려	생물학적 요인으로 환원	생물학적 요인을 적게 보고 사회적 요인을 강조

종합하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연주의는 윌슨의 자연주의 그리고 반(反)자연주의와도 다른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입장에 서 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은 상보적으로 독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차이는 두 사람이 구분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개진한 사회과학은 분과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이 글에서 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반환원주의적 통섭과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Carchedi, Guglielmo. 2011. 「Chapter one Method.」. 『Behind the Crisis』. Brill.

Dussel, Enrique. 2001. 「12장. The Manuscripts of 1861-63 and philosophy of liberation」, in 『Toward unknown Marx』. Routledge.

Fineschi, Roberto. 2013. 「The four levels of abstraction of Marx's concept of "Capital"」, 『In Marx's Laboratory』. Brill.

Lawson, Tony. 2003. 「Chapter 05 An Evolutionary Economics?」. 『Reorienting Econom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arx, Karl. 1977.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rogress Publishers, Moscow.

Moseley, Fred. 2014. 「The Universal and the Particulars in Hegel's Logic and Marx's Capital」, 『Marx's Capital and Hegel's Logic: A Reexamination』. Brill.

R S 바가반. 2010.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천경록 역. 책갈피.

굴드(Gould, Stephen Jay). 2009. 『다윈 이후』. 홍욱희, 홍동선 역. 사이언스북스.

권용주. 2013. 『이기적 유전자 사용매뉴얼』. 카오스북.

기든스(Giddens, Anthony). 2008.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박노영・임영일 역. 한길그레이트북스.

김명희. 2017. 『통합적 인간과학의 가능성』. 한울아카데미.

김민재, 이지완, 황정규. 2019.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해방.

김상연. 2016. 『과학과 경제학의 만남- 뇌과학과 신경경제학』. 동아엠엔비.

김세균 외. 2015. 『다윈과 함께』. 사이언스북스.

_____. 2018. 『학문간 경계를 넘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다네마르크(Danermark, Berth) 외. 2005.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다윈(Darwin, Charles). 2014(1872).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김홍표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_____. 2019(1859). 『종의 기원』. 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도킨스(Dawkins, Richard). 2010(1976).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이상임 역. 을유문화사.

뒤르케임(Durkheim, Émile). 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 역. 아카넷.

_____. 2019.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 박창호 역. 새물결.

레닌(Lenin, Vladimir Ilyich). 2015. 『국가와 혁명』. 이용재 역. 돌베개.

_____. 2018.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 최재훈 역. 아고라.

로우즈(Rose, Steven) 외. 1993.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이상원 역. 한울.

루카치(Lukacs, Georg). 2015. 『역사와 계급의식』. 조만영・박정호 역. 지만지.

루티(Ruti, Mari). 2017.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김명주 역. 동녘사이언스.

마르크스(Marx, Karl). 1991.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_____. 2015a(1867). 『자본론Ⅰ(상/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cf. Capital Ⅰ. tr. by B.Fowkes. Penguin Books Limited. 1976.
_____. 2015b(1885). 『자본론Ⅱ』. 엥겔스(Engels, Friedrich) 엮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_____. 2015c(1894). 『자본론Ⅲ(상/하)』. 김수행 역. 엥겔스(Engels, Friedrich) 엮음. 비봉출판사.
마르크스 and 엥겔스(Marx, Karl and Engels, Friedrich). 1997(1848). 『공산당 선언』. 서석연 역. 범우사.
_____. 1991.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_____. 1992.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_____. 1994.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5』.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_____. 2019(1845-1846). 「1장 포이어바흐」. 『독일 이데올로기 1』. 이병창 역. 먼빛으로.
멜서스(Malthus, Thomas Robert). 2011. 『인구론』. 동서문화사.
바스카(Bhaskar, Roy). 2007.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이기홍 역. 후마니타스.
_____. 2020. 『로이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교육을 말하다』.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_____. 2021. 『자연적 필연성의 질서』. 게리 호크 편집. 김훈태 역. 두번째테제
버스(Buss, David). 2012. 『진화심리학』. 이충호 역. 웅진지식하우스.
버틀러(Butler, Judith).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베버(Weber, Max). 2017. 『사회학의 기초개념』. 문예출판사.
벤턴 and 크레이브(Benton, Ted and Craib, Ian) 2014. 『사회과학의 철학』.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브란튼베르그(Brantenberg, Gerd). 2016. 『이갈리아의 딸들』. 히스테리아 역. 황금가지.
블래키(Blaikie, Norman). 2015. 『사회연구의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블랙모어(Blackmore, Susan). 2010. 『밈』. 김명남 역. 바다출판사.
사사키 류지. 2020.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정성진 역. 산지니.
셔머(Shermer, Michael). 2009. 『진화경제학』. 박종성 역. 한국경제신문 한경BP.
_____. 2013. 『경제학이 풀지 못한 시장의 비밀』. 박종성 역.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스노우(Snow. Charles Percy). 1996. 『두 문화』. 오영환 역. 민음사.
슬레이터(Slater, Lauren). 2005.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조증열 역. 에코의서재.
아처(Archer, Margaret) 외. 2005a. 『초월적 실재론과 과학』.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_____. 2005b. 『비판적 자연주의와 사회과학』.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엥겔스(Engels, Friedrich). 1990a(1872-1882). 『자연변증법』. 윤형식・한승완・이재영 역. 중원문화.
_____. 1990b(1880). 『공상에서 과학으로』. 나상민 역. 새날.
_____. 2008(1886).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강유원 역. 이론과 실천.
_____. 2012(1884).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두레.
올콕(Alcock, John). 2013. 『다윈 에드워드 윌슨과 사회생물학의 승리』. 김산하・최재천 역. 동아시아.
와터스, 에단(Watters, Ethan). 2011.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김한영 역. 아카이브.
윈치(Winch, Peter). 2011. 『사회과학의 빈곤』. 박동천 역. 모티브북.
윌슨(Wilson, Edward). 1992(1975). 『사회생물학 1, 2』. 이병훈・박시룡 역. 민음사.
_____. 2005(1998). 『통섭』. 최재천 역. 사이언스북스.
이기홍. 2017. 『로이 바스카』. 커뮤니케이션북스.
_____. 2019.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한울아카데미.
이진경. 2015.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
임승수. 2020.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시대의창.
조성오. 1991. 『인간의 역사』. 동녘.
채만수. 2013. 『노동자 교양경제학』. 노사과연.
최재천 외. 2011. 『사회생물학 대논쟁』. 이음.
캘리니코스(Callinicos, Alex). 2020. 『자본론 행간 읽기』. 책갈피.
콜리어(Collier, Andrew). 2010. 『비판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역. 후마니타스.
키트 and 어리(Keat, Russell and Urry, John). 1993. 『과학으로서의 사회이론』. 이기홍 역. 한울아카데미.
트리그(Trigg, Roger). 2007. 『인간 본성과 사회생물학』. 김성한 역. 궁리출판.
파이어스톤(Firestone, Shulamith). 2016(1970). 『성의 변증법』. 김민예숙, 유숙열 역. 꾸리에.
포스터(Foster, John Bellamy). 2016. 김민정, 황정규 역. 『마르크스의 생태학』. 인간사랑.
폴리(Foley, Duncan). 2011. 『아담의 오류』. 김덕민, 김민수 역. 후마니타스.
_____. 2015. 『자본의 이해』. 강경덕 역. 유비온.
핑커(Pinker, Steven). 2004. 『빈 서판』. 김한영 역. 사이언스북스.
하먼(Harman, Chris). 2004. 『민중의 세계사』. 천경록 역. 책갈피.
_____. 2012. 『좀비 자본주의』. 2012. 이정구 역. 책갈피.
_____. 2016. 『크리스 하먼 선집 - 시대를 꿰뚫어 본 한 혁명가의 시선』. 최일붕 엮음. 책갈피.
_____. 2019.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이수현 역. 책갈피.
하야시 나오미치. 2011.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유승민・양경욱 역. 그린비.
하인리히(Heinrich, Michael). 2016. 『새로운 자본 읽기』. 김강기명 역. 꾸리에북스.

한형식. 2010. 『맑스주의 역사 강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아시아 공산주의까지』. 그린비.
_____. 2019. 『마르크스 철학 연습 - 세상을 직시하게 하는 한 권의 철학』. 오월의봄.
헤스(Hess, David J.). 2004. 『과학학의 이해』. 1장(21-103). 김환석 역. 당대.

2. 학술논문

Bellofiore, R. and Riva. T. 2015. "The Neue Marx-Lektüre: Putting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back into the critique of society." *Radical Philosophy* 189: 24-36.
Dmitryev, Franklin and Eugen Gogol J. 2018. "Marx's Philosophy of Revolution in Permanence: Its Significance for Our Time." 『tripleC』 16-2.
Lawson, Tony. 2002. "Should Economics Be an Evolutionary Science? Veblen's Concern and Philosophical Legac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VI, no. 2: 279-292.
강신익. 2012. "사회생물학 달리 보기." 『대동철학』. 2012.06: 23-60.
강정한. 2013. "현대 사회 이론의 생물학적 전환." 『사회와이론』 2013.11: 105-134.
김명희. 2014. "마르크스와 뒤르케임의 사회과학방법론 연구." 성공회대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a. "맑스와 뒤르케임의 딜레마와 자연주의 사회과학의 가능성." 『한국사회학』. 2015. 02: 259-292.
_____. 2015b. "뒤르케임의 사회과학철학 : 반환원주의적 통섭의 가능성." 『한국사회학』. 2015. 10: 267-30.
김세균. 1990. "政治經濟學 批判의 方法으로서의 마르크스 변증법에 대한 一考察." 김세균 홈페이지 http://htp://skkim.jinbo.net/
김진업. 2010. "맑스 민주주의 이론의 과학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동향과전망』80: 106-142.
마시(Marcy, Sam). 2009. "맑스, 다윈 그리고 생물학의 대격변." 나승연 역. 『정세와노동』 47: 70-91.
민병원. 2012.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한국정치연구』. 2012.21: 343-367.
박만준. 2012. "사회생물학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68: 295-321.
박창호. 2004.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오리엔탈리즘." 『담론201』, 6(2): 125-162.
백훈승. 2003. "자연변증법 비판: F.Engels의 『자연변증법』과 『반뒤링론』을 중심으로." 『범한 철 28: 235-255.
송성수. 2009. "윌슨의 통섭은 두 문화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가?" 『철학논총』 2009.4: 25-42.
이기홍. 2006. "사회과학에서 몇가지 이분법에 대한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2006.8: 223-247.
_____. 2015. "사회과학에서 가치와 객관성." 『사회와 이론』. 2015.11: 261-308.
이남인. 2009.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철학연구』 2009.12: 259-311.
이영희. 2010. "두 문화, 사회생물학, 그리고 통섭 비판적 고찰." 『인간연구』 18: 69-97.
임지현. 1984. "다윈과 마르크스 : 獻呈說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02: 135-174.
캘리니코스(Callinicos, Alex). 2009. "다윈과 진화론." 천경록 역. 『마르크스21』 2009.12:

201-206.

3. 기사

김민정. 2011.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을 옹호하며.” 「레프트21」 57호 (2011.06.01.).
이원웅. 2020.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노동자연대」 341호 (2020.10.28.).
이재유. 2020. “엥겔스, 맑스주의 논쟁사의 시작 - 독일 사회민주주의자 1: 엥겔스의 기여.” 11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9.30.).
한선희. 2017.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노동자연대」 223호 (2017.09.21.).

서울시 PC방의 공간분포 분석과 유형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종훈

이번 연구는 PC방의 공간사회학적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울시 PC방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밝히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초반부터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대상을 '방 문화'로 였는 문화사 연구들이 이뤄졌는데, 각각의 공간들이 모두 공간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 학원가 근처의 PC방과 번화가 근처의 PC방의 특징이 같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연구는 행정동을 단위로 PC방의 밀집 분포 지역을 선정하고 유형화하였는데, 행정동이라는 단위가 너무 넓고, 동마다 크기가 다르며, 다양한 성격이 혼재해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를 500m x 500m의 단위격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이질성에 착안하여, Gi 통계량을 활용한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서울시 PC방 핫스팟을 선정하고 핫스팟에 분포한 PC방을 대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핫스팟에 위치한 PC방은 서울시 전체 1,312개 PC방 중 551개 PC방에 해당한다.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K 개수는 5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며, 각 군집의 변수 패턴을 보았을 때 지하철역 인근 공무원/어학 학원가, 거주 인구 많은 번화가/유흥가, 초중고등학교 및 입시학원 많은 주택가, 주택가 인근 상권, 교육/주택/상업 혼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형별로 이용계층,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 등이 모두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이어지는 PC방 게임문화 연구와 이용자 연구에 유용한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1. 들어가며

1990년대 말 처음 등장하여 2000년대 초 서울시 내 '어디서나' 볼 수 있던 PC방은,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의 근대적 문화풍경의 한 단면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PC방은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PC방이 놀이, 특히 게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인간의 본질로서 노동을 이해한 마르크스나 청교도적 노동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인과적으로 연결한 베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친 한국에서 사회과학의 연구 관심은 대체로 미시적 소재보다는 국가, 민주주의, 기업과 노동시장 등 거시적 소재에 있었기에 놀이공간은 주변에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놀이의 형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희를 찾는 것'까지 범주가 다양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논다'는 것은 '일/공부'의 의미와 반대되기 때문에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학생의 본질은 학업으로 설정되고, 성적 혹은 진학이라는 성과를 내기 이전에 노는 것은 유예되어야 했으며,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대표적 여가문화인 게임은 물론 게임이 수행되는 대표적 장소로서 PC방에 가는 행위는 필요에 따라 제한되었다. 시간대를 좀 더 확장하면, 전후 국가재건, 개발주의 시기 경제성장,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역군'으로 호명되어왔으며, 쉽게 놀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사회과학에서 놀이공간 혹은 여가 공간을 연구한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점차로 일상생활과 문화 등 미시사 연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카페, 노래방, PC방, 편의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 문화사 연구들이 이뤄졌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문화공간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방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공유된 인식 속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식민지적 혹은 압축적이라는 한국의 고유한 근대성 안에서 다양한 문화공간들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근대성이라는 거시적 틀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바로 그 시도로 인해, 각각의 공간들은 모두 공간적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 학원가 근처에 있는 PC방과 번화가에 있는 PC방의 성격이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PC방은 언제나 '문제적'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공간'으로서 PC방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PC방이 오락실의 연장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PC방이라는 공간이 1995년 인터넷카페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고 97년부터 지금의 PC방의 모습을 갖춰왔지만, 1960년대 중반 이미 국내에 오락실이 처음 도입되어 80년대 전성기를 맞으며 게임하는 공간으로서 오락실 문화가 형성되었고, PC방은 1997년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기능적 등가물로서 오락실을 점진적으로 대체해왔다. 오락실에 대한 규제, 전자오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PC방 규제, PC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PC방이 처음 등장함과 거의 동시에 학습저해시설로 분류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진입이 금지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오락실에 대한 연구가 그랬던 것처럼, PC방에 가는 것 자체가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라는 연구결과들까지 제시됨으로써 PC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배가되었다.

그러나 내가 시도하는 PC방 연구가 게임문화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던지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연구되었던 문화사 연구의 연장에서 PC방이라는 놀이공간의 의미를, 공간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해명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PC방 연구가 한편으로 공격성/폭력성 증가 및 학업성적 저해를 유발한다는 심리학, 아동/청소년 연구의 주된 흐름과 협력/즐거움을 강조하는 게임연구의 흐름으로 양분되어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연구흐름들을 PC방 공간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포섭하는 한편 PC방의 공간사회학적 의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C방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분포 양상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떤 외부 조건들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공간의 내부구조, 구성 및 이용자의 이용방식 등을 탐구하고 PC방과 사회, PC방과과 사용자, 계획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서울시 내 PC방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와 현재 어떻게 분포해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따라 2000~2019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행정동 단위의 PC방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후, PC방 유형 분류를 시도했던 선행연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이며 2021년 현재 서울시에 분포한 1,312개 PC방을 대상으로 새롭게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

저 PC방 밀집 분포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Getis-Ord-Gi 통계량을 활용하여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나온 핫스팟 지역에 분포한 551개 PC방을 대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군집화를 시도한 이유는, 모든 PC방이 공간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PC방의 유형별로 주요 이용 계층, 이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할 게임문화/이용자 연구의 준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 PC방의 정의

1) PC방의 정의

노래방, 찜질방, DVD방 등 일상에서 '-방'의 이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들을 '방 문화'로 범주화하기를 시도해왔다(정기용, 2007; 유현준, 2015; 김광수, 2015; 조민식, 2017). 이때 '-방'이라는 어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은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벽으로 막아 만든 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 분포한 다양한 '방'들은 거처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여가 등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며, 개별 공간이 벽으로 막혀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따라서, 방 문화에서 방은 '-방'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정의된다(박경선, 2018).

'방'의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PC'와 '방'의 합성어인 PC방은 PC를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PC를 하기보다는 PC를 이용하여 문서작업, 게임, 인터넷쇼핑 등 다른 무언가를 한다. <표1>에서 사전적 정의는 PC방 이용자를 중심으로, 법률적 정의는 PC방 업주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PC방은 '일정 요금'을 내고 포괄적 의미에서 'PC를 하기 위한 곳'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PC방의 내부 구성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지 않다.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PC방이 2006년 폐지된 음비법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 같은 해에 신설된 게임산업법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바뀐 것을 통해 PC방 이용의 목적이 '게임'으로 좁혀졌음을 알 수 있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통해 2000년대 후반부터 PC방이 휴게음식점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함께 등록하여 PC방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적・법률적 정의를 이용자 중심으로 종합하면, PC방은 '일정 요금을 내고, 인터넷이 연결된 여러 대의 PC 및 주변기기가 갖춰진 곳에서 (경우에 따라 음식을 먹으며) 주로 게임 위주의 PC이용을 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PC방의 주된 이용 목적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진행할 연구들에서, PC방을 게임 위주로 바라봄과 동시에 게임에 괄호를 쳤을 때 남는 부분들까지도 포착할 필요가 있다.

<표1> PC방의 사전적·법률적 정의

구 분		정 의
사전적 정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온라인게임이나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장소[1]
	대중문화사전	돈을 내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2]
	매일경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혼자 또는 여럿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시켜 놓은 장소[3]
법률적 정의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이하 음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0.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02144&cid=51884&categoryId=53390
2) 대중문화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71000&cid=42028&categoryId=42028
3) 매일경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825&cid=43659&categoryId=43659

3. 선행연구 검토

<표2> PC방 선행연구 정리

구 분	주 제	세부 내용
인터넷·게임중독, 일탈, 범죄	PC방 이용과 인터넷·게임중독	-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할수록 중독되기 쉬움 - 인터넷·게임중독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PC방 이용자를 표적표집
	청소년 일탈, 범죄	- 음란물 접촉 - 허위사실 유포, 해킹 등 사이버범죄 - 일진 등 일탈청소년의 집결지
게임, 놀이	관계 형성	- PC방에서의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청년세대의 소통방식을 반영 -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호혜적·상호의례적 관계를 형성
	가상-현실을 매개하는 놀이 장소	-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보는' 행위를 통해 가상-현실이 매개됨 - PC방은 가상, 가상-현실, 현실이라는 복합적 층위에서 놀이하는 육체들로 구성됨
그 외	다중이용시설	- 홈리스의 임시 숙박 장소
	게임산업 유통업	- 게임생산자의 최종 공급단위임과 동시에 게임소비자의 최종 소비단위
	법/정책변화	- 음비법, 게진법, 청소년보호법, 등록제 전환, 영업 중지 명령 등 다양한 법/정책변화의 영향
공간분포 연구	PC방 분포 유형	- 1998~2004년 서울시 PC방의 행정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하철/대학가/학원가/아파트 인근으로 구분 가능
	방 문화	- PC방은 1세대 방 문화에 속하며, 대형화를 통해 침체기를 극복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음

<표2>는 PC방이 다뤄진 연구들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 중 PC방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인터넷·게임중독 연구에서 PC방은

대부분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뤄졌고, 게임문화 연구에서는 게임이 수행되는 장소로 PC방 다뤄졌다. 홈리스 연구에서 PC방은 홈리스의 대부분이 머물러본 경험이 있는 임시 숙박 장소로 다뤄졌다. 한편 PC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게임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유통장소로 다루거나, 제도적 측면에서 PC방을 대상으로 한 법/정책의 변화와 규제를 다루었다. PC방의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 PC방의 분포 유형을 행정동별로 분석한 김윤정(2007)의 연구가 유일하며, 홍대 앞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 문화의 종합을 시도한 박경선(2018)은 PC방을 방 문화의 일부로 바라보며 분석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PC방을 일탈/범죄 등 사회문제와 연결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게임문화를 촉진하는 장소로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① 인터넷・게임중독, 일탈, 범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학 연구나 아동・청소년 연구는 PC방을 중독/일탈의 장소로 전제하며, PC방 이용과 인터넷・게임중독을 연결하고, 게임 이용과 이용자의 우울감/폭력성의 증가를 연결한다.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변수로 PC방 이용을 설정했다(Kim et al., 2004; 김은영, 2009; 서민영, 임은미, 2012). 즉, 가정보다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할수록 더욱 중독되기 쉽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연구의 다수는 연구의 표본 추출을 위해 PC방에 자주 출입하던 사람들을 표적표집했는데[4](김준수 외, 2004; 박중규, 배성만, 2012; 이주연, 전종설, 2015; 김소연, 전종설, 2016; 권현숙, 권경인, 2017), 이는 PC방을 중독의 장소로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PC방은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장소로, 혹은 일탈 청소년들의 집결지로 분석된다. 초기 PC방에서 나타났던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에 관한 연구(김선희, 1999)나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사실 유포,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다는 연구(김성은 외, 2014)는 PC방을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바라보는 관점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학생들, 혹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PC방을 자주 찾으며, 그곳에서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연구(김의철 외, 2010; 오경희, 한대동, 2015)는 PC방을 일탈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PC방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② 게임, 놀이

한편 문화연구자들은 그동안 게임이 가치중립적 문화현상이자 연구대상으로 연구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윤태진, 2015), 게임이용자들이 게임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 나아가 게임이라는

4)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의 대표적 공간인 PC방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률 및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였다."(김준수 외, 2004)
"인터넷 사용이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측된 표적표본은 PC방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지목된 대상을 중심으로 면접 및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박중규, 배성만,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재학생들, pc방 이용 중학생, 인터넷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중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김소연, 전종설, 2016)
"자료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207명을 대상으로 표적 표집한 것이다."(권현숙, 권경인, 2017)

가상과 현실을 매개해주는 공간이라는 시각으로 PC방을 바라본다. 윤선희(2001)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새로운 게임과 PC방이라는 새로운 산업은 청소년・청년 세대의 억눌린 욕망을 실체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반영한 공간이라고 본다(윤선희, 2001). 정정현(2017)은 PC방 참여관찰을 통해 온라인 게임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증여적이고 호혜적인' 집합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김혜영(2019)은 청소년들이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는 것이 집합열광을 경험하게 하는 등 상호의례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를 진행했다(정정현, 유승호, 2017; 김혜영, 유승호, 2019).

원용진, 강신규, 채다희(2018)는 PC방에서 게임 구경은 집, 오락실과 달리 직접적으로 이뤄진다기보다는 '관전' 혹은 '리플레이'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보면서, 게임이 실행될 뿐만 아니라 '보는' 행위를 통해 이용자들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PC방을 다뤘다(원용진 외, 2018). 이수엽, 채다희, 박근서는 요한 호이징아가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공간'을 개념화하기 위해 만든 '매직서클[5]'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PC방을 '2차 매직서클'로 정의한다. PC방 안에는 게임이라는 1차 매직서클이 존재하고, 그 밖에는 컴퓨터의 하드/소프트웨어 및 마우스,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 그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는 플레이어, 다른 게임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 구성된 2차 매직서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수엽 외, 2016).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두 연구 경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리학, 아동・청소년학은 인터넷과 게임을 문제가 있는 것, 적어도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 연구들은 청소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드러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하고, 중독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반면, 문화연구는 게임과 PC방을 가치중립적 연구대상으로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앞선 연구들이 보지 않았던 부분을 들춰내는 것 이외에 실제로 존재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애써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C방에서 비속어・욕설의 사용은 연령・성별과 무관하게 들려오며, 게임 내에서도 익명성을 방패 삼아 다른 이용자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6]. 전자의 연구는 PC방이 게임-중독-일탈, 후자의 연구는 PC방이 게임-협력-즐거움이라는 단일한 성격을 가

5) 매직서클이란 어떤 놀이가 시작되었을 때 현실과 구분되는, 특정 놀이만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가위바위보를 구성하는 규칙과 두 명의 플레이어 이외의 요소는 가위바위보에 개입될 수 없다. 그러나 매직서클은 언제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즉, 외부세계(현실)은 내부세계(매직서클) 내에 개입될 수 없고 오직 매직서클에서만 외부로 나갈 수 있다.

6) "한 아이는 눈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죽어, 죽어버려, ××새끼"를 계속 반복했고, 주변의 또래 남자아이 1명과 여자아이 2명도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을 뱉어냈다."(강원도민일보, 『방학 맞은 PC방 '비속어 천국'』, 2011.08.13.)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초등학생들이 험한 욕을 내뱉으며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 친구를 부르는 호칭 중 접미사에는 주로 '년'이 접두사에는 주로 '개'가 많이 붙었다. 본래의 뜻이 패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도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도 발견됐다."(스카이데일리, 『충격의 PC방…초등생 뱉는 말마다 'xx년, 개xx'』 2017.10.17.)
"다른 온라인게임 이용자 최모(19)씨는 "같은 반 여학생 이름을 캐릭터 명에 넣어서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는데 게임 측도 학교 측도 제재하지 않았다"며 "게임 캐릭터 명이 '1차 가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차 가해 놀이터'된 게임…캐릭터명 '제재 사각지대' 우려』, 2020.09.24.)

진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PC방의 한 단면만 드러낼 경우 놀이공간으로서 PC방의 총체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

③ 그 외

PC방에 중독-일탈, 협력-즐거움이라는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게임'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다. 지금의 PC방이 '게임'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PC방은 게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테면 PC방은 다중이용시설숙박자 및 홈리스의 숙박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IMF 외환위기는 PC방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리면서 특히 실직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주요한 장소가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PC방은 홈리스가 된 실직자들의 숙박 장소로까지 활용된 것이다. 남기철(2014)에 따르면 사우나, 만화방 등 다양한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 중 PC방은 다중이용시설숙박자의 약 80%가 임시 숙박 장소로 활용했을 만큼 빈번했다(남기철, 2014). 류정순(2009)에 따르면 홈리스들은 PC방에 머물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PC방 사장이 중개역할을 함으로써 PC방에 머무르는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기도 했고, 그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었을 때 숙박요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존재했다(류정순, 2009). PC방은 저소득층의 인터넷 사용 장소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 취약계층의 임시 숙박 장소로도 기능해온 셈이다.

또한, PC방은 2019년 기준 전국에 11.871개가 분포해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주로 게임을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에 '게임산업 유통업'으로 분류된다. 조명래(2006)에 따르면 "게임서비스의 공급은 인터넷 제공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도의 유통업체를 필요치 않는다. 이런 유통구조에서 인터넷 PC방은 네트워크물의 수요자인 동시에 일반소비자에게 네트워크 게임을 판매하는 공급자로서 이중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네트워크 공급자를 제외한다면 게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단위가 인터넷 PC방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의 최종단위이지만,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란 측면에서는 최종소비단위기도 하다."(조명래, 2006)

마지막으로, PC방은 정부 정책과 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PC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게임을 주요 상품으로 유통한다는 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최성락, 2007; 김령희 외, 2010),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 등의 간접적 영향권에 놓여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상기한 연구들은 PC방을 이해할 때 게임에 괄호를 치고 남는 부분들에 관한 연구로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상품으로서 게임, 산업으로서 PC방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④ 공간연구

김윤정(2007)은 1998~2004년 서울시 PC방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요인을 분석하고, 입지 특성에 따라 PC방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PC방은 외환위기 이후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하면서 1997년 77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20,000개를 넘어서게 되었는

데, 그중 약 25% 정도인 5,300개의 PC방이 서울시에 분포하게 되었다. 즉 서울시 전역에 PC방이 분포해있던 것인데, 그중 신림9동(대학동), 노량진1동, 창천동(신촌동), 잠실본동, 화양동, 상계 2·7동에 PC방이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PC방의 입지유형은 대학교 주변, 전철역 주변, 독서실/학원/고시원 주변,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으로 구분되었다(김윤정, 2007).

박경선(2018)은 기존에 분석된 '-방'들을 포괄한 전반적인 '방 문화'에 대해 분석하며, '방들의 도시'가 된 서울 중에서도 홍대 앞 번화가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박경선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방 문화는 20세기 말 노래방을 필두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PC방은 1990년대 말에 등장한 1세대 방에 속한다. 2000년대 들어 노래방, 만화방, PC방, DVD방 등을 합친 '멀티방', PC게임이 아닌 콘솔게임을 제공하는 플스방, 오프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보드게임방 등이 성행하면서 1세대 방의 성장기는 둔화되었는데, DVD방, 만화방 등 기존의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는 1세대 방은 침체기를 피할 수 없었던 반면 대형화/고급화, 복합서비스 제공 등 활로를 찾은 PC방 (과 노래방)은 생존할 수 있었다. 2018년 홍대 인근의 PC방 분포를 살펴보면, 홍익대학교 정문과 홍대입구역 근처에 대형PC방 위주로 분포해있다(박경선, 2018).

3. 행정동별 PC방 분포 변화

김윤정과 박경선의 연구가 놀이공간으로서 PC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간분포의 변화양상을 제시하고 유형화를 시도하거나 시기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따라 이번 장에서는 행정동별 PC방 분포의 변화양상과 밀집 분포 지역을 시각화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김윤정(2007)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PC방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뒤, PC방이 가장 많이 분포한 행정동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였다(김윤정, 2007). 이는 본 연구에서 PC방 성장기로 구분한 시기의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다. 김윤정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PC방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상위 6개 행정동은 <표5>와 같다.

<표3> 2004년 PC방 사업체 수 상위 6개 행정동[7)]

순위	행정동	PC방 사업체 수
1	신림9동(대학동)	91개
2	잠실본동	61개
3	화양동	57개
4	창천동(신촌동)	51개
4	역삼1동	51개
6	노량진1동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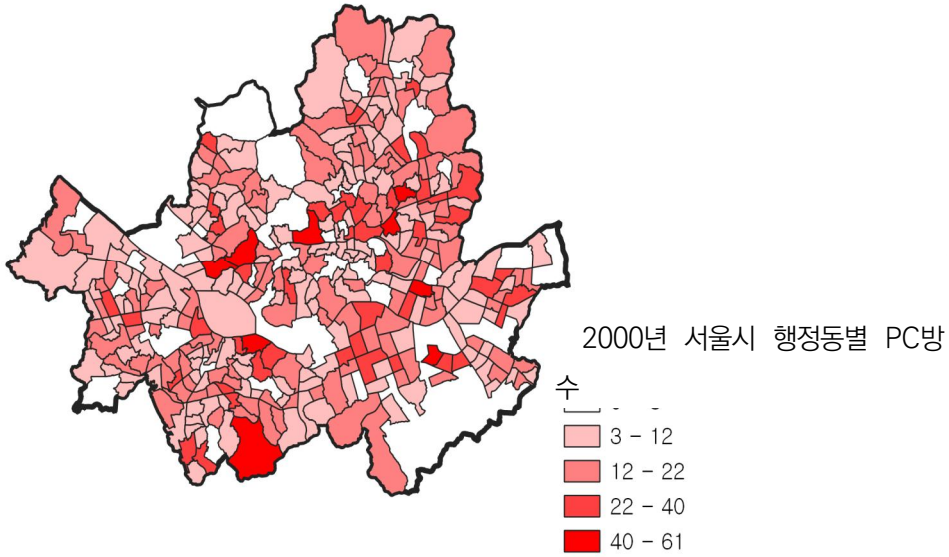
* ( ) 안은 현재 행정동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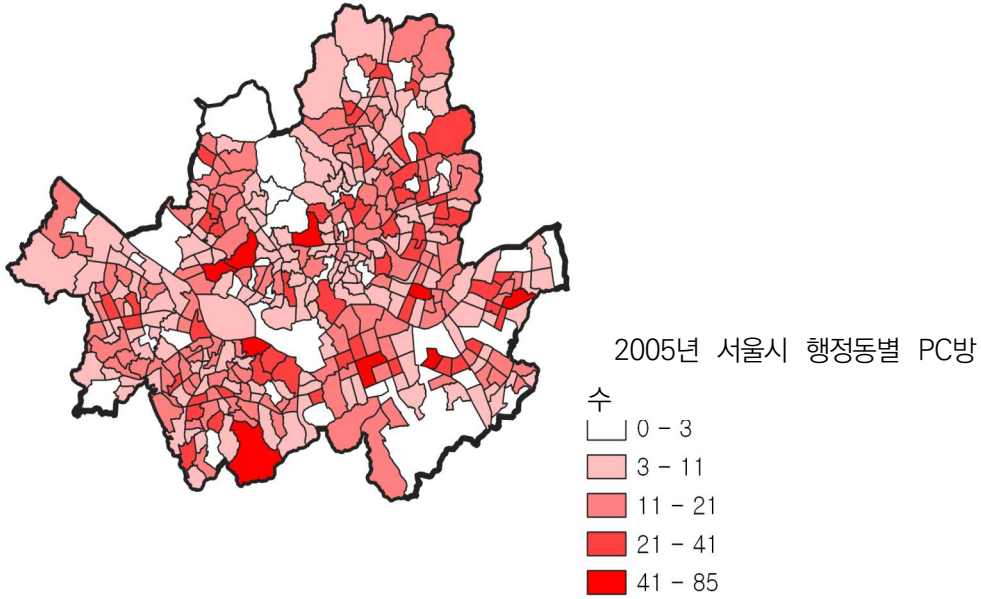
7) 김윤정. 2007. 서울시 PC방의 공간적 분포 패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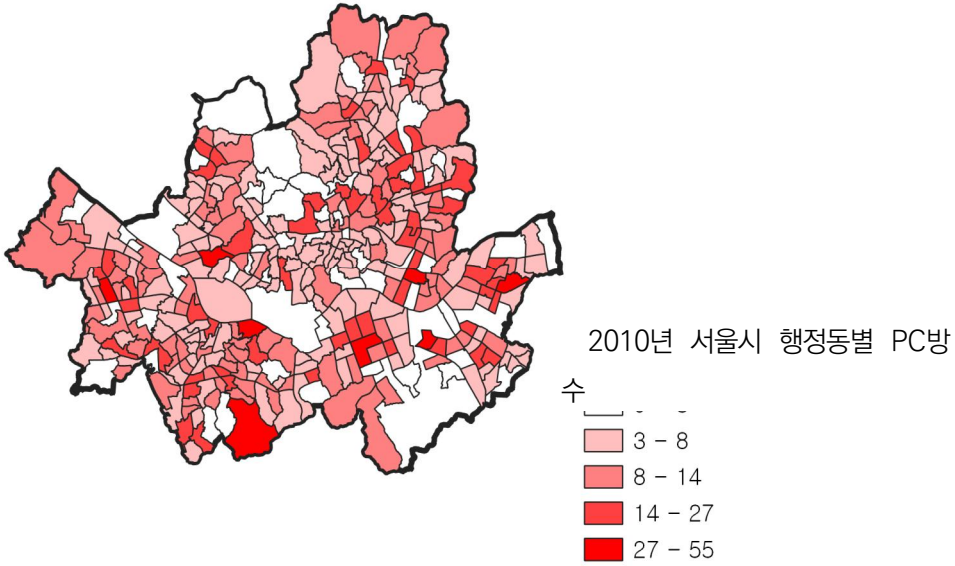
한편 현재 행정동별 PC방 분포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2018년 데이터까지 확인 가능하며, 선행연구 이후로 14년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정동별 PC방 분포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연도별 상위 5개 행정동의 변화를 살피고, 선행연구의 유형분류가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살펴볼 것이다.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이용했다. 그러나 SG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행정동의 PC방 사업체 수가 5개 이하면 N/A로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와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가공하였다. 가공한 데이터는 QGIS 3.18.2 버전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으며, 행정동별 PC방 수는 5분위로 구분하였는데, 분위 선정 방법은 Jenks natural breaks 최적화를 사용하였다. 이는 분위 간 편차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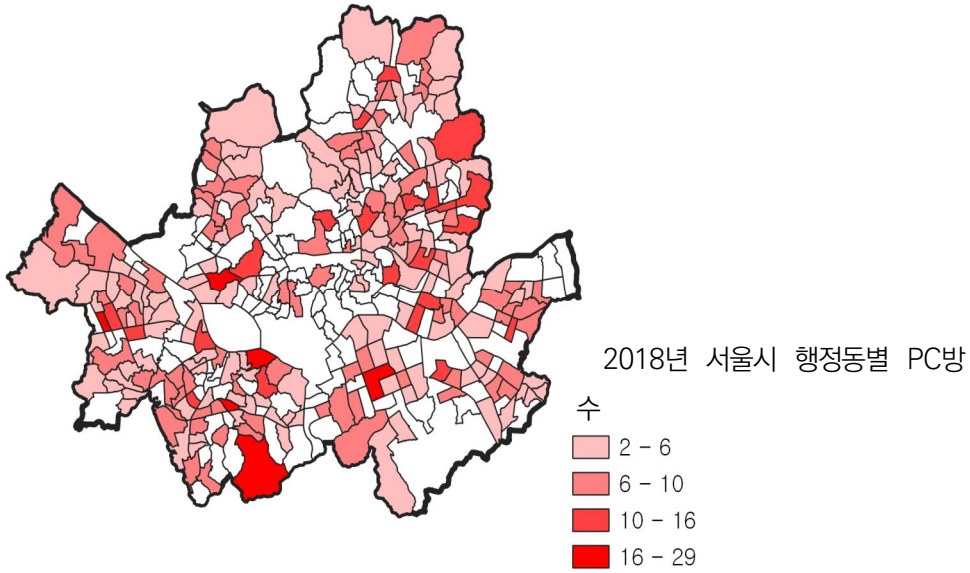
$$SSD_{i...j} = \sum_{k=i}^{j} A[k]^2 - \frac{(\sum_{k=i}^{j} A[k])^2}{j-i+1},\ A = 1,2,...,N,\ 1 \le i < j < N$$

<그림1> 2000, 2005, 2010, 2018년 서울시 행정동별 PC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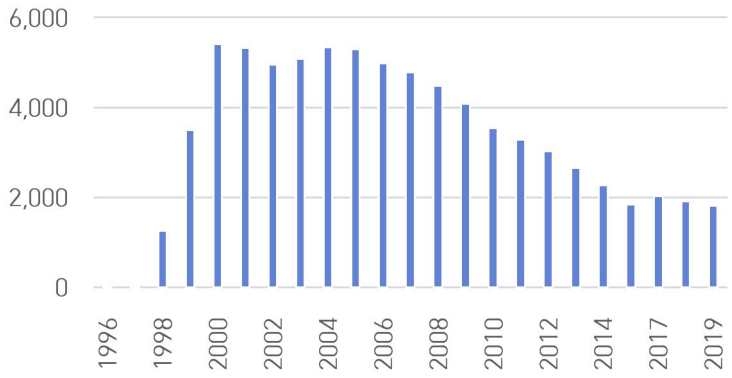






직관적 비교를 위해 <그림1>에서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행정동별 PC방 분포 현황을, <표5>에 연도별 상위 5개 행정동의 PC방 사업체 수를 제시하였다. <그림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PC방 사업체 수의 감소이다. 2000년과 2005년에는 소수 행정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일정 사업체 수 이상의 PC방이 분포하고 있다. 2010년에도 여전히 많은 행정동에 PC방이 분포해있지만, 2018년에는 PC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또한, 범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사업체 수 역시, 2000, 2005년에 비해 2010, 2018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약 5,000개 이상의 PC방 사업체가 분포해있었지만, 2006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약 1,900개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림2> 서울시 PC방 사업체 수(199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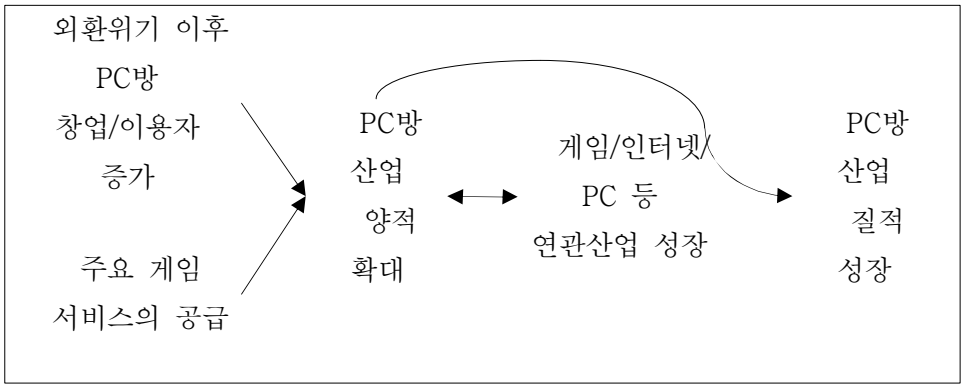
그런데 이것이 PC방 산업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C방 사업체 수 변동의 흐름과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간단한 도식만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PC방은 지금과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카페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였고, 주 이용층은 인터넷 이용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PC방 사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는 <그림3>에 제시되어 있듯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증가와 PC방이 창업아이템으로 홍보됨에 따라 대량 수요[8]와 공급[9]이 동시에 마련된 점, 97년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다양

8) 그러나 실업자들이 PC방에 단순히 게임을 하러 간 것은 아니다.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가 실직자들이 구직정보를 찾는 공간으로 인기다…"(조선일보, 『인터넷 구직 인파』, 1998.09.03)
"최근엔 실직자들이 늘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 펜티엄급 피시와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놓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한겨레신문, 『도심에 있는 소형점포 해볼만』, 1998.05.11.)

9) "올해부터 일기 시작한 소규모 창업 분위기에 힘입어 IMF 사태 이래 침체된 PC시장이 게임방으로 인해 최대 활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일경제, 『PC업계 인터넷게임방 특수』, 1998.12.23.)
"월 순익 700만원, 인터넷 열기 확산…"(매일경제, 『IMF 시대 新자영업 인터넷 게임방』, 1998.10.23.)
"창업과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생존형 네티즌'이 인터넷 카페를 베이스 캠프 삼아 재기를 꿈꾸는

한 PC, 인터넷 게임들이 출시되어 인기를 끈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PC방은 게임산업, LAN 산업, PC산업 등 주변 산업과 상승효과를 내며 양・질적으로 동시에 성장했다.

<그림3> PC방 성장기 주요 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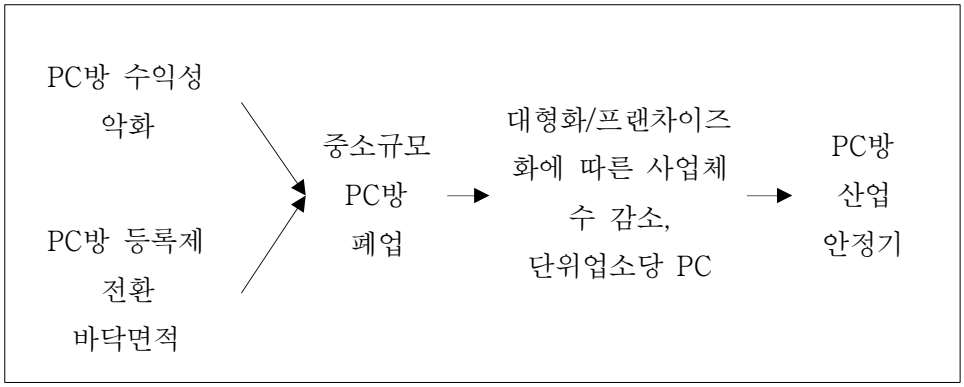


그러나 그러한 상승세가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는 PC방의 수익성 악화와 다양한 제도변화로 인한 중소규모 PC방의 폐업 때문이다. 5,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PC방 간 과도한 경쟁 및 '멀티방' 등의 경쟁 시설 등장에 따른 요금 인하, 게임사의 게임 유통비용 인상,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중소규모 PC방의 폐업을 유도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제도적 규제들이 존재했는데, 결정적으로는 2004년 자유업으로 창업할 수 있던 것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불거지며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에 창업 기준을 맞추지 않았던 PC방은 기준을 맞추거나 이전/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은 대체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거나, 바닥면적 150㎡의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주택가 밖에 위치해야 하는 등 '이전'이 강제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중소규모 PC방들은 이미 경영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PC방 산업이 쇠퇴한 것은 아닌데, 경영난에 대한 자구책으로 PC방 산업은 대형화/프랜차이즈화의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평균 100대 이상의 PC를 보유한 대형 PC방이 늘어감에 따라 중소규모 PC방은 더욱 줄어들었지만, 단위사업체 당 PC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PC방이 보유한 전체 PC 대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즉, 2018년 기준 PC방 사업체 수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는 오히려 박경선(2018)이 언급한 대로 PC방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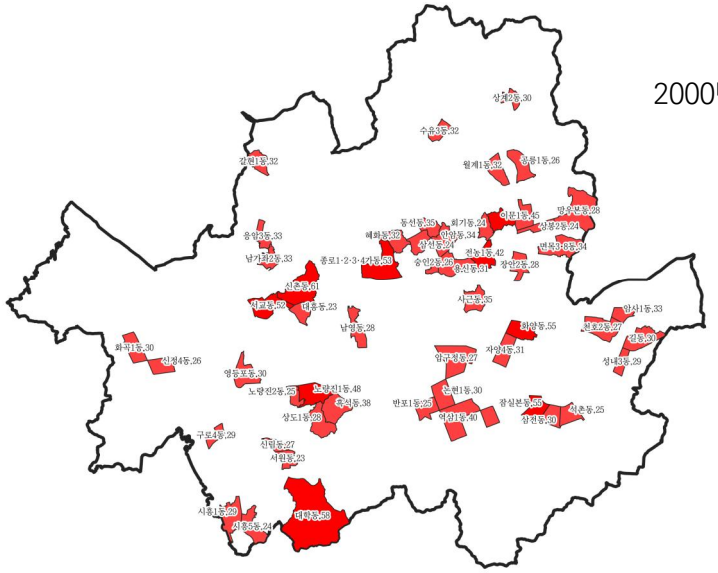
곳…"(동아일보, 『'IMF형' 인터넷 카페』, 1998.02.25.)
<광고> (주)사이버코리아/체인점/대리점 모집(조선일보, 『IMF 시대 성공 창업 - 유망업종 PC방을 잡아라』, 1998.03.26.)
<광고> Netian "인터넷PC방&인터넷 테마카페" 사업(동아일보, 『"인터넷 PC방"&"인터넷 테마카페" 사업』, 1998.12.14.)

<그림4> PC방 안정기 주요 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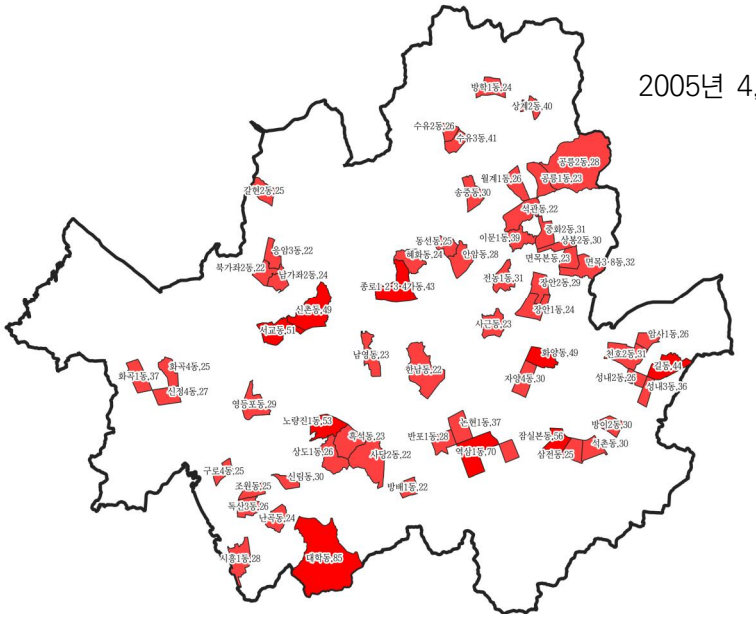


<그림5> 2000, 2005, 2010, 2018년 서울시 행정동별 PC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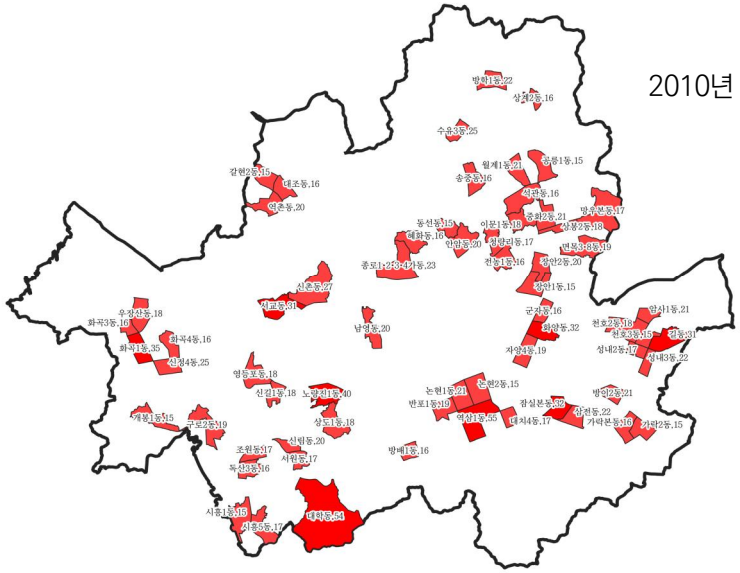
4~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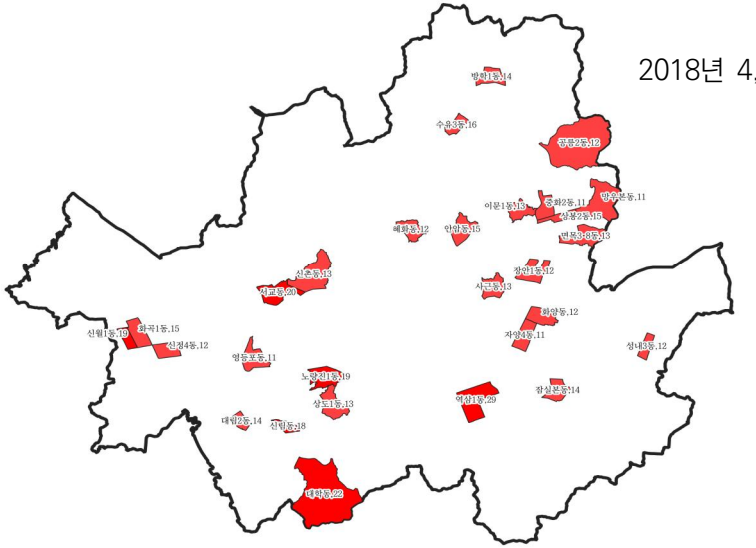
2000년 4, 5분위



2005년 4, 5분위



2010년 4, 5분위



2018년 4, 5분위

그런데 <그림5>에서 확인되는 점은, 4~5분위에 있는 행정동은 대부분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 PC방 사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18년은 이전보다 밀집 분포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표5>에 볼 수 있듯 노량진1동, 대학동, 서교동, 신촌동, 역삼1동, 잠실본동, 화양동은 상위 5개 행정동에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4> 2000~2018 서울시 행정동 연도별 최대 PC방 사업체 수

연도 / 순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61 (신촌동)	64 (신촌동)	73 (대학동)	78 (대학동)	91 (대학동)	85 (대학동)
2	58 (대학동)	63 (대학동)	61 (화양동)	63 (신촌동)	61 (잠실본동)	70 (역삼1동)
3	55 (화양동, 잠실본동)	55 (화양동)	55 (잠실본동)	57 (잠실본동)	58 (신촌동)	56 (잠실본동)
4	53 (종로1~4가동)	51 (노량진1동)	53 (신촌동)	56 (화양동)	57 (화양동)	53 (노량진1동)
5	52 (서교동)	50 (종로1~4가동)	48 (종로1~4가동)	49 (역삼1동)	53 (노량진1동)	51 (서교동)

연도 / 순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80 (대학동)	71 (대학동)	65 (대학동)	60 (대학동)	55 (역삼1동)	53 (대학동)
2	62 (역삼1동)	58 (역삼1동)	63 (역삼1동)	52 (역삼1동)	54 (대학동)	50 (역삼1동)
3	58 (노량진1동)	57 (노량진1동)	49 (노량진1동)	44 (화곡1동)	40 (노량진1동)	36 (노량진1동)
4	48 (잠실본동)	54 (잠실본동)	46 (수유3동)	42 (노량진1동)	35 (화곡1동)	31 (화곡1동, 화양동)
5	47 (수유3동)	43 (화양동)	40 (서교동, 길동)	39 (서교동)	32 (잠실본동)	29 (잠실본동)

연도 /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47 (대학동)	37 (대학동)	33 (역삼1동)	31 (대학동)	32 (역삼1동)	36 (역삼1동)	29 (역삼1동)
2	44 (역삼1동)	36 (역삼1동)	30 (대학동)	30 (역삼1동)	27 (대학동)	26 (대학동)	22 (대학동)
3	35 (노량진1동)	36 (노량진1동)	29 (노량진1동)	26 (노량진1동)	21 (노량진1동)	25 (서교동)	20 (서교동)
4	30 (화양동)	28 (서교동)	23 (화양동)	21 (화양동)	19 (화양동, 잠실본동)	23 (노량진1동)	19 (노량진1동, 신월1동)
5	29 (화곡1동)	26 (화양동)	20 (서교동)	19 (영등포동)	18 (서교동)	20 (화양동, 신촌동, 신월1동)	23 (신림동)

그러나 종로1~4가동처럼 순위에서 사라지거나, 신월1동과 같이 새롭게 순위에 등장하는 행정동도 있는데, 이는 해당 행정동의 인구변동, 상권의 개발 및 노후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분석 방법과 자료 구성 및 수집

놀이공간인 PC방이 밀집해서 분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반적으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비슷한 놀이공간들이 함께 분포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C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구집단이 10~30대인 점으로 미루어보아[10], 주변에 10~30대 인구가 많거나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학원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표4>의 2004년에서 확인된 PC방이 많이 분포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표5>와 같이 PC방 입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5> 김윤정(2007)의 PC방 입지유형

유형	행정동(예시)	방법
전철역 인근	창천동(신촌동), 잠실본동, 화양동, 노량진1동 등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GIS의 buffer 기능 (500m)
대학교 인근	창천동(신촌동), 화양동, 안암동, 사근동 등	
학원, 독서실, 고시원 인근	노량진1동, 신림9동	이미 알려진 정보
아파트 및 주택가 인근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대치4동 등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첫 번째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철역 인근과 대학교 인근의 경우 GIS에서 각각 전철역, 대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500m의 buffer를 형성하여 그 안에 있는 PC방을 전철역/대학교 인근으로 구분하였지만, 학원가나 주택가의 경우 기존에 잘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가라면 입시, 공무원, 어학 등 어떤 학원이 주변에 많이 분포해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주택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개의 유형이 겹칠 수 있다. 박경선(201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대 앞 번화가가 속한 서교동에서 대학교 인근형 PC방도 있지만 전철역 인근형 PC방도 있다. 물론 하나의 행정동 안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PC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행정동은 유형화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로, 하나의 PC방에도 여러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개의 유형이 겹칠 수 있다. 노량진1동에 있는 PC방 인근에는 노량진역과 학원가가 모두 있다. 이 경우에 PC방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선행연구의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1) 분석 방법: Getis-Ord-Gi(G_i^*)를 활용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과 K-means 클러스터링

이렇게 더 명확한 유형화가 필요한 이유는,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PC방 유형에 따라 이용계층과 이용계층에 따른 이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G_i^* 통계량을 활용한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이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은 공간분포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서 유사한 값들의 군집 경향을 요약하여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에는 전역적 자기상관 분석과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 지역에서 비슷한 값을 보이는 지역을 표시해준다면, 후자는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한 지역의 값들이 갖는 가중평균의 상관관계에 따라 핫스팟(특정지역-인접지역이 모두 높은 값을 갖는 경우)과 콜드스팟(특정지역-인접지역이 모두 낮은 값을 갖는 경우)을 유의수준 0.05 범위 안에서 구분해준다(이희연, 노승철, 2020: 598-602).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G_i^* 통계량 역시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을 위해 사용되며, QGIS 3.18.2 버전의 Hotspot Analysis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_i^*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G_i^*(d) = \frac{\Sigma_j w_{ij}(d) x_j}{\Sigma_j x_j}$$

여기서 $G_i^*(d)$는 일정 거리(d) 내의 i번째 데이터의 국지적 자기상관 값을 의미하며, x_j는 i와 이웃한 이웃의 속성값을 의미하고, w_{ij}는 타겟-인접(i-j 쌍)으로 구성된 n x n의 공간가중행렬 W로부터 도출된 가중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n은 데이터 수를 의미하고, 거리 d는 보통 유클리디언 거리로 측정된다.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G_i^*(d)$값은 표준화된 통계량으로, 표준화 방법은 일반적인 Z-score를 구하는 방법과 같다(Getis and Ord, 1992; Getis and Ord, 1995; A.Peeters et. al., 2014).

이후 $G_i^*(d)$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서울시 내 PC방 핫스팟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핫스팟 내에 있는 PC방을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하여 군집화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들에 부여된 속성값들을 기반으로 군집화를 할 수 있는 비지도학습 방법 중 하나다. K-means 의 구현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k의 개수가 결정되면, k개의 클러스터에 하나의 중심점이 부여되고 각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해당 클러스터로 구분된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k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새롭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게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기까지 중심점의 위치가 변하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경우 과정이 종료된다. 결과적으로, K-means는 각 데이터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각 중심까지의 거리, 즉 오차의 합이 최소화하는 동시에 각 클러스터의 중심 간 거리는 최대화하는 방법이며, 중심점으로부터 데이터까지의 거리(J)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T. Velmurugan, T. santhanam, 2010).

$$J = \sum_{j=1}^{k} \sum_{i=1}^{n} \| x_i^{(j)} - c_j \|^2$$

여기서 j는 클러스터를, i는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 x_i^{(j)} - c_j \|^2$는 j번째 클러스터로부터 j번째 클러스터에 할당된 i번째 데이터까지 거리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k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k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알려진 구분 기준을 따르거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를 참조하는 방법 외에도 k 개수에 따른 집단 내 분산(WSS; Within Sum of Square)을 비교하여 집단 내 분산이 충분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k 개수를 선택하거나,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 사이에 충분한 연속성이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인 실루엣 스코어(Silhouette score) 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해 R을 사용하였으며, k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루엣 스코어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자료 구성 및 수집

먼저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위해, 공간 샘플링 기법을 통해 서울시 전역을 500x500m의 단위격자로 구분하고, 단위격자 내 PC방으로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한 뒤 G_i^*통계량을 산출 및 검정하였다. 500x500m의 단위격자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년과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PC방 선택 기준 1순위는 'PC방 위치'였기 때문이다[11]. 이는 이용자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PC방들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성희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보행자의 최적 보행접근거리는 400~500m 내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500m를 단위격자로 설정하였다(김성희 외, 2001).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한 자료는 <표6>과 같으며, 각 변수별 기초통계량은 <표7>과 같다. 모든 변수는 개별 PC방의 반경 500m 내 단위 수로 구성되었다. 변수는 크게 교육, 인구, 주택, 상업변수로 나누었으며 모든 변수는 세부적으로 교육변수는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입시학원, 성인학원(공무원학원, 어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이며, 인구변수는 15~34세 인구수와 1인가구 수로 구성하였으나,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했기 때문에 1인가구 수는 배제하였다. 주택변수 역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호수로 구성하였으나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여 아파트 호수를 남긴 변수를 배제하였다. 상업변수는 지하철역, 카페, 편의점, 노래방, 당구장, 모텔 사업체 수로 구성하였는데, 카페와

11) 2019년에는 34.5%, 2020년에는 30.4%로 'PC방 위치'가 1순위였다. 2순위는 모두 'PC 성능'으로, 각각 24.1%와 30.2%였다.

편의점, 노래방과 당구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카페+편의점, 노래방+당구장으로 변수를 합하였다.

개별 PC방과 교육, 상업변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만 상업변수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록된 사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종확인날짜가 오래된 경우 현재 폐업/영업중지 등으로 인해 운영하지 않음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C방과 상업변수의 데이터는 일괄적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영업이 확인된 데이터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PC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에 1,805개가 분포하는데, 이는 성인 게임을 유통하는 성인 PC방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데이터 구성 과정에서 성인PC방을 모두 제거하여 최종 1,312개의 PC방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구변수와 주택변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단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PC방 반경 500m 내에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15~34세 인구수와 아파트 호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PC방은 좌표가 제공되었지만 다른 변수들은 좌표가 제공되지 않아, R과 Google maps API를 활용하여 주소를 위도, 경도 좌표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표6>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한 PC방 단위 사업체 당 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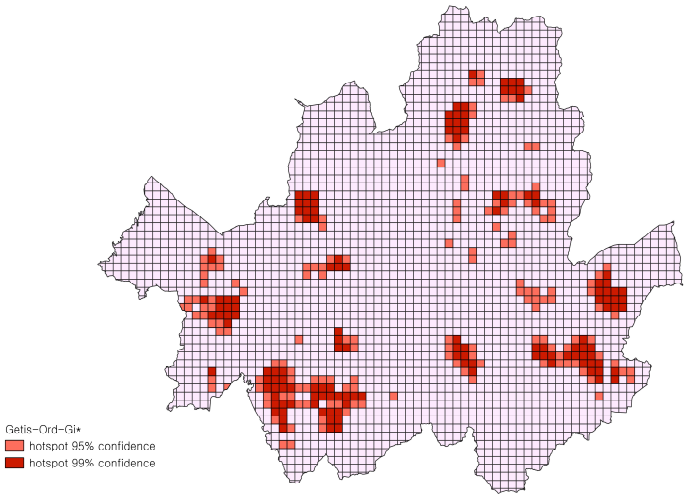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수집방법
교육변수	대학교	PC방 반경 500m 내 대학교 수	서울시 대학 및 전문대학 DB 정보
	초중고등학교	PC방 반경 500m 내 초중고등학교 수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정보
	입시학원	PC방 반경 500m 내 입시학원 사업체 수	서울특별시 학원 교습소정보
	성인학원	PC방 반경 500m 내 공무원학원, 어학원 사업체 수	
	~~독서실~~	~~PC방 반경 500m 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업체 수~~	
인구변수	15~34세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15~34세 인구수	서울시 집계구별 인구
	~~1인가구~~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1인가구 수~~	
주택변수	아파트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아파트 호수	서울시 집계구별 주택
	~~단독주택~~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단독주택 호수~~	
	~~다가구주택~~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다가구주택 호수~~	
	~~다세대주택~~	~~PC방 반경 500m 내 포함된 집계구에 등록된 다세대주택 호수~~	
상업변수	지하철역	PC방 반경 500m 내 지하철역 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카페, 편의점	PC방 반경 500m 내 카페, 편의점 사업체 수	서울특별시 휴게음식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정보
	노래방, 당구장	PC방 반경 500m 내 노래방, 당구장 사업체 수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인허가 정보
	모텔	PC방 반경 500m 내 모텔 사업체 수	서울특별시 숙박업 인허가 정보

<표7>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한 PC방 단위 업체 당 변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N	Min.	Max.	Mean	SD
교육변수	대학교	1,312	0	1	0.0774	0.267768
	초중고등학교	1,312	0	9	2.159	1.613355
	입시학원	1,312	0	726	30.87	51.97799
	성인학원	1,312	0	75	1.61	7.404483
인구변수	15~34세	1,312	216	31,822	8,225	3209.702
주택변수	아파트	1,312	0	18,288	3,866	2844.036
상업변수	지하철역	1,312	0	5	0.9276	0.924811
	카페, 편의점	1,312	0	178	45.11	23.63588
	노래방, 당구장	1,312	0	94	22.93	16.56992
	모텔	1,312	0	90	9.309	14.41565

5. 분석결과

<그림6> 500x500m 단위격자 내 PC방 사업체 수 G_i^* 국지적 자기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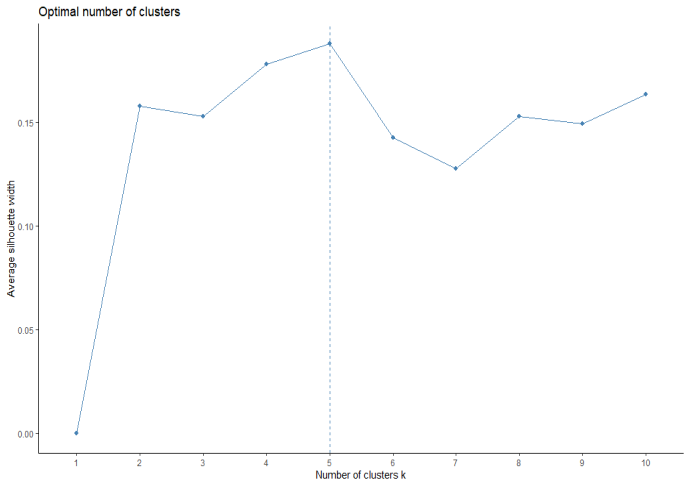
G_i^* 통계량을 활용하여 국지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6>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 신뢰구간 95% 이내에서 핫스팟이 형성되었고, 콜드스팟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5>의 2018년 4, 5분위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500m의 단위격자가 분석단위지만 각각의 격자는 격자가 속한 지역의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격자로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행정동으로는 환원될 수 없고 인접한 단위격자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PC방 핫스팟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는 PC방의 유형화를 위해, 핫스팟 내 위치한 551개 PC방 데이터를 새롭게 추출하였으며,

K-means 클러스터링은 핫스팟 내의 551개 PC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핫스팟 내 PC방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8>과 같다. K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실루엣 스코어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7>과 같으며, 최적 K 개수는 5개로 산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한 결과, 각 클러스터의 특징은 <그림8> 및 <표9>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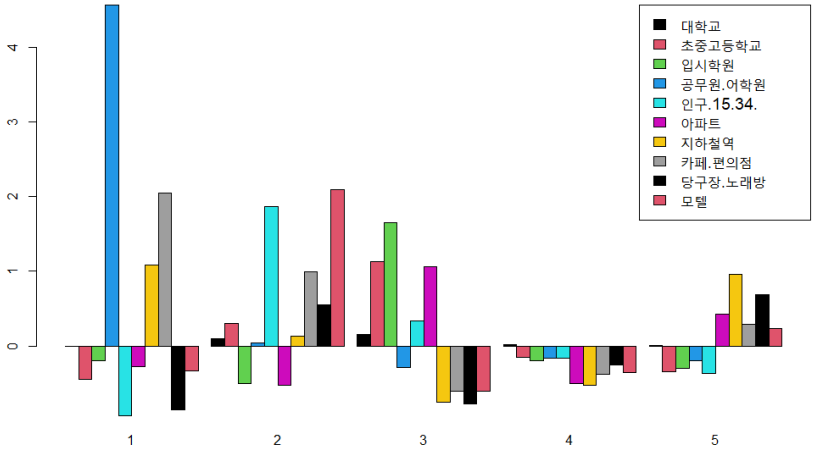
<표8> 핫스팟 내 PC방 단위사업체 당 변수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N	Min.	Max.	Mean	SD
교육변수	대학교	551	0	1	0.04174	0.2
	초중고등학교	551	0	9	1.891	1.44435
	입시학원	551	0	117	22.26	18.57517
	성인학원	551	0	75	3.336	11.10312
인구변수	15~34세	551	3547	31,822	9,327	3473.183
주택변수	아파트	551	243	14,858	3,349	2448.21
상업변수	지하철역	551	0	5	0.9855	0.893497
	카페, 편의점	551	14	178	52.62	24.79576
	노래방, 당구장	551	1	94	32.8	18.30279
	모텔	551	0	85	12.84	16.45952

<그림7> 최적의 K 개수 설정을 위한 Silhouette score 측정



<그림8> 클러스터별 변수 표준화 계수 그래프



<표9> 클러스터 변수 표준화 계수

클러스터	N	대학	초중고	입시	공무원 어학	인구	아파트	지하철	카페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모텔
1	20	0	−0.4	−0.2	4.6	−0.9	−0.3	1.1	2	−0.8	−0.3
2	49	0.1	0.3	−0.5	0	1.9	−0.5	0.1	1	0.5	2.1
3	77	0.2	1.1	1.6	−0.3	0.3	1.1	−0.8	−0.6	−0.8	−0.6
4	241	0	−0.2	−0.2	−0.2	−0.2	−0.5	−0.5	−0.4	−0.3	−0.4
5	164	0	−0.3	−0.3	−0.2	−0.4	0.4	1	0.3	0.7	0.2

– 클러스터1: 지하철역 인근의 공무원/어학 학원가 유형

<그림9> 클러스터1 분포 양상과 변수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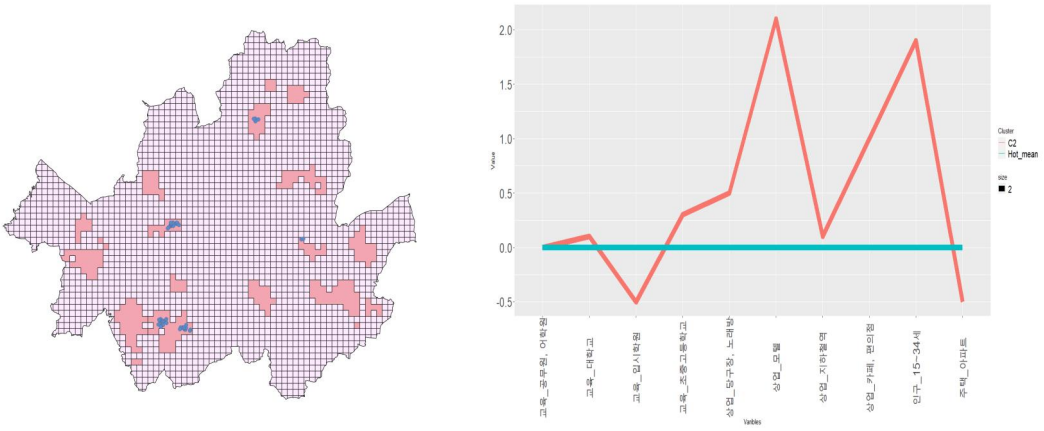
1번 클러스터에 속한 PC방의 변수별 특징을 살펴보면, 공무원학원, 어학원이 핫스팟 평균에 비해 반경 500m 내에 매우 많이 분포해있으며, 지하철역과 카페/편의점 역시 평균 이상으로

분포해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1번 클러스터 유형의 PC방은 노량진역과 강남역 인근에 분포해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1은 노량진역 공무원 학원가, 강남역 공무원/어학 학원가 근처에 분포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사례 수가 적지만 분포 양상과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이용계층 역시 주로 학원을 이용하는 20대에 집중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공무원, 어학 학원가에 PC방 주요 이용 연령대인 20대가 많기 때문에 PC방이 많다고 손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학원가 인근에 PC방이 밀집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통상 공부와 놀이가 대비되는 개념이고, 공무원 시험 합격이나 어학 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수험생은 자신의 공부시간과 놀이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가 인근 유형의 PC방을 이용하는 집단의 이용 형태가 수험생의 '자기관리', '자기통제' 결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즉, 중독이나 놀이시간의 과용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는 게임 수행은 즐거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PC방은 놀이공간이 아닌 도피처로 기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클러스터2: 거주 인구가 많은 번화가/유흥가 유형

<그림10> 클러스터2 분포 양상과 변수별 특징



2번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경 500m 내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당구장/노래방, 모텔, 카페/편의점, 15~34세 인구가 핫스팟 내 PC방 평균보다 높다. 먼저 비슷한 놀이공간인 당구장과 노래방, 모텔이 많이 분포해있다는 점으로부터 번화가에 위치한 PC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 15~34세 인구수 역시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통해 PC방 주위에 대학생들의 자취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포 양상을 보면, 이 유형의 PC방들은 서울대입구, 신림동, 신촌, 화양동, 수유3동 등 대체로 자취촌 인근의 유흥가에 있다. 따라서 이용계층은 주로 인근에 거주하거나 번화가에 놀러 온 대학생, 성인으로 예상된다.

거주 인구가 많은 번화가/유흥가 유형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나는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놀이/여가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1인 가구 거주 청년들에게 PC방이 가

지는 의미다. 번화가에 있다는 점에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PC방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때 PC방 이용이 혼자 이뤄지는지 친구와 함께 이뤄지는지, PC방 이용이 '노는'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유형의 PC방 주변에 주택변수는 적지만 인구변수는 많다는 점을 통해 1인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한국의 '방 문화'에 대한 설명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방 문화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방문화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서로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며 단절되어 있지만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곳으로 설명된다(정기용, 2007; 유현준, 2015; 김광수, 2015; 조민식, 2017).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즐기러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1인 가구 거주자들이 공적공간으로의 진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 클러스터3: 초중고등학교 및 입시학원이 많은 주택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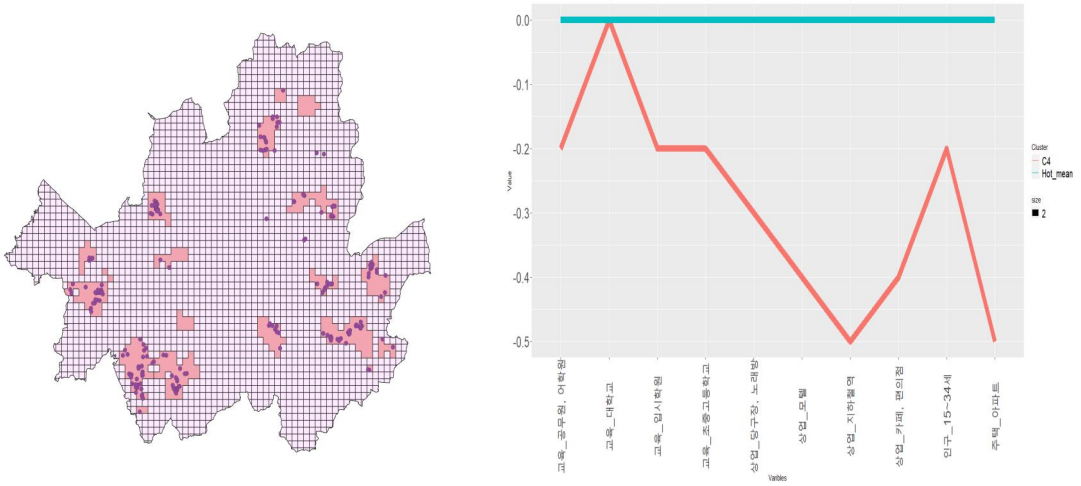
<그림11> 클러스터3 분포 양상과 변수별 특징

3번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입시학원과 초중고등학교, 아파트가 핫스팟 평균보다 많이 분포해있으며 상업시설은 모두 평균 이하로 분포해있다. 분포 양상을 보면, 주로 송파구의 여러 행정동에 걸친 아파트 단지와 쌍문동, 남가좌2동~홍은동, 등촌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분포해있다. 이를 통해 3번 클러스터는 초중고등학교 및 입시학원이 많은 주택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용계층은 주로 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은 대체로 부모 등의 보호자에 의해 제한되며,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PC방 이용을 중독–보호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PC방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보호자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PC방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간/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관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청소년들의 PC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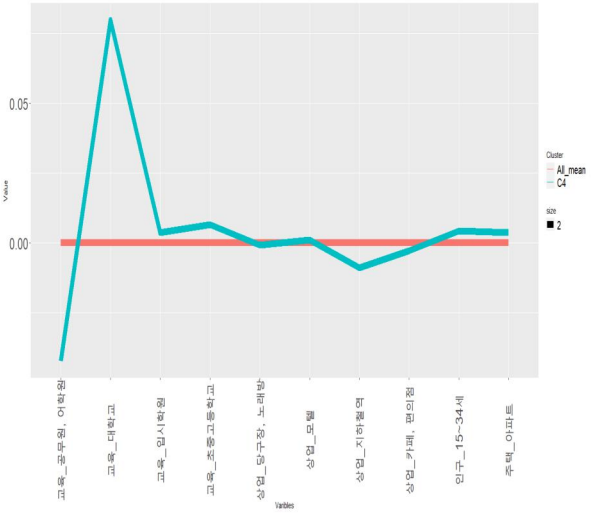
이용이 부모에 의해 제한된다면, 그들의 PC방 이용은 놀이문화의 향유를 위한 적극적 투쟁과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함으로써 PC방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저항적 행동으로 몰래, 혹은 허락없이 PC방에 갈 수 있다. 세 번째로, PC방은 청소년들이 돈-시간 관리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학습하는 자본주의적 스펙터클이다. PC방 이용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행위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본(돈,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놀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PC방이 청소년들을 일찍부터 돈-시간을 관리하는 자본주의적 주체로 호명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을 공무원, 어학 학원가 인근 수험생들의 유형의 이용 패턴과 비교해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놀이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제한의 주체가 각각 부모와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 클러스터4: 교육/주택/상업 혼합형



<그림12> 클러스터4 분포 양상과 변수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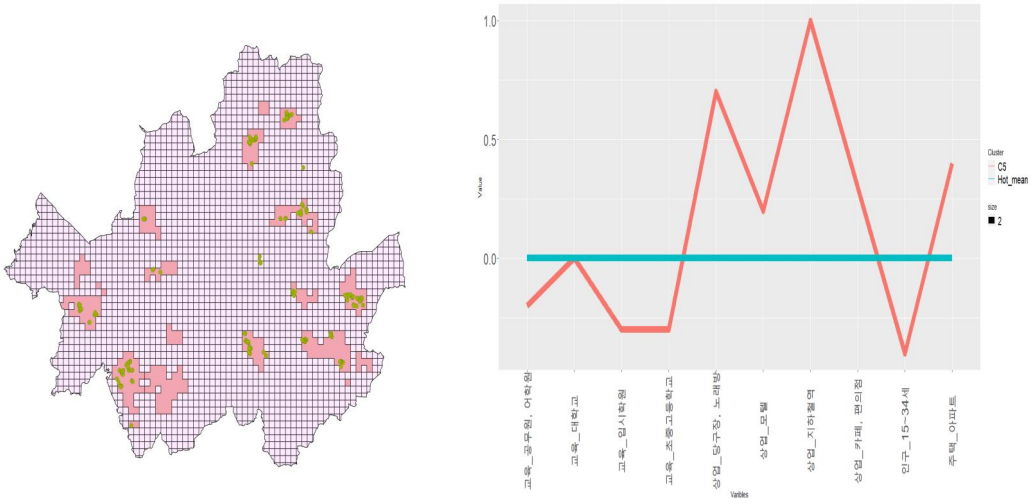
4번 클러스터의 특징은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모든 변수가 핫스팟 평균 이하인데, 5개 클러스터 중 사례 수가 가장 많고 거의 모든 핫스팟에 분포해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핫스팟을 포함한 1,312개 전체 PC방의 변수 평균과 비교하면, 대체로 평균에 근사한 값을 가지며 공무원, 어학원과 대학교에서만 큰 편차를 보인다. <표7>을 참고하면, 이 유형의 PC방 주변은 1~3번 클러스터와 달리, 교육가/주택가/상권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치가 큰 공무원, 어학원과 대학교를 제외하고 보면, 교육변수로는 평균 31개의 입시학원과 2개의 초중고등학교, 상업변수로는 23개의 노래방/당구장과 45개의 카페/편의점, 9개의 모텔, 1개의 지하철역, 인구변수로는 8,225명의 15~34세 인구와 주택변수로 3,866 아파트 호수가 4번 클러스터 유형의 반경 500m 내에 분포해있다. 이렇게 혼재된 유형에서 이용계층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유형의 PC방과 비교의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클러스터5: 주택가 인근의 역세권/상권 유형



<그림13> 클러스터5 분포 양상과 변수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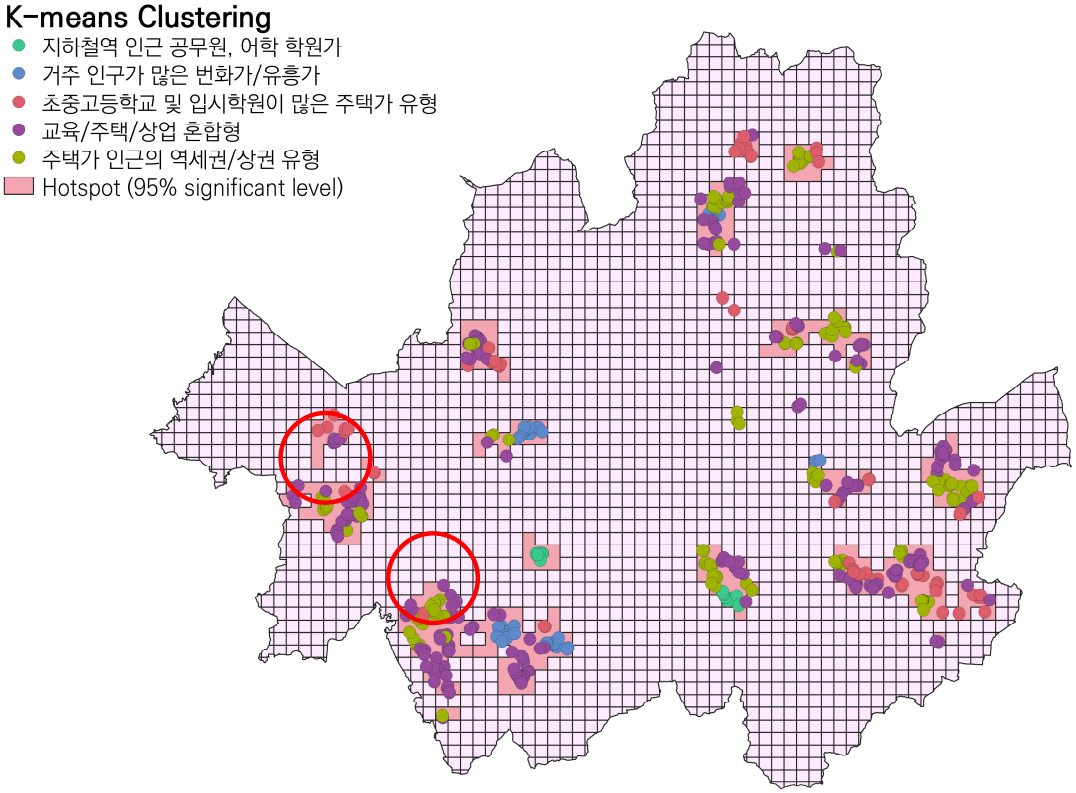
5번 클러스터는 핫스팟 평균에 비해 상업변수와 주택변수가 높으며, 4번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사례 수가 많고 대부분의 핫스팟에 분포해있다. 이를 통해 5번 클러스터는 주택가 인근 상권 혹은 역세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주요 이용계층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은 이용 형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학원가 인근, 학교 인근에 있는 PC방의 경우 학원/학교 - 집 사이의 동선에서 PC방에 가게 된다면, 이 유형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온 뒤에 가거나, 혹은 주말에 집에서 출발하는 형태의 이용이 예상된다.

3번과 5번 클러스터는 모두 주택가 인근이지만, 3번은 학교–학원과 가까운 주택가라면 5번은 상권과 가까운 주택가다. 이는 PC방이 유형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시간, 요일, 상황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PC방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학교, 학원을 가는 날과 안 가는 날, 평일과 주말 등에 따라 이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 이런 패턴들을 종합함으로써, 한편으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PC방을 중심으로 놀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삶에서 놀이의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차지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거시적 관점을 통해 한국에서 놀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놀이문화에서 PC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사람들이 PC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이 PC방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편 계층화되어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1~5번 클러스터를 종합하면 <그림14>와 같다. 거의 모든 핫스팟에 분포하는 혼합형을 빼면, 각 핫스팟별로 밀집된 PC방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노량진 핫스팟에는 학원가 유형만 있고, 신촌/홍대 핫스팟에는 번화가 유형과 주택가 인근 상권 유형이 혼합되어 있다. 핫스팟 별로도 공통되는 핫스팟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좌하단에 빨간 원이 표시된 핫스팟에는 공통적으로 혼합형, 주택가 인근 상권 유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다. 이는 개별 PC방뿐만 아니라 핫스판 단위에서도 유형화가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14> K-means 클러스터별 분포도



5. 나가며

이번 연구에서는 PC방의 공간사회학적 이해를 위해,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G_i^* 통계량을 활용한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1,312개 PC방 중 551개 PC방이 핫스팟 내에 위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역 인근 공무원/어학 학원가, 거주 인구 많은 번화가/유흥가, 초중고등학교/입시학원 많은 주택가, 교육/

주택/상업 혼합, 주택가 인근 상권의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로 분포 양상은 상이했으며, 이용계층과 이용 형태, 패턴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 20,000여 개의 PC방 중 약 25%인 5,000여 개가 서울시에 분포해있었지만,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2019년 기준 서울시에 분포한 PC방은 전국의 약 15%의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 PC방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수이지만, 지역적 차이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약 70%의 PC방이 대도시에 분포해있다는 점을 통해, '도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PC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적 차이의 한계는 K-means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석단위를 선행연구의 행정동에서 500m 단위격자로 바꿨지만, 단위격자 역시 특정 행정동에 속해있으며 결국 핫스팟도 해당 핫스팟이 위치해있는 행정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림14>를 보더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핫스팟이 존재한다. 이는 핫스팟이 속한 행정동들이 비슷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동의 경우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구성에 한계가 있고, 행정동은 '행정'을 위해 구분된 기준일 뿐 문화의 경계선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행정동의 경계를 넘나들어 존재하는 핫스팟에 대해서는 500m의 단위격자가 더욱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핫스팟이 아닌 지역의 PC방 유형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6>을 보면 대표적인 입시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학원가가 핫스팟에서 제외되었다. 굳이 핫스팟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쓰리팝 PC방'의 경우 반경 500m 내 726개의 입시학원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입시학원가 인근형 PC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가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미 잘 알려진' 기준을 통해 추가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윤태진. (2015). 『디지털 게임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정기용. (2008). 『사람 건축 도시』. 현실문화연구

<논문>

권현숙, 권경인. (2017). 청소년 인터넷 게임 관여와 중독 차원에 따른중독의 발달단계 연구: 잠재

계층 분석을 통한 단계구분과관련 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2017년 6월 제25권 25(1), 155-175.
김령희, 안소영, 이재인, & 이명진. (2010). 인터넷 확산과정에서 PC 방 정부정책 변화. 정보사회와 미디어, (18), 1-25.
김선희. (1999).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26.
김성희, 이창무, 안건혁. (2001). 대중교통으로의 보행거리가 통행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297-307.
김성은, 박산하, & 김진석. (2014).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관련변인의 탐색: 다층 포아송모형의 적용. 교육학연구, 52, 147-168.
김소연, & 전종설. (2016).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불안 및 정서조절곤란과 인터넷 중독 간의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1), 159-183.
김윤정. (2007). 서울시 PC방의 공간적 분포 패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의철, 박영신, & 탁수연. (201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4), 487-508.
김은영. (2009).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특성. 청소년복지연구, 11(4), 1-23.
Kim, J. S., Cho, J. M., Song, Y. M., & Lee, J. K. (2004). PC 방 이용자들의 인터넷중독과 우울, 불안 및 대인회피 성향과의 연관성.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5(6), 455-461.
김혜영, & 유승호. (2019). 상호작용 의례 관점에서의 청소년과 게임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27(1), 77-157.
남기철. (2014). 숨겨진 노숙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숙박자의 성격. 비판사회정책, (42), 140-176.
류정순. (2009). 고시원, PC 방, 찜질방, 만화방, 다방거주자의생활실태조사. 기념논문집, 4-45.
박경선. (2018).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에 따른 '방'의 형성과 도시공간적 특성 연구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중규, & 배성만. (2012).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19-434.
서민영, & 임은미. (2012).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 활용특성,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 가족과 상담, 2, 31-47.
오경희, & 한대동. (2015). '노는 아이들'의 또래문화 속의 폭력성과 권력에 관한 질적 연구: 중학교 전이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5(2), 19-33.
원용진, 강신규, & 채다희. (2018). 메타게임 (metagame) 으로서의 '게임 보기': 전자오락 구경부터 인터넷 게임방송 시청까지.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3-125.
윤선희. (2001). PC 방과 네트워크 게임의 문화연구: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2), 316-348.
이수엽, 채다희, & 박근서. (2016). 게임 공간과 게임 플레이의 변화: 전자오락실, PC 방, 모바일 게임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1), 89-137.

이주연, & 전종설.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87-303.

정정현, & 유승호. (2017). 온라인 FPS 게임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호혜성 관점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1), 49-106.

조명래. (2006). 게임산업의 공간성. 공간과 사회, 158-193.

조민식. (2017). 청소년 온라인 게임문화에 관한 고찰: 상호작용성을 기준으로 한 문화 파동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5(1), 85-105.

최성락. (2007).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PC 방 등록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1-15.

Ord, J. K., & Getis, A. (1995).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Geographical analysis, 27(4), 286-306.

_____. (2010).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In Perspectives on spatial data analysis (pp. 127-145). Springer, Berlin, Heidelberg.

Peeters, A., et. al., (2015). Getis-Ord's hot-and cold-spot statistics as a basis for multivariate spatial clustering of orchard tree data.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111, 140-150.

Velmurugan, T., & Santhanam, T. (2010). Computational complexity between K-means and K-medoids clustering algorithms for normal and uniform distributions of data points. Journal of computer science, 6(3), 363.

<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1).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2).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3).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4).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5).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6).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7).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8).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2).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_____.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
국내 학부 성악 전공자 대상 파일럿 인터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태현

1. 들어가며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저는 청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중앙일보, 2020/12/30).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성악가 조수미는 관객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감은 물론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고백했다. 1986년 데뷔 이후 쉬지 않고 전 세계 무대를 넘나든 거장에게도 무대는 여전히 꼭 돌아가야만 하는 간절한 장소로 그려진다. 조수미는 무대에 선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팬들과 그들이 보내는 갈채가 마치 생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즉, 무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스스로를 빛내는 장소이자 동시에 관객과 교감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삶을 그려가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조수미는 “세상은 멈췄지만 우리도 멈춰있을 수는 없다”(중앙일보, 2020/12/30)라며 지난해 난생처음 온라인 공간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도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다. 그러나 무대가 아닌 장소를 무대로 탈바꿈하고 그곳에서 홀로 공연하며 자신을 스스로 빛내는 일은 수많은 예술가가 한 번쯤 꿈꾸지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조수미와 같은 성악가를 포함한 공연 예술가들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무대에 올라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한다. 작품을 물질화하여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미술가, 문학 작가와 같은 예술가들과는 다르게 공연 예술가들의 작품인 공연은 비재현적이다. 즉, 시공간의 제약을 감수하고 기꺼이 찾아온 사람(客)들이 공연을 직접 봄(觀)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1] 따라서 코로나19의 대유행 이전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연 예술가들과 관계자들이 꾸준히 무대의 소중함을 강조해왔던 것은 관객 유치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이토록 귀중한 무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

1)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연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연 자체의 일부를 복제하여 기록하는 것일 뿐이다(Adey, 2019: 285).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통한 재현의 시도는 본래 상연되었던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동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결국 재현은 거부된다. 움직임의 비재현성에 대해서는 로익 바캉의 복서에 대한 문화기술지(2004)를 참고할 것.

2) 대중의 예술 참여와 관련하여 예술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예술의 상대성을 옹호하는 입장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 예술을 창작자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며, 대중의 개입과 참여가 예술의 완성을 이룬다는 관점은 ‘삶을 위한 예술’을 지향한다(장정·엄명용, 2018). 본 연구의 대상은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 노래 또는 오페라 공연을 하는 성악가들로 그들은 관객과의 소통

를 수 있을까? 그리고 무대 위 주어진 자리에 호명되기 위해 그들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누군가는 비교적 수월하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공연 예술이 협업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고프먼은 사회생활에서 연출 기법과 무대 관리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Goffman, 2016/1959: 27). 다시 말해, 사람들은 가정, 일터와 같이 비교적 닫힌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공연을 통해 스스로가 의도한 인상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공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순간적인 인상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단초가 되며,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Goffman, 2016/1959: 312). 따라서 공연 예술가들은 무대에서는 물론 무대 밖에서도 함께 자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연 예술계에서는 어떤 인상을 주는 개인이 선호될까? 또한 예술가 개인은 그러한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본 발표는 국내의 다종다양한 공연 예술 분야 가운데 성악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행위 전략을 살피고 이와 위 질문들을 연결 지어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성악계를 포함하는 서양 고전 음악계 일반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3], 서양 고전 음악계 내부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질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서양 고전 음악계 일반에서 발견되는 질서의 양상이 성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 질서에 따라 개인은 어떻게 행위 하는지에 대해 국내 학부 성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파일럿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지점과 분석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2. 서양 고전 음악계의 동향과 명성의 중요성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2020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총 14,078건의 서양 고전 음악 공연이 열렸으며 그 가운데 양악이 13,678건, 오페라는 400건을 차지했다.[4] 전체 공연프로그램 가운데 오페라를 제외한 서양 고전 음악 장르의 평균 공연 건수가 10.3건으로 가장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120).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연을 선보인 것에 비해 티켓 판매금액은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주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회장에 따르면 국내 서양 고전 음악 시장의 티켓 판매량

및 교감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의 상대성을 옹호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3) 국내 성악계의 동향을 단독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성악가들 및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 대한 양적·질적 자료 수집은 추후 성악계의 발전은 물론 관련 문화정책 기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2020 공연예술조사』에서 양악은 오페라를 제외한 오케스트라, 실내악, 독주회, 기획공연, 내한공연 등 서양 고전 음악 장르 일반을 의미한다.

은 연평균 약 300억 원대에 이르며, 이는 뮤지컬 시장의 약 10분의 1 정도 규모이다(경향일보, 2020/5/20). 뮤지컬 시장과 비교하여 약 10배에 달하는 매출 규모 격차는 동원되는 관중의 규모와 공연료의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국내 서양 고전 음악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신규 관중의 유입 역시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5] 코로나19의 대확산 이후 공연 예술계 내 시장 규모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으로 집계한 2020년 4월 서양 고전 음악 분야 총매출은 (4월 26일 기준) 2,600만 원이었다(경향일보, 2020/5/20). 같은 기간 약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뮤지컬 업계와 5억 3천여만 원의 티켓 판매를 달성한 연극 분야에 비하면 서양 고전 음악 시장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서양 고전 음악 시장은 코로나19의 유행 이전부터 이미 침체의 늪에 빠져있었다. 우수한 음악 인력을 육성해내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문 연주자로서 활동할 국내 시장이 부족하여 국제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네트워크 마련이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왔다(허은영, 2016). 서양 고전 음악계와 그 시장이 직면한 '위기'는 결국 구성원들의 위기로 이어진다.

2010년대에 접어들 무렵까지 국제 콩쿠르 입상은 대중에게 입상자의 이름을 알리며 그의 '티켓파워'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였다(신동아, 2019/4/10). 피아니스트 조성진, 손열음, 임동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도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잊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사례도 허다하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무대에 서서 관객을 만나야 하지만, 지명도가 낮은 사람을 위한 무대는 많지 않다(허은영, 2016; 신동아, 2019/4/10). 즉, 무대를 찾아오는 관객들 대부분은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이들의 공연을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신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양 고전 음악계의 저변이 좁아지는 악순환은 단절되지 못한 채 반복된다.

이러한 서양 고전 음악계의 현실은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의 명성을 높게 쌓을수록 무대에 설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삶을 실현하는데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는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경력개발 담론의 면모를 상기시킨다. 개인의 '명성 쌓기'가 경력 쌓기와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력개발 담론은 곧 개인 브랜드 구축이나 인맥관리 같은 자기계발 담론의 주요 장르와 맞닿는다(서동진, 2009 : 256). 이는 국제적 거버넌스의 논리로서의 신자유주의는 퇴색하였지만, 그 문화가 여전히 이곳저곳에 드리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김종엽, 2010: 293). 서동진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재현된 시장이 자율성과 책임성은 물론 혁신이나 창조성처럼 "종래의 현실에서 제약되었던 삶의 조건에서 해방시키는 원리"를 구사하여 문화적 재구성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서동진, 2011: 90). 명성을 쌓음과 동시에 경력을 쌓고, 그를 반복하여 사회적 인정과 자아실현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예술가들의 면모는 푸코가 명명했던 기업가적 자아

5) 『2020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뮤지컬의 평균 티켓 가격은 23,058원, 오페라를 포함한 양악 전체는 19,962원으로 나타났다(세부장르로서 양악은 18,985원, 오페라는 24,423원). 또한 뮤지컬의 유료관객 비중은 44.7%인 반면, 양악 일반은 24.2%으로 확인됐다(세부장르로서 양악은 21.8%, 오페라는 41.8%). 이와 같은 현격한 유료관객 비중의 격차가 양 업계 간 매출 규모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따라서 이는 예술가 개인은 본인이 속해 있는 각 예술 분야의 장에서 어떻게 자기 브랜드화나 인맥관리를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명성 쌓기와 연결 짓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본 발표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성악계라는 더 좁고 특수한 영역에서도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성악계 내 개별 행위자들이 더 자주 무대 위로 호명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탐구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앞서 서양 고전 음악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명성 쌓기가 개인의 자기 브랜드화 및 인맥관리의 실천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더 좁은 영역인 성악계에서도 발생하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직 연구의 방향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사전연구 차원으로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가 아니다. 이들은 국내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 중에 있거나 이미 졸업한 전공자로서 성악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악계 일반에 대해서 문외한인 연구자로서는 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 모두 똑같이 소프라노인 점에서 성부는 물론 노래와 배역에서의 성별 구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성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이 모든 한계는 결국 성악계 외부자로써 매우 희소한 성악 전공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전연구를 통해 이들과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고, 추후 연구에서는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더욱 적합한 대상을 소개받을 예정이다.

사전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3명이며,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에서 키워드 '성악'을 검색하여 모집하였다. COVID-19가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관계로 인터뷰는 모두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각 약 1시간 20분씩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	연령	전공	학력	비고
M	30대 초반	소프라노	K대학교 졸업 후 독일 H대학원 졸업	독일 유학 후 귀국
E	20대 중반	소프라노	E대학교 재학중	미국 유학 계획
R	20대 초반	소프라노	S대학교 재학중	미국 유학 계획

<표1> 인터뷰 참여자 정보

이 글에 등장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성은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32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전부 예술중학교 출신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를 정리한 <표1>에 각각 M, E, R로 명명하였다.

세 명 모두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합창단에 참가하여 노래 실력을 키웠지만, 본격적으로 성악을 전공하고자 결정한 것은 고교 입학을 앞두고부터였다. R은 서울에 소재한 전국 최상위권 예고 출신이며, M과 E는 수도권에 소재한 K예고 동문이다. 그러나 연령 차이로 인해 서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은 물론 공통으로 알고 있을 만한 동문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나중에 인터뷰를 진행한 E에게는 M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개개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하였다. E는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R은 이제 막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마친 신입생이다. 반면, M은 한국에서 학부 졸업 후 독일에서 약 4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동료들과 성악 입시와 관련된 사업을 이끌며 입시생들에게 발성학을 가르치고 있다. E와 R은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4. “학력? 안 중요해요. 그런데 반수나 재수 다들 많이 하죠.”: 성악계 내 학력의 의미

서양 고전 음악계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근본 기조와는 다르게 위계질서가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역설적인 장소이다(성용원·장민호, 2017: 2). 따라서 아무런 연고 없이 신성으로 주목받는 일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예술가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부터 레슨을 시작하여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특수한 과정을 따르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을 넓혀가는 것이 보편적인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M은 이러한 시각과 대척된다고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을 제시한다.

> M: (…) 20살 넘어서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동기들 중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는 ㅇㅇ대 불문과 졸업한 사람이 회사까지 다니다가 성악하고 싶다고 해서 스물일곱, 여덟에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독일에서 발성학을 전공한 M은 기악 전공자와 비교하여 성악 전공자의 전공 진입 나이가 훨씬 더 높다고 설명한다. 청소년기에 겪는 변성기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도 성인이 되어서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 아름다운 소리 내는 고가의 악기를 보유함은 물론 그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악 계통과 다르게 성악은 전공자의 좋은 목소리와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 외에 더 요구되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개인의 신체 기관 일부만을 음악적 재능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서양 고전 음악계 안에서 성악계만이 갖는 대표적인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모두 성악의 평가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창 실력이지만, 정해진 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결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대학 동기들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다고 이야기한다. M의 동기처럼 전혀 다른 길을 걷다가 성악을 전공하게 된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M과 E는 개인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정받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다소 상반되게 출신 학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많은 성악과 학생들이 반수 및 재수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M과 E가 각각 제시한 예시는 왠지 모르게 서로 닮아있다.

> M: 반수를 해서 한예종을 갔다가 또 반수를 해서 연대를 갔고. 연대에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가지고 연대 졸업을 했죠. 나이가 계속 차니까. 그러니까 학벌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E: 그러니까 **우선 시장이 좁다 보니까, 네임드가 많이 갈리잖아요?** (…) 어떤 사람은 처음에 1학년 때 대학교를 단국대를 갔다가 시험을 봐서 한양대를 오고, 한양대에서 연대를 가고. 연대에서 서울대를 가고. 이렇게 해서 **네 번의 학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2살까지도 다닌다, 학교를.

연구참여자들 모두 가창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악 전공자들이 반수와 재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학벌의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다. 학벌은 대학생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김근영, 2013; 김부태, 2011; 정용교·이화경, 2012), 좋은 학벌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인격적인 수치심,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호, 1998; 문상석·염유식, 2010; 이종현, 2007). 또한 E의 이야기는 비단 대학생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장래 성악 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될 때를 고려해서라도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학위를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늦게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라도 더 좋은 학력을 얻고자 분투하는 것은 학위를 통해'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생산하고자 함으로(이상길, 2018: 198), 이는 E가 말한 것처럼 향후 사회자본과 경제자본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서울대 입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려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예고를 졸업한 R의 이야기다.

> R: 그냥 친구들, 학생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서울대, 연대만 조금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전교생이 다 '무조건 서울대'** 라고 생각을 하다가 3학년 때쯤 조금씩 현실 자각을 하면서 조금 폭이 넓어지는?

R은 실제로 고등학교 동문 50명 정도와 함께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은 R의 동기 또는 대입을 다시 치른 선배들이다. R은 음악대학 전반에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이 많은 덕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부담감이 덜했다"라고 이야기한다. M과 E가 예로 들었던, 여러 번씩 대입을 치른 전공자들과 비교하여 R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입 재도전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본인의 목표인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몰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학력보다 노래 실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E는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학벌을 제일 많이 봤지만, 지금은 시장이 바뀌는 추세"라고 이야기한다. M과 R 역

시 학력이 무대 위에서의 실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R: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만 봐도 무조건 서울대가 1, 2, 3, 4등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대학들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어느 학교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른 차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M: (…) 무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막 내가 어디 수석하고, 100점 시험에 100점 노래를 했는데 막 무대에서 말도 안 되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게 무슨…. 더 우스워지는 거죠. 사람이, 꼴이. (…) **성악가를 안 할 거면 학벌이 더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니까.**

M의 단호한 주장은 성악계에서 더 이상 학벌을 기반한 전통적인 위계 구조의 존속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이는 성악가로서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최후의 전략인 것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M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이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Michael Young은 능력을 지능(IQ)과 노력의 합으로 도식화했다. 이때의 노력은 가정에서 축적된 개인의 문화자본을 반영한다(권성민·정명선, 2017: 444). 예컨대, 학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은 물론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다. 성악계에서는 문화자본뿐만 아니라 경제자본의 영향 역시 비교적 크게 작용될 수 있다. 많은 공연을 관람하고, 더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내는 실력의 상승은 결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상길은 자본이 장에서 매번 새롭게 분배되지 않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제자본은 거의 모든 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이상길, 2018: 209). 즉, 경제자본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손실을 입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문화자본 역시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폴 포츠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의 초대 우승자인 폴 포츠는 경제자본은 물론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테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를 제외한 제2, 제3의 폴 포츠는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폴 포츠는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됨과 동시에 꿈은 아무나 이룰 수 없다는 불공평한 현실을 상징하는 효시로 남겨진다.

연구참여자 세 명 모두 학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력이며, 이는 성악을 업(業)으로 삼는 이라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처럼 비추어진다. 그들의 유사한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성악계에서 학력은 도덕주의적 가치판단의 개입 아래 상징성이 다소 흐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명성 쌓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악가를 포함한 서양 고전 음악가 일반이 보편적으로 계획하는 해외 유학과 연결하여 이를 더 파헤쳐볼 것이다.

5.“학부 유학? 그래도 학부는 한국에서 나와야.. 하지만 대학원은 강추!”: 유학의 의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성악가들 대부분의 이력에는 빠지지 않고 유학 경력이 적혀있다. 몇몇

은 학부 과정부터 외국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만약 해외에서 학부를 졸업한 뒤 국내로 재귀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학부를 마친 전공자들에 비해 사회자본 형성이 어렵지는 않을까? 아직 유학을 계획 중인 E는 학부 유학이 국내 인맥과의 단절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학부 유학을 떠난 지인들이 새로운 인맥 형성의 중재자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R 역시 소통이 끊기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 E: 사실 이게 웃긴 게 애들이 먼저 해외로 나가면 그 국내 애들은 해외로 나간 애들이 해외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요. 서로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되고**. 우선은 얘네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 대학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독일에 아는 친구 있어.' '어, 누구?'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더 이어지기도 하고요.
> 그러고 이제 물론 스무 살 때쯤에 나가서 한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40살까지. 하지만 갔는데 음악적 역량이 터져요. 만약에 해외 입상해서, **해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해.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도 자리는 많습니다.** (…) 그래서 **사실 걔네들이 부족할 점은 없어요.**
>
> R: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자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예 유학을 갔다고 해서 막 아예 끊기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는 마치 볼탕스키와 시아펠로가 제안한 '프로젝트(project)'로서의 인맥(network)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Boltanski & Chiapello, 104). Boltanski & Chiapello가 지칭한 '인맥 자본주의'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Illouz, 2007/2010: 132). 즉, 그물망 사회에서 사회적 삶은 만남(encounters)과 일시적임(temporary)의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네트워크는 본원적으로 언제든지 재활성할 수 있다(Boltanski & Chiapello, 104). 따라서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랜 유학의 결실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국내에 돌아와도 아쉽거나 무서울 게 없다는 E의 주장은 결코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E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유학을 가는 것 역시 스스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성악가로서 자기계발에 전념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명성을 쌓고 또 성악계 내에서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E는 유학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그 누구에게서의 호출도 없이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것을 명예롭지 못하다는 듯이 말한다. E에 따르면 뛰어난 실력으로 스스로의 명성을 쌓은 자에게는 인맥도 저절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모 아니면 도"임을 알아도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 유학과 관련해서는 E를 제외한 연구참여자 두 명 모두 다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R: 그래도 다시 왔을 때 자리 잡을 수 있는 편한 방법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아예 유학을 가면 그쪽에서만 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

아오겠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아무리 쳐주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왔어요."가 더 크게 작용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

M: 성악은 [학부 유학이] 진짜 드문 것 같아요. (…) 어쨌든 한국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자기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동문*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인맥 자본주의의 원리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R과 E는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학력과 동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는 앞서 4장에서 두 사람 모두 학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로 대답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대학원 유학은 개인의 명성을 쌓고 인맥을 확장 및 보강하는 요소로 작동되지만, 그 기저에는 국내 학부 학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가 교차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6. 관계와 관계 맺기: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며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관계는 바로 지도교수와의 관계일 것이다. 수많은 유명 성악가들이 스스로를 홍보할 기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선생님에게 사사했는지 알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M과 E는 교수와의 관계를 묻는 말에 있어서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침없는 E와 비교하여 M은 말을 고르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지도교수가 독창회를 하면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E: 가긴 가야죠. 못 가더라도 돈은 내야 되죠. 이제 뭐, 꽃이나 현수막? 그러니까 크게 독주회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되는 거고. 그냥 협연 정도? 아니면 뭐 오라토리오의 솔로를 한다 그러면 시간되는 사람들만 하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화환이나 뭐 그런 거는 n분의 1 합니다. 심지어 타지여도 교수님 연주 보러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강원도 속초, 대전. 다 가요, 큰 교수님들은. (…) **우선은 사진 한 장에 내 얼굴이 박혀 있어야 "아, 얘도 있었지." 그렇게 되는 거라서.**

M: 글쎄요. 그거 가지고 이익, 불이익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교수님이 노래하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보면 교수님의 생각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따라 할 수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플러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참여자는 학생이 교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여러 층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교수의 실습 클래스[6]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클래스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콩쿠르 심사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대학 생활은 물론 미래의 경력을 위해서도 교수와의 관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6) 대학원에서의 연구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학생이 교수님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맞추지 못하겠으면 전공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도교수가 결국 학생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인맥으로 작용한다.

> E: (교수님이) 해외에 활동을 하다가 온 사람이어서 해외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이 유학을 하신 곳으로 보통 가요.** 그러면 독일에 있었던 분이면, 독일에 가면은 그 교수님이 이제 연락을 해. '내 제자 가는데, 걔 잘한다. 한번 봐줘라' 뭐 이렇게.

E에 의하면 지도교수가 해외에서 형성한 인맥은 다시 제자의 인맥이 된다. 제자는 이 인맥을 활용하여 다시 해외에서 공부 및 활동하며 새롭게 명성을 쌓고 언제든 다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에서 새롭게 닿을지 모르는 프로젝트로서의 인맥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다.

> R: [고교시절 레슨] 선생님들의 기억 속에 조금 좋은 제자로 자리잡고 있다면, 그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인맥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말들이 퍼져나가다 보면 조금 더 저를 받아들이는 게 다른 선생님들에게 하여금 조금 더 수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나쁜 소문이 돈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조금 꺼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 앞에서는 최대한 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판 쌓는 거를 되게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R 역시 성악계에서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강사 및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때때로 이러한 과정이 감정적으로 다소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맥락에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자기계발 담론의 자기 브랜드화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는 결국 명성 쌓기의 한 사례로 수용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의 평판을 드높여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은 결국 명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가 가장 강하게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 M: 그런데 실력이 좋으면 관계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 와서 달라붙죠. 달라붙고 연락을 하죠. '아, 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같이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꼭 관계가 형성되죠, 결국에는.

> E: 우선은 한국 콩쿨보다 해외에서 콩쿨을 입상을 하는 게 더 많이 쳐주기 때문에 한국은. 그리고 뭐 객석이나 음악 잡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이 가서 한 거를 더 많이 따와요. 인터뷰 같은 거나. (…) 콩쿨이 짱이에요. 성악은 콩쿨이 짱입니다, 국제 콩쿠르.

> R: 물론 실력이 있어야지 인정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지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항상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 [교내의 수많은 배움의 기회가] 어떻게 봐도 실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이라고 연구참여자 모두가 입 모아 말한다. 아무리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막강해도, 아무리 좋은 평판을 쌓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실력이 없는 성악가는 무대에서 오래도록 빛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조건이 부족할 경우 쌓을 수 있는 명성의 정도와 인맥의 정도도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바로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로써 불평등한 장소로서의 무대가 실력을 앞세워 모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비단 성악계를 포함한 서양 고전 음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마치며

본 발표는 원래 국내 성악계의 개인 행위자들이 내부 구성원으로 시장 내부에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는지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외부자로서 실제 장의 분위기를 알 수 없어 다소 두루뭉술했던 처음의 질문은 사전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금씩 구체화될 수 있었다. 사전연구를 통해 만난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명성 쌓기와 인맥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을 통해 성악계라는 장에서 개인 행위자가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한 학력, 해외 유학과 인맥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 행위자가 때때로 고프먼이 주장했던 인상 관리를 사회적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푸코가 제시한 기업가적 자아의 면모를 보이며 자기계발을 강구하기도 하며, 볼탕스키와 시아펠로가 고안한 프로젝트로서의 인맥 관리를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인 작업은 보다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은 개인이 스스로의 명성을 드높이고 그를 통해 더 단단하고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발표를 준비하며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장 내부에서 감정 조절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지점이다. 연구참여자 세 명 모두 이를 명확하게 문제로서 조명하지 않았지만, 장 내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고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 성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 역시 본인의 본능적인(visceral) 모습을 숨기기 위해 어떤 명예로운(honourable) 모습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타인과의 구별짓기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Jarness & Friedman, 2017). 따라서 추후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해 이러한 개인의 감정 조절 역시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가치의 충돌과 이에 대한 비판과 해석을 다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측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6호, 73~102쪽.

김부태. 2011. 「한국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제49권 4호, 25~54쪽.

김종엽. 2010. 「자기계발을 넘어선 자유의 의지를 위하여,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돌베개, 2009)」. ≪경제와사회≫, 292~299쪽.

문상석·염유식. 2010. 「학벌과 불행: 한국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 ≪현대사회와 문화≫, 제31권, 73~102쪽.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게.

_____.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경제와사회≫, 71~104쪽.

성용원·장민호. 2017. 「한국 클래식음악계의 새로운 동향」. ≪문화산업연구≫, 제17권 2호, 11~18쪽.

이영호. 1998. 「한국인의 교육열과 학력사회 상관성에 대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1호, 75~95쪽.

이상길. 2018. 『아틀라스의 발: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문학과 지성사.

이종현. 2007. 「"학벌과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학벌과시의 기원과 특성」.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호, 380~413쪽.

장정·엄명용. 2018. 「예술작품과 관객참여: 관객이 경험하는 역할 전이의 순환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8권 1호, 11~20쪽.

정용교·이화경. 2012.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벌주의 실태와 대안」. ≪중등교육연구≫, 제 60호 3권, 699~824쪽.

Adey, Peter. 2009. *Mobility*. Routledge. (최일만 역. 2019.『모빌리티 이론』. 앨피).

Boltanski, Luc & Chiapello, Eve. 2009.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Verso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진수미 역. 2016.『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Jarness, Vegard & Sam Friedman. 2017. "I'm not a snob, but . . . ': Class boundaries and the downplaying of difference." *Poetics*, 61, pp. 14~25.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2020 공연예술조사』,
https://www.gokams.or.kr/05_know/data_view.aspx?Idx=1098&flag=0&page=1&txtKeyword=&ddlKeyfield=T

허은영. 2016. 『클래식 지원정책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문기사]

김호정, 「조수미 “나도 코로나 블루…하지만 작은 빛이라도 밝혀야”」, 『중앙일보』, 2020년 12월 31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59236

문학수, 「이창주 공연예술경영협회 회장 “붕괴 위기인 클래식 생태계, ‘약간’의 정부 지원만 있어도 버티는데…”」, 『경향일보』, 2020년 5월 20일자.
https://m.khan.co.kr/culture/performance/article/202005202034005#c2b

송화선, 「위기에 빠진 클래식 음악계 “투자 축소, 기획 실종… 이래선 미래 없다”」, 『新東亞』, 2019년 4월 10일자.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690277/1

[참고문헌]

최연식. 2014. 『클래식 음악 공연의 관객연구 – 앙상블 디토 관객의 옴니보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Wacquant. Loïc J. D. 2004. *Body and Soul: Notebooks of an Apprentice Boxer*, Oxford University Press.

세션 2-1.
여성, 소수자

사회: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류다현 (이화여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생존과 이탈 경향 및 요인 분석: 생존분석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민주 (전북대)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혼합연구: 전라북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태정 (성공회대)
김지혜 (전북대)	트위터의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이분화된 인종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열돔 현상을 식힐 수 있었을까?	서선영 (충북대)
박재승 (중앙대)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주변화 현상: 독립 영화감독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영 (부산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생존과 이탈 경향 및 요인 분석

: 생존 분석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182SOG11 류다현

목차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의의

제 1장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계 노동 시장 내 경력 생존과 이탈의 경험은 어떠한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

(1) 연구 배경

1) 이공계 인력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 과학기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고용률 80%대로 비이공계 영역을 10% 가량 웃도는 수치)
3) **하지만, 과학기술 노동시장은 극심한 성비왜곡이 나타남: 여성들의 평균적인 수치는 20%에 그침**
4) **여성과학기술인은 경력이 지속될 수록 급격하게 이탈하는 송유관 유실 현상(Leaky pipeline)을 보임**

(2) 연구 목적

1) **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진입에 주목한 연구와 달리 여성과학기술인의 노동 과정 탐색**
2) **여성과학기술인을 인적 자본 혹은 대상으로 다루는 관점을 넘어서 직접적인 노동 경험 분석**
3) **개인 · 가구적 요인, 조직 · 직무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흩어져있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여성과학기술인의 종합적 생존곡선을 도출**

연구문제

개인 · 가구적 요인, 조직 · 직무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존과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한다.

개인 · 가구적 요인, 조직 · 직무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유의한 요인을 찾아낸다.

개인 · 가구적 요인, 조직 · 직무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존곡선을 도출한다.

연구의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 표준직업분류표 기준 **과학/공학 영역 종사 유경험자**

전문가	과학전문가	자연과학전문가
		생명과학전문가
	컴퓨터관련 전문가	컴퓨터관련전문가
	공학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전기, 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측량 전문가
		기타 공학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과학관련기술종사자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건축 및 토목공학기술종사자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선박,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분석자료 및 프로그램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1차 개인용 자료 사용

SPSS ver. 25 생존 분석 및 Random Forest(확장) 사용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여성과 과학기술 관련 논의

(1) 여성주의적 과학기술 비판

1) 지식사회학 · 과학기술사회학의 과학 지식/ 과학 구성 객관성 의문제기
2)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비판: 페미니스트 경험론, 페미니스트 입장론,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론

(2) 과학기술의 남성중심성

1) **바이런의 학문의 비전통성(non-traditionality)의 네 분류 ▶ 과학기술계/ 특히 공학계열 내의 비정상적 · 소수자인 여성**
2) **약한 숙달과 연성과학, 강한 숙달과 경성과학의 분류 하에서 전자로 여성들의 수평적 분리가 이뤄짐.**
3) **비전통적인 학문 분야인 과학기술계, 특히 강한숙달과 경성과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4) **과학기술계의 성평등의 역설(Gender equality paradox)(Stoet, Geary, 2018)과 부족한 사회구조적 개선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이탈 및 생존 관련 논의
(1) 개인 · 가구적 요인

(1) 혼인 상태

1) 혼인 상태가 여성과학기술인의 패널티로 이어진다는 주장(Blickenstaff, 2005)
2) 혼인 상태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성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Cole and Zuckerman, 1987; Zurlaquova et al., 2015)
3) 2)가 실재와 다른 핵심적인 균열 상황(critical rift)일 수 있다는 지적(Grant et al., 2000; Long, 1987)
4) 지지하는 배우자 및 가족이 있을 시 도움이 된다는 주장

(2) 학력

1)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 및 인적자본은 과학기술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조혜선, 2003): 성별은 인적자본의 보상효과를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
2) 성별에 따른 인적자본의 상이한 가치평가는 최근에 들어서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박찬웅, 2006)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이탈 및 생존 관련 논의
(2) 조직 · 직무적 요인

(1) 공정성 및 직무만족도

1)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와 정보 제공이 없을 경우 높은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할 확률이 높음 (Pederson, Minnotte, 2016)
2) 여성과학기술인은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낮게 이뤄지는 업무 배치를 받는 경우가 빈번함(Hart, 2016)
3) 교수 및 상사는 남성과학기술인을 선호하고, 남성과학기술인은 더 많은 멘토링 기회 등으로 유리한 조직 상황을 경험(Eaton et al., 2020; O'Connor et al., 2019)
4) 높은 직무 만족도는 이탈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킴

(2) 복지제도

1) 일가정 양립제도 혹은 가족친화제도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김서린 외, 2016)
2) 일가정 양립제도 혹은 가족친화제도는 유의미하게 여성들의 이탈경험을 감소시키지 못함(김효선 외, 2017)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이탈 및 생존 관련 논의 (3) 사회심리적 요인

(1) 주변의 지지

1) 남성중심적 영역에 진입한 여성과학기술인은 여성의 정체성과 (남성적)과학기술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을 거쳐 탈정체화를 경험함(주혜진, 2011)
2) 성별 규범에서 이탈한 영역 선택에 따르는 피로감 및 기회비용의 손실을 회복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중요함(Wegemer and Eccles, 2019)

(2)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

1) 과학기술자로써 높은 일치감과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여성과학기술인은 더 생존할 확률이 높았음(Buse et al., 2013)
2) 피로감과 탈진감, 박탈감에도 굴복되지 않는 과학기술인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가족 및 동료의 지지로 뒷받침됨(Bart et al., 2016)

제 3장 연구 방법

생존 분석 (Survival Analysis; Event-History Analysis)

-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시간이라는 변수와 함께 고려하는 통계 분석법**
- **사건(event), 시간(time), 중도절단(censored)**

(1)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ic)

- 데이터의 특성과 생존시간의 분포 정보 사용하지 않음
- 카플란마이어 추정(생존함수), 넬슨 알렌 추정(위험함수), 로그순위 검정(log-rank test), 윌콕슨 검정(Wilcoxon test)

(2) 준모수적 방법(semi-parametic)

- 데이터의 특성 정보를 사용하지만, 생존 시간에 대한 분포를 사용하지 않음
- 위험 함수 사이의 비례 관계를 활용하는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1) 랜덤포레스트

-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앙상블 학습방법 모형으로 붓스트랩 방식을 이용해 많은 수의 표본 생성, 결과 도출하는 방법(Breiman, 2001)
- 의사결정나무 맞추는 과정에서 설명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무작위성 활용 - 최대가 될 수록 예측 오차 감소
- 과적합 문제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예측력을 지님

◆ 의사결정나무란(Decision Tree)?

-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관측 대상을 종속변수에 대해서 범주화하는 패턴을 도출하는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
- 부모노드(parent node)가 불순도/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 자식노드(child node)로 분할
- 세분화, 분류, 예측, 변수 선택, 범주의 병합과 연속형 변수의 이산화 등에 활용 가능

제 4장 연구 결과

비모수적 생존분석 결과

(1) 개인 · 가구적 요인

- 결혼 상태가 생존기간에 유리하게 도출
- 석사/ 박사는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음
- 학사학위 소지는 유리하게 도출됨
- 결혼과 학사학위 소지 여부를 고려했을 경우, 결혼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유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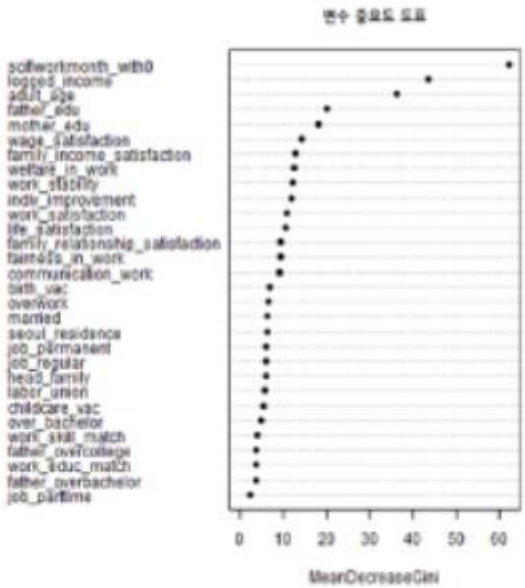
(2) 조직 · 직무적 요인

- 상용직 여부, 시간제 여부,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 공정성이 유의하게 도출
- 상용직일 경우, 전일제일 경우, 정규직일 경우, 고용안정성, 공정성이 높을 경우 생존기간이 길어짐.

(3) 사회심리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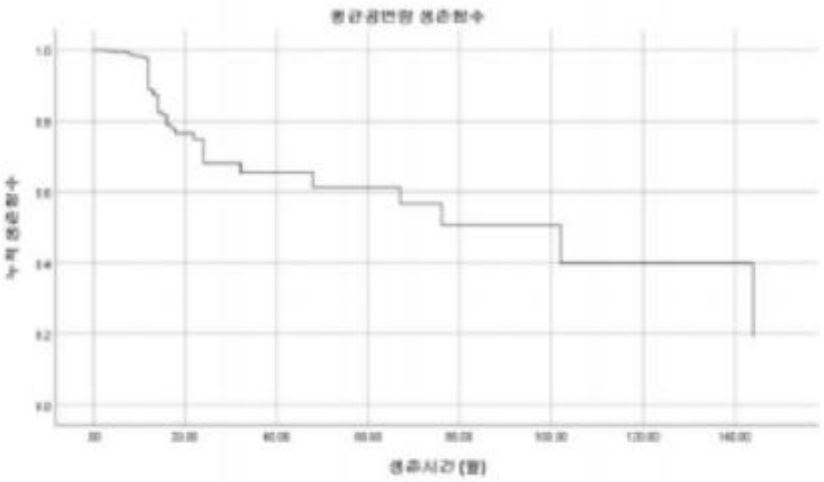
- 일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개인발전가능성의 유의성 도출됨.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 부모의 교육수준, 임금만족도, 고용안정성과 복지, 발전가능성과 전반적인 만족도, 지지 여부, 의사소통 만족도, 공정성, 출산 휴가, 초과근로 여부, 결혼 상태, 서울 거주 여부, 육아휴직, 일교육수준일치도, 일기술수준일치도, 시간제 순의 중요도가 순서대로 도출
- 부분의존성(Partial Dependence) 분석 결과, 정규직, 시간제, 상용직, 노동조합 여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공 여부 고려 필요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그림 20】 전체 콕스비례위험모형의 평균공변량 생존함수

<표 17>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이탈 여부(상태)와 과학기술 노동시장 생존시간(단위: 월)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콕스회귀모형 도출 결과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나이(일반)	-0.015	0.005	-0.012	0.003	0.000	0.002
4년제	0.340	-0.235	0.289	-0.198	-0.180	-0.186
석사과정	-0.026	-0.033	-0.027	-0.032	-0.029	-0.028
석사이상	-0.035	0.079	-0.016	0.062	0.117	0.110
결혼	0.182	-0.191	0.177	-0.246	-0.224	-0.234
임금(로그)		-1.115***		-1.176***	-1.139***	-1.201
노동조합		0.324		0.298	0.301	0.366
상용직		0.059		0.015	-0.039	-0.015
시간제		1.498*		1.579*	1.585*	-4.350***
정규직		0.318		0.288	0.312	-6.381***
고용안정성		0.071		-0.54	-0.54	-0.055
공정성		-0.305		-0.291	-0.296	-0.314
출산휴가		0.760**		0.714*	0.713*	0.792**
육아휴직		-0.508		-0.454	-0.468	-4.554**
초과근로		0.021		-0.26	-0.070	-0.075
일반직도			-0.159	0.148	0.107	0.107
재인발전가능성			-0.059	0.268	0.297	0.319
가족관계			-0.023	0.098	0.119	0.115
전문직					-0.246	-0.230
공학계열					0.106	0.173
시간제*정규직						6.740***

제 5장 결론 및 의의

연구 결과 및 제언

(1) 연구 결과

1) 비모수적 분석 결과: 개인 · 가구적 요인 중 결혼과 학사학위 취득 여부 유의, 조직 · 직무적 요인 중 상용직, 시간제,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 공정성 유의, 사회심리적 요인 중 일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개인발전가능성 유의한 요인 도출
2)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조직 · 직무적 요인만 유의한 영향 미침. 임금과 출산휴가 제공 여부, 시간제가 유의한 요인으로 검출. 시간제와 정규직의 상호효과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 강화

(2) 제언

1)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이탈에 대한 집단적(조직/직무적) 차원의 개선 필요
2) 시간제를 필두로 한 국가/ 기업의 유연고용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안정적 경력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함. 적극적 할당제 등 다른 성격의 접근 필요
3) 가족친화제도가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에 기초한 검토가 필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산출 및 도입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함(주혜진, 2014)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혼합연구
: 전라북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신민주

Ⅰ. 서론

1. 연구 배경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이주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데,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적 취득과 한국사회 적응, 시민권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다문화 배경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전체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정착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학령기 아동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라북도, 2020).

우리 사회의 이주민 증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삶에 관한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 이주민 연구는 이주민의 증가 현상이나 추세, 원인, 개인적 특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건강,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범죄, 지역 등 이주민의 생활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다루며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김두섭, 2014; 김세현, 2018).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겪는 일상생활 영역에 기울이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한국사회에 소속된 이후 결혼이민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개인 혹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부터 넓게는 종교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시간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일하는 직장, 결혼한 주부로서 아내이자 어머니 등 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데, 가족·친척·이웃 간의 네트워크, 정부, 종교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자조 모임 참여 등의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겪는 생활세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결혼이민자는 여타 이주민과 달리 한국 국민도 외국인도 아닌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이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결혼 2～3년 후에도 배우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와 방법은 알아도 심사 기간이 1년~2년이 소요되어서 실질적인 국적 취득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행과 신원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에 따라서 국적취득이 늦어지는 문제를 겪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이주민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소수자의 지위에 놓여 있어 이중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인종과 문화, 언어 등의차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남성에게 시집 온 후진국여성이라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신뢰는 시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들의 시민적 효능감과 차별 경험은 시민참여에 있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결혼이민자의 시민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시민정체성을 형성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시민권 문제와도 연계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시민사회의 실천에도 함의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일시적 체류자, 이주노동자와는 다른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법률 행위에 기초하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적 계약의 형태로 1차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영구체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 국가와 그들의 관계 또한 다른 국내체류 외국인과 다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주체라기 보다는 수혜의 대상 혹은 객체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이자 피부양자라는 의존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차별과 부적응, 사회관계의 고충, 경제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노동자, 어머니, 시민으로서 여러 역할을 교섭하면서 연출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스스로 시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지닌 개별적인 시민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신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시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의 존재가 아닌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식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민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의 과제에 있어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합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시민참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확장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며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1) 신뢰와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르디외(Bourdieu, 1986), 콜만(Coleman, 1988)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 먼저,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됨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자원의 한 유형으로서 실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Bourdieu, 1986). 콜만은 사회자본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했는데, 그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구조 속에서 발달된 사회자본이 여타의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재할 경우 달성하기 힘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Coleman 1988). 이후 퍼트남(Putnam 1993; 2000)과 후쿠야마(Fukuyama, 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해 사회자본 이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다.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사회공동체의 특징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의 특징이란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신뢰(trust)와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 등을 일컫는다(Putnam 1993). 이것이 바로 퍼트남이 파악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였다. 퍼트남은 이 중 신뢰가 사회자본에서의 핵심적 요소이자 시민공동체 문화에서 중요하며 이것이 정치제도의 실패,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임을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Putnam, 1994). 이처럼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이 사회 전반에 확장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문화와 민주제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사회자본이 협조적인 행위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효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다.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문화를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매우 기능적으로 설명하면서 사회자본이 시민참여를 늘려 민주적인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후쿠야마는 사회자본을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규범으로 파악했다. 특히 그는 규범이 단순한 추상성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신뢰라고 보았다. 또한, 신뢰의 구축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필수 구성요소로 보았다. 즉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Fukuyama 1995).

이처럼 학자들 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자본이 상호주의적 개념이며 이는 공유를 통해 생성되고 증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자본을 이루고 있는 공통적 구성 요소로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언급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들에서 구성원들 간 협력과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Uslaner, 2013). 이는 신뢰를 통한 사회자본의 증진이 민주주의의 구축과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유재원, 2004; 조기숙·박혜윤, 2004). 또한, 상호 신뢰를 공유하는 사회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간 자발적 참여가 증진될 수 있고, 이는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김기동·이정희, 2017).

이러한 신뢰에 대한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되어져 왔는데, 퍼트남 의 경우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양자의 논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별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Putnam, 2000). 즉, 전자가 높은 경우라도 후자가 낮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신뢰 유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경고하고자 했다. 또한, 우슬러너(Uslaner 2013)는 신뢰를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타인에 대한 신뢰에는 친구와 가족, 또는 낯선 사람들이 포함된다. 반면, 공적신뢰에는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속하게 된다. 우슬러너의 타인에 대한 신뢰는 공적신뢰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사적신뢰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낯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generalized trust; thin trust)'와 친구 및 가족 등 아주 '가까운 대상에 대한 신뢰(particularized trust; thick trust)'로 더욱 세분화되기도 한다. 즉, 사적 영역(사회에 대한 신뢰)과 공적 영역(정부에 대한 신뢰) 간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신뢰의 유형에 대해 기존의 구분을 수용함으로써 사적영역의 개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 영역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로 두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신뢰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토대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시민참여 유형과 참여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지구화 시대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2) 신뢰와 시민참여

1960년대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대되면서 시민참여, 정치적 형평, 신뢰, 다양한 견해와 인종에 대한 관용, 시민조직과 연합의 성장 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Putnam, 1993).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빠른 발전과 확대를 이루어 왔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의 시민참여 역시 그 관심과 수준이 상당히 증대되어 왔다.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란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의 관심, 수요, 가치들을 정부 및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Creighton, 2005; 김혜정, 2012). 이러한 시민참여는 모든 공식적, 일상적 활동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Putnam, 2009) 개인의 행동을 넘어선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다.

신뢰는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생성되는데, 시민사회 형성과 시민참여, 집합행동, 거버넌스, 지역발전 등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김동철·김대건, 2021). 또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상호호혜의 규범 형성과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쉬운 공공재이며(Norris, 2002),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반대로 선순환적 축적도 가능하다(Putnam, 2000). 축적되고 선순환하게 되면 단순히 사회협력을 떠나서 지역, 국가와 지역의 시민참여와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며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만든다(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또한, 이밖에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신뢰는 바람직한 행동과 타협을 이끄는 협력을 촉진시킨다(Uslaner 1999). 신뢰를 토대로 하는 협력은 시민들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는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도록 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갈등을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게 만든다(이숙종·유희정, 2010).

신뢰와 시민참여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이 신뢰와 호혜적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주요 변인으로 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형성과 참여,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 효율적 정부구성이 가능한지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빈스트라와 로마스(Veenstra & Lomas, 1999)는 높은 수준의 일반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쉽게 협력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으며, 퍼트남 역시 일반신뢰와 시민들 간의 연대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Putnam 1995). 뿐만 아니라, 토크빌(Tocqueville, 1997)도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단체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 곽현근(2007)은 투표참여에 있어서 이웃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송경재(2013) 역시 타인에 대한 신뢰가 투표참여와 시위참여 모두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홍성모 외(2011)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지역의 사회참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조권중(2010)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함께 서울지역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지표로 조사했다. 또한, 송경재(2010)도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다양한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낮은 공적신뢰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가 활발하지만 연구들이 지나치게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만 한정되어 변인을 단순화하여 분석했거나(송경재, 2010) 다양한 시민참여의 영역 중에서 일부 시민참여의 유형에만 한정된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이주민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통해 획득하는 법·제도적 시민권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나아가 사회자본을 구

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신뢰와 네트워크 간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즉 신뢰가 시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Putnam 1993; Coleman 1990), 그 반대로 시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Brehm & Rahn 1997). 따라서 양자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2. 시민적 효능감

시민적 효능감(citizenship self efficacy)은 보다 일반적인 시민참여 영역에서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역량에 대한 확신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Schulz et al., 2010). 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에서는 이를 '시민성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설명한다(Schulzet al., 2016). 국내에서는 교육부(2018)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는 시민적 효능감의 개념을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시민적 효능감의 특징으로는 기존 정치효능감 개념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만 관심을 둔 것과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시민적 참여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효능감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사안에 더하여 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나누기도 시민 참여로 포함되며 크게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시민참여의 영역으로 봄으로써 단순한 정당 정치 차원을 넘어서서 작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활동까지도 포괄한다. 자신이 시민적 효능감을 확신하고 정부가 반응적이어서 시민이 요구하면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 운동 참여, 투표 독려, 후원금 기부, 정당 활동 등에 참여한다(Craig, 1979; Finkel, 1985; Pollock, 1983; Zimmerman & Rappaport, 1988). 이처럼 시민적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시민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며 시민적 효능감이 시민참여의 강력한 동인이라는 관점으로 정치 사회화 및 시민참여 연구에서 다뤄왔다(김태한, 2013). 그러나 시민적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및 조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간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룬 연구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적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Crocetti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높은 시민적 효능감을 보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시민 참여 수준이 높았고, Blasko와 Vera-Toscano(2018)의 연구는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이 시민의식, 시민의식과 관련된 사회운동,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미래 선거참여, 미래 정치참여, 모든 민족·인종, 이민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태도 등 비인지적인 시민적 결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시민적 효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진리(2019)는 시민적 효능감에 대해 자신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시민들 앞에서 주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는 확신이라 정의한다. 김태준(2016)은 2009년 ICCS의 문항을 통해 시민적 자기효능감이란 학교 내외 시민 참여 관련 활동에 학생 자신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2009년 ICCS 자료를 회귀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적 자기효능감이 교내 시민활동 참여, 투표참여 의도, 시위 및 정치활동 참여 등의 시민참여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시기에 있어 시민사회 활동에 요구되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혜영(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회·정서적 역량이 사회참여 활동과 미래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상현·이창호(2012)는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이 온라인에서 사회정치와 관련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이러한 시민적 효능감을 '자신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차별 경험

차별(discrimination)이란 개인 혹은 집단의 소속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를 의미(Krieger, 1999)하며 편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부터 기인하는데, 권력을 지닌 지배집단의 자신들의 지위 유지를 위해 피지배 집단을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제한하고(Tilly, 1998), 이들의 주거와 대인관계,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한다(손인서·김승섭, 2015).

한국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인종적 또는 종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언어·심리 폭력, 한국문화에 대한 강요, 사생활 침해, 경제적 착취 혹은 권리 박탈 등의 차별이나(Kim & Choi, 2011) 인종차별, 국가차별,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 작업장에서의 통제와 같은 근로고용상의 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한다(Yang, 2005). 또한, 한국사회의 고정관념과 차별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스트레스이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박순희, 2011), 이민자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 경험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많은 이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차별경험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장애나 주관적 건강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균 외(2015)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차별경험과 자가평가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차별의 구조적 특징에 중점을 두어 출신지역별 그리고 남녀별로 차별경험의 건강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비서

구권 출신 혹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크게 나타나 인종주의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열악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한성·이유신(2013)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수준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수준의 요인들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차별경험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희정·조영아(2017)는 차별경험에 대해 차별 피해자인 결혼이민자의 내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출신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족이 차별의 큰 근원이자 지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며 성장해나간다고 보았다. 또한, 조선주 외(2017)는 차별을 두 집단 간의 언어, 생활방식, 관습,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과 법적, 사회적 제도, 인종주의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구조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한국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조선주·안주희(2020)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만족도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별로 2015년과 2018년의 상황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이에 결혼이민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경험을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출신 배경에 따른 문화적 적응에 더욱 엄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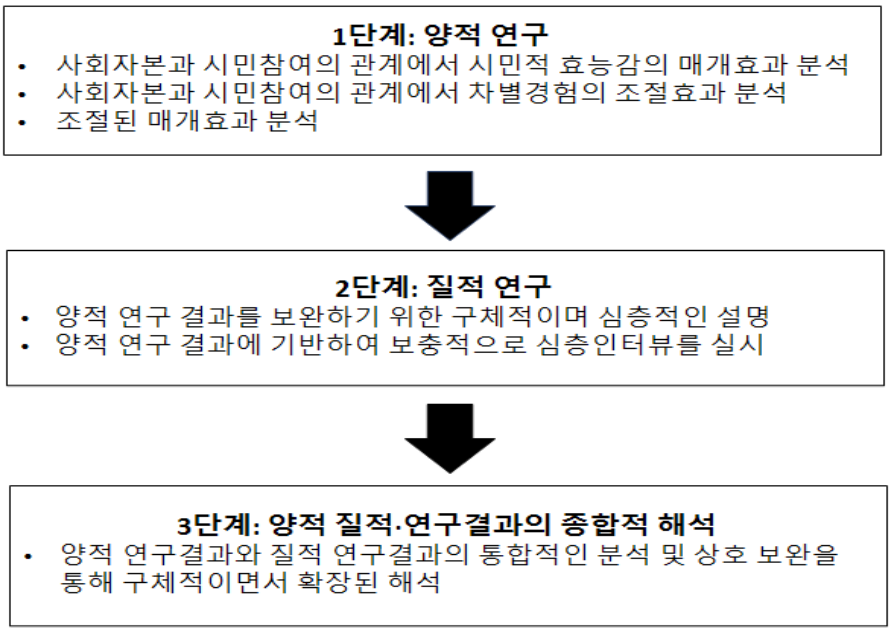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에 관해서 건강, 문화적응과 삶의 질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통합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나 이들이 시민권을 형성하는데 차별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을 “결혼이민자가 편견 혹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지각한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에 따른 시민참여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여 두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여 탐구하는 방법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단일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연구문제를 보다 넓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연구자들이 점차 많이 활용하고 있다(Crewell, 2013). 본 연구는 크레스웰(2014)이 제시한 ‘순차적 설명 혼합연

구(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를 사용한다. 먼저 양적 연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후 도출된 양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를 계획하고 시행한 후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를 통해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를 찾아내고, 이후 질적 연구로 양적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더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즉, 양적 연구 결과는 뒤이어 시행되는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질적 연구에서 드러냄으로써 양적 결과의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Creswell, 2014). 따라서 양적 연구 단계에서는 2020년 전북다문화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양적 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에 따른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 효능감과 차별 경험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질적 연구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담아내고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시민 효능감과 차별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양적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통하여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①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신뢰는 시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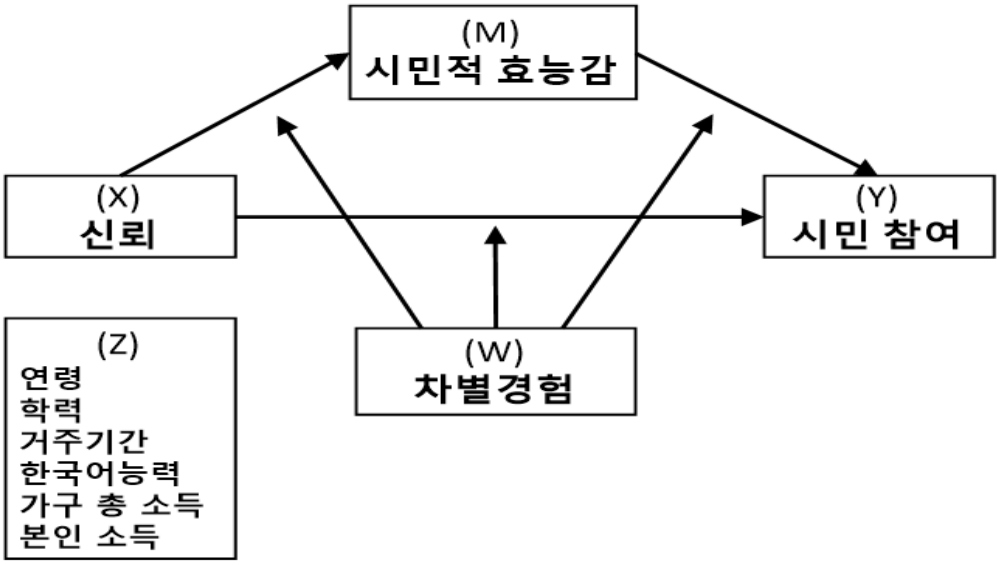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이들의 시민적 효능감과 차별 경험은 시민참여에 있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민자의 시민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시민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② 연구가설

가설 1.	통제변수들과는 독립적으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참여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시민적 효능감은 신뢰와 시민참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참여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신뢰와 시민참여 사이의 관계를 차별경험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참여가 높아지지만 이러한 관계는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강화(약화)될 것이다.
가설 3-2.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적 효능감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관계는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강화(약화)될 것이다.
가설 3-3.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참여가 높아지지만 이러한 관계는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강화(약화)될 것이다.

<분석 모형>



3. 양적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2020년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전라북도, 2020)' 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들의 실태의 종합적 파악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가 수행한 공공조사자료이다.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14일

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17일이며 전라북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회원 명부에 등재된 여성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를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한 통계 자료이다. 목표 표본 1,210명 중 1,209명의 여성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가 응답하였다.

2) 변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출신국 사람이 중심이 된 모임, 단체 및 사회활동', '한국인이 중심이 된 모임, 단체 및 사회활동' 경험으로는 '학교의 학부모 모임', '마을(동네)이나 지역주민 모임', '노동조합, 업종 또는 직종 단체', '종교 활동', '취미, 문화활동 동호회',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환경, 인권, 봉사 등)', '정치 활동(투표, 정당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임을 통한 사회활동'을 묻는 문항이며 '가입했고 활동에도 참여함' 1, '미가입 미참여' 0으로 처리하였다. '출신국·한국인이 중심이 된 모임, 단체 및 사회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앞의 두 문항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신뢰 중 개인에 대한 신뢰는 '남편을 제외한 가족', '친적, 인척', '친한 친구 또는 선·후배', '직장 동료 또는 선·후배'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을 묻는 문항을 사용했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경우 '시군 단위 지역사회 주민', '시군 단위 지방정부(기초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주민', '전라북도 지방정부(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 시민', '한국 정부', '출신국 시민', '출신국 정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매우 신뢰한다' 1,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2,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다' 3, '대체로 불신하는 편이다' 4. '매우 불신한다' 5로 5점 척도이며 이를 역코딩하였다.

(3) 매개변수

조절변수인 시민적 효능감의 경우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시군 단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당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매우 크다' 1, '대체로 큰 편이다' 2, '보통이다(크지도 작지도 않다)' 3, '대체로 작은 편이다' 4, '매우 작다' 5로 5점 척도이며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차별경험의 경우 '언어적 비하(반말, 욕, 조롱) 표현을 들었다',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내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이용을 거절당해 쫓겨났다', '일부 항목에 대해 판매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지원이나 서비스를 강요받았다', '길에서 신분증 검사 등 단속을 당했다', '채용

을 거부당했다', '일터에서 승진, 작업배치, 임금, 보너스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았다', '소속된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사람들이 낙서를 하는 등 내 물건 또는 집을 망가뜨렸다',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당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무례하게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 '나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았다',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총 20개 문항에 대해 '경험 없음' 0, '경험 있음' 1으로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가구 총 소득, 본인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당신과 남편은 언제 태어났습니까?"의 문항으로 결혼이민자의 연령만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무학' 0, '초등학교(6년)' 1, '중학교(3년)' 2, '고등학교(3년)' 3, '전문대(2~3년제 대학교)' 4,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5, '대학원(석사)' 6, '대학원(박사)' 7이며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거주기간은 '한국에 처음 입국한 때부터 지금까지 체류한 기간'으로 '1년 미만' 1, '1년~2년 미만' 2, '2년~3년 미만' 3, '3년~4년 미만' 4, '4년~5년 미만' 5, '5년 이상' 6이며 6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한국어능력은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문항으로 '매우 잘한다' 1, '약간 잘하는 편이다' 2, '보통이다' 3, '별로 못하는 편이다' 4, '전혀 못한다' 5이며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가구 총 소득과 본인 소득은 '1=50만원 미만, 2=50~99만원, 3=100~149만원, 4=150~199만원, 5=200~249만원, 6=250~299만원, 7=300~349만원, 8=350~399만원, 9=400~449만원 10=450~499만원, 11=500~549만원, 12=550~599만원, 13=600~649만원, 14=650~699만원, 15=700~799만원, 16=800~899만원, 17=900~999만원, 18=1,000만원 이상'의 중간값인 '25 만원' 1, '75 만원' 2, '125 만원' 3, '175 만원' 4, '225 만원' 5, '275 만원' 6, '325 만원' 7, '375 만원' 8, '425 만원' 9, '475 만원' 10, '525 만원' 11, '575 만원' 12, '625 만원' 13, '675 만원' 14, '750 만원' 15, '850 만원' 16, '950 만원' 17, '1000 만원' 18으로 사용하였다.

< 변수의 측정 >

변수			측정
종속변수	시민참여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	'학교의 학부모 모임', '마을(동네)이나 지역 주민 모임', '노동조합,업종 또는 직종 단체', '종교 활동', '취미,문화활동 동호회',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환경, 인권, 봉사 등)', '정치 활동(투표, 정당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임을 통한 사회활동' 경험에 대해 0=미가입 미참여, 1=가입했고 활동에도 참여함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문항들의 평균 값을 사용

독립변수	신뢰	개인 신뢰	‘매우 불신한다’에서부터 ‘매우 신뢰한다’ 5점 리커트 척도 구성
		공동체 신뢰	
매개변수	시민 효능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작다’에서부터 ‘매우 크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조절변수	차별 경험		총 20문항의 합산 점수를 사용 0= 경험 없음 1= 경험 있음
통제변수	연령		조사시점(2020년) 기준 나이
	학력		0=무학, 1=초등학교(6년), 2=중학교(3년) 3=고등학교(3년), 4=전문대(2~3년제 대학교) 5=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 6=대학원(석사), 7=대학원(박사)
	거주기간		1=1년 미만, 2=1년~2년 미만, 3=2년~3년 미만 4=3년~4년 미만, 5=4년~5년 미만, 6=5년 이상
	한국어 능력		본인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전혀 못한다’에서부터 ‘매우 잘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가구 총 소득		‘1=50만원 미만, 2=50~99만원, 3=100~149만원, 4=150~199만원, 5=200~249만원, 6=250~299만원, 7=300~349만원, 8=350~399만원, 9=400~449만원 10=450~499만원, 11=500~549만원, 12=550~599만원 13=600~649만원, 14=650~699만원, 15=700~799만원 16=800~899만원, 17=900~999만원, 18=1,000만원 이상’의 중간값 사용
	본인 소득		

3) 분석방법

연구모형 및 가설에서 제시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2020년 다문화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2020’자료를 SPSS와 SPSS PROCESS Macro 3.5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산출하여 자료의 기술정규성을 확인한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며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을 산출한다. 셋째,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시민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3단계 검증 절차를 참조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넷째,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참조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민적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59를 사용하여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실시하여 검증한다. 이상의 분석과정은 배병렬(2018)이 '매개된 조절효과의 분해'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르고자 한다.

여기서 본래 Model 59는 매개된 조절효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분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 분석 의도는 차별경험이 미치는 조절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변수의 효과에 대해 차별경험의 여부가 미치는 조절효과에 분석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매개된 조절분석(MeMo)가 아닌 조절된 매개분석(MoM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매개된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은 통계적으로 같은 모형이기 때문에 분석 의도에 따라 달리 분류할 수 있다(배병렬,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el 59를 활용한 최종모형의 검증을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으로 볼 것이다.

4)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0년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라북도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여주는 약 10명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와 대면으로 심층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사회 시민참여 활동에 대하여 반구조화 형식의 개방 질문과 함께 시민적 효능감과 차별 경험을 질문할 것이다. 인터뷰 과정 중 참여자와 의사소통의 흐름에 따라 내용의 확장이나 구체화 내용에 따라 상세 질문을 추가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인터뷰 이후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코딩화 작업을 할 것이다. 띠리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발화 중 유의미한 부분을 표시한 후 목록으로 정리하고, 관련있는 내용을 그룹으로 묶어 정리하고자 한다(Creswell, 2017).

Ⅳ. 양적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아래 <표 00>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의 평균은 약 0.249,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는 0.241,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는 0.244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인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17.647, 공동체 에 대한 신뢰는 27. 505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시민적 효능감은 3. 022, 조절변수인 차별경험은 0.407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인 연령은 37.774, 학력은

3.207, 거주기간은 6.067, 한국어 능력은 3.254, 가구 총 소득은 3,173,348, 본인 소득은 92 0,390으로 나타났다.

<표 00> 변수들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	10,011	0.249	0.298	0	1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9,934	0.241	0.302	0	1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10,021	0.244	0.285	0	1
독립 변수	개인에 대한 신뢰	9,452	17.647	3.509	5	25
	공동체에 대한 신뢰	9,483	27.505	5.325	8	40
매개 변수	시민적 효능감	10,020	3.022	1.061	1	5
조절 변수	차별 경험	10,082	0.407	0.491	0	1
통제 변수	연령	10,287	37.774	8.827	20	69
	학력	10,173	3.207	1.204	0	7
	거주기간	10,320	6.067	1.770	1	7
	한국어 능력	10,242	3.254	0.871	1	5
	가구 총 소득	9,070	3,173,348	1,960,599	0	10,000,000
	본인 소득	7,260	920,390	1,108,720	0	10,000,000

2.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모형 1>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지만 앞서 매개효과 검증 <표00>에서 개인에 대한 신뢰와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이 의미 없다.

<모형 2>의 분석 결과 조절변수 '차별 경험'이 독립변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종속변수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개인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에 대한 신뢰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하므로 개인에 대한 신뢰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 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 조절변수 '차별 경험'이 독립변수 '개인에 대한 신뢰'가 종속변수 '출

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개인에 대한 신뢰가 매개변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에 대한 신뢰가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하게 나타나, 개인에 대한 신뢰와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높은 '시민 효능감'으로 연결되고 높은 '시민 효능감'이 '출신국 중심의 시민 참여'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모형 4>의 분석 결과 조절변수 '차별 경험'이 독립변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종속변수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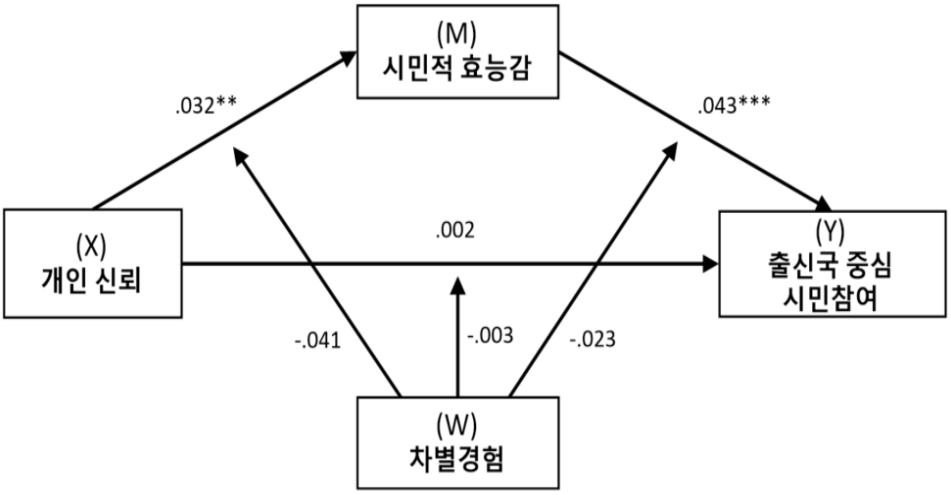
<모형 5>의 분석 결과 조절변수 '차별 경험'이 독립변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종속변수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적 효능감이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 <모형 5>의 분석 모형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별 경험'이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을 겪은 경우 시민참여 확률에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6>의 분석 결과 조절변수 '차별 경험'이 독립변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종속변수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적 효능감이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적 효능감이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 사이에 시민적 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개인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277	.256	1.081	.280	-.226	.779	-.099	.069	-1.451	.147	-.234	.035
X **(독립변수)**												
개인 신뢰	.032	.012	2.641	.008	.008	.056	.002	.003	.479	.632	-.005	.008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43	.011	3.976	.000	.022	.064
W **(조절변수)**												
차별경험	-.165	.086	-1.932	.054	-.333	.003	.049	.023	2.145	.032	.004	.094
상호작용항(X*W)	-.041	.025	-1.632	.103	-.090	.008	-.003	.007	-.398	.691	-.016	.011
상호작용항(M*W)							-.023	.022	-1.063	.288	-.065	.019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20	.129	-.018	.002	.001	.001	.633	.527	-.002	.004
학력	-.004	.037	-.116	.908	-.078	.069	.024	.010	2.429	.015	.005	.044
거주기간	.037	.028	1.360	.174	-.017	.091	.022	.007	2.962	.003	.007	.036
한국어 능력	-.006	.054	-.117	.907	-.113	.100	.027	.015	1.831	.068	-.002	.055
가구 총 소득	.000	.000	-2.180	.030	.000	.000	.000	.000	1.244	.214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338	.735	.000	.000	.000	.000	-1.317	.188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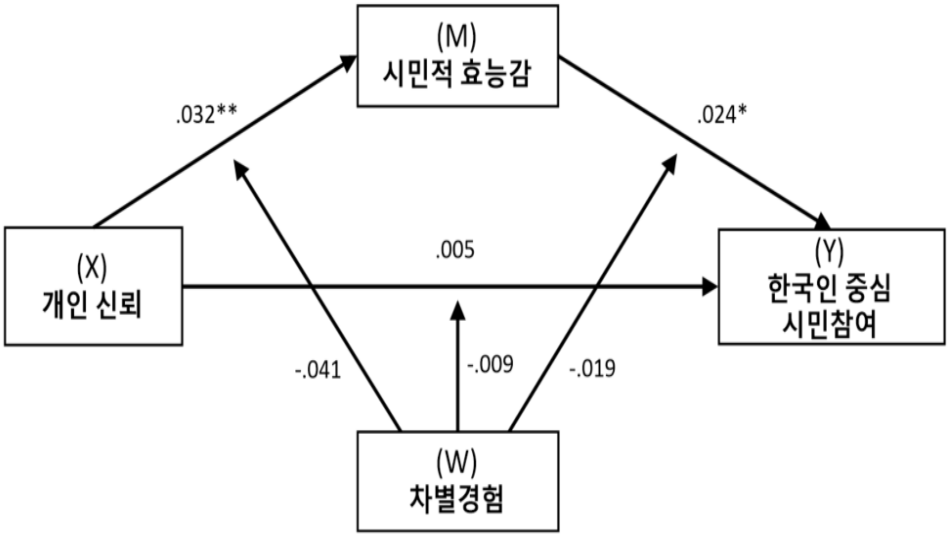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06)	.003	.001	.001	.005
차별경험 유 (.594)	.000	.001	-.001	.002



<모형 1>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개인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277	.256	1.081	.280	−.226	.779	−.099	.069	−1.451	.147	−.234	.035
X **(독립변수)**												
개인 신뢰	.032	.012	2.641	.008	.008	.056	.002	.003	.479	.632	−.005	.008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43	.011	3.976	.000	.022	.064
W **(조절변수)**												
차별경험	−.165	.086	−1.932	.054	−.333	.003	.049	.023	2.145	.032	.004	.094
상호작용항(X*W)	−.041	.025	−1.632	.103	−.090	.008	−.003	.007	−.398	.691	−.016	.011
상호작용항(M*W)							−.023	.022	−1.063	.288	−.065	.019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20	.129	−.018	.002	.001	.001	.633	.527	−.002	.004
학력	−.004	.037	−.116	.908	−.078	.069	.024	.010	2.429	.015	.005	.044
거주기간	.037	.028	1.360	.174	−.017	.091	.022	.007	2.962	.003	.007	.036
한국어 능력	−.006	.054	−.117	.907	−.113	.100	.027	.015	1.831	.068	−.002	.055
가구 총 소득	.000	.000	−2.180	.030	.000	.000	.000	.000	1.244	.214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338	.735	.000	.000	.000	.000	−1.317	.188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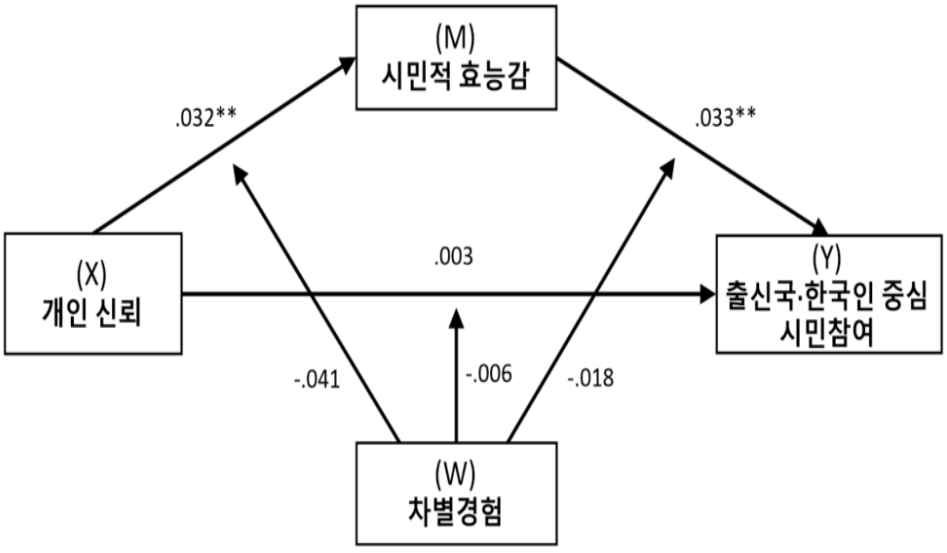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06)	.003	.001	.001	.005
차별경험 유 (.594)	.000	.001	−.001	.002



<모형 3>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개인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277	.256	1.081	.280	−.226	.779	−.181	.065	−2.809	.005	−.308	−.055
X **(독립변수)**												
개인 신뢰	.032	.012	2.641	.008	.008	.056	.003	.003	1.066	.287	−.003	.009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33	.010	3.251	.001	.013	.053
W **(조절변수)**												
차별경험	−.165	.086	−1.932	.054	−.333	.003	.038	.022	1.748	.081	−.005	.080
상호작용항(X*W)	−.041	.025	−1.632	.103	−.090	.008	−.006	.006	−1.007	.314	−.019	.006
상호작용항(M*W)							−.018	.020	−.879	.380	−.058	.022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20	.129	−.018	.002	.001	.001	.845	.398	−.001	.004
학력	−.004	.037	−.116	.908	−.078	.069	.030	.009	3.149	.002	.011	.048
거주기간	.037	.028	1.360	.174	−.017	.091	.025	.007	3.569	.000	.011	.038
한국어 능력	−.006	.054	−.117	.907	−.113	.100	.038	.014	2.781	.006	.011	.065
가구 총 소득	.000	.000	−2.180	.030	.000	.000	.000	.000	1.200	.230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338	.735	.000	.000	.000	.000	−1.635	.102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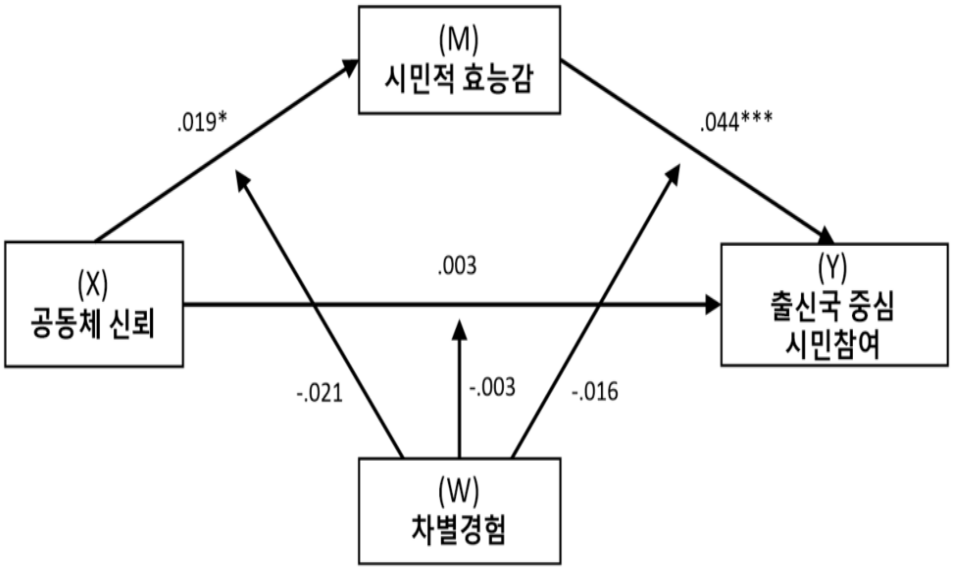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06)	.002	.001	.000	.004
차별경험 유 (.594)	.000	.001	−.001	.002



<모형 4> 출신국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공동체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040	.252	.158	.875	−.455	.535	−.067	.068	−.997	.319	−.200	.065
X **(독립변수)**												
공동체 신뢰	.019	.008	2.492	.013	.004	.035	.003	.002	1.454	.147	−.001	.007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44	.011	4.094	.000	.023	.064
W **(조절변수)**												
차별경험	−.208	.085	−2.438	.015	−.375	−.040	.044	.023	1.905	.057	−.001	.089
상호작용항(X*W)	−.021	.016	−1.332	.183	−.052	.010	−.003	.004	−.602	.547	−.011	.006
상호작용항(M*W)							−.016	.021	−.743	.458	−.058	.026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70	.117	−.018	.002	.001	.001	.616	.538	−.002	.004
학력	.008	.038	.218	.827	−.066	.082	.027	.010	2.641	.008	.007	.046
거주기간	.029	.027	1.055	.292	−.025	.082	.019	.007	2.565	.011	.004	.033
한국어 능력	.071	.054	1.323	.186	−.034	.177	.024	.014	1.670	.095	−.004	.052
가구 총 소득	.000	.000	−2.114	.035	.000	.000	.000	.000	.774	.439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201	.841	.000	.000	.000	.000	−.962	.337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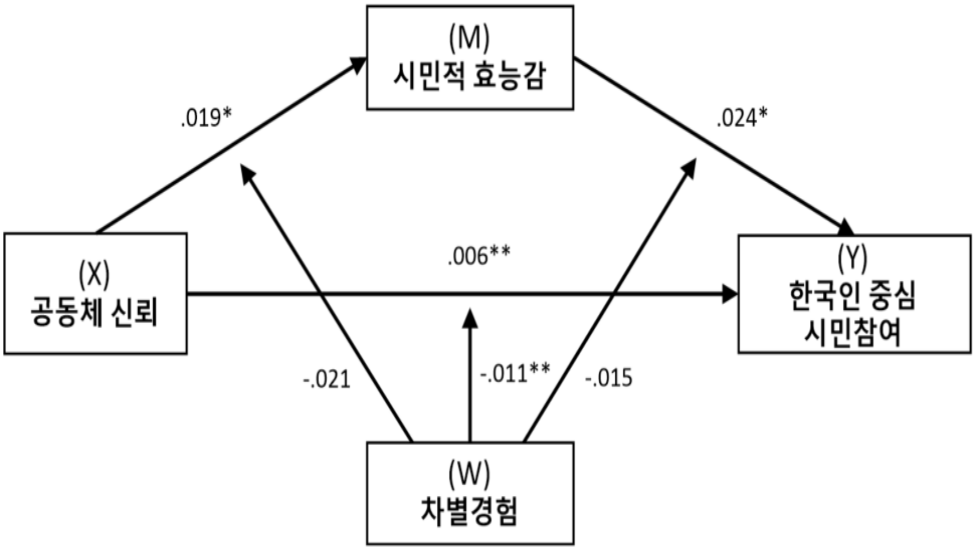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13)	.001	.001	.000	.003
차별경험 유 (.587)	.000	.000	−.001	.001



<모형 5> 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공동체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040	.252	.158	.875	−.455	.535	−.242	.068	−3.577	.000	−.375	−.109
X **(독립변수)**												
공동체 신뢰	.019	.008	2.492	.013	.004	.035	.006	.002	3.026	.003	.002	.011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24	.011	2.260	.024	.003	.045
W **(조절변수)**												
차별경험	−.208	.085	−2.438	.015	−.375	−.040	.023	.023	1.007	.314	−.022	.068
상호작용항(X*W)	−.021	.016	−1.332	.183	−.052	.010	−.011	.004	−2.674	.008	−.020	−.003
상호작용항(M*W)							−.015	.021	−.691	.490	−.057	.027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70	.117	−.018	.002	.002	.001	1.120	.263	−.001	.004
학력	.008	.038	.218	.827	−.066	.082	.035	.010	3.418	.001	.015	.054
거주기간	.029	.027	1.055	.292	−.025	.082	.026	.007	3.502	.000	.011	.040
한국어 능력	.071	.054	1.323	.186	−.034	.177	.045	.014	3.102	.002	.016	.073
가구 총 소득	.000	.000	−2.114	.035	.000	.000	.000	.000	1.198	.231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201	.841	.000	.000	.000	.000	−1.324	.186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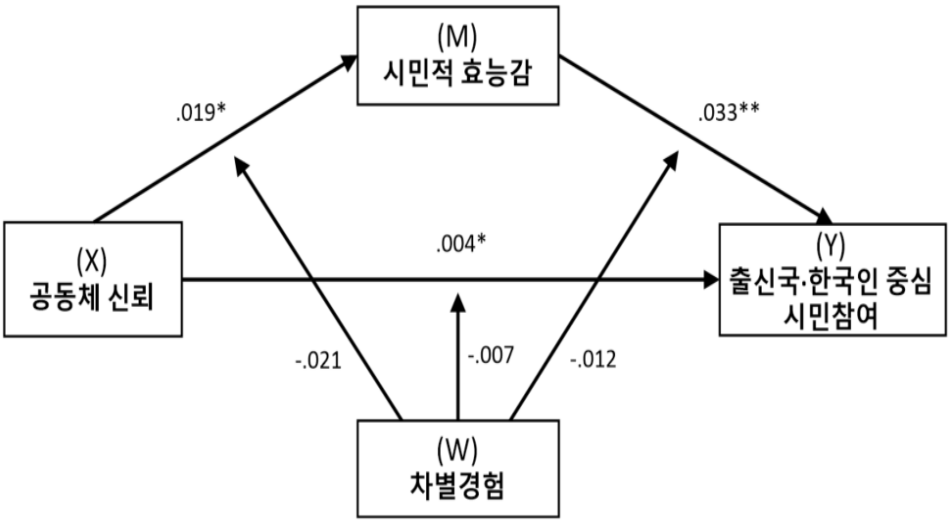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13)	.001	.001	.000	.002
차별경험 유 (.587)	.000	.000	.000	.001



<모형 6> 출신국·한국인 중심 시민참여에 대한 공동체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X, W → M						*X, W, M → Y*					
	B	*S.E.*	*t*	*p*	*LLCI*	*ULCI*	*B*	*S.E.*	*t*	*p*	*LLCI*	*ULCI*
(상수)	.040	.252	.158	.875	−.455	.535	−.155	.063	−2.449	.015	−.280	−.031
X **(독립변수)**												
공동체 신뢰	.019	.008	2.492	.013	.004	.035	.004	.002	2.261	.024	.001	.008
M **(매개변수)**												
시민효능감							.033	.010	3.327	.001	.014	.053
W **(조절변수)**												
차별경험	−.208	.085	−2.438	.015	−.375	−.040	.034	.022	1.601	.110	−.008	.077
상호작용항(X*W)	−.021	.016	−1.332	.183	−.052	.010	−.007	.004	−1.801	.072	−.015	.001
상호작용항(M*W)							−.012	.020	−.618	.537	−.052	.027
Z **(통제변수)**												
연령	−.008	.005	−1.570	.117	−.018	.002	.001	.001	.820	.413	−.001	.004
학력	.008	.038	.218	.827	−.066	.082	.032	.009	3.424	.001	.014	.051
거주기간	.029	.027	1.055	.292	−.025	.082	.022	.007	3.142	.002	.008	.035
한국어 능력	.071	.054	1.323	.186	−.034	.177	.037	.014	2.698	.007	.010	.063
가구 총 소득	.000	.000	−2.114	.035	.000	.000	.000	.000	.887	.376	.000	.000
본인 소득	.000	.000	.201	.841	.000	.000	.000	.000	−1.298	.195	.000	.000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차별경험 무 (−.413)	.001	.001	.000	.002
차별경험 유 (.587)	.000	.000	−.001	.001



Ⅴ. 질적연구 결과

Ⅵ. 결론 및 함의

[부록] 심층인터뷰 반구조화 질문지

A. 개인 혹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 활동에 관한 질문

1. 개인(가족, 친척, 인척, 친한친구, 직장동료, 선후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공동체(지역사회주민, 지방정부, 전라북도 주민, 한국시민, 한국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개인/공동체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하는 정도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시민 활동에 참여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1.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나요?
   (ex 학부모 모임, 지역 주민 모임, 노동조합, 종교활동, 취미·문화활동, 협동조합, 환경·인권·봉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투표 및 정당 등 정치활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임을 통한 사회활동)
   4-2. 시민 활동 참여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B. 시민적 효능감에 관한 질문

1. 자신(혹은 본인 포함 결혼이민자)이 살고있는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스스로 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ex 사회활동, 모임, 투표참여 등을 통해)
2.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신뢰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요인이 있나요?
3.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하 게끔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4. 자신(혹은 본인 포함 결혼이민자)이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써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C. 차별경험

1.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2. 차별을 겪었다면 어떠한 차별이었나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3. 차별을 겪기 전과 후 시민참여에 있어 변화가 있었나요? (ex 참여 횟수 혹은 정도)

<참고문헌>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김동철·김대건. 2021. “시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춘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1): 3-29.

김세현. 2018.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특성과 사회자본.” 『서울도시연구』 19(4): 131-147.

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김태준. 2016. “청소년의 시민적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심리연구』 30(3): 535-558.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김희정·조영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4: 99-140.

모상현·이창호.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43-164.

박순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1): 89-109.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배병렬. 2018.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제 2판』 서울: 청람.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김철효·고재훈·이충훈·이지훈. 2020.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 전라북도 연구보고서.

손인서·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송경재.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Ⅱ: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동학의 변화.” 『국가전략』 16(4): 125-150.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 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41-166.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이용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고찰: 제도적· 비제도적 차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1(2): 235-268.

정진리. 2019. 여성 롤모델이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권중. 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70): 1-25.

조기숙·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38(2): 95-116.

조선주·안주희.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103.

조선주·오현경·민현주. 2017.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09-140.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9): 291-319.

Blasko, Z., da Costa, P. D., & Vera-Toscano, E. 2018. “Civic attitudes and behavioural intentions among 14-year-olds. How can education make a difference towards a more democratic and cohesive Europe?” Joint Research Centre (Seville site).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99-1023.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Creswell, John. W. 2014.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Crocetti, E., Jahromi, P., & Meeus, W. 2012. Identity and civic engag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5(3): 521-532.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ty*, NY: Free Press.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pp.295-352.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NESF).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um Report No.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 1994. "Social capital and public affair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5-19

Putnam, R.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 Politics*(December) 28(4): 664-683.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utnam, R. 2009. "Diversity, social capital, and immigrant integration: Introductory remarks." *National Civic Review*, 98(1): 3-5.

Schulz, K. F., Altman, D. G., & Moher, D. 2010. CONSORT 2010 statement: updated guidelines for reporting parallel group randomised trials. Trials,11(1): 1-8.

Tilly, C. 1998. *Durable Inequal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ocqueville, A. de. 1997. 『미국의 민주주의』. 임효선, 박지동 역. 서울: 한길사.

Uslaner, Eric.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Democracy and trust*, 121-150.

Uslaner, Eric, 2013. "Trust and corruption revisited: How and why trust and corruption shape each other." *Quality & Quantity*, 47(6): 3603-3608.

Veenstra, G & Lomas, J.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5(1): 1-12.

Zimmerman, M. A., & Rappa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50.

트위터의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이분화된 인종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열돔 현상을 식힐 수 있었을까?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지혜

Ⅰ. 연구 배경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사망했다.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아시아계 노인들의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3월 16일 이후 #StopAsianHate(SAH)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중심 의제가 되었다. BTS 등 유명 인사들은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다. SNS 유저들은 폭행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부에 참여하고, 오프라인 시위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셜미디어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액티비즘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플랫폼은 '뉴스피드'처럼 liveness를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해시태그 액티비즘이 '사건 기인적(episodically oriented)'인 이유를 설명해준다(Zuli, 2020). 특정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거의 즉각적으로 출현하고, 빠르게 엄청난 수준의 인기(popularity)를 얻지만, 대중적 중요성(public prominence)으로부터 사라져버린다(Anderson, 2018). 둘째, '도용 해시태그'(appropriated hashtag)의 등장 가능성이다(Zuli, 2020).

<Racial Melancholia, Racial Dissociation>의 저자들은 아시아인을 향한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라는 고정관념이 미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국가적 상상력(national imagination)으로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차별과 배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억압당한 집단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과정을 촉진하는 우울의 메커니즘(melancholic mechanism)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모범적 소수자 고정관념은 아시아계 이민 2세대의 학문적 성취와 그들의 경제적 상층 이동을 증거 삼아 미국이 평등한 기회의 땅이자 인종 차별로부터 해방된 자유 시장임을 확인해준다. 이러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미국 사회 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불평등한 위치는 개인이 자신에게 가한 잘못(self-inflicted injury)으로 여겨진다. 불평등은 제도적 인종차별주의나 지속된 백인 특권(whiteness as property)의 유산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이다.

USA Today/Ipsos survey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60%였던 미국인의 #BlackLivesMatter(BLM) 지지 비율은 2021년 3월에 50%로 감소했지만, law enforcement

를 신뢰하는 비율은 56%에서 69%로 증가했다. 작년 5월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Derek Chauvind은 올해 4월 이례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혁 없이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뿐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BlackLivesMatter 액티비즘이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오프라인 시위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BLM을 향한 반발심이 미국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American National Social Network Survey의 조사는 가까운 지인 중 흑인이 있는 공화당원이 다른 당원들보다 인종차별에 대해 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바이든 지지자를 지인으로 둔 공화당원이 "흑인들을 향한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Is there a lot of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or not?")라는 질문에 더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Ⅱ. 선행연구 검토

BLM을 주제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AllLivesMatter(ALM)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다. 2014년 Michael Brown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점과 경찰관 Darren Wilson이 'non-indictment' 판결을 받은 시기를 포괄한 논문에서는 전체 BLM 데이터 중 1%의 트윗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위를 반박하고, 대항하는(counter protest) 맥락에서 BLM을 ALM과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한다(Ince et al., 2017). 2014년 12월 3~7일까지 5일간의 BLM 또는 ALM를 포함한 트윗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젊은 흑인들이 시위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ALM를 역이용했던 사례를 보여준다(Carney, 2016).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LM과 ALM 해시태그를 포함한 트윗들을 분석한 논문은 ALM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해시태그가 BLM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Gallagher, 2018). 하지만 위 연구들은 ALM과 BLM이 함께 등장하는 트윗(교집합)과 각각 따로 등장하는 트윗(차집합)을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다. SAH의 프레임이 BLM과 어떻게 연대하며, ALM 프레임을 오염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 1>처럼 7개 그룹에 따른 트윗 분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그룹 분류

해시태그 조합	그룹
#AllLivesMatter	A
#BlackLivesMatter 또는 #BLM	B
#StopAsianHate	S
#AllLivesMatter + {#BlackLivesMatter 또는 #BLM}	AB
#AllLivesMatter + #StopAsianHate	AS
{#BlackLivesMatter 또는 #BLM} + #StopAsianHate	BS
#AllLivesMatter + {#BlackLivesMatter 또는 #BLM} + #StopAsianHate	ABS

Ⅲ. 문제 제기 및 연구질문

21세기 버전의 인종차별과 양극화된 정치 성향이 뒤엉킨 갈등 상황에서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에 궁금증이 생겼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계(AAPI)를 대표해 새롭게 등장한 해시태그인 #StopAsianHate 사회 운동의 동학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StopAsianHate이 태동한 시기부터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한 시기와 그 담론의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해시태그 등장으로 인종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BlackLivesMatter와 #AllLivesMatter가 어떤 조정과 프레이밍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하고자 한다. 세 해시태그를 모두 포함한 트위터 공론장 안에서 두 마이너리티 집단인 SAH과 BLM 사이에 연계 및 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StopAsianHate은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 아닌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을 이끌어냈는가? 또한, #BlackLivesMatter와 연대 및 연계하여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의미 연결망을 만들어내었는가?

현시대의 사회운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전보다 개인화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사회운동에 비해 더 규모가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며, 훨씬 유연하게 정치적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슈들을 연결 지을 수 있다.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필수 요소는 자원(resources), 기구(organization)와 네트워크,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은 기술 사용(technology deployments), 느슨한 연결(loose organizational linkage), 개인화된 액션 프레임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Bennett and Segerberg, 2014).

홍콩의 #HongkongPoliceBrutality 액티비즘에 관한 연구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중심 토픽 5개를 분석했다(Wang and Zhou, 2021). Wang and Zhou는 감정 표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증거 기록 등 유저들의 능동적 참여를 담은 담론들을 확인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리더나 기구의 도움 없이 논쟁적 이슈에 대해 자기 동기 부여(self-motivation)와 개인화된 행동(personalized actions)을 통해서 액티비즘에 참여한다.'는 연결행동의 프레임에 연구 대상의 성격이 부합하며, 홍콩의 온라인 액티비즘이 지역적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연결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맺는다.

트위터 유저들은 프레임을 창조하고, 공유(broadcast)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트윗을 다시 공유(rebroadcast)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social) 또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랜 시간 관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접성(proximity)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van Haperen et al., 2018). 미등록 이주민의 추방(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에 저항하여 시작된 #not1more 캠페인의 중추는 특정 대도시에 있는 활동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중심 기구와 활동가들이었다. van Haperen는 국가 전체 차원의 이슈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직접행동(direct action)이 트위터에서 더 오래 지속되며, 직접행동(direct action)의 여러 종류에 따라 지속성과 새로운 유저 유입에 차이를 보인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여러 온라인 액티비즘이 보여줬던 연결행동의 특징들이 #StopAsianHate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행동이 해시태그 액티비즘의 역동성에 미칠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음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1. #StopAsianHate이 연결행동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하고, 개인화된 서사들이 트윗 속에 포함되는가?

가설 1-1: 폭력 비디오(cctv 영상)와 피해자를 위한 기부(go fund)로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프라인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한 트윗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스노우와 동료들에 의해 발전된 사회운동론적 접근의 프레임 분야는 프레임을 '해석의 도식'으로 정의한다.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란 개인과 사회운동조직의 해석적 정향(interpretive orientations)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스노우는 '프레임 정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동조직의 프레임이 일반인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공명(resonance)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now et al., 1986 ; 이준웅, 2000 재인용). 스노우는 SMO(social movement organization)가 제시하는 가치가 잠재적 지지자 그룹 또는 개인을 포괄하지 못할 때에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SMO의 중심 목표에는 부수적일지라도 잠재적 지지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와 관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프레임 확장이 발생한다. 본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목표와 이슈를 포함하도록 중심 프레임을 확장하는 일은 자칫하면 프레임 자체를 흐릴 수도 있다. 결국 프레임 확장 후에 중심 지지층 손실이라는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Snow et al., 1986).

SAH과 BLM의 해시태그가 함께 나열되는 것을 프레임 확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 간 관계의 빈번함이나 밀도가 '연계'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연계라는 사회적 결속 그 자체가 연대인 것은 아니다(은수미, 2004). 은수미는 1991년도 한국 시민사회운동조직 상징연결망의 주해석틀이었던 민중민주와 민주쟁취가 97년도에 소멸되며, 상징의 다양화 및 상징 간 약한 파당 형성으로의 변화가 연대 약화 경향을 지지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해시태그 통합(ABS와 BS)이 해시태그 B 또는 S만 단독으로 등장했을 때의 프레임과는 구분되는 마스터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B와 S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깝게 파당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시태그 어휘연결망 분석이 요구된다.

ALM은 주로 'Black protesters vs. law enforcement' 관계를 '그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운다(Langford, 2015 ; Gallagher et al., 2016 재인용). ALM 맥락 속에서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관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진다(Rickford, 2016 ; Gallagher et al., 2016 재인용). 앞서 언급한 Carney의 논문에서 ALM은 BLM의 담론을 약화시키려 하지만, 젊은 흑인들은 논쟁에 휘말리기를 멈추거나, ALM 언급 없이 BLM만을 사용해 정부 차원에서 행해진 흑인의 몸에 대한 폭력(state-sanctioned violence against

Black bodies)의 불공정성(injustice)를 강조한다. 또는 BLM과 ALM 해시태그를 융합해 기존 논쟁을 둘러싼 관심을 오프라인 시위(protest in the streets)에 동원하기 위해서 역이용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AllLivesMatter를 포함한 A, AS, AB, ABS가 각각 어떤 어휘에 둘러싸여 주해석틀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오염당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Ince의 연구는 #BlackLivesMatter와 공출현한 해시태그들을 5개의 범주로 나누고, 2014년 중 핵심 시기를 기준으로 트위터 볼륨 추이를 확인했으며, 고빈도로 출현한 해시태그 간 네트워크를 연구 결과로 제시한다. 위 연구들을 배경 삼아 본 연구가 설정한 두 번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2. 트위터 유저들이 어떻게 #StopAsianHate와 #BlackLivesMatter를 통해 해시태그 통합(integration)을 만들어 내는가? 단순히 함께 나열하는가?

가설 2-1: 통합(연계)이 발생했다면, 흑인과 아시아인이 모두 마이너리티임을 인정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었는가? 백인 우월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며 흑인과 아시아인의 연대를 주창하는 프레임 확장이 발생했는가?

가설 2-2: 연계가 발생한 해시태그 집합들의 주해석틀이 독립된 A, B, S의 프레임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시간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가설 2-3: 기존 연구들이 보여줬던 그룹 A의 주해석틀이 소멸되었는가? 3월 16일에서 4월 20일의 시간 변화를 거쳐 소생했는가?

Ⅳ.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StopAsianHate, #BlackLivesMatter, #blm, #AllLivesMatter를 포함한 트위터 텍스트 및 해시태그와 리트윗 횟수, 포스팅 날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StopAsianHate이 폭증했던 2021년 3월 16일과 경찰관 Derek Chauvin의 유죄 판결이 났던 4월 20일을 포함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UTC 기준) 4개의 해시태그를 하나라도 포함한 트윗들을 python를 통해 수집했다. 연구 시기는 #StopAsianHate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BlackLivesMatter 담론의 변화가 예상되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각 시기 당 7일로 설정했다.

연구질문 1에 답하기 위해서 #StopAsianHate로 얻은 트위터 데이터의 텍스트를 R 프로그램를 이용해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다. 토픽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담론의 맥락이 소실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n그램 분석 방법도 활용한다. n그램을 통해서 연구 대상인 중심 해시태그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서브 해시태그(위성 해시태그) 또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는 어휘 등 특정 관심 주제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질문 2에 답하기 위해서 모든 해시태그를 포함한 트윗을 합친 데이터 셋을 만들고, 각 해시태그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7그룹으로 분류한다. 각 그룹의 평균 리트윗 횟수와 볼륨 추이를 비롯한 특징들을 확인하고, 그룹 별 고빈도 해시태그와 n그램을 활용해 가설 2-1, 2-3에 답한다. 2-3를 위해서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준 #AllLivesMatter와 공출현한 고빈도 어휘 목록을 참고한다.

#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가설 2-2에 답한다. SAH과 서브 해시태그들의 매개중심성을 확인하면 #StopAsianHate과는 배타적으로 분류된 그룹(A, B, AB) 내에서의 SAH 프레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커뮤니티 디텍터를 통해서 연계가 발생한 그룹과 독립된 그룹(A, B, S) 사이에 그룹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면 해시태그가 연계된 트윗들이 A, B, S 중 어느 쪽에 가깝게 프레임을 형성했는지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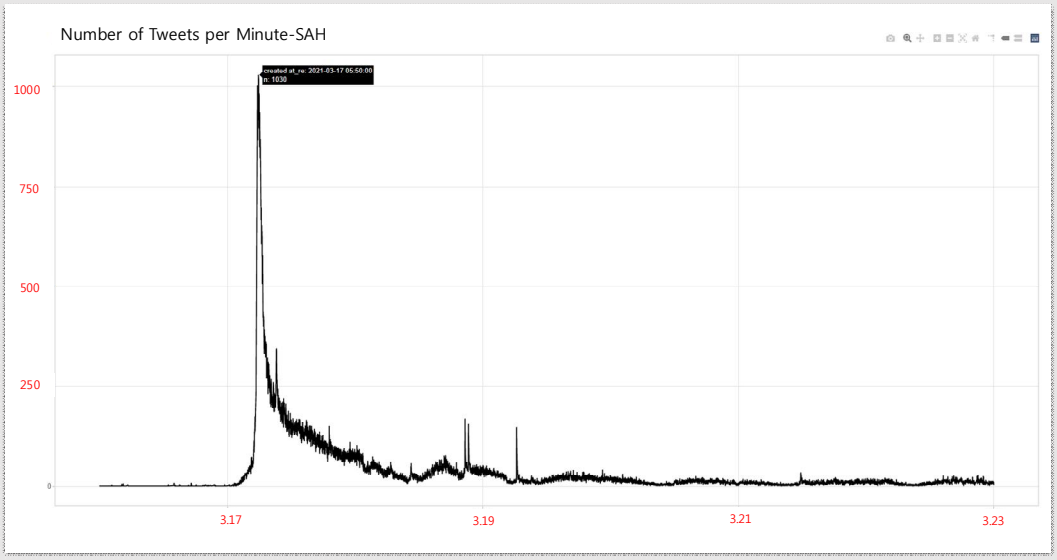
〈표 2〉 데이터 기본 정보

	AllLivesMatter	BlackLivesMatter	BLM	StopAsianHate
크롤링한 총 트윗	2665	25491	300152	337895
# 포함 트윗	2513	24120	14597	335242
# 포함 비율	0.943	0.946	0.049	0.992
리트윗 평균	0.911	3.847	1.787	10
리트윗 최대	108	20476	1637	108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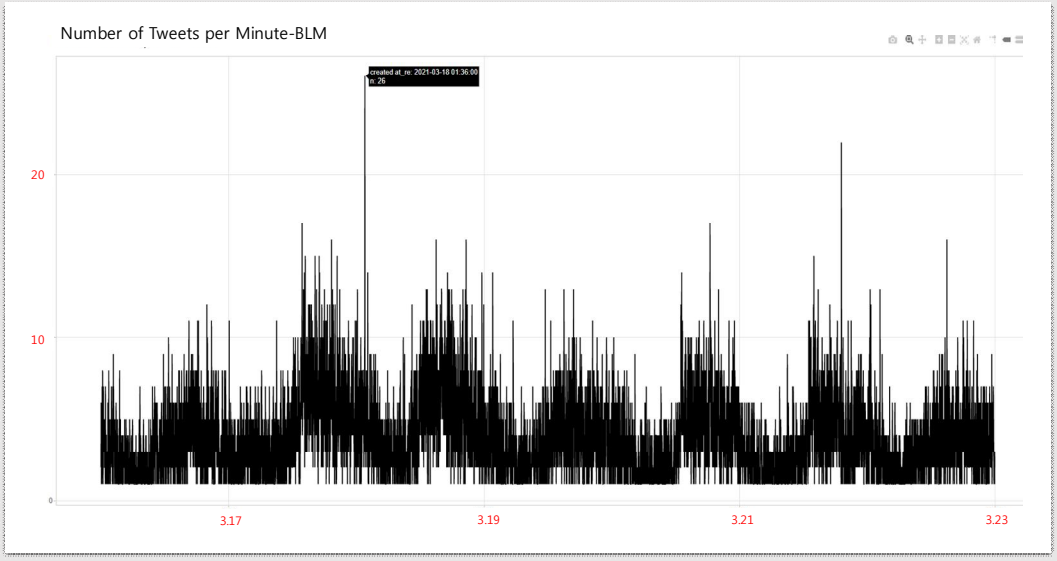
<표 2>는 각 키워드로 긁어온 데이터의 기본 정보를 보여준다. python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 #blm뿐만 아니라 blm를 포함한 모든 트윗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없는 트윗, 해시태그가 있어도 앞뒤로 다른 단어들이 붙은 트윗(#hateblm, #supportblm, #blmmovement) 등이 추가되었다. #를 포함하면서 양옆에 다른 단어가 없는 문서로만 데이터를 정제하고 나면 #blm를 포함한 트윗은 약 5%가량 남는다. #stopasianhate은 99.2%의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SAH의 트윗 규모와 평균 리트윗이 10으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트위터 대중이 총기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3>은 3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시간 흐름에 따라 트윗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BLM과 ALM은 반복적으로 증감하는 변동 흐름을 보여주지만 SAH은 3월 17일 5시 50분(UTC 기준)에 분당 트윗 103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사그라든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1〉 Number of Tweets per Minute, S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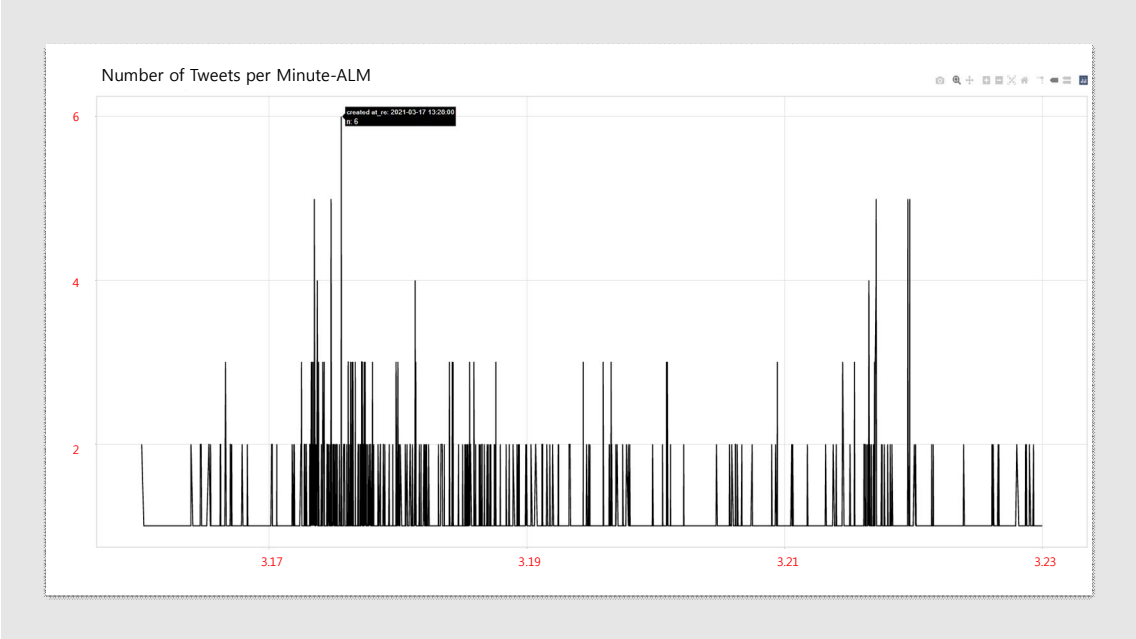
〈그림 2〉 Number of Tweets per Minute, BLM



<표 3>은 7개 그룹에 속한 트윗의 숫자를 보여준다. <표 2>에서 #AllLivesMatter를 포함한 트윗의 숫자가 2513였지만, <표 3>의 그룹 A+AB+AS+ABS의 합이 2521로 더 큰 것은 크롤링 시기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즉, 4개의 해시태그를 크롤링한 날짜가 다 달랐기 때문에, BLM를 크롤링할 때 포함된 AB 또는 ABS 트윗이 추후에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비공개 전환이 되는 등의 이유로 ALM를 크롤링한 나중 시점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차이가 생긴다. 4개의 해시태그를 표적으로 얻은 369862개의 트윗 중에서 ABS는 79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Number of Tweets per Minute, ALM



<표 3> 그룹 별 트윗 숫자(중복 제거)

그룹	A	B	S	AB	AS	BS	ABS
트윗 숫자	1743	32465	330685	397	302	4191	79

1. 날짜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7일 기간 중 16, 17, 18, 22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해시태그 30개를 <표 4,5>로 확인할 수 있다. 16일에는 #bidenharris, #mlk(마틴 루터 킹), #lgbtq, #cancelmortgage와 같이 폭넓은 주제들이 BLM과 함께 등장했다. 17일에는 #atlanta, 동양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 아이돌 그룹 BTS를 보호하자는 팬들의 목소리와 소속사에게 항의하는(#bighitprotectyourartists)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8일에는 관련성을 유추하기 어려운 #ucldraw와 #snydercut(3월 18일 개봉 영화 Zack Snyder's Justice League)가 새롭게 나타났고, SAH와 직접 연관된 #covid19와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한 #whitesupremacy, #endwhitesupremacy가 등장한다. 22일에는 이민자 법을 둘러싼 이슈를 다루는 #lofgrenswiftlymeansnever, #voteyesforfairnessbill의 등장이 주목할 만하다.

〈표 4〉 날짜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1

순위	3.16 (UTC 기준)	빈도	3.17 (UTC 기준)	빈도
1	#blacklivesmatter	2661	#stopasianhate	222558
2	#blm	1949	#asiansarehuman	101201
3	#stopasianhate	624	#racismisnotcomedy	48847
4	#bidenharris	368	#racismisntcomedy	10286
5	#mlk	366	#stopaapihate	7360
6	#oprahmeghanharry	366	#asianlivesmatter	6210
7	#grenfelltower	362	#blacklivesmatter	4110
8	#holocaustmemorialday	361	#stopasianhatecrimes	4021
9	#alllivesmatter	186	#blm	2564
10	#lgbtq	146	#toppsracist	1750
11	#racism	144	#bighitprotectyourartists	1745
12	#resist	141	#apologize_to_bts	1285
13	#cancelmortgage	136	#bighitdoaction	1156
14	#fbr	128	#protectasianlives	1078
15	#antifa	118	#asiansarehumans	1070
16	#motivation	105	#asianarehuman	1056
17	#tuesdaythoughts	105	#atlanta	896
18	#georgefloyd	103	#racismisnotjoke	736
19	#grassroots	102	#weloveyoubts	724
20	#noh8	100	#stopracism	714
21	#tweetuk	100	#racismisnotanopinion	697
22	#weekdayuk	100	#aapi	663
23	#weekenduk	100	#alllivesmatter	647
24	#worldsspotlight	100	#toppsxenophobi	558
25	#blacktwitter	88	#stpatricksday	525
26	#breonnataylor	69	#racismlsnotcomedy	392
27	#racist	68	#racism	366
28	#cancelpropertytax	68	#bts	364
29	#rentrelief	68	#stophate	308
30	#stopaapihate	64	#wednesdaythought	305

2. 전체 및 7개 그룹 고빈도 해시태그

SAH로 모인 트윗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표 6>의 전체 그룹에 대한 해시태그는 동양인 혐오에 반대하는 어휘가 주를 이룬다. 한 트윗에 같은 #를 중복 사용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그룹 A 에서 나타난 #alllivesmatter 의 어휘빈도(1751)는 이를 포함한 트윗의 개수(1743)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룹 7개에 대한 어휘빈도 항목은 그룹 이름에 포함된 #와 어떤 #

가 공출현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즉, 그룹 B에서는 {#BlackLivesMatter 또는 #blm}과 그 이하 어휘들이 함께 쓰였으며, 그룹 ABS에서는 {#BlackLivesMatter or #blm} & #AllLivesMatter & #StopAsianHate과 후 순위 #들이 같이 쓰였다.

〈표 5〉 날짜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2

순위	3.18 (UTC 기준)	빈도	3.22 (UTC 기준)	빈도
1	#stopasianhate	55777	#stopasianhate	12378
2	#stopasianhatecrimes	8123	#blacklivesmatter	2692
3	#stopaapihate	5307	#stopasianhatecrimes	2515
4	#blacklivesmatter	4990	#blm	2050
5	#blm	2315	#stopaapihate	1879
6	#asianlivesmatter	2245	#asianlivesmatter	723
7	#asiansarehuman	2092	#asiansarehuman	611
8	#racismisnotcomedy	1364	#lofgrenswiftlymeansnever	333
9	#aapi	635	#voteyesforfairnessbill	327
10	#atlanta	558	#alllivesmatter	247
11	#alllivesmatter	474	#stopaap	167
12	#stopracism	395	#racism	157
13	#racism	334	#aapi	149
14	#ucldraw	322	#antifa	136
15	#protectasianlives	305	#lgbtq	121
16	#hateisavirus	277	#protectasianlives	117
17	#stophate	239	#stopracism	112
18	#snydercut	231	#cancelmortgage	102
19	#covid19	212	#covid19	100
20	#asiansarehumans	198	#resisters	100
21	#asian	190	#racismisnotcomedy	97
22	#endracism	183	#strongertogether2021	97
23	#whitesupremacy	179	#fightracism	91
24	#got7	175	#bidenharris	91
25	#stopthehate	171	#mondaymotivation	91
26	#lgbtq	169	#miamibeach	84
27	#atlantaspa	166	#mlk	79
28	#whiteprivilege	152	#georgefloyd	78
29	#endwhitesupremacy	136	#python	77
30	#stpatricksday	130	#beachlife	77

#stopasianhate를 제외하고도 그룹 A에 등장한 #asianlivesmatter, #asiansarehuman 등으로 SAH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3위에 등장한 #notallmen은 #metoo에 대항해 만들어졌던 해시태그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라는 비동의의 뉘앙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ALM 프레임을 설명해주던 #bluelivesmatter,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뒤로 밀려났기에 특정 시기 동안 그룹 A의 주해석틀이 소멸되었다는 가설2-3을 지지한다. 빈도는 낮지만 미국(#usa, #america), 트럼프와 그의 슬로건(#trump, #maga, #kag), 정당(#republicans, #gop, #libertarian, #rightwing)처럼 공화당을 지지하는 맥락의 어휘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llLivesMatter가 티파티 운동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결집된 공론장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 그룹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1

순위	전체 그룹 (369862*)	빈도	그룹 A (1743)	빈도
1	#stopasianhate	343815	#alllivesmatter	1751
2	#asiansarehuman	105293	#asianlivesmatter	152
3	#racismisnotcomedy	50833	#notallmen	72
4	#blacklivesmatter	24312	#asiansarehuman	57
5	#stopasianhatecrimes	22613	#racismisnotcomedy	46
6	#stopaapihate	21092	#bluelivesmatter	33
7	#blm	14772	#maga	32
8	#asianlivesmatter	11722	#trump	30
9	#racismisntcomedy	10463	#usa	30
10	#alllivesmatter	2534	#covid19	30
11	#aapi	2323	#freedom	28
12	#atlanta	2023	#stopasianhatecrimes	28
13	#toppsracist	1867	#america	23
14	#protectasianlives	1834	#gop	22
15	#bighitprotectyourartists	1813	#memes	20
16	#stopracism	1713	#racism	19
17	#racism	1636	#republicans	19
18	#asiansarehumans	1401	#kag	19
19	#apologize_to_bts	1331	#libertarian	19
20	#bighitdoaction	1182	#rightwing	19
21	#asianarehuman	1124	#conservative	18
22	#hateisavirus	1042	#republican	18
23	#lgbtq	962	#donaldtrump	18
24	#bidenharris	957	#politics	18
25	#covid19	916	#liberal	18
26	#racismisnotanopinion	914	#trumptrain	18
27	#stophate	914	#conservativememes	18
28	#mlk	910	#democrat	18
29	#weloveyoubts	841	#walkaway	18
30	#oprahmeghanharry	836	#dankmemes	18

***해당 그룹의 트윗 수**

<표 7>의 그룹 B는 SAH의 서브 해시태그 3가지(#asianlivesmatter, #stopasian-

hatecrimes, #stopaapihate)를 포함하고 있으며, #grenfelltower(2017년 6월 영국의 임대 아파트 화재 참사), #holocaustmemorialday, #lgbtq, #ethiopiaprevails의 등장은 범세계적인 소수자 지지로 BLM의 프레임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7〉 그룹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2

순위	그룹 B (32465)	빈도	그룹 S (330685)	빈도
1	#blacklivesmatter	20583	#stopasianhate	339190
2	#blm	13608	#asiansarehuman	104620
3	#asianlivesmatter	2072	#racismisnotcomedy	50443
4	#bidenharris	895	#stopasianhatecrimes	21515
5	#mlk	862	#stopaapihate	20209
6	#lgbtq	839	#racismisntcomedy	10440
7	#oprahmeghanharry	836	#asianlivesmatter	8759
8	#grenfelltower	830	#aapi	2106
9	#holocaustmemorialday	829	#toppsracist	1856
10	#racism	792	#bighitprotectyourartists	1811
11	#resist	746	#protectasianlives	1708
12	#antifa	724	#atlanta	1702
13	#fbr	673	#stopracism	1447
14	#ethiopiaprevails	667	#asiansarehumans	1352
15	#eritreaprevails	662	#apologize_to_bts	1330
16	#ethiopia	637	#bighitdoaction	1182
17	#stopasianhatecrimes	608	#asianarehuman	1120
18	#usa	567	#hateisavirus	976
19	#blacktwitter	565	#weloveyoubts	841
20	#miamibeach	543	#racismisnotanopinion	834
21	#python	524	#racismisnotjoke	815
22	#motivation	523	#stophate	757
23	#beachlife	511	#racism	745
24	#noh8	508	#toppsxenophobi	605
25	#grassroots	508	#stpatricksday	564
26	#stopaapihate	505	#stopthehate	561
27	#tweetuk	500	#asian	558
28	#worldsspotlight	499	#covid19	502
29	#weekdayuk	498	#bts	496
30	#weekenduk	484	#endracism	485

공화당 관련 해시태그가 등장했던 그룹 A와 대조적으로 그룹 B에서는 #bidenharris가 {#BlackLivesMatter or #blm}와 같이 895번 출현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트럼프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규정했던 #antifa가 전체 779번 중 그룹 B에 724번 출현했다는 점에서 극단주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집단(A, S)의 해시태그와 융합되지 않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룹 S는 실체나 사건보다는 추상적인 메시지 중심적인 해시태그와 공출현 한다.

〈표 8〉 그룹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3

순위	그룹 AB (397)	빈도	그룹 AS (302)	빈도
1	#alllivesmatter	400	#alllivesmatter	304
2	#blacklivesmatter	338	#stopasianhate	304
3	#asianlivesmatter	213	#racismisnotcomedy	112
4	#blm	103	#asianlivesmatter	108
5	#bluelivesmatter	90	#asiansarehuman	102
6	#stopasianhatecrimes	78	#stopasianhatecrimes	36
7	#spreadlovenothate	61	#stopaapihate	15
8	#stophate	61	#stopracism	8
9	#pleaseshare	60	#endracism	6
10	#beaware	60	#stopthehate	6
11	#livelaughlove	60	#stoptheattacks	5
12	#cometogether	60	#racism	3
13	#endracism	59	#usa	3
14	#breaking	56	#toppsracist	3
15	#silenceisacceptance	55	#asianlivesmatters	3
16	#wemustdobetter	55	#stophate	3
17	#leadbyexample	55	#hateisavirus	3
18	#whitelivesmatter	29	#fridaymorning	3
19	#alm	16	#fridaymotivation	3
20	#asiansarehuman	15	#fridaythoughts	3
21	#racism	9	#stopthestupid	3
22	#protests	7	#lovenothate	3
23	#racismisnotcomedy	7	#asiansarehumans	2
24	#muslimlivesmatter	7	#stpatricksday	2
25	#notallmen	6	#stfu	2
26	#feminism	6	#womenslivesmatter	2
27	#stopaapihate	6	#tiktok	2
28	#womenslivesmatter	6	#wednesdaythought	2
29	#asianhate	6	#asian	2
30	#stopthehate	6	#black	2

AB와 AS로 분류된 트윗은 각각 397개, 302개이고, AS는 AB보다 함께 쓰인 고빈도 #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에서는 'livesmatter'의 주어가 바뀌어 #asianlivesmatter, #bluelivesmatter, #whitelivesmatter 등이 #alllivesmatter와 더불어 등장하고, #spreadlovenothate, #cometogether, #endracism처럼 차별 반대와 설득을 위한 다양한 동사 표현들이 발견된다. AS에서 #alllivesmatter, #stopasianhate 를 제외했을 때 10회 이상 나타난 #는 모두 SAH 프레임의 위성 해시태그들이다. 따라서 그룹 AS는 S와 맥락은 비슷하지만 해시태그 다양성이 적은 그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9〉 그룹 기준 고빈도 해시태그 4

순위	그룹 BS (4191)	빈도	그룹 ABS (79)	빈도
1	#stopasianhate	4242	#alllivesmatter	79
2	#blacklivesmatter	3316	#stopasianhate	79
3	#blm	1051	#blacklivesmatter	75
4	#asianlivesmatter	393	#asianlivesmatter	25
5	#stopaapihate	344	#stopasianhatecrimes	17
6	#stopasianhatecrimes	331	#blm	10
7	#asiansarehuman	165	#stopracism	9
8	#stopracism	113	#stopaapihate	7
9	#racismisnotcomedy	86	#asiansarehuman	5
10	#whitesupremacy	73	#nba	5
11	#endracism	71	#marchmadness	5
12	#endwhitesupremacy	68	#racism	4
13	#racism	64	#whitelivesmatter	4
14	#atlanta	58	#endracism	4
15	#transrightsarehumanrights	51	#milehighbasketball	4
16	#lgbtq	50	#bullsnation	4
17	#stopthehate	49	#racismisnotcomedy	3
18	#stophate	49	#equalityforall	3
19	#protectasianlives	49	#antiracism	3
20	#stopwhiteterrorism	47	#justice	2
21	#aapi	44	#alm	2
22	#hateisavirus	42	#nohate	2
23	#womenslivesmatter	41	#love	2
24	#fightracism	40	#stopallhate	2
25	#solidarity	34	#tiktok	2
26	#translivesmatter	33	#stopthehate	2
27	#stopwhitesupremacy	33	#whiteprivilege	2
28	#metoo	32	#notoracism	2
29	#antiracism	30	#muslimlivesmatter	2
30	#stopasianviolence	29	#blacklivesmatters	2

BLM 해시태그 2개를 제외하고, SAH 관련 해시태그만이 그룹 BS에서 100번 이상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hitesupremacy, #endwhitesupmacy, #stopwhiteterrorism, #stopwhitesupremacy와 같이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한 #는 각각 100회 이하 등장했다. #lgbtq, #transrightsarehumanrights가 BS와 함께 쓰였다는 것은 다양한 소수자를 포용하는 그룹 B의 성격이 BS에 반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해시태그가 모두 모인 ABS는 #whiteprivilege처럼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결속의 매개가 되어줄 메시지가 적은 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Ⅵ. 결론

기존의 #AllLivesMatter 프레임은 주어가 무색하게도 다른 인종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결여된 채로 Black protesters와 law enforcement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고, #BlackLives-Matter의 대항서사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6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보여줬다(Gallagher, 2018; Zulli, 2020; Stewart, 2017). 그러나 트럼피즘이 표출되는 공론장이라는 정체성은 제3의 해시태그인 #asianlivesmatter로 어느 정도 오염당했다. #BlackLivesMatter가 포함된 그룹(B, AB, BS)의 #는 다른 인종과 소수자를 지지하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대선 직후가 아님에도 ALM의 대척점에서 #bidenharris가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혐오 표출의 표적이 된 동양인의 저항을 의미하는 #StopAsianHate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고 현장인 #atlanta보다 #bighitprotectyourartists와 그룹 S에서 더 자주 공출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방탄소년단 관련 #들이 높은 빈도를 보여주더라도,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담론들과 연결이 적고 주변화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BLM, ALM과 비교해 추상적인 메시지 중심적인 해시태그들이 #StopAsianHate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슬랙티비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021년 3월 21일 뉴욕의 'Black and Asian Solidarity Run'에 참가한 한 시위자는 "백인우월주의가 최종 보스(White supremacy is the final boss)"라는 말과 함께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의 시위는 애틀란타 총기 사건 직후 주말이었고, 본 연구도 같은 시기를 포괄하지만 온라인에서 두 액티비즘의 연계(그룹 BS, ABS)는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적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컨텐츠에 휘어 감겨진 채로 기존의 믿음과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을 일컬어 '에코 챔버'라고 한다. 분열이 심각한 미국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2개의 에코 챔버가 존재한다는 말은 어쩐지 충분하지 않게 느껴진다. 2개로 분리된 돔 안에 갇힌 뜨거운 공기가 점점 더 그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열돔 현상을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 부채질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의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이분화된 인종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열돔 현상을 식힐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회 속 분열과 갈등의 가속화 현상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구기연. (2019). "혁명 거리의 소녀들 (#GirlsofRevolutionStreet)": 해시태그 정치를 통한 이란 여성의 사회 운동. 비교문화연구, 25(1), 5-43.

곽수정, & 김현희. (2019).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트위터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의 키워드 및 주제 분석.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8(1), 13-18.

김수아. (2017). 연결행동 (Connective Action)? 아이돌 팬덤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의 명암. 문화와 사회, 297-336.

신서인. (2015). 코퍼스를 이용한 신문기사 담화 분석-'성장'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9, 111-156.

송준모, & 강정한. (2018). 메갈리아의 두 딸들: 익명성 수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52(4), 161-206.

이종임, 홍주현, & 설진아. (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Too) 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99-146.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85-153.

은수미. (2004). 연계강화, 연대약화-사회운동의 관계맺기와 한국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4(2), 5-40.

정지은, & 박남기. (2016). 뉴스 댓글에 대한 편향지각이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2), 95-126.

Anderson, M., Toor, S., Rainie, L., Smith, A., Anderson, M., Toor, S., & Smith, A. (2018). An analysis of #BlackLivesMatter and other Twitter hashtags related to political or social issues.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internet.org/2018/07/11/an-analysis-of-blacklivesmatter-and-other-twitter-hashtags related-to-political-or-social-issues.

Bennett, W. L., & Segerberg, A.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Bennett, W. L., Segerberg, A., & Walker, S. (2014). Organization in the crowd: peer production in large-scale networked protest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2), 232-260.

Bonilla, Y., & Rosa, J. (2015). #Ferguson: Digital protest, hashtag ethnography, and the racial politics of social media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thnologist, 42(1), 4-17.

Carney, N. (2016). All lives matter, but so does race: Black lives matter and the evolving role of social media. Humanity & Society, 40(2), 180-199.

Conover, M., Ratkiewicz, J., Francisco, M., Gonçalves, B., Menczer, F., & Flammini, A. (2011, July). Political polarization on twitter.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Vol. 5, No. 1).

Coppock, A., Guess, A., & Ternovski, J. (2016). When treatments are tweets: A network mobilization experiment over Twitter. Political Behavior, 38(1), 105-128.

Eng, D. L., & Han, S. (2019). Racial melancholia, racial dissociation: On the social and psychic lives of Asian Americans. Duke University Press.

Freelon, D., McIlwain, C. D., & Clark, M. (2016). Beyond the hashtags: #Ferguson, #Blacklivesmatter, and the online struggle for offline justice. Center for Media & Social Impact, American University, Forthcoming.

Gallagher, R. J., Reagan, A. J., Danforth, C. M., & Dodds, P. S. (2018). Divergent discourse between protests and counter-protests: #BlackLivesMatter and #AllLivesMatter. PloS one, 13(4), e0195644.

Giorgi, S., Guntuku, S. C., Rahman, M., Himelein-Wachowiak, M., Kwarteng, A., & Curtis, B. (2020). Twitter corpus of the #blacklivesmatter movement and counter protests: 2013 to 2020. arXiv preprint arXiv:2009.00596.

Harlow, S. (2013). It was a Facebook revolution": Exploring the meme-like spread of narratives during the Egyptian protest. Revista de comunicación, (12), 59-82.

Hswen, Y., Xu, X., Hing, A., Hawkins, J. B., Brownstein, J. S., & Gee, G. C. (2021). Association of "#Covid19" Versus "#Chinesevirus" with Anti-Asian Sentiments on Twitter: March 9-23, 2020.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5), 956-964.

Ince, J., Rojas, F., & Davis, C. A. (2017). The social media response to Black Lives Matter: How Twitter users interact with Black Lives Matter through hashtag use. Ethnic and racial studies, 40(11), 1814-1830.

Lyu, H., Fan, Y., Xiong, Z., Komisarchik, M., & Luo, J. (2021). State-level Racially Motivated Hate Crimes Contrast Public Opinion on the #StopAsianHate and #StopAAPIHate Movement. arXiv preprint arXiv:2104.14536.

Paßmann, J. (2019). Less mutable, more mobile: The role of Twitter apps in the history of the retweet button. Computational Culture, (7).

Rho, E. H. R., & Mazmanian, M. (2019). Hashtag Burnout? A Control Experiment Investigating How Political Hashtags Shape Reactions to News Content.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3(CSCW), 1-25.

Roberts, M. E., Stewart, B. M., & Tingley, D.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1), 1-40.

Snow, D. A., Rochford Jr, E. B., Worden, S. K., & Benford, R. 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481.

Stewart, L. G., Arif, A., Nied, A. C., Spiro, E. S., & Starbird, K. (2017). Drawing the lines of contention: Networked frame contests within #BlackLivesMatter discourse.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1(CSCW), 1-23.

Tillery, A. B. (2019). What kind of movement is Black Lives Matter? The view from Twitter. Journal of Race, Ethnicity and Politics, 4(2), 297-323.

Tremayne, M. (2014). Anatomy of protest in the digital era: A network analysis of Twitter and Occupy Wall Street. Social Movement Studies, 13(1), 110–126.

Tufekci, Z. (2017). Twitter and tear gas. Yale University Press.

van Haperen, S., Nicholls, W., & Uitermark, J. (2018). Building protest online: engagement with the digitally networked #not1more protest campaign on Twitter. Social Movement Studies, 17(4), 408–423.

Wang, R., & Zhou, A. (2021). Hashtag activism and connective action: A case study of #HongKongPoliceBrutality. Telematics and Informatics, 61, 101600.

Zulli, D. (2020). Evaluating hashtag activism: Examining the theoret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BlackLivesMatter. Participations, 17(1), 197–215.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주변화 현상: 독립 영화감독의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박재승

<국문초록>

2016년 10월, 성폭력 해시태그를 시작으로 촉발된 영화계 페미니즘 운동은, 영화제작현장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여성 감독들이 맞닥뜨리는 유리천장과 경력단절, 불안정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화제 진출 이후 차기 작품을 준비하거나 제작한 연출 직군 여성 영화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영화산업 내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 영화산업에서 남성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 관계망을 장악하며 물적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영화계 진입 자체를 제한하며, 영화제 수상, 장편 영화 제작 지원 등 성별화 된 기회구조를 체계화한다. 남성중심의 위계문화에 따른 여성 불인정 문화는 이 같은 차별적 상황을 비가시화하거나 악화시키며, 성별임금 격차 및 경력단절과 연결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여성 감독들은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다양한 생존전략을 통해 삶을 살아내고 있다.

주제어: 한국 영화산업, 여성 영화감독, 성차별, 노동환경, 경력단절

(※ 저자의 요청으로 자료집에서는 인터뷰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1. 들어가며

2016년 10월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촉발된 2017-2018년도에 야기된 여성 영화인들의 문제제기에는 '그 많던 여성 영화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남순아, 2017, 111쪽)와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7.05.11. [성명] 남배우A사건 성명문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는 두 문구가 축을 이루었다. 전자는 당시 문화계 내 성폭력 문제 가시화에 발맞춰 한국 영화 현장에서 여성 영화 노동자의 이탈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후자는 2017년 영화계 내에서 최초로 등장한 성폭력 고소 사건 '남배우 A' 사건에서 등장한 것으로, 영화계 내 권력적 노동 구조 안의 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각 구호는 여성 영화인의 경력단절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후 한국영화산업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 영화 노동자들에게 공고한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기도 했다(김선아, 2019; 이희진, 2018; 조혜영, 2020). 2009-2018년 10년 동안의 개봉한 한국영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종 결정 및 지휘

권한을 가진 핵심 창작 직군인 제작·프로듀서·연출·각본·촬영 전반에서 여성의 헤드 스태프 비율은 모두 20%를 넘지 못하며, 특히 연출 직군에서는 11.5%에 불과"했다[7](조혜영, 2020, 70쪽). 영화제작현장 내 상위직급인 헤드 스태프 비율에서 여성이 희소해지는 유리천장은 남성이 80-90% 비율을 차지하는 촬영/조명 직군[8]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성비가 비슷한 연출 직군에서 가장 두드러져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2018년 사이 대학교 영화학과 여성 졸업생 비율은 57.6%이다(조혜영, 2020, 64쪽). 한국 영화산업 노동시장의 전체 스태프 중 여성의 비율은 43.7%이고, 그 중 연출 직군의 여성 영화 노동자 비율은 33.5%이다(이종수, 2021, 1,50쪽). 이처럼 연출 직군의 여성 비율 교육기관에서 영화현장으로 진입하는 경로에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경력을 쌓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점인 한국 영화아카데미와 영화제에서는 그 수가 더 감소한다. 2009-2018년도 사이 한국 영화아카데미(KAPA)의 여성 비율은 32.3%이며,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부천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를 연출한 여성 감독의 비율은 24.7%이다(조혜영, 2020, 66쪽). 같은 기간, 영화감독으로서 경력을 쌓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극장개봉영화에서 11.5% 였던 여성 감독의 비율은 인력자원과 자본이 집중되는 상업영화(총제 10억 또는 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와 순제 30억 이상 영화로 나아가면 각각 8.5%, 4.1%로 하락한다(조혜영, 2020, 69쪽). 즉, 여성 감독은 영화 교육 기관 이후 영화 현장의 진입, 경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단계(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제), 경력을 쌓는 단계(극장개봉영화 및 상업영화)에서 시계열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9].

그렇다면 장편영화 및 상업영화 제작 단계에서 이탈된 여성 감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8개 국제 영화제[10] 최종 후보작을 보면 여성 감독은 장편 영화(15.9%)보다 단편 영화(25.4%)에서 더 많이 대표된다(Stephen Follows and Alexis Kreager, Eleanor Gomes, 2016, p.43).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09-2018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장편 극영화 제작지원을 받은 여성 감독의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조혜영, 2020, 68쪽), 2017년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되는 독립영화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단편영화에서 60%, 장편영화에서 27%로 나타났다(김숙현, 2018. 82쪽: 김영, 2019, 13쪽 재인용). 여성 감독은 상업영화보다 독립영화에, 장편 영화보다 단편 영화에서 높은 비율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단순히 여성감독의 실력 부족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2019년 이

---

7) 2009-2018년 10년 동안의 개봉영화 중 총제작비 10억 또는 최대 스크린 100개 이상의 상업영 화 678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직군의 헤드 스태프 성비에서 제작 15.7%, 프로듀서 23.4%, 연출 11.5%, 주연 33.9%, 각본 25.0%, 촬영 7.1%, 조명 2.4%, 편집 39.5%, 사운드 13.3%, 음악 20.5%, 미술 42.1%, 의상 85.1%, 분장 91.1%으로 의상과 분장을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비율이었다(조혜영, 2020, 70쪽).

8) 「2020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전체 549명(온라인 279명, 오프라인 270명)을 대상으로 부서별 성별분포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해당 직군에서 각각 미술 95.4%, 분장·헤어 93.9%, 의상 86.2%, 소품 55.6%, 동시녹음 37.8%, 제작 36.9%, 연출 34.6%, 촬영 11.3%, 조명 9.5%, 기타 28.1% 였다(이종수, 2021, 29-30쪽).

9) 이는 조혜영(2020)의 보고서에서 여성 감독의 경력 단계를 나눈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10) 아스펜 쇼츠 페스트, 베를린 국제 영화제, 칸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SXSW), 토론토 국제 영화제, 트라이 베카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가 이에 속한다(Stephen Follows and Alexis Kreager, Eleanor Gomes, 2016, p.45).

후 독립영화가 이례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성 감독이 만든 작품들이 견인하는 현상이다[11]. 2009-2018년 사이 전주와 부산 영화제의 신인감독 출품작 중 스크린 수 10개관 이상의 극장 개봉률을 보면, 전주 영화제에서는 여성감독의 비율이 50%로 남성감독의 비율 38%에 비해 높고, 부산 영화제 역시 여성감독의 비율이 56%로 남성감독 비율 44%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선아, 2019, 253쪽). 이를 보면 개봉된 여성 감독의 영화는 성적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독립영화제의 본선에 올라온 경쟁작 27편 중 23편이 여성감독의 연출작으로 그 비율은 85.2%에 달한다(매일신문, 2021.02.16. [매일춘추] "여성감독의 시대를 고대하며").

독립영화에서 여성감독이 약진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여성 감독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발휘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 감독은 실력과는 상관없이[12] 단편 영화에서 장편 영화로, 독립 영화에서 상업영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극심한 유리천장에 맞부딪히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과 의미를 묻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없다. 그렇기에 연구에서는 연출부 직군에 속한 여성 영화 노동자가 영화계 내 독립 단편 영화에 머물게 되는 현상의 원인을 묻고 한국 영화산업 노동시장 구조에 내제된 차별적 요인을 밝히려고 한다. 하여 한국 영화계의 이제는 그 많던 영화과의 여성 영화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던 외침에서 나아가 여성 영화인들이 장편영화와 상업영화에 도달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영화계 성차별 논의

영화계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 영화산업의 성불균형이 여성에게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성차별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영화 제작현장의 남성중심의 위계문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연결됨을 드러낸 것이다(김영, 2019;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2018; 이나영, 2021). 영진위는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서 한국 영화산업 전체에 성불균형이 극심함을 처음으로 적시하고 성인지 통계를 부분 차용했다(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2018). 이후 이나영(2021)은 <2019년 영화계 성

11) 2019년 8월에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과 김보라 감독의 <벌새>가 25일 기준 각각 5만명, 9만7000명 관객을 모으며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 이옥섭 감독의 <메기>, 한가람 감독의 <아워바디>도 개봉(이상 26일)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류 상업영화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비주류로 분류되던 독립영화 중에서도 여성 감독들 영화의 약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경향, 2019.09.25. "독립영화 여성 감독들의 활약…남성 중심·획일화된 흥행 코드에 반기" https://m.khan.co.kr/culture/movie/article/201909252124015 검색일: 2021.08.17.)

12) 2016년 영국 영화 산업 보고서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봉 한 총 2,591편의 영화를 조사하면서 시청률과 비평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 감독 영화를 선호한다고 말하며(p.24) "평균 IMDb 등급 여성 감독이 있는 영화는 5.91점이었고, 여성 감독이 없는 영화는 5.77점이었다. 여성 감독의 평균 메타 스코어는 63.5점, 남성 감독은 58.3점. 토마토 로튼 지수, 여성 감독 영화의 평균은 68.4점이었고 남성 감독 영화의 평균은 60.2" 이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p.77). 또한 여성이 감독 한 영화가 수익성이나 품질이 낮고, 여성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영화 시장 내에서 위험한 제안될 증거 역시 없다고 강조한다(p,77)

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한국 영화산업이 결정권자의 위치를 남성이 독식하는 권력적 노동구조를 띠며, 남성이 인적 네트워크까지 독점한 가운데 여성 영화 노동자가 고용의 측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원치 않는 성적관계를 요구 받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영화 제작현장의 수직적인 위계질서와 남성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 부족"이 성희롱·성폭력이 쉽게 유발한다고 밝혔다(402쪽).

김영(2019)은 다양한 직군의 여성영화인의 심층면접을 통해 영화제작현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를 밝혀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화제작현장에는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비공식성, 단기성, 불안정성이 성별분업과 상호작용하여 가족책임(family responsibility)을 근거로 여성을 배제하는 새로운 성차별(new sexism)"과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과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성차별(traditional sexism)"이 중층적으로 작동한다(33-34쪽). 우선, 남성이 네트워크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인적 연결망에 의한 평판경제[13]를 배경으로 구축된다. 왜냐하면 영화 노동 시장 구조의 평판경제는 영화산업의 자율적인 팀 단위로 작동하는데, 그 "평판경제를 좌우하는 인적 관계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각 직군의 헤드 스태프이자 기득권자 남성"이기 때문이다(9쪽). 그로인해 여성 노동자의 평판은 남성 중심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 판가름 나게 되고, 이것이 전통적 성차별과 맞물려 여성 노동자의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영화계 내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 관념으로 인한 남성 직군(촬영/조명)과 여성 직군(미술/헤어/분장)이라는 성별분절, 즉 유리벽이 여성 직군의 일을 주변적인 것이라 여기는 사고방식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이 직군별 임금격차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포착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영화계 성차별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차별적 구조가 여성 영화 노동자의 경력단절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조혜영, 2020; 이희진, 2018). 조혜영(2020)은 2009-2018년 기간의 극장개봉영화와 상업영화 전수조사를 통해 13개 직군의 여성 헤드 스태프 비율을 집계하여 성별 불균형 및 불평등을 파악했다.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는 여성이 상위 직급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유리천장과 상업영화나 장르영화에 기회가 제한되는 유리벽이 있다. 그 효과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영화인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차별 구조가 공고화 될 때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성별로 불평등한 평가를 받는 "낙인 효과(stigma)"와 "열등화"가 심화된다(165쪽). 또 여성 감독의 수는 여성 주연 영화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여성 감독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 주연 영화와 여성 인물의 재

13) 한국영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징은 전형적인 프로젝트형 고용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프로젝트형 고용이란, 고용이 프로젝트 즉 영화제작 단위로 이루어지며 제작이 완료되면 고용의 형태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산업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특징은 첫째, 프로젝트 고용이 팀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헤드 스태프의 사적 관계망을 통해 인력이 모집되기 때문에 헤드 스태프가 실질적인 고용주가 된다. 둘째, 팀이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훈련시켜 서드, 세컨드, 퍼스트로 승급시키는 방식의 숙련 형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팀 내 구성원간의 수직적 관계가 유지된다. 셋째, 일자리 구인 시 개별 노동자에게는 팀 내의 인정기제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화 노동시장에는 객관적으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별 평가시스템이 없기 부재하여 팀 제도가 인력활용 시 스태프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유일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노동시장에서는 평판을 주고받는 개인 간의 연결망이 활발하게 작동된다.(정이환, 2004).

현도 다양해질 수 있다. 이희진(2018)은 영화제작인력들의 현장이탈 현상을 보기 위하여 제작인력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영화제작현장 이탈현상의 주 원인이 "정서적 소진"이란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 "정서적 소진"이란 "감정과 관심의 상실, 신뢰감의 상실, 정신적 상실감 등,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보상 없이 인간적 회의나 좌절을 겪는 상태"(전보경, 2016, 34쪽: 이희진, 2018, 94쪽 재인용)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영화 제작인력의 '성차별' 인식을 중요한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 중 성차별 인식 저집단의 경우 물리적 조건인 근로조건만이 "경력장애[14]"에 영향을 미친 반면, 성차별 인식 고집단의 경우에는 업무만족과 근로조건이 "경력장애" 매개변수에 유의한 관계를 맺었다. 즉 성차별이 업무의 전문성을 해치는 직접 요인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인식할 때 "남성 주도적 영화업계에 진입한 여성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을 때 오는 좌절과 실망"이 매우 크다(107쪽).

정리하자면 위의 선행연구(김영, 2019; 이희진,2018; 조혜영, 2020)들은 한국영화산업의 프로젝트형 노동시장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맥중심의 평판경제가 작동하고, 한국영화계에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이 공고하여 영화제작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와 여성 재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성별화 된 직무분리(유리벽), 유리천장, 성별 임금격차,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편견)이 그러하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여러 직군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고 여성 감독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기에, 여성 감독이 한국 영화산업 노동시장의 유리천장에 맞닥뜨려 어떤 차별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성 영화감독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을 분석한 연구를 따로 분리하여 봐야 한다(김숙현, 2018a, 2018b; 김선아, 2019; 안지혜, 2008; 주유신, 2019). 김선아(2018)는 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영화제를 거쳐 상업 영화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여성감독의 수가 남성감독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을 기존 자료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신인 여성감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한다. 서론에서 보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성 감독의 수적 열세를 살펴보면, 장편출품작을 기준으로 전주국제영화제(이하 전주)와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에서 성비를 따져보았을 때 전주(2010-2017년)의 한국경쟁부문 출품감독 전체에서 여성은 20%(88명 중 16명), 부산(2006-2017년)의 뉴커런츠와 비전부문에 출품한 신인감독 전체 중 여성은 18%(107명 중 19명)이었다(김선아, 2019, 252,257쪽). 영화제 이후 여성 감독의 차기작 활동을 보면 전주에서는 출품 이후 여성 감독은 단 4명(남성감독 26명) 부산에서는 출품 이후 단 1편이라도 차기작을 만든 여성 여성감독은 단 9명(남성감독 48명)이었다. 2편 이상의 영화를 만든 여성감독은 두 영화제를 합쳐서 보아도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이다(김선아, 2019, 263쪽). 영화제에서 상업영화로 영역을 넓혀도 마찬가지다. 2009-2018년도 사이 상업영화를 개봉한 여성 감독 단 50명 중에서 데뷔작 이후 두 번째 영화를 개봉한 감독은 3명으로 8.8%였다. 반면 상업영화를 개봉한 남성 감독은 445명이고 그중 데뷔작 이후 두 번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42명으로

14) 경력장애의 척도 문항은 '업무 분야의 장래성이 부족함', '일의 전문성이 부족함', '멘토링, 업무지도, 업무교육이 부족함','과다업무 및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 4문항이다(이희진, 2018).

19.9%이다(조혜영, 2020, 41쪽). 범위를 상업영화에서 극장 개봉영화로 넓혀 보아도 데뷔작 상영 이후 10년 내에 두 번째 작품을 개봉한 여성은 115명 중 단 14명인 12.2%에 그쳐 상업영화를 개봉한 남성비율 보다 적다.(조혜영, 2020, 41-42쪽). 또, 상업 영화에서 지난 10년 간 4편 이상의 작품을 만든 여성 감독은 단 1명도 없었고, 남성 감독은 17명이었다(조혜영, 2020, 41쪽). Stephen Follows, Alexis Kreager, Eleanor Gomes(2016)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봉 한 총 2,591편의 영화를 통계 분석하였는데, 남성 감독이 여성 감독보다 두 번째 영화를 만들 확률이 13.1% 더 높다(p.13).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여성감독의 유리천장의 원인은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려는 행동보다는 개별의 무의식적 편견과 이를 지속시키는 영화 산업의 체계 때문이다. 여성감독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단지 전형적인 감독의 이미지에 남성이 부합하다는 개인의 무의식적 편견이 영화감독을 고용하는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산업에서는 영화 흥행 성공을 보장하고 입증할 방법이 부재하고, 프로젝트 기획의 단기성(permanent short-termism in the industry)으로 인해 초래되는 고용절차에서의 시간적 압박이 성불평등한 고용관행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이 된다. 그렇기에 여성 감독의 유리천장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편견과 개인의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숙현(2018b)은 여성 감독의 영화계 진입 초기 단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면접을 통해 유리천장의 원형적 하부구조로서 영화 장의 젠더화된 문화자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영화 장에는 남성지배의 상징적 질서에 의해 남성 하비투스는 인정받는 반면 여성 하비투스는 저열하게 평가되는 문화적 기제가 있다. 이때 형성되는 젠더 불평등한 수직적 위계질서가 "기술적 파트에 대한 중요성을 남성이 독점"할 때 나타나는 "가부장적 지휘권"이다(90쪽). 이는 남성의 강한 신체에 대한 상징적 의미부여에서 나오는 신체적 성별차이에 기댄 노동 분업이며, 그로인해 촬영조명 직군의 남성 영화 노동자에게 현장 내 발언권 및 권력의 우위가 부여된다.

여성감독의 유리천장의 원인을 분석한 논의들은(김숙현, 2018; Stephen Follows·Alexis Kreager·Eleanor Gomes, 2016) 영화산업과 영화 제작현장의 남성 중심적 위계가 성별 고정관념 및 개인적 편견과 같은 문화적 기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여성감독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이끌어냈다는 지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여성 감독이 경력단절로 인해 영화산업의 주변부에 머무는 현상의 주요 원인이 과연 개인적 편견과 이를 체현하는 문화적 기제에만 국한되는가? 주유신(2019)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 한국영화산업 노동시장에서 "젠더별 직무분리와 임금격차가 큰"것을 지목하며 영화 산업 전체에 남성 직군이 여성 직군보다 우월하다는 위계 의식이 있음을 짚었다(45쪽). 그렇다면 오히려 남성 직군이 우월하다는 의식이 경제적 분배의 부정의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가? 김숙현(2018b)은 영화 장의 젠더 불평등한 위계가 작동할 때 여성 감독이 노동 과정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고[15], "영화산업

15) 노동의 영역으로서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영화 기자재의 복잡함과 무게가 남성에게 전유된다. 이는 여성의 약해보이는 신체와 대비된 남성의 강한 신체에 대한 상징적 의미부여, 즉 지각과 판단 도식을 전제함으로 이뤄진다. '사물들 속에는 남성의 질서가 담겨 있다. 또 그 속에는 노동구분과 집합적인 권력관계가 암시적인 명령의 형태'로 '신체 속에 등재' 되는 것이다(김숙현, 2018b, 110쪽:Bourdieu, 1998/2003 재인용). 그렇기에

자체의 불안정성과 고용과 노동조건의 불합리성"과 결합하여 실질적 경제적 위치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91-92쪽), 그렇다면 여성감독의 경제적 위치의 불안정함은 문화적 기제에 의한 부수적 효과라고 봐야하는가? 여성감독의 불안정한 노동과 위태로운 경제적 위치는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개인적 편견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또, 여성감독이 유리천장을 겪을 때 노동 과정에서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화 제작현장에서 남성적 위계질서에 밀려나는 현상으로 한정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감독이 독립 영화 단편에 머물면서 부딪히는 노동 과정의 불안정성은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 여성감독이 영화산업 전체에서 어떻게 주변화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영화제작현장의 여성감독의 경험을 통한 분석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 내 여성 주변화 논의

여성 노동자 주변화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학계에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의미는 연구자별, 학제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하여 잠재적으로 극도의 물질적 빈곤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억압의 형태 중 가장 위험한 유형"(Young, 1990: 박홍주, 2004, 75쪽 재인용)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이리스 영(Young, 1990/2017)은 주변화를 피억압 진단이 처한 다섯 가지 구조적 부정의의 주요 범주로 보고, 분배 부정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피억압 집단의 구성원들이 처한 부정의한 상황을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억압 형식은 분배 부정의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 분배 부정의를 낳는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05-106쪽).

강이수(2006)는 "여성의 주변화는 자본주의 산업화 아래 지속되어왔던 여성노동력 범주의 '임시화'와 여성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제이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성별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76쪽). 1990년 중반 이후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비정규직이 성별화(gendering)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가지로 보고 있다. 이때 여성 노동자의 주변화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여성은 각각의 영역에서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

첫 번째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는 현상은 종사상의 지위나 고용형태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 성별직종분리, 고용 불안정과 같은 요소로 드러나고 그 결과 여성은 노동시장 내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강이수, 2006; 신경아, 2015). 신경아(2015)는 시간제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분석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시간제를 '선택'한다고

영화현장에서 남성 직군에 속하는 촬영과 조명 직군이 핵심적 작업으로 분류되고 유일하게 숙련된 '기술'로 인정받는다. 이로 인해 남성 직군은 '공동작업의 흐름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편성' 하며 '촬영현장에서 더 많은 위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여성 직군의 일은 촬영과 조명의 기술직을 보조하거나 밑받침하는 일로 분류되어 '여성 직군 조사자들은 남성직군 종사자들의 작업흐름에 맞추어서 눈치 보면서 서둘러 자신의 업무를 수행(김영, 2019, 18쪽)' 하는 식으로 주변화 된다.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여성이 시간제 노동에 집중되는 것은 돌봄노동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불평등한 결과임을 제시한다. 이승윤, 안주영 그리고 김유휘(2016)는 한일 여성노동시장에서 모두에서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남녀 성별간의 격차가 중층적으로 맞물리는 차별을 겪고 있고, 이에 여성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등적 위치에 처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주변적 위치는 한일 노동시장 모두 결혼 및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를 기점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 참여가 활성화 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가사 노동을 부담하는 존재로서 가계수입을 보조하는 것으로 여기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짚는다. 신경아(2019)는 여성이 노동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 진입, 조직 내 승진, 퇴직 등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는 것과 여성이 모성을 수행하는 역할임에 따라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따른 불이익, 경력단절의 계기가 되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 노동자는 비핵심적이고 주변적 직무에 배치되어 작업장 내에서 주변화 된다(강이수, 2006; 김명숙, 2000). 가령, 강이수(2006)는 고숙련이라고 여겨지는 IT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직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주변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일이 외부노동시장에 속한 여성 노동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음을 실증한다. IT 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할 때도, '기술'에 결부된 남성적 특질의 선호나 학력, 연령, 혼인상태와 같은 제반차이에 따라 단순인력으로 여겨지고 저평가 된다는 것이다. 김명숙(2000)은 여성 노동자를 저평가하는 것이 작업장 내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체력이나 관계망 형성을 잘 할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선호하는 '능력주의'에 의해 합리화 된다고 짚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 노동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성차별적인 통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분리되어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는 형태로 주변화를 겪는다. 이는 고용형태의 상이성에 따라 소수자적 위치에 처한 것에서 드러나는 소외일 수도 있고(신경아, 2015)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당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신경아와 장수정(2001)은 노동조합 내 여성 주변화에 주목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과 같은 사안이 노동 운동의 중심의제로 설정되지 못하는 현상을 논증한다. 이는 노동운동이 여성 운동을 부문적 운동으로 치환하는 가부장적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하트만(Hartmann, 1989)은 가부장제를 단순 이데올로기가 아닌 성별임금격차나 성차별과 같은 여성 억압의 문제가 남성이 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물적 기초와 연결한다. 가부장제는 자본과 결합하여 작업장에서의 성별분업을 통해 남성의 일은 가치 있고 여성의 일은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 노동자의 주변화 현상을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고용형태와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과 작업장에서 주변적 업무 및 저평가 그리고 조직 내 고립 및 노동조합에서의 거부에 따른 노동 지위의 하락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구조에서 외부자로 존재할 때의 고용불안정성 문제는 영화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여성 영화 노동자만의 주변화 현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여성 감독이라는 직군의 특수성과 성별이 교차해 만들어내는 차별의 현상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노동시장의 여성주변화 논의에 기초하되 영화계 특수성에 착목한 여성 감독에 대한 경험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감독의 유리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영화제 진출 이후 차기 작품을 준비하거나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연출 직군 여성 영화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력단계를 중요하게 고려해 영진위(2020, 64쪽)에서 여성 감독의 유리천장 현상을 조사할 때 사용하였던 경력단계 범주를 차용하여 교육(대학교 영화학과)-진입1(한국영화아카데미 및 대학원 진학)-진입2(영화제 상영)-경력 쌓기(장편 개봉영화 감독)-경력 안정화1(상업영화 감독)-경력 안정화2(순제 30억 이상 감독)로 인터뷰 참여자의 경력을 구분하였다. 이는 "감독 데뷔 후 제작비와 관련해 자원이 집중되는 영역에 여성 감독의 진입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단계이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진입단계에서 경력 쌓기 단계에 해당된다.

처음의 인터뷰 참여자 모집은 2021년 3월 16일 여성 영화 노동자간의 구인 구직을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에 연구 소개 글을 게시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체는 그 이후 3개월 동안 인터뷰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90-12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와 안면이 있던 영화 연출 직군의 여성 노동자 A에게 연구의 취지를 소개한 뒤 2021년 3월 20일 인터뷰를 약 120분간 진행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연구 소개글을 보고 인터뷰 의사를 밝혀준 감독 C와 2021년 4월 2일 약 12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마무리 후 감독 C에게 아는 여성 감독의 인터뷰 소개를 부탁했으나 단편 이후로 작품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감독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탓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다. 독립 단편 영화 현장에서 작업을 해왔던 연구자가 알고 지내던 미술 감독의 소개로 감독 B를 소개 받아 2021년 4월 8일 약 9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감독 B를 통해 감독 D를 소개 받아 2021년 4월 20일 약 100분가량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단편 영화를 연출한 여성 감독이었고, 그들의 인적 관계상으로 장편 연출 경험이 있는 여성 감독을 소개받기는 어려웠다. 이후 감독 B를 소개해 주었던 미술 감독의 지인인 피디를 경유하여 장편 연출 경험이 있는 감독 F를 소개 받았다. 감독 F를 인터뷰하기 전에 경력 쌓기 이전의 다양한 단계의 여성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충하기 위해 독립 영화 현장에서 만났던 감독 E에게 인터뷰 취지를 소개하고 2021년 6월 9일 약 90분가량 인터뷰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1일 감독 F의 사무실 건물에서 약 120분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총 6명의 참여자와의 면접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able 1 인터뷰 참여자

NO	사례명	필모그래피	감독 외	나이	경력 기간	결혼 여부	경력 단계	교육 기관
1	A	단편 (2편 이상)	조감독 (상업, 독립)	20대 후반	약 5년	미혼	진입 1 (영화과 대학원 재학 중)	국내 영화과 대학원 재학 중
2	B	단편 (4편 이상)	스크립터 (독립)	20대 후반	약 8년	미혼	진입 2 (국내 영화제 상영)	국내 미디어 센터 수료
3	C	단편 (7편 이상)	조감독/ 피디 (상업, 독립)	30대 후반	약 15년	기혼	진입 1, 2 (국내 영화제 수상)	국내 영화과 대학원 졸업
4	D	단편 (4편 이상)	조감독 (상업, 웹드라마)	30대 후반	약 10년	미혼	진입 2 (영화제 수상)	국내 영화과 대학교 졸업
5	E	단편 (3편 이상)	피디 (단편)	30대 중반	약 5년	미혼	진입 2 (영화제 상영)	국내 미디어 센터 수료
6	F	단편 (6편 이상) 장편 (2편 이상)		40대 초반	약 15년	미혼	경력 쌓기 단계 (국내, 국제 영화제 수상 및 극장 개봉 예정)	국내 미디어 센터 수료

심층면접의 내용은 경제적 측면, 인력 네트워크 측면, 영화 현장 내의 노동 이행의 측면, 숙련 형성의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묻는 흐름에서 이루어졌다. 질문지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영화 노동을 지속할 때의 경제 및 구인구직 상의 어려움, 영화 노동 현장에서 참여자의 능력이나 직군의 직무자체가 저평가 되었던 경험, 여성 감독 혹은 연출직군 여성 노동자로서 업무 권한을 타 직군 및 타인에 의해 침범당한 경험, 촬영 및 조명 직군이 현장의 핵심을 구성하는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 마지막으로 장편 영화를 기획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이나 위태로운 지점에 대해 물었다. 면접 시간은 참여자마다 조금씩 상이했으나, 전반적으로 90-120분 사이로 소요되었다. 면접이 끝난 후 면접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자료화하였다.

4. 본론 – 인터뷰 내용 분석

1) 여성감독의 영화 노동시장 내 주변화

(1) 영화 현장 진입의 어려움 – 여성의 인력 네트워크 부재

2) 영화 제작 현장 내의 성차별

(1) 여성 감독 불인정 기제와 업무 권한 박탈

(2) 남성 중심적 위계 문화와 촬영 직군의 권력 독점

(3) 열악한 노동환경 – 과도한 업무 긴장성
(4) 성차별 성희롱 경험

3) 남성 비공식 네트워크의 물적 독과점 체계

(1)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와 제작지원 및 영화제 수상의 편파성
(2)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

5. 결론

여성이 영화 노동자는 현장에서 남성중심적 문화 안에서 불인정 받아 남성과 대등한 노동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여성이 경력을 아무리 쌓아도 남성과 결코 같은 '숙련'을 가질 수 없다. 여성의 연출 권한에 대한 남성의 직접적 침해, 무시, 남성 촬영 감독 주도로 이끌기 위한 공격적 언사 등은 바로 그 여성에 대한 불인정에 기반한 노동 저숙련 평가 기제로 인해 정당화되고 젠더 위계로 인한 현장 내 권력과 권한의 독점을 비가시화 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불인정과 저숙련 노동 평가 기제는 남성 직군인 촬영 직군의 노동 도구에 우월성을 부과하여 직군에 대한 숙련이 영화 노동 현장 전체에 대한 특권을 갖고 권력을 독점을 하게 하는 남성 지배적 기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패턴을 남성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현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그런데 그것이 성차별적 문화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인적 자원을 꾸려서 인력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러한 영화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여성의 작품 지속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에 여성들은 영화계 내 전체 네트워크와 단절되고 여성들 간의 커뮤니티와도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남성들 간의 이 비공식적 인력 네트워크는 영화제 수상 및 이후의 공적/사적 제작지원의 투자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영화계 노동 '시장' 뿐 아니라 영화 경력을 인정받고 이후에 발돋움할 물적 토대 까지 빼앗는 지배 시스템이 된다.

한국 노동 시장에서 남성이 인적 관계망을 장악했다는 것은 영화 노동 현장 내의 남성 헤드스태프가 노동 참여 기회의 결정 권한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영화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영화제의 공식적 절차와 그 이후로 장편으로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독점하는 형태까지 포괄한다. 즉, 영화계 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남성 권력은 여성이 경력을 쌓고, 인정받고, 지속할 기회를 빼앗음으로서 그 기회와 자원을 남성이 독식하게 하는 실질적인 물적 토대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여성 노동의 주변화란 남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독점한 상황에서 문화적 인정기제로 인한 지위상의 불평등함과 영화제작투자와 임금의 성불평등한 경제적 분배로 인해 그 숙련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인한 젠더 권력을 공고하게 다지는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아지고 노동 현장에서 주변적 위치에만 머물게 되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비가시화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한국 영화 미디어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이 폭력적인 구조가 지난 100년간 일축되어왔다는 것에서 반증된다. 최근의 각종 영화계 내 성평등 이슈가 드러났으나 2017-2018년 많은 여성 영화 노동자들이 각기의 위치에서 노력하여 겨우 그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많던 여성 영화인'들은, 영화계 내의 주변부적 위치로 자리 잡힌 독립 단편 영화현장으로 밀려났을 뿐이다. 그들이 장편에 진입하고 경력을 지속시키려면 단 한 번의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영화계 전체에 필요한 것은 성별 고정 관념에 의한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공적사적 제작지원의 편파성 및 직종 분리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강이수 (2006). 해방 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 -차별과 주변화의 지속-. <여성과역사>, 4호, 43-76.

김영 (2019). 한국영화산업 노동시장의 성차별 실태와 여성배제기제: 여성영화인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3권 1호, 5-38.

김선아(2018). 교육기관과 영화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여성 신인감독의 영화계 진출 현황. <영화연구>, 76호, 241-271.

김숙현 (2018a). 2000년대 한국영화 장과 여성 영화감독. <문화와 사회>, 26권 2호, 317-377.

김숙현 (2018b). 여성 영화감독의 역할수행 과정과 실천의 구조. <언론과 사회>, 26권 1호, 79-134.

경향 (2019.09.25.). "독립영화 여성 감독들의 활약…남성 중심·획일화된 흥행 코드에 반기" https://m.khan.co.kr/culture/movie/article/201909252124015 (검색일 : 2021.08.17.)

남순아 (2017). 찍는페미가 영화계를 바꾼다. <여/성이론>, 36호, 111-125.

미디어운동본부 (2018, 09, 14). [후기] '남배우 A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한국여성민우회>.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482 (검색일 : 21.03.21)

매일신문 (2021.02.16.) [매일춘추] "여성감독의 시대를 고대하며" http://news.imaeil.com/NewestOpinion/2021021510024682508 (검색일 : 2021.08.17.)

박홍주 (2004). [특집/민주주의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파견직, 여성 그리고 촉탁직 노동자]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권 3호, 67-97.

배상준 (2012). 한국영화의 독과점과 인력양성의 문제. <인문콘텐츠>, 27호, 247-257.

성하훈 (2019, 11, 19).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3인 집단 사직 파문 : 집행위원장 선임 놓고 "

이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비판. <Ohmystar>.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88449 (검색일 : 2021.06.16.)
신경아 (2015).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의 조직 내 주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1권 2호, 131-179.
신경아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시론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19권 1호, 173-206.
신경아·장수정 (2001). 노동운동은 성평등한가. <여성과 사회>, 12호, 60-80.
이나영 (2021). <2019년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KOFIC 연구 2021-01)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이주환 (2001). [특집/벼랑 끝에 선 삶: 시장의 논리와 삶의 위기]고삐 풀린 자본과 주변화된 여성노동. <당대비평>, 15호, 67-84.
이종수 (2021). <20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KOFIC 연구 2021-06).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권 2호, 201-237.
이희진 (2018). 영화제작인력의 업무만족 및 근로조건만족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1권 3호, 85-113.
여성연합 (2017, 05, 11). [성명] 남배우A사건 성명문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21.or.kr/notice/9485 (검색일 : 2021.06.21.)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2018).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정이환 (2004). 문화산업 노동시장 구조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61-565.
조혜영 (2020).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KOFIC 연구 2020-06).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주유신 (2019).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한국 영화와 성평등 영화정책에 대한 시론.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6집, 31-56.
황은주·김유휘·이승윤 (2015). 북한 여성 노동시장의 주류화와 주변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1-121.

Stephen Follows·Alexis Kreager·Eleanor Gomes (2016). *CUT OUT OF THE PICTURE A study of gender inequality amongst film directors in the UK film industry*. Commissioned by Directors UK.
Frase, N. (2013). Fortunes of Feminism. 임옥희 (역)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서울: 돌베게.
Hartmann, H. (1997).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김혜경·김애령 (역) (1989).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15-64.
아이리스 매리언 영 (1990). 김도균·조국 (역)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세션 2-2.
노동, 개발

사회: 최인이 (충남대학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이다은 (이화여대)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소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최인이 (충남대)
신양희 (만하임대)	Do firms make us poor? Effects of corporate behaviors on labor insecurity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e U.K, Germany, Sweden, and Italy	조혁진 (노동연구원)
이시림 (연세대)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자본주의	임운택 (계명대)
김명지 (제주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개발주의 비판적 검토	박지훈 (중앙대HK사업단)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소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다은

1. 서론

2021년 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OECD 국가 중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임금격차, 여성 고위직 비율에서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고, 유리천장지수에 있어 9년 연속 꼴찌를 유지해오고 있다. 저조한 여성고용률과 큰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2006년 3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분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한다(노사발전재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 www.aa-net.or.kr). 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재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개입 정책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은 추후에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입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20년 기준 여성이 71.3%, 남성이 66.1%로(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4년 이후 여성이 계속해서 남성보다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8%로 적극적 고용조치가 시행된 2006년(50.5%)에 비해 2.3%p 증가한 수준이며, 고용률 또한 2006년(49.0%)에 비해 1.7%p증가한 50.7%에 머무르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 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는 여성고용 비율이 동종 산업별·규모별 고용비율의 평균 60%에서 70%로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는 300인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신규대상으로 적용하였고,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을 신규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적극적 고용조치의 대상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돼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의 기준비율을 동종 업계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면서 노동시장 안에서의 차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2014년 법 개정에 기반하여 2017년부터 적극적 고용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조치의 미미한 패널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분분하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함의 및 잠재력은 매우 크고 또한 중요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미이행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하려는 미이행 사업주 공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가. 약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한국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복합적이나,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가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의 기저에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부재가 존재한다.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도입되었지만, 미국과 달리 강제성을 배제하고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이주희, 2004; 유정미, 2012). 이는 한국 정부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여성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도 제도형성 초기에는 정부계약준수제 방식으로 여성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정부 발주사업 및 조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계약준수제 대신 근로자 수와 규모에 따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다(유정미, 2012). 정민오(2005) 또한 통계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네가티브 방식이 아닌 기업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 친화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전한다.

적극적 조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동부(2005)는 한국사회에서는 미국과 같이 흑인에 대한 역사적 빚이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적극적조치의 주된 취지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국가 인력자원의 효과적 활용측면에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정부계약 배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263쪽)”고 말한 바 있다. 즉,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부재하다는 판단 하에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만 제도를 운영함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적극적 고용조치는 애초부터 현재 만연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개입정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사 및 제재 조치가 부제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우려된다(이주희, 2004; 2011). 하지만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정부 또한 이행유인수단으로 제재보다는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시상 및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패널티의 부재와 약한 인센티브에 대해 곽선화(2015)는 한국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다른 국가와 다르게 기업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고용 미달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시행계획서를 작성했던 사업장의 83%가 당해에도 시행계획서를 작성했음을 지적한다. 이근재(2016) 또한 미국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한국은 기업에 대한 강제성과 유인정책이 충분치 않고, 이 때문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39조 제3항에 따라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이 조치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제재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금재호, 2012).

미이행 기업에 대한 강제의 부재와 더불어 매력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조치에 참여하여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제도 및 환경을 만드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며, 기준 고용률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성 고용을 위해 더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을 만든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고 전산시스템 상에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적정수준으로 나오는 경우 굳이 여성근로자 확대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강창현·허수연, 2016). 더불어 기계나 항만 등의 산업에서는 동종업계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자체가 낮으므로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도 쉽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강창현, 허수연, 2016), 이처럼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직종에 걸친 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고용을 개선하리라 전망하기는 어렵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초기에도 인사담당자들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제나 인센티브 강화(38.6%)'를 꼽은 바 있다(전명숙·김향아, 2008).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많은 연구가 그 원인으로 낮은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부재를 꼽고 있다(금재호, 2012; 강창현·허수연, 2016; 이근재, 2016; 최인이, 2017; 정경윤, 2020).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부는 2017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 시행해오고 있다.

나. 낮은 사회적 합의와 희석된 차별시정

Jacobsen(2008)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들도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대상 사업장임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기관의 경우 43.53%,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우 63.58%, 민간기업의 경우 48.17%를 차지하는 한국과 상당히 대비된다[1]. 한국의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절반가량이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대상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고 사항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 제도가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이주희, 20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세력의 지지와 정당성이 중요한데, 한국사회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고, 정부 주도적으로 정책이 시행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인지도가 매우 낮다(이주희, 2011).

강수택(2011)은 사회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연대의식의 부재 위에 만들어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기업체들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가지는 차별 시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체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적으로 수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행계획의 수립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제도를 이행하는 기관들에서 불만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강창현·허수연(2016)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해 해당 기관이 민영화된다면 이 제도를 계속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과 실무자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어렵게하고,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족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에 있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게 하고 사회전반적인 성별 직종분리나, 임금차별 등에 대한 개선을 함께 불러일으키기 힘들어진다. 더 많은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회적인 책임은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더불어 적극적 고용은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삭제된 채 제도가 형성되었다. 유정미(2012)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초기에는 명시되었던 '차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별이라는 용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혹은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대체된 현상을 지적한다. 최인이(2017)도 마찬가지로 여성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1) 2020.11.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도자료.

시행되는 과정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개입'이라는 의미가 퇴색 및 변형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적극적 조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를 통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흐름보다 기업이 여성인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인력주의로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다. 차별 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 없는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를 Employment Equity로, 단순한 기회의 평등(Equality)가 아닌 사실상의 평등을 추구하는 형평(Equity)을 강조한 캐나다(김향아, 2006)와 극명한 차이를 지닌다. 능력주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애초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할 정도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하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연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식의 이러한 제도의 정의는 제도의 본연적 한계를 규정짓는 역할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차별 시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고 기업의 책임감을 기를만한 어떠한 정책도 형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경윤(2020)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당 사업장의 여성 고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알게 되고, '공개'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이 해당 사업자의 노동자뿐 아니라 불균형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3. AA에 대한 패널티 전략; 미이행 사업주 공개 정책

고용노동부는 2014년의 1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오고 있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1)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2)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3)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4)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명단을 공표함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의 불이익을 미이행 명단 공표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미약한 처벌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

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그들에게 이행을 촉구하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도를 통해 AA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개선노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한다[2]. 고용노동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전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이후 현장사례

- 명단공표가 이루어진 A기업은 명단공표 이후 임원진 주재의 향후 AA제도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대책회의 진행 및 개선방안 마련
- 명단공표 후보기업이었던 B 공공기관은 금년도 발생한 관리자 공석에 AA제도를 고려하여 여성 관리자를 우선 배치
- 명단공표 대상기업이 포함된 C그룹사는 전 그룹계열사의 개선방안 마련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

마찬가지로 노사발전재단[3]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된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로 지속적인 패널티를 강화하여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들에 제도적 관심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명단공표 사업장에 대한 불매운동, 부정적 언론보도 등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있어 보다 적극적인 여성고용환경 개선과 여성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품고 출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개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를 다음 두 측면을 통해 살펴보겠다. 우선, 명단 공표 대상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에 비해 낮음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있는가. 만약 이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내 제도나 문화를 만들어 조치를 취했다면, 매년 공표되는 미이행 명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개 조치된 미이행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남을 것이다. 둘째, 이 제도는 민간기업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초기에는 민간기업이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비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 고용률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초기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부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기관평가라는 패널티 및 인센티브의 영향일 수

2) [출처] 17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작성자 고용노동부(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07323247)
3) 전윤정(20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중 제도의 입법 정책적/수단의 효과성 관련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중 노사발전재단의 의견.

도 있다. 공기업이 약진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나, 민간기업이 포괄하는 노동자 수가 더 많으므로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행을 민간기업에게서 이끌어낼 수 없다면 이 제도로 효과를 보는 노동자와 사업장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패널티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이행률을 높일 수 있었는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고로, 정부가 패널티 강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부진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가.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현황

2017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는 올해 제도 시행 5년을 맞이했다. 사업주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의 사업주 명단 공표 대상 기업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 제도가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6개월 동안만 게재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1년과 2020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여전히 게재하고 있었고, 2019년은 대한민국 정책 프리핑(www.korea.kr)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과 2017년의 경우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4].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미이행 기업의 명단 외에 해당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각 공개된 미이행 사업장들의 전체 고용인원과 여성 고용율, 전체 관리자와 여성 관리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개가 선정과정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을 선별한다. 그 후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사업장을 선정하여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 노력을 보인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 아래 <표 1>은 미이행 사업주 공표제도 이후 명단을 공개 대상을 선정하는 각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정리해 둔 표이다.

4) 2018년 미이행 기업관련: “오리온·교원…여성고용 저조 사업장 42곳 명단 공개” 2018.03.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081355001)
2017년 미이행 기업관련: "‘여성 고용 차별’ 기업명단 첫 공표…금호타이어·한라 등” 2017.03.0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1511001&code=940100)

〈표 1〉 2017-2021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개 선정과정

(단위: 개)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개 선정과정	2017	2018	2019	2020	2021[5]
1)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734	776	770	742	-
2)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이행촉구 사업장	241	376	323	319	279
3)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사업장	93	106	105	80	37
4)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 곳	66	64	55	28	7
5) 최종 명단 공개 사업장	27	42	50	52	30

출처: 각 년도 미이행 사업주 보도자료 및 기사를 통해 연구자가 재구성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이행 사업주 공개 대상 첫 번째 기준인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은 모두 700곳 이상인 반면 절차가 계속될수록 대부분의 기업은 명단공개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종 명단 공개 사업장은 27~52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곳만 명단공개가 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충분히 기업들에게 소명 및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은 명단공개 후보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는 명단공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소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최종 명단공개 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이 미달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도 하지 않은 곳임을 시사한다.

최종 명단 공개 사업장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최종 30곳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최종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기 이전 단계인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한 곳'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줄고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66곳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2018년의 경우 64곳, 2019년의 경우 55곳, 2020년의 경우 28곳, 2021년의 경우 단 7곳만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기업들이 이 제도를 패널티로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 패널티로서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

패널티로서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는 패널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의 미이행 사업주 명단 목록을 확인 결과 많은 사업장이 명단 공개 이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미이행 사업장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이행 명단으로 중복하여 공개된 사업장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2021년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개 기업 7곳 중 1곳(14.3%)이,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개 기업 23곳 중 16곳(69.6%)이 그 이전에 한 번이라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었던 사업장이었다. 이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던 사업

5) 2021년의 경우 3년 연속('18~'20년)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

장이 반복적으로 또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곽선화(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미달기업의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제도의 효과로서 여성 관련 지표들이 꾸준히 증가한다기보다 낮은 상태로 잔존해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미이행 사업주 공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 고용에 있어 미흡한 사업장을 긍정적으로 변모시키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2019년-2021년 3개년 연속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3곳을 중심으로 이들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크게 유사한 업종이라는 점과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이번 절에서는 업종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해당 업종은 [중공업1]이 2곳, [화학공업2]가 한 곳이다. 특히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과 같은 경우 매년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직종 중 하나이다. 2021년 역시 이전 연도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함께 '중공업1' 부분이 가장 미이행 사업장이 많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전 연도까지는 중공업1 부분이 가장 미이행 업종이 많았는데, 2021년의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가장 미이행 업종이 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타 업종보다 매우 높은 업종으로, 2020년 기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은 52.49%다. 이는 기존에 계속 제기되었던 업종 간의 차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2019-2021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6]

(단위: 명, %)

2019-2021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7]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A: [중공업1]	2019	738	178	24.12	7.88	38	0	0.00	1.49
	2020	796	197	24.75	7.13	30	0	0.00	1.40
	2021[8]	788	193	24.49	7.24	28	0	0.00	1.68
B: [중공업1]	2019	527	29	5.50	7.88	48	0	0.00	1.49
	2020	502	25	4.98	7.13	48	0	0.00	1.40
	2021	82	23	28.05	7.24	46	0	0.00	1.68
C: [화학공업2]	2019	645	50	7.75	10.64	13	0	0.00	3.08
	2020	663	57	8.60	11.48	10	0	0.00	3.71
	2021	679	62	9.13	10.96	16	0	0.00	3.72

<표 2>에 속한 사업장 모두 여성고용 기준율이 7%대와 10%대 혹은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율은 3% 미만은 것으로 보아 기준율이 여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세 기업 중 A 기업을 제외하고 여성 근로자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관리자의 경우 3년 연속 세 업장 모두 0명으

6) 여성고용 기준율(%)과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은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임.
7) [ ]는 해당 사업이 속하는 업종임.
8) 2021년부터 해당년도 3월기준(20년 3월) 재직중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로 단 한 명의 여성 관리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로 남성 직종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해 여성 근로자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김향아, 성혜진, 2006). 여성 근로자 수부터가 타 업종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성 관리자를 뽑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된 위 3개의 기업은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2019년과 2021년 사이 A와 C 기업의 경우 모두 여성 근로자가 각각 15명, 12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율로 따지면 전체 여성 고용 비율은 0.37%p, 0.32%p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가 매우 약소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B 기업은 여성 근로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명단 공개라는 패널티가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두 기업이 여성 고용률이 약소하게나마 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효과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줄어든 사업장도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명단 공개된 미이행 사업주가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이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제기된 패널티에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잔존함을 보여준다. 사업장 명단공개로 기업들에게 이행을 촉구할 일종의 패널티를 마련하였지만,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의 불이익은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시행을 촉구할 정도의 패널티로의 역할이 미미했다. 미이행 사업장들이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표면상으로 부재했으며, 특히 부진 명단이 공개된 업종이 특정 업종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업종간의 격차 또한 해소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가 '명단 공표'이외에 별다른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한계로 남는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만 해당 기업의 명단과 해당기업의 여성 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6개월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했다는 근거가 사라기지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업의 명단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함께 미이행 명단 공표 사업장의 여성 고용자 수, 비율,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모두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이행 관련 명단 공개가 사라지게끔 설계된 구조는 이 자체로 명단 공개 패널티에 대한 효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6개월의 공표가 어느 정도로 패널티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표 1>에서 보았듯이 미이행 사업주 명단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최종 명단 공표 이전에 이탈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제도의 효과성이 발휘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경우 지속해서 미이행 사업주가 다시 미이행 사업주로 꼽혔다는 사실로 보아 이것이 제

도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여성 고용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것 이외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전명숙(2016)은 2015년까지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중공업 부문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행계획서를 살핀 결과 중공업 부문의 남성중심 문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중공업 부문의 여성 관리자 0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오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은 명단 공표 패널티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업종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미진함을 보여주었던 중공업 및 화학, 건설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 직종분리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장 내의 성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인재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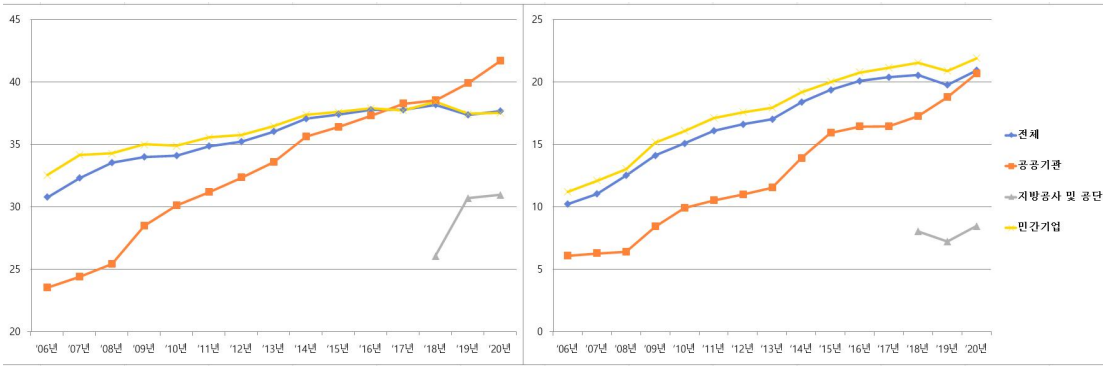
다. 민간기업 vs.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기업은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 모두에서 공공기관을 앞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민간기업은 여성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공기업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전명숙·김향아, 2008),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김향아·성혜진, 2006). 하지만, 공공기관은 점차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려왔고, 2017년 이후부터는 공공기관이 여성 고용률의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을 앞선 모습을 [그림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대상을 점차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여성 관리자 비율의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우세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공공기관의 증가추세는 민간기업에 비해 가파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평가 등에서 정부 기관과 얽혀 있어 이를 수행할 어느 정도의 강제성 및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인센티브 및 제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명단을 공개하는 패널티 이후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일었었는가?

[그림 1] 여성 근로자 비율(좌) 및 여성 관리자 비율(우) 추이(2006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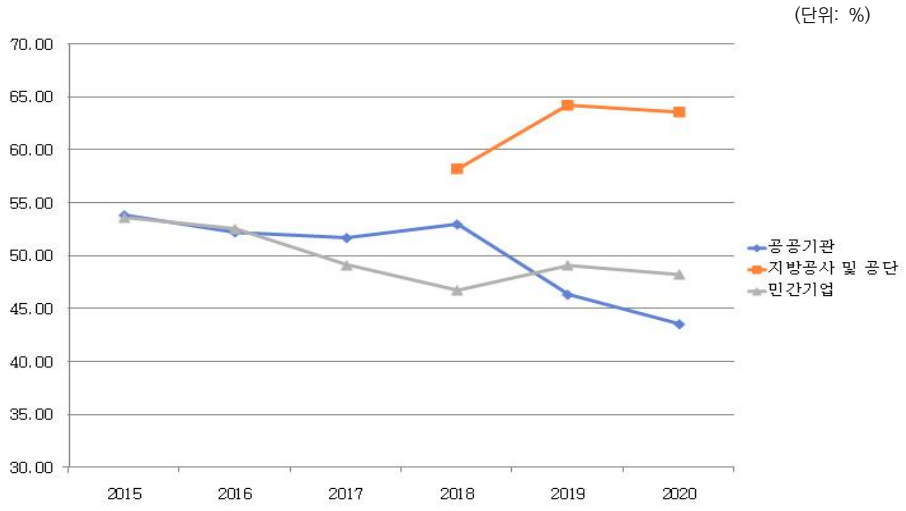
(단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이행 명단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7년 1곳, 2019년 5곳, 2020년 1곳으로 2018년과 2021년에는 미이행 명단 공개 사업장이 없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안은 공기업의 경우 5년 사이에 미이행 명단이 중복되는 기업이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담당자를 인터뷰한 강창현·허수연(2016)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숙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평가라는 별도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10년 이상 진행되오면서 공공기관이 여성 고용에 있어 좀 더 도드라진 것이다. 물론, 여성 관리자의 경우 여전히 민간기업이 높지만, 현재 추이대로라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 비율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미이행 명단 공개의 경우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관개 없이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민간기업이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우 중복해서 미이행 명단에 오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미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연도별 여성고용 기준미달 기업 추이([그림 2])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기준 미달 기업이 줄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 2015-2020 연도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미달 기업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반에서 민간기업의 미이행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 고용 및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수도 많고 더 많은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의 증가를 늘리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가 공기업뿐만 아닌 민간기업을 얼마나 여성 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현재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패널티는 민간기업에서는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더더욱 성과가 미미하며, 미이행 기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있지만(정경윤, 2020),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할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도 존재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에 대해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관평가라는 강제적인 제도가 수반되어 이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했다(강창현·허수연, 2016). 이는 Dobbin & Kalev(2016)이 지적했던 대로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담당자, 그리고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책임(accountability)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또한 계속해서 여성 고용률을 늘려 제도의 확장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담당자들의 차별 및 편견을 우선적으로 해소하여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을 지울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이 제도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및 제언

본고는 2017년부터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5년간 시행된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명단 공개 이전단계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는 명단 공개를 회피하고자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노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첫 공개 이후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제도가 계속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명단공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감소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공개 대상 기업은 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직종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는 중공업1과 사회서비스업 두 분야가 지속적으로 가장 미이행 명단공개 사업장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중공업의 경우 여성 고용이 꾸준히 낮은 사업장인 반면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여성고용이 높은 사업장으로 직종간의 여성 고용률 격차가 두드러져 이에 따라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매우 낮은 기준을 적용받기도,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받기도 했다.

둘째, 특정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보아 명단공개 제도가 기업의 고용 차별을 시정할 정도의 페널티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단 공표 사업장 중 상당수가 이전에도 미이행한 적이 있는 사업장으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이후에도 미진한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명단 공표'하는 것 이외에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사실이 제도의 효용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좀 더 기업들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잘 이행하도록 하려면 명단 공표 이외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미진한 사업장에게는 컨설팅 및 제도개선 지원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반적으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여전히 민간기업이 앞서고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공공기관이 여성 고용률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을 따라잡았고, 관리자 비율의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선 추이를 보아 민간기업보다 앞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허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을 기관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종합하여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업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진하다고 평가되어왔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패널티의 일환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도를 2017년 이후로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이 50% 내외의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명단공개 제도가 패널티로 작용하여 기존의 사업장들에게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공개 기간에 대해 6개월이라는 한정을 둠을 통해 6개월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미이행 기업의 여성 고용인원 및 비율, 여성관리자 인원 및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삭제된다.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공표는 태생적으로 본 제도의 패널티성에 대한 효과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한계에 대한 제고와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이행하지 않아 명단 공개가 된 사업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들의 조직 내 분위기와 함께 여성 고용을 늘려갈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패널티와 더불어 민간기업을 다시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공공기관 대비 적용 사업장이 약 6배 정도 많다. 이는 그만큼 그만큼 민간사업장이 포괄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또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민간기업이 근래의 부진한 모습을 탈피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를 끌어안을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명단 공표 이외에 강제성과, 이들을 컨설팅을 통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늘리려면 여성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윤 및 인력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가 그동안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차별 시정'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위한 여러 방면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민들 또한 사회적으로 만연한 여성의 직/간접적인 차별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인사담당자,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을 서로에게 갖는 것은 기업이 자율성을 늘려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고용 및 여성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며, 이미 여성 고용률이 기준미달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구조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전반의 고용환경과 질을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고 여성이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의 짐을 짊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에서는 여성은 안정적으로 노동환경에 나아갈 수 없다. 여성 고용을 늘리는 일은 단순히 고용만을 늘려서 된다기 보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여성이 직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이념이나 원칙을 갖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목표 하에 여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경합을 통해 형성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과정이다(허라금, 2020). 계속되는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낮은 관리자 비율에 대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타협해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만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애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그간 추진된 남녀고용평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모집이나 채용, 직종·직위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 도입되었다(노동부, 2005). 이 도입 취지를 되살려서, 노동시장 안에서의 차별에 대한 진단 및 명확한 차별 시정의 의미를 제도에 담는 것 부터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강수택 (2011). 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사회이론(39), 75-114

강창현, 허수연 (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1), 1-27

금재호 (20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리뷰, 49-65

곽선화 (201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A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22(5), 73-92

김향아 (2006).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노동브리프, 4(1), 10-16

김향아, 성혜진 (2006).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현황과 영향요인. 노동리뷰, 73-89

노동부 (2005).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관련 자료집

우양호 (2021).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108(1), 5-38

유정미 (20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가치의 희석. 젠더와 문화, 5(2), 147-184

이근재 (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경제연구, 34(2), 121-143

이주희 (2003).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2004). 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 한국여성학, 20(3), 139-170

이주희 (2011). 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젠더법학, 3(2), 67-87

전명숙 (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여성경력개발제도 연구: 중공업부문 여성관리자 미달기업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교육연구, 18(2), 89-112

전명숙, 김향아 (20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년의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 39-50

전명숙, 김향아 (20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 고용현황 비교분석. 노동리뷰, 3-19

전윤정 (20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오 (200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나라경제, 64-68

정경윤 (2020).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최인이 (2017). “한국사회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책적 방향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2: 157-188.

허라금 (2010). 젠더 전환적 전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재개념화. 한국여성학, 26(2), 99-125

Joyce P. Jacobsen (2008). 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절차와 성과. 국제노동브리프, 6(6), 26-42

Dobbin, Frank and Alexandra Kalev. 2016. “Why Diversity Program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5).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16). 공공기관·대규모사업장 여성근로자·관리자 모두 증가했다! – 고용노동부, '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17). 지난 1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 7.03%p, 관리자비율 10.17%p 증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결과, '16년 여성 고용비율 37.80%, 관리자비율은 20.39%

고용노동부 (2018).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019).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0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인터넷 자료>

고용노동부. 2017.09.28 17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07323247)

김상범. 2018.03.08. 오리온·교원…여성고용 저조 사업장 42곳 명단 공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081355001)

배문규. 2017.03.02. ‘여성 고용 차별’ 기업명단 첫 공표…금호타이어·한라 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1511001&code=940100)

Do firms make us poor? Effects of corporate behaviors on labor insecurity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e U.K, Germany, Sweden, and Italy

만하임대학 석사 졸업

신양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abor insecurity on the labor market. The study considers three players as agents who interact with each other: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First, I explore the insecurity of workers with sequence analysis to grasp how precarious individuals are over employment histories (duration and spells). Second, as a cause of insecurity, corporate behaviors are analyzed with induced poverty risk of individuals from the first part. Hiring practices and the intensity of market concentrations of firms a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corporate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ecology by industry affect the founding rates of other businesses and new employment. Finally, institutions, including market regula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are investigated for how different regulations influence recruitment across countries. These three multi-dimensional analyses from micro via meso (organization) to macro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e among agents in the labor market.

Introduction

Joblessness is rampant. Nowadays, unemployment and atypical work have been spread with platform-based labor. Firms utilize a short-term contract as a tool of cost-saving. With no need to long-term standard employment, contracts have been changed into output of tasks from input like working time. Employers only care about an outcome ordered. This change deprives workers of labor protections like sick pay or paid leaves. Labor is not commodification, but a counterpart in the trade of exchange goods under a name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with a risk delivered by firms. Mostly it can't be governed by labor regulations (Koch and Fritz 2013). Firms are not responsible for insecurity of their counterparts any more. As this relationship is an auction, orders just choose another partner who is not sick (Bergvall-Kåreborn and Howcroft 2014). In this way, individuals take more insecurity where a long-term relationship disappears.

Pandemic in work has accelerated economic polarization among workers (Ma et al. 2020). The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be the unskilled, who are less educated

and work in manual or service sectors (Fischer and Schmidt 2021). The less-educated in the service sector or manual jobs are easily unemployed under economic recessions (Gangl 2003) and employed laggingly later (Jarosz and Mathers 2018). Unemployment has proved great effects on impoverishing the weak: children, African Americans, and single mothers (Blank 2009). Most of them rely heavily on labor income so that joblessness causes them to fall into poverty. The very bottom have low-paying jobs and insufficient resources to bear the difficulties (Brülle et al. 2018). This results in reproduction of the poverty by restricting better opportunities to get an education for worker's children (Mood et al. 2012).

Income blank from frequent or long-term joblessness levers poverty risk. Although labor participation rates in Europe have recently increased (Fernández and Turégano 2018), labor shares have decreased (Autor et al. 2020) while corporate earnings rise up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Barkei 2016; Chen et al. 2017). It may mean that labor shares are insufficient for workers in that consumer prices involve producer surplus for the sake of the labor price, their wages. Firms nowadays grow through plat-forms without creating jobs or marginal production substituting traditional or backward industries (Autor et al. 2020). Otherwise, decreases in labor shares come partly from that proportions in economics for the top class have increased (Berman and Milanovic 2020) or wage inequality is greater between firms than within firms (Song et al. 2019). This questions whether large corporations make average income or hours worked less for some reasons. The reasons are based on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abor income are associated with firms in terms of employment.

I attempt to investigate how corporate behaviors and ecologies influence worker's insecurity and poverty. This expects to fill in the gap between an individual level and macro-economy by adopting organizational behaviors and ecological concepts. Prior literature on work-in-poverty has focused on the poverty of individuals and labor market policies or welfare regimes (Brülle et al. 2018; Lohmann 2009; Halleröd et al. 2015). At the individual level, the poor tend to have low-paying jobs. At the macro level, household debts have persistently mushroomed for 2015-2020 along with government deficits since the Great Recession (OECD 2020). Labor economics has studied this issue with economic cycles like Beveridge curve (e.g. Pissarides 2013). Considering that the employment rate doesn't recover after economic shocks and industrial changes (Krueger 2017), research in this tren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of a view of organizational behaviors.

This study attempts to how and which corporate behaviors affect workers' insecurity and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corporations, all three players in the economy are considered as an agent in the labor market: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First, at the micro-level, insecurity and poverty for individuals are analyzed with employment spell in sequence analysis over the life course. Basically, this part is grounded on the social capital theory of Coleman (1994) and competitive labor market theories but this analysis depends on ad-hoc basis of sequence outcomes. It is for capturing current situations of insecurity and flexibility for individuals at the micro level over time. Second, at the meso-level, changes in corporations are dealt with hiring style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from an aspect of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ecology. Isomorphism and market dominance are tested whether corporate strategies, like outsourcing (Goldschmidt and Schmieder 2017) or overlapping market niche, aggravate labor insecurity and decreases in labor shares. Third, at the macro-level for institutions, effects of social policies on the labor market and anti-competitive laws are compared to time points before enforcement of legislation such as industry-connected wages or co-determination in corporate boards.

Distinguishing dimensions helps to look over current problems as a whole picture in society.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1) identifying an accumulation process of poverty from the individual perspective over the lifetime with sequence analysis–individuals can't constitute separate events so that a life-course approach provides abundant narratives–, 2) investigating empirical evidence of connections of organizational levels from the micro- to the meso-level (at the firm-level) before analyzing the macro-level of the national economy and welfare regime, 3) seeking for corporate policies with welfare policies in the labor market.

Theoretical Backgrounds and Research Structures

If one is poor, it sets both one with a job or without. For the former, wages are below the threshold of the poverty line which seems to be exploitation of laborers or decline of worker's rent–bargaining power. Otherwise, price levels are higher than their wages. For the latter, insufficient social policy fail to complement earnings drop. Besides them, laborers are not needed or over-supplied on the demand side for firms. Long-term unemployment will obviously bring poverty. Also, frequent unemployment or job transfers may create income blank to wear economic reservoirs of individuals (Halleröd et al. 2015).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is labor flexibility comes out of poverty and whether it comes from corporate behaviors and institutions.

Individual perspectives will review three hypotheses of whether labor flexibility causes poverty: stepping-stone hypothesis; durable-trap hypothesis; social capital hypothesis. *The first* two assumptions are based on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theory. According to rational choice theory, transfer of the workplace should be for better payrolls. It occurs when costs of transfer are less than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transfer. If a job change connects to income increases or status improvement, it supports the stepping-stone hypothesis (Knabe and Plum 2010). *Otherwise*, the durable-trap hypothesis assumes that individuals with atypical jobs at the entry time of the labor market continue to stay at non-standard employment (Kahn 2007). These two hypotheses are for examining a relationship between job changes and poverty risk. If occupational mobility take places in the beginning or short-duration of employment trajectories such as interns, it won't be significant on labor income. A concept of the job security entails careers years or status over the life course. *Third*, the social capital hypothesis is for a case of exceptions in the two hypotheses. Although non-standard work is believed as being insecure, freelancers in professional occupations can be high-income earners. They tend to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McLanahan and Percheski 2008; Mood et al. 2012) or parent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regardless of a degree of job changes. This part investigates whether advantages in earlier stages accumulate themselves on a successive chain (e.g. African Americans in Blau and Duncan 1967; Sewell and Hauser 1975) over the life course. If each move such as unemployment periods may work with a knock-on effect on the next events, ther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ffect beyond individual reasons of poverty.

Thus, next three sections follow different dimensions of individual poverty in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Recruitment is a product of hiring practices from a result of management decision. It is crucial for organizational mortality as resources for firms and as opportunities to work for individuals. Also, a reason that firms can conduct human resource strategies benefiting themselves come from that changes institutions permit those behaviors for them: deregulations of labor protections and weakening labor unions. With income supports, institutions influence firms' behaviors and individuals' income at the same time.

For corporate behaviors, neo-institutionalists' aspect will be utilized in whether firms have changed or have been changed into likeness toward saving labor cost or labor flexibility on the demand side of the labor market. It is related to possibilities of exploitation or decline of workers' rent contributing to individual poverty. From the standpoint of a firm, globalization and flexibility of hiring occur because labor costs are cheaper and efficient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gencies for hiring. Minimizing cost is rational for firms by retaining a few core workforces and downsizing periphery workers' wages: An optimal-mix strategy of core and periphery (Tsui et al. 1995). This leads to declining internal labor markets and segmenting the labor market into insiders and outsiders (Barbieri and Cutuli 2016). Taking benefits, firms have been gotten isomorphic to follow conformed standards of management strategies by other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DiMaggio and Powell 1983; Meyer and Rowan 1977). The conformed standards, such as labor-bargaining practices (Helfen et al. 2015), are

believed in legitimacy taken for granted to firms because of moral reasoning, adaptation, and manipulation (Scherer et al. 2013). This part attempts to explain relationships of firms with individual life related to *(a) numerical and functional flexibility of hiring practice*- HR agencies, a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b) transaction costs* -debt financing cost and financialization (Lin and Tomaskovic-Devey 2013; Eichner 1976; Dallery 2009),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üthe and Milner 2008) for offshoring (Autor et al. 2011), M&As (McCarthy 2013)-, changes in accounting systems (Mezias 1990), and *(c) diffusion from corporate elites network* such as executives' origins from MBA to participating in policy boards (Carroll and Sapinski 2010; Davis and Greve 1997). By spreading the same business strategy, corporations have been isomorphic with each other and developed in an efficient way of saving various costs including wages, financing, and production.

From a perspective of the organizational ecology, market concentration of few firms could induce employment reductions in liability of newness as well as in redundant labor with efficiency. Based on the resource dependence theory (Pfeffer and Salancik 1978), market space in a population is a kind of resources to obtain for firms in the environment with constraints. For the beginning of the time that density in an industry is growing, firms are interdependent on mutualism (Hannan and Freeman 1992). After competitions function for increasing mortality over the high level of density, higher market concentration hinders entry of new units. Although Carroll et al. (1995) studied specialized niche came out in the population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generalist, plat-form businesses currently take place over overall industries enlarging their domains including small niches. Their market overlapping seems to be effective than market partitioning. Newly founded firms may lose an opportunity to recruit more workers (Sørensen 2004) so a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rates. Young organizations tend to die earlier because of few resources (Brudel and Schussler 1990). For instance, emergence of superstar firms like Amazon indicate decreases in labor shares (Autor et al. 2020) because they destroyed backward industry and substitute pre-existing firms. Digital platforms have no additional cost at a marginal profit once they had established attractive platforms to users. In order to maintain the number of workers, decreases in employment for some should fill in increases for others. Therefore, this part tests whether a degree of concentration and overlapping in populations is associated with total employment rates, sales per a number of employment, founding rates, and mortality. It can be incrementally estimated by how a proportion of employment for large firms contributes to increases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compared to increases in their market shares. This can shap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and growth of large firms over organizational demography at the population level.

From macro perspectives of institutions, this part examines *(a) labor market*

policies, (b) corporate regulations for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erms of declines of labor shares and insecurity from the first part. Pursuing earnings for private firms tend somewhat to promote individuals to be poorer by paying below living wages or raising product prices. Government intervene the labor and product markets through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or co-determination and price ceiling or price floor.

Labor market policies complement income loss of individuals. Depending on contexts of countries, a degree of individual poverty will differ across social policies (Nelson 2013)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Thus, this part is based on comparative analyses with classification of countries combined by Esping-Andersen (1990) and Hall & Soskice (2011). In this view, outcomes of the labor market are affected by *(a) regulations like unionization and a degree of freedom in fire and layoffs for companies* (Barbieri and Cutuli 2016; Emmenegger et al. 2012), *(b) social protections like unemployment insurance to relieve poverty and to support job-trainings like ALMP* (Lohmann 2009; Gangl 2004). A high level of collective coverages in unions works for wage raises by bargaining power (Kim and Sakamoto 2008; Schäfer and Karin Gottschall 2015). Whil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guarantees stability for regular workers, disemployment occurs for outsiders in the labor market (Bertola et al. 2007). Additionally, *(c) public employment* gives outsiders in the labor market advantages: lower wage discrimination (e.g. gender pay gap in Dieckhoff et al. 2015) and a high density of unionization (Waddington 2005). In Sweden, public employment contributed to reducing unemployment for 1960-1990 (Forslund and Krueger 1997).

With respect to corporations, I go over effects of regulations of **anti-trust and governance structures on employment**. *First*, restricting tyranny of market power for corporations can be up-step of the other side: consumers, workers, and small-sized firms. Anti-trust laws prohibit price-fixing among the same side of participants and abuse of superior market status. For workers, prices of minimum wages and food are crucial to keep their living. Instead of the real world data, this part attempts to identify effects of restrictions between prior- and post- sues by a number of cases filing European Court of Justice according to Article 101 and 102 in the Treaty of Lisbon. *Seco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corporations is assumed to be positive effects on labor income. Politicall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reproduces a feedback mechanism, especially for making the poor poorer (Bartels 2005). When workers have voice on the Board of Directors (Co-determination) or have directors from diverse origins, there would have been a try to find alternatives rather to decrease labor shares. It would not be clear to have positive effects on short-term performances, but clearly to have relations to do with longevity (Kim 2013). This part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longevity and degree of labor's

co-determination.

Data

Analysis for four countries by regional category in Europe: South (Italy), West (Germany), North (Sweden), Liberalized (the U.K.)

1. Individua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data
2. Corporate data: Datastream of Thomson-Reuters and Compustat of Standard & Poor with Wharton School, EU KLEMS database (http://www.euklems.net), Global Enterpreneurship Monitor (www.gemconsortium.org), Research data (asking for th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accounting firms or government)
3. Macro data: Datastream, OECD, World Bank

Each country is set by welfare-state regime systems according to Esping-Andersen (1990:55-78): The U.K. is classified in a liberalist regime; Germany is conservative; Sweden is socialist. Italy was closed to conservatism (Ibid) but is coined as southern Europe in recent studies (Halleroed et al. 2015; Nelson 2013) due to reforms of welfare policies after economic crises. Each coun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 proportion of firms in economic activities; a degree of concentration in markets;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s such as the co-determination structure and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Thus, comparative analyses among four countries are proper to grasp institutional effects.

Methods

A sequence analysis is appropriate for measuring insecurity of work. Beside insecurity as status like contract-based work, sequences over the life course can create an index like entropy for a degree of job changes to be comparable among ag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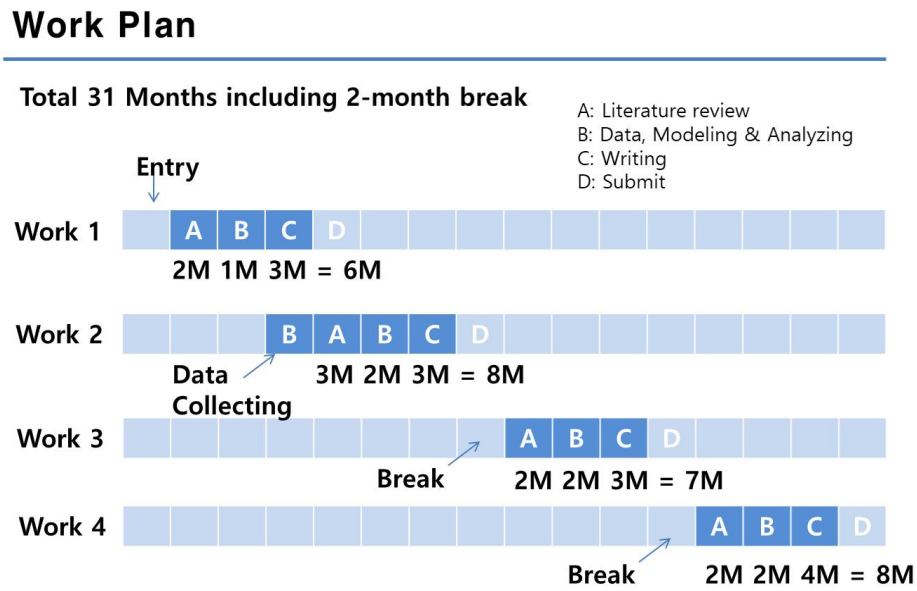
(1) *Current phenomenon at the micro level for individuals*: Sequence analysis for employment histories over life course, network analysis for each time period within an individual, survival analysis for poverty risk, Fixed-effect model for income differences between the unskilled and the skilled.
(2.a) *Causes at the meso level for firms:* OLS examining relationships with (a) aggregate variables for firms like labor costs, overseas & financial profit proportions, globalization (import/export), and digitalization and (b) poverty risk from the survival analysis of (1), duration of unemployment or entropy from the number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2.b) *Causes at the meso level for industries:* OLS examining relationships with (a) aggregate variables by industry or segregated by firm size like a degree of

concentration (Herfindahl-Hirschman Index), founding rates or mortality.

(3.a) *Causes at the macro level for labor policies in institutional effects*: Multi-level modeling for comparative analysis among countries relationships with (a) national accounts for individual income, unionization rates, and public employment analyzing statistics from (1).

(3.b) *Causes at the macro level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anti-trust laws in institutional effects*: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and fudge-set analysis for comparison in corporate structures. (b) RDD with a number of cases filing cases and a number of small-business firms.

Research schedule



Work 1 for the individual level; Work 2 for organizational levels; Work 3 for institutional levels; Work 4 for a process of integration among the work units.

References

Autor, D., Dorn, D., Katz, F. L., Patterson, C., and J. V. Reenen. 2020. "The Fall of the Labor Share and the Rise of Superstar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2): 645–709.

Autor, D., Dorn, D., and G.H. Hanson. 2011.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03(6):2121-68.

Barbieri, P., and G. Cutuli. 2016.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Labou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4):501–516.

Barkai, S. 2016. "Decling Labor and Capital Shares." *Stilger Center Working Paper Series* No. 2: 1-57.

Bergvall-Kåreborn, B. and D. Howcroft. 2014. "Amazon Mechanical Turk and the commodification

of labour." *New technology, work and employment* 29(3): 213-223.

Berman, Y., and B. Milanovic. 2020. "Homoploutia: Top Labor and Capital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1950—2020." *Stone Center on Socio-Economic Inequality Working Paper Series*. No. 28.

Bertels, L. M. 2005.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Princeton University*.

Bertola, G., Blau, F. D., and L.M. Kahn. 2007.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demographic employment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 833–867.

Blank, Rebecca M. 2009. "Economic Change and the Structure of Opportunity for Less-Skilled Workers." Pp. 63–91 in *Changing Poverty, Changing Places* edited by M. Cancian and S. H. Danzige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Blau, Peter M., and Otis Dudley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Bruderl, J. and R. Schussler. 1990. "Organizational Mortality: The Liabilities of Newness and Adolesc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3): 530-547.

Brülle, J., Gangl, M., Levanon, A., and E. Saburov. 2018. "Changing labour market risks in the service economy: Low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trend in working poverty risks i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5.

Carroll, Glenn R. and Michael T. Hannan, eds. 1995. Organizations in Industry. New York: Oxford UP.

Carroll, W. K., and J. P. Sapinski. 2010. "The global corporate elite and the transnational policy-planning network, 1996-2006: A structural analysis." *International Sociology* 25(4): 501-538.

Chen, P., Karabarbounis, L., and B. Neiman. 2017. "The global rise of corporate sav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89:1-19.

Coleman, J. 1994.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Belknap.: "Social Capital" 300-321.

Dallery, T. 2009. "Post-Keynesian Theories of the Firm under Financializ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1 (4): 492–515.

Davis, Gerald F., and Henrich R. Greve. 1997. "Corporate Elite Networks and Governance Changes in the 1980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 1-37.

Dieckhoff, M., Gash, V., and N. Steiber. 2015. "Measur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ange on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9: 59–75.

DiMaggio, Paul J. and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47-60.

Eichner, Alfred S. 1976. *The Megacorp and Oligopoly: Micro Foundations of Macro Dynam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2012. "How We Grow Unequal." Pp.3-26 in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9-78.

Fernández, C., and D. Martínez-Turégano. 2018.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in the euro area: Performance and outlook, a long-term view." *Bank of Spain, Analytical Articles, Economic*

Bulletin 1/2018.

Fischer, G. and G. Schmid. 2021. "Unemploymen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nder COVID-19: Better constrained in the corset of an insurance logic or at the whim of a liberal presidential system?" *WZB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Discussion Paper EME 2021–001.

Forslund, A. and A. Krueger. 1997. "An evaluation of the Swedish active labor market policy: new and received wisdom." in Freeman, R., B., Swedenborg and R. Topel (eds),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angl, M. 2003. "Explaining change in early career outcomes: labour market conditions, educational expansion, and youth cohort sizes." Pp. 251-276 in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The integration of Youth into EU Labour Markets* edited by Walter Müller and Markus Gang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ngl, M. 2004. "Welfare States and the Scar Effects of Unemploy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6): 1319-1364.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3): 481-510.

Hall, P.A., and Soskice, D.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1–6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lleröd, B., Ekbrand, H., and Bengtsson, M. 2015. "In-work poverty and labour market trajectories: Poverty risks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in 22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5): 473–488.

Hannan, M. T., and G.R. Carroll. 1992. *Dynamics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Helfen, M., Schüßler, E., and S. Botzem. 2015. "Legitimation Strategies of Corporate Elites in the Field of Labor Regulation: Changing Responses to Global Framework Agreements." In *Elites on Trial*. Published online. Pp. 243-268.

Ilsøe, A. 2017. "The digitalization of service work – social partner responses in Denmark, Sweden, and Germany." *TRANSFER –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3(3): 333-348.

Jarosz, B. and M. Mather. 2018. "Low-Income Working Families: Rising Inequality Despite Economic Recovery". *Policy Brief from 'The working poor families project'*.

Jesper B. Sørensen. 2004. "Recruitment-based competition between industries: a community ecolog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3(1): 149–170.

Kahn, L. 2007. "Employment Protection Reforms, Employment and the incidence of Temporary Jobs in Europe: 1995-2001." *IZA. Discussion Paper* No.3241.

Karabarbounis, L, and B. Neiman. 2014.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9(1): 61-103.

Katz, L. and A. B. Krueger. 2019.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ILR Review*. 72(2):382-416.

Katz, L. and D.H. Autor.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Pp. 1463-1555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dited by Ashenfelter O. and D. Card. vol. 3A.

Kim, C., and A. Sakamoto. 2008. "The Rise of Intra-Occupational Wag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83 to 200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 129-157.

Kim, Soohan. 2013. “Surviving Hard Times: The Impacts of Corporate Bankruptcy on Workplac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3): 25-50.

Knabe, A. and A. Plum. 2010. “Low-Wage Jobs: Stepping Stone of Poverty Trap?” *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Koch M and Fritz M. 2013. *Non-Standard Employment in Europe: Paradigms, Prevalence and Policy Responses.* London: Palgrave Macmillan.

Krueger, A. 2017. “Where Have All the Workers Gone? An Inquiry into the Decline of the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rookings Pap Econ Act* 2017(2): 1–87.

Lin, Ken-Hou, and Donald Tomaskovic-Devey. 2013. “Financialization and U.S. Income Inequality, 1970–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8(5): 1284-1329.

Lohmann, H. 2009. “Welfare States,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Working Poor: A Comparative Analysis of 20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4): 489–504.

Ma, C., Rogers, J., and Sili Zhou. 2020.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effects of 21st century pandemics and epidemics.” In *Covid economics* No. 5: 56-74.

McLanahan, S., and C. Percheski. 2008.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1)*:* 257–276.

Meyer, John W., & Brian Rowan 1977. “Institutional organizations: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63.

Mood, Carina, Jan O. Jonsson, and Erik Bihagen. 2012. “Socioeconomic persistence across generations: cognitive and noncognitive processes.” Pp.53–84 in *From Parents to Childre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antage* edited by John Ermisch, Markus Jäntti, and Timothy Smeeding, New York: Russell Sage.

Nelson, K. 2013. “Social Assistance and EU Poverty Thresholds 1990-2008. Are European Welfare Systems Providing Just and Fair Protection Against Low Incom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2): 386–401.

OECD. 2020. General government debt (indicator). doi: 10.1787/a0528cc2-en (Accessed on 30 November 2020)

OECD. 2020. Household debt (indicator). doi: 10.1787/f03b6469-en (Accessed on 30 November 2020)

Pfeffer, J. and G. 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 Row.

Pissarides, C.A. 2013. “Unemployment in the Great Recession.” *Economica* 80(319): 385-403.

Schafer, A., & Gottschall, K. 2015. “From wage regulation to wage gap: how wage-setting institutions and structures shape the gender wage gap across three industries in 24 European countries and German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9(2): 467–496.

Scherer, A. G., Palazzo, G., and D. Seidl. 2013. “Managing legitimacy in complex and heterogeneous environment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ed world.”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0(2): 259-284.

Sewell, William H., and Robert M. Hause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NY: Academic Press.

Skovron, Christopher, and Rocıo Titiunik. 2015. “A Practical Guide to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6.

Song, J., J. D. Price, Guvenen, F., Bloom, N., and T. von Wachter, 2019. "Firming Up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1): 1–50.

Tsui, S., Pearce, L., Porter, W., Hite, J. 1995. "Choice of Employee Organization Relationship Influence of External and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13: 117-15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t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t04.htm

Waddington, J. 2005. "Trade union membership in Europe: The extent of the problem and range of trade union responses." *A background paper for the ETUC/ETUI-REHS top-level summer school.* Florence, 1–2 July 2005.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자본주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시림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를 야기해왔다. 생산의 수단과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은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발전을 해왔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다시 그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던 새로운 기술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플랫폼은 그러 변화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문화산업은 플랫폼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다. 기존에는 책, 음반 등 실물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디지털의 형태로 전환된 문화 '상품'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만화, 소설 뿐만 아니라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플랫폼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것 같았던 공연도 플랫폼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대중문화산업 내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화를 생산하는 창작자가 소속된 기획사,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사, 창작물을 배포하는 유통사 등을 통해 생산물이 제작되고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기획사, 음반사, 방송사 등이 제도를 형성해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이들은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콘텐츠 생산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악, 영상 등 자신들의 생산물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제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창작자와 생산물도 대중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제도권의 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누구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아티스트들에게는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점차 또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각자 노력을 기울이면 그에 따라 더 많은 기회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생산물과 이로 인한 이윤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 창작자들의 생산 방식 및 수익 구조, 그리고 시간을 플랫폼이 규제하고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이 플랫폼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

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이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노동자들의 시간을 규제하며,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생산물로부터 소외시켜 온 이전의 자본주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에 모이는 정보가 일종의 자본이 된 현재, 플랫폼을 가진 거대 기업이 점차 산업 전반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 대중문화산업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플랫폼이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이용되어온 분야는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분야로 기존 연구들 또한 이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해왔다. 특히 웹툰의 경우 플랫폼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를 인터뷰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플랫폼이 창작자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분석하였다(김수철 & 이현지, 2019; 양경욱, 2020).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에 초점을 두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중음악 산업의 경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오래전부터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산업 내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을 그 특성별로 나누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플랫폼과 문화산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대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플랫폼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Srnicek(2016)은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복수의 집단이 교류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 광고주와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집단을 매개하는 인프라 구조를 제공하며, 이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상호작용 기록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그 독점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나간다(Srnice, 2016). McAfee와 Brynjolfsson(2017)은 플랫폼을 “무료, 완전성, 즉시성의 경제를 이용하는 온라인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이 한 번 생산되고 나면 사본이 거의 완전하게,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재생산될 수 있고, 그 생산물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 자체에 드는 비용이 전무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확장했다고 언급한다(McAfee & Brynjolfsson, 2017). Srnicek이 플랫폼을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면, McAfee와 Brynjolfsson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 이재열(2021)은 이를 크게 네트워킹 효과를 극대화 하는 디지털 인프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다양한 층위의 플랫폼이 서로 의존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생태 시스템, 총 세 가지로 분류한다(이재열 외, 2021).

이는 연구자가 어떤 이론과 시각에서 플랫폼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분석을 통해 보고자 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서도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정의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플랫폼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정보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각 산업에서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를 키웠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용자로 하여금 플랫폼 사용에 있어 점점 더 큰 혜택을 얻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가 몰리는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이 산업을 좌우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플랫폼을 개발할 자본이 없는 소규모 집단은 기존에 형성된 플랫폼에 진입하여야만 상품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용자는 플랫폼 밖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플랫폼이 여러 노드를 연결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나면, 이용자들은 이 플랫폼 생태계에 갇히게 된다. 문화산업에서도 네트워크 효과는 크게 작용한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인 무불 노동을 해야함에도 많은 창작자들이 유투브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분배 구조에서 플랫폼과 유통사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직접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부른 창작자들은 수익의 아주 작은 비율만 가져가게 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졌지만 그럼에도 창작자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물 음반을 구매하기보다는 원하는 곡만 실시간으로 듣는 방식을 선호하고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산업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플랫폼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서 플랫폼이 한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산업 내의 공급과 유통을 독점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창작자들이 기존에 작품을 생산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한을 점차 줄여나간다. 웹툰산업에서의 플랫폼화를 분석한 김수철과 이현지(2019)는 웹툰 플랫폼으로 인해 생산의 성격과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생산물을 언제든지 변경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소비자의 이용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함에 따라 작품에 대한 플랫폼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또한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면서 플랫폼과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웹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웹소설의 서사 흐름이나, 소재는 이미 검증되고 인기가 많은 플롯 위주로 생산되면서 웹소설 간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안상원, 2017). 플랫폼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면서 문화산업 내 다양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웹툰과 웹소설 연구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오히려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은 과거 출판사나 음반사가 혁신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것과 달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이 원하는 작품을 파악하고, 이 작품들만 플랫폼에 남기는 방식으로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Deresiewicz, 2020). 또한 공급되는 생산물은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모두 접하기는 어렵다. 플랫폼이 추천하거나 대중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작품 위주로 플랫폼에 노출되게 되고, 이는 하나의 '슈퍼스타'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문화상품의

공급 자체는 다양해질 수 있지만 이는 창작자들이 넓은 바다에서 모든 분야의 창작자들과 경쟁해야 함을 의미하고, 어떤 창작물을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혹은 알고리즘 설정이 전적으로 플랫폼에 있어서 여전히 창작자들은 평등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3. 대중음악 산업의 플랫폼

(1)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플랫폼

음악 산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플랫폼은 음원을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하는 플랫폼이다. 초기에는 음반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리핑하여 음원을 추출한 후 이를 플랫폼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1999년에 등장한 냅스터가 공유 플랫폼을 제공했고, 한국에서는 소리바다가 동일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과 규제의 강화로 공유 플랫폼은 사라졌다.

이후 현재 익숙한 방식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Krueger(2019)는 미국 음악 산업을 분석하면서 스트리밍이 현재 수입의 2/3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음악 스트리밍이 음악 시장에서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스트리밍 이용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 확대에 실물 음반 판매량 또한 증가했다[1].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음악 산업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서비스 플랫폼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Youtube Music(58.4%)이며 그 뒤로 Melon(56.6%), genie(23.9%) 순으로 나타났다[2].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자는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노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하나의 음반에 묶여 있었던 음악들을 각각 개별 상품으로 분리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음반 전체를 살 필요가 없어졌고, 구독권을 구매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된다(McAfee & Brynjolfsson, 2017). 이러한 소비방식은 수익분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음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리밍 지수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게 되고, 이에 창작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수익은 극도로 낮아진다[3]. 결국 음악 소비가 플랫폼으로 옮겨옴으로써 더 이상 음악이 창작자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이 되기 어려워졌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4년 자신의 음악을 스포티파이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며, 스트리밍 서비

1) 다만 우리나라에서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팬덤을 기반으로 한 아이돌 산업이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여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물 음반이 더이상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일종의 굿즈가 되었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티켓이 되었다. 음반의 구성품을 랜덤으로 만들어 필연적으로 여러 장을 사도록 하는 마케팅이 음반 판매량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Youtube Music이 스트림 당 0.07센트, Apple Music 0.74센트, Spotify 0.44센트 등으로 밝혀져 있다(Deresiewicz, 2020).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공개되어있지 않지만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통신 사업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들 이통사들이 유통 명목으로 높은 비중을 가져가 논란이 되었다. 현재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따른 수익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음악백서).

스가 앨범 판매량을 급감시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 하고 상당한 팬덤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보이콧이다. 대부분의 창작자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인디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인디씬의 창작자들은 사운드 클라우드나 인디씬을 대상으로한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음악 자체가 중요한 수익원이 되기 어려워지면서 창작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원을 옮겨왔다.

우리나라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실시간 차트를 제공해왔다. 이는 스트리밍 순위가 높은 곡을 1위부터 100위까지 매긴 것으로 플랫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실시간 차트가 노출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차트에 든 곡을 위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결국 이 차트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성공과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창작자들과 회사는 이 차트에 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창작자들은 최근 대중이 좋아하는 흐름에 맞춰 곡을 쓰게 되고, 순간적으로 귀를 잡아채기 위해 반복적인 멜로디를 집어넣는다. 회사는 스트리밍 지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동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계를 통해 이 지수를 불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차트 순위 집계 방식은 각 플랫폼마다 다르며, 플랫폼이 이 집계 방식을 변경하면 차트 순위 또한 쉽게 변경된다.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은 어떤 음악을 플랫폼에 노출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창작자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차트에 영향을 받으며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웹소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음악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플랫폼들은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실시간 차트를 없애고 이용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추천하는 음악을 플랫폼 상단에 띄웠지만 최근 이 차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 영상 플랫폼

영상 플랫폼은 최근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유투브나 틱톡이 이에 해당한다.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주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아마추어들도 자신들의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새롭기 기회를 잡은 이들도 등장했다. 공연 기획사를 통해 선별된 공연만이 공연장에 올라가고, 오디션을 통해 기획사가 선발한 가수만이 대중을 만났던 것과 달리 누구나 대중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플랫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역으로 오프라인 공연장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공연할 곳을 잃은 실연자들이 영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플랫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 이외의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및 홍보 등 부가적인 노동은 가려지게 된다. 문화산업 내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투브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독자 수와 시청시간이 있어야한다. 이 기준점을 넘어야 유투브 측에 수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선을 넘기 전까지 창작자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는 콘텐츠 생산 뿐만 아니라 편집, 홍보, 판매 등 전 과정을 담당해야 하며, 콘텐츠가 공개되기까지 들어가는 일종의 노동과정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틱톡의 경우 이 영상 자체로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있어 창작자는 자신의 영상을 무료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결국 창작자는 디지털 플랫폼에 자신의 생산물을 계속 공개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은 지속되고,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과 생산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다른 일을 계속해서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일정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편, 플랫폼은 창작자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는 동안에도 창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창작자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으며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거둔다. 즉, 플랫폼은 창작자의 무료 노동을 통해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이용자의 이용 기록을 또 다른 산업의 마케팅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플랫폼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용자 수와 플랫폼 안에 쌓이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영상 플랫폼은 플랫폼 산업에 가지는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팬덤 소통 기반형 플랫폼

팬덤 소통 기반형 플랫폼은 최근 대중 음악 산업 내 아이돌 산업에 도입된 것으로, 아이돌과의 친밀한 소통을 앞세워 빠르게 발전했다. 소통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멤버 개인과의 소통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아이돌 그룹의 성장과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팬덤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 아이돌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 산업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에 있다. 아이돌 팬은 대체로 한 팬덤에서 이탈해도 다른 그룹으로 이동해 또 다른 팬 활동을 이어간다. 따라서 다른 그룹에서 이탈하는 팬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산업 밖에 있는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오는 것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팬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이돌 산업에서의 소통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돌과의 소통에 초점을 둔 플랫폼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차별화된 소통, 아티스트의 프라이빗한 메시지 제공 등을 앞세운 이 플랫폼은 수익 모델로까지 연결되었다.

〈표 1〉 2021년 현재 아이돌 산업 내 소통 기반 플랫폼 현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참여 소속사 및 아이돌
위버스(weverse)	Weverse Company Inc. (하이브 자회사)	하이브, 플레디스, YG, FNC, DSP 등
버블(bubble)	Dear U Inc. (SM 엔터 IT 계열사)	SM, JYP, FNC, 젤리피쉬, WM, 등
포켓돌스(Pocket dols)	너하고	울림, RBW, 후너스등
유니버스(UNIVERSE)	엔씨 소프트	스타쉽, 큐브, 판타지오, 브랜뉴뮤직, WM, 울림 등

이러한 플랫폼은 아이돌 그룹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이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팬덤도 함께 움직인다. 이 중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는 솔로 가수 및 해외 가수와도 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장차 이 플랫폼을 회사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가져갈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가수들이 위버스에 들어옴에 따라 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하이브는 위버스와 연결된 위버스샵을 통해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과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위버스샵과의 연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 내의 소비를 자사 플랫폼 안으로 모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네이버가 소유한 영상 플랫폼을 사들였고 이는 하이브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넘어 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하이브만이 아니라 산업 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 독점을 추구함에 따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플랫폼에 투자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마련한 플랫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의존하게 되면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연구 방향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문제의식 정리한 단계로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고 현황 파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배경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진행이 현재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현황 파악으로 먼저 진행되다보니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이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 이론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향후 분석의 기초가 될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선행연구가 국내 연

구 위주로 검토되었고, 해외 연구의 경우 최근에 발표된 논문 보다는 책을 위주로 분석되어 있어 플랫폼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가 진행되기 전 다른 산업(배달, 노동시장 등)에서의 플랫폼 연구에 대해 분석했으나 이 발표에는 빠져 있다. 향후 연구 진행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2) 플랫폼별 연구 분리

각 플랫폼별로 공급자와 이용자가 다르며, 이에 따라 특성이 확연히 갈리는 만큼 이후 연구에서는 플랫폼별로 연구를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영상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플랫폼에 음악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하는 이들과, 기존에 음악 산업에 진입해 있었던 창작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 플랫폼의 도입이 창작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팬덤 기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공급자나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플랫폼을 통한 시장 점유를 가장 선명하게 명시한 하이브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이브는 최근 주식 시장에 상장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이를 위한 사업 방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미 위버스 샵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비 독점의 구조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사례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분석과 더불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수철, and 이현지. "문화산업에서의 플랫폼화: 웹툰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 no.3 (2019): 95-142.

안상원. "웹소설 유료화에 따른 플랫폼과 서사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문예창작 16, no.3 (2017): 9-33.

양경욱. "플랫폼 경제와 문화산업: 만화산업의 플랫폼화와 웹툰 작가의 자유/무료노동." 노동정책연구 (2020): 79-106.

이재열 역. 플랫폼 사회가 온다. 경기: 한울엠플러스,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음악산업백서

_____. 2020 음악산업백서

Krueger, Alan B. Rockonomics: A backstage tour of what the music industry can teach us about economics and life. Broadway Business, 2019.

McAfee, Andrew, and Erik Brynjolfsson. Machine, platform, crowd: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WW Norton & Company, 2017. (이한음 옮김, 2018. 『트리플 레볼루션의 시대가 온다.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청림출판)

Srnicek, Nick. Platform capitalism. John Wiley & Sons, 2017. (심성보 옮김. 2020. 『플랫폼 자본주의』 킹콩북.)

William Deresiewicz. The Death of the Artist: How Creators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the Age of Billionaires and Big Tech. New York: Henry Holt and Co., 20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개발주의 비판적 검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명지

2000년대 초반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호명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달라진,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개발주의인 "신개발주의"가 태동했다. 신개발주의는 "겉으로는 보전과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는 현상이다. 신개발주의는 경제를 여전히 팽창시키고 있는 한국, 제주 사회의 발전 관성이 새로운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장논리에 따라 환경을 이용, 활용하는데 있다(조명래a, 2003). JDC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정책화 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사실상 실패"(이승욱, 2017)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교육과 의료부문이 외국자본에게 개방되었으며 이것이 이윤창출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심화"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영리병원 및 영리교육 시스템 등 예외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개발자치도'라는 비판 속에 지역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또한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환경 문제(경관 훼손, 마을공동목장 파괴 등)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성찬, 2016). 이승욱(2017)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표방하는 자유는, 자본의 자유"라고 비판하면서 "반면 '세계환경수도' 등과 같은 담론들은 자본축적과 이윤 논리에 복속되면서, 그 진정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JDC라는 개발주체와 JDC의 사업 내용이 학문세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현실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 내재된 맥락이 보다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주체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보다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000년대 초반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호명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달라진,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개발주의[1]인 "신개발주의"가 태동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2002

1) '개발주의'는 이러한 "근대적 개발을 사회의 핵심적 목표로 삼는 태도"를 뜻한다. 따라서 개발주의의 역사는 공업화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개발주의의 지구화를 촉진한 것은 미국에서 고안되어 세계로 퍼져나간 '근대화론'이었다. 월트 로스토우 등의 학자가 정립한 근대화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업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서를 따른다면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부유해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홍성태, 2006).

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6년 새롭게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음과 같다.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또는 '개방화'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발전동력 확보라는 당위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2)3)]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실천되었다.

그러나 JDC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정책화 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사실상 실패"(이승욱, 2017)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교육과 의료부문이 외국자본에게 개방되었으며 이것이 이윤창출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심화"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영리병원 및 영리교육 시스템 등 예외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개발자치도'라는 비판 속에 지역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또한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환경 문제(경관 훼손, 마을공동목장 파괴 등)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성찬, 2016). 이승욱(2017)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표방하는 자유는, 자본의 자유"라고 비판하면서 "반면 '세계환경수도', '세계평화의섬' 등과 같은 담론들은 자본 축적과 이윤 논리에 복속되면서, 그 진정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제기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리고 JDC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주라는 시공간에서 개발주의가 '언제, 어떻게, 왜' 태동했고 변형되어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법과 제도(또는 계획)로 접근할 수 있다. 1963년 박정희 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표된 '제주도 자유항 설정구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차원에서 나온 최초의 개발계획이었다[4)]. 그

---

2)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66조(설립)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이다.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3) JDC는 한국사회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간에서 유일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개발공기업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기업(또는 공사)은 "정부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중에서 다양한 공사 가운데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공기업을 '개발공기업'라고 부른다. 공기업는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뉘며, 국가 공기업은 다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기관으로 나뉜다(오관영, 2003). 다시 말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다르게 JDC가 특이한 점은 제주지역을 한정하여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공기업이라는 점이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상철(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의 연

리고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지역개발을 망라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3)이었다. 이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1년에 발표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3, 제주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모태가 되었다. 개발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적 흐름도 형성되었다. 이제 개발주의의 주체는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힘과 힘이 부딪치고 전략적 선택들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개발주의를 둘러싼 담론투쟁의 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담론장 한 가운데에서 JDC를 위치시켜 분석한다.

그렇다면 제주의 개발주의를 추동하고 이끌어온 주체는 누구인가. 1963년 발표된 ‘제주도 자유항 설정구상’ 이후 30여년 간 개발의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였다. 그러다 1990년 발표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실행되면서 제주도(지방정부)로 주요 주체로 떠올랐다[5]. 이는 1990년대 초반 이뤄진 지방자치의 물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주체는 항상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과 성장이라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신자유주의는 지방자치정부를 넘어 도민사회에서의 다양한 욕구분출을 가능하게 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주민사회로부터의 개발주의적 욕망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물론 도민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복잡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제주지역 개발의 주요한 주체는 국가(중앙정부)[6]→제주도(지방정부)→공기업으로 옮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친환경적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언술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보전과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는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가 나타났다. 신개발주의는 경제를 여전히 팽창시키고 있는 한국, 제주 사회의 발전 관성이 새로운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장논리에 따라 환경을 이용, 활용하는데 있다(조명래a, 2003).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개발주의가 국가 의지에 의한 개발, 즉 ‘국가 주도 개발’이라면, 신개발주의는 “국가를 매개로 하면서 시장과 자본에 의해 추동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발이다.(조명래, 2005). 이러한 점에서 제주지역의 현재 개발주의의 거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다. JDC[8]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지원하는 통로역할을 하며 제주도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도시성장연합’[9]의 주요한 주체임을

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철은 “제주개발은 지역발전보다는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주지역 개발주의에 국가(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은진(2002)의 설명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 더 정교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한국의 개발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역할이 막대했다. “무엇보다 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개발국가”이다. 또한 불필요한 부동산 개발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형적 개발국가 형태인 “토건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7) 물론 제주제2공항 건설, 강정 해군기지(서귀포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 등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국가안보시설의 경우 여전히 국가(중앙정부)가 핵심 사업 추진 주체로 드러난다.

8) JDC 홈페이지-기관소개(www.jdcenter.com/about/aboutdetail.cs), 검색일 : 2021.05.05.

9) ‘도시성장연합’은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자본가 연합을 주로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박재욱, 1997)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JDC와 함께 개발주의를 이끌어가는 지역 내부의 협력적 주체를 찾는 일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서 실시되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윤정·이강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JDC의 성과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불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윤정·이강영은 응답자들은 JDC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자연환경 훼손우려와 외국자본 잠식 우려가 높은 응답율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폐기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는가? 여전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적 예외공간으로서 제주를 지탱하고 있는 '내력(耐力)'은 무엇인가? 이는 앞으로의 연구가 분석해야 할 질문들이다.

학문의 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예외공간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기 또는 분리 주장과 결합되지 않으면서 학문적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도 원인은 아닐까[10].

이를 위해서 JDC라는 개발주체와 JDC의 사업 내용이 학문세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현실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 내재된 맥락이 보다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주체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보다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발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회학적 상상력은 자본, 권력, 전문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금-여기, "도시계획, 주택, 에너지, 교통,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의 영역을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관찰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학적 개입"(서영표, 2017)이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신개발주의의 주체인 JDC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개발주의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JDC의 주요 사업을 핵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제주지역 개발주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개발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 진행 양상 등을 살피며,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신개발주의로 이행하도록 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한국, 제주지역 개발주의의 태동과 변형 과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JDC 그 자체에 관한 비판적 사회학 연구는 많지 않다. 개발사

10) 물론 이승욱(2017)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현실에서 목격되는 문제점을 풀어낸 바는 없지 않다. 또한 조성찬(2016)은 국제자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지 개발방식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송석언(2002)는 국제자유도시개발기구로서 JDC를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외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업을 주도해 온 국가(중앙정부)의 일정 부분 대체자로서 JDC의 지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JDC의 설립 근거가 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연구가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JDC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연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임동근(2006), 이승욱(2017), 신용인(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임동근의 주장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의 시작과 개발공기업 JDC의 탄생과정에서 보여주는 국가의 책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임동근(2006)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추진과정과 특별법 조문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개발주의를 연결시켜 설명한다. 임동근의 연구는 정치학적이고 행정학적 접근에 가깝다. 특히 임동근은 "제주도는 언제나 '실험용 쥐'와 같은 실험대상이었다"는 한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가져와 "참여정부는 제주도를 '지방분권'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의료·교육 개방 및 토목공사식 국토개발의 최전선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 권한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삭제하고 통치권력을 일원화시키는 작업, 거기에 일원화된 통치 권력마다 개발공기업이 진출하여 개발사업을 일으키고 시장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임동근(2006)은 시론적 연구에 가까워서 이론적 틀을 갖고 설명하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승욱(2017)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승욱은 "경제특구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구역화 논리로만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지역의 지리, 역사, 그리고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지역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탄생하였고 진화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및 발전동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자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 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됐다"고 분석했다.

이승욱은 신용인(2013)이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자생적인 비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로 제주에 강제된 비전"이라고 단언한 것에 대해 "반드시 중앙정부의 압력에 강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에 "기존의 제주 관련 개발정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은 오히려 제주 차원의 장소적 이해에 기댄 개발주의적 욕망이 표출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준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승욱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한국의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 침체의 극복방안으로, 당시 제주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화 추진"을 옹호했다는 데에서 제주의 "개발주의적 욕망"을 드러내고자 했다.

JDC의 개발공기업적 성격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선행연구 주제로는 한국의 개발공기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있다. 오관영(2005), 홍성태(2011)은 국가가 개발공기업(공사)을 만

들어 개발사업의 실무 차원의 추진을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오관영(2005)는 개발사업의 전위대(前衛隊)로서의 개발공사(開發公社)의 성격을 해부하고 있다. 오관영(2005) 등은 한국의 개발공사의 설립 배경과 역할,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언급하는 개발공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을 단위로 하는 개발공기업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JDC 같은 지역 기반의 개발공기업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발공기업이 국가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분석하고 있어 "도시성장연합"(박재욱, 1997)의 한 축으로서의 개발공기업으로서 JDC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JDC 뿐만 아니라 JDC가 지역 내 다양한 개발주의를 옹호하는 협력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한 설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공간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Aihwa Ong(2007)이 제시한 '예외공간(spaces of exception)'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ng(2007)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정치-경제적 변화속에서 '예외공간'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특구(예외공간)를 국가 영토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질서와는 차별화되는 예외적인 조절의 규칙, 질서 등이 부과된 물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이라 규정하며, 이를 예외공간(spaces of exception)이라 개념화했다. 또한 Ong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은 모든 국민과 장소에 균질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한 자본의 순환과 시장의 작동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전략이 유연하게 펼쳐지면서 국민 집단과 장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행된다.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예외공간의 등장은 발전주의에서 포스트발전주의로 국가의 공간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특구 건설이 동아시아에서 확산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포스트발전주의적"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Ong은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을 채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시장적 규율을 강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제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ng의 '예외(exception)'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외'라는 개념은 1930년대 독일의 파시스트 이론가인 칼 슈미트와 이태리 좌파 이론가인 조지오 아감벤의 논의가 기묘하게 결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Karl(2007)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작동하는 차별화된 공간을 '예외'라고 보는 Ong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외공간의 생산을 통해 차이와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arl에 따르면, 어떤 것이 예외라고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그와는 대비되는 특정한 유형의 '정상성(norma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균등을 보편적 정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불균등과 영속적인 위기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규칙이라는 지적이다.

즉, 불균등과 차별을 일상화하고, 자본의 축적논리에 순응하도록 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나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끊임없이 차별과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 Ong의 논의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속성을 무

시한 채 신자유주의라는 특정 국면에만 문제를 전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박배균 외, 2017).

또 Ong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동아시아 예외공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박배균 등(2017)이 제시한 "특구"가 있다. Ong의 설명과는 달리, 박배균은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서유럽과 북미의 케인즈주의적인 공간정책은 국토공간 전체에서 균등화를 명시적으로 지향하였음을 고려했을 때, 특구라는 공간전략과 그를 통해 구현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표출하는 강한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은 '예외'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균등과 형평을 보다 보편화하려는 지향을 가진 정치-경제적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국가나 자본에 의한 '예외공간'의 창출이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배균(2017)은 "자본주의는 항상 예외를 만든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며, 국가 영토성에 대한 전략관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외공간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Ong의 논의대로 발전주의와 포스트발전주의가 명확히 구분가능하고 상반되는 것이라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도 명확한 차이와 경계가 존재하며,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자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박배균은 "동아시아의 발전주의는 신자유주의 친화력이 높은 기업친화적인 생산주의, 근면과 자조를 강조하는 개인적 성과주의를 훨씬 더 강조했다"고 보았다. 게다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의 정치화를 억압당한 동아시아의 시민과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긴장하고 충돌하기 보다는, 쉽사리 동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 스케일의 슬로건과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서 노동과 자본의 집약적 동원을 추진하였지만 국토공간을 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등과 같은 다양한 '예외공간'으로 구획화하여 선택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공간 전략이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Ong(2007)과 박배균 외(2017) 등은 '예외공간'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개발에 대한 공간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주요 개발주체로 호명하면서 구체적인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상술하고자 한다.

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연원(淵源)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전개된 개발주의, 신개발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의 연구는 개발주의, 신개발주의에 대한 개념정의,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 등을 검토하는데 유효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먼저 한국의 개발주의와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홍성태(2005)는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인류적으로 '개발[11]' 행위의 시초와 그 개념의 발전 과정,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명래 외(2005)는 개발주의에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결합된 '신개발주의'의 태동과정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주요 논거로 활용한다.

조명래 외(2005)와 최병두(2007)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이후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질서로부터, 신개발주의의 가속화를 문제제기한다. 특히 최병두(2007)의 연구는 198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의 '자발적 도입',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부터 출발한 '강제된 신자유주의화'라는 두 개의 국면을 전후로 하여 개발주의 담론의 변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제주지역 개발주의가 한국사회의 개발주의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개발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정책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홍성태(2005) 등의 연구는 한국의 개발주의를 총론적으로 서술하면서, 새만금 사업 등 지역의 개발 사업을 다루고 있으나 연구자의 위치는 서울(중앙)에 있다. 국가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지역 내부의 정치적 동학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시작된 지역 내부의 개발주의 동학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내부의 사회적 행위들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발주의가 국가 내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화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김종태(2014)는 한국 발전주의[12]의 담론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종태는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등 당대에 제시된 대표적인 발전주의적 구호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을 주요 연구자료로 삼았다. 발전주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발주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정치 엘리트, 즉 대통령의 국가운영 기조가 발전주의 담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주요 도구인 개발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김종태의 연구는 대통령의 언술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이다. 한국 발전주의 담론 속에서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개발주의의 위치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제주도 지역개발의 변화와 양상에 관한 사회학적인 총괄적 연구는 많지 않다. 직접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는 이상철(1987), 오정준(2003) 등의 연구이다. 이상철(1987)은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한국의 산업화와 지역개발 정책으로부터 출발해 이에 기인하는 제주 산업구조의 변동을 설명한다. 이상철의 연구는 탐라국으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

11) 홍성태(2005)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개발행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54). 1만년 전 이전 시대에는 수렵채집의 단계로 자연에 대한 "수동적 적응"이 특징적이다. 1만년 이후 농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농업문명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자연에 대한 적극적 적응, 자연의 수동적 가공"을 하기 시작했다. 250년 이후의 시대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문명의 단계로 접어들고 "자연의 적극적 가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12) 김종태(2014)가 제기한 '발전주의' 담론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발주의 담론보다는 큰 범주이다. 김종태가 설명하는 발전주의는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김종태는 본 연구의 초점인 토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공업기술의 발전 등 세계의 타 국가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비교우위에 서기 위한 시도, 즉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개발사업도 이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가(중앙정부)의 제주지역 개발정책을 검토하는데 유효하다. 특히 제주가 외화 유치 등을 위한 국가단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왔는가 분석하고 있음은 본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이상철(1987)의 연구는 30여 년 전에 수행된 연구여서 분석에 있어 갱신/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가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기제에 완전히 통합, 종속되었다. 그 결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특수성이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는 분석 내용에 있어서 현재적 시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면서 지역민주주의가 태동했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개인, 집단의 생겨났고 이들의 의견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상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지역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완벽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철의 연구보다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오정준(2003)의 연구는 이상철이 설명한 이후(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주지역의 개발계획의 주체가 국가(중앙정부)에서 제주도(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과정을 개발계획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정준의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 더 정교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은진, 2002)는 점에서 '이관'이라는 다소 단선적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JDC는 "국가와 제주도의 가교 역할"을 자임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또한 오정준의 연구는 결론에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연 제주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함'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국가주도형 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예래동 사례 하나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어 과연 제주지역 전반적인 변동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보일 수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변화된 공간으로서의 제주에 주목하고 국가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서 제주를 주목한 연구로는 정영신(2015)이 있다. 한반도 지역과 분리되었던 탐라국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제주4·3, 냉전체제기를 경유하고 있다. "중앙 권력으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제주가 끊임없이 주변화되어 왔다"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의 욕망이 씌워진 제주라는 공간을 분석한다.

또한 제주, 한국사회라는 스케일을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개발주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시도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손지연·김동현(2020)은 제주와 오키나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에 의해 해방을 맞은 조선, 반대로 패전을 맞이한 일본이라는 시간 속에 두 공간의 양상이 유사했음을 주장한다. 두 국가체제에 종속된 제주와 오키나와를 함께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동아시아의 동시적 시공간'을 관통하면서 국가 내에 주변화된 존재로서 제주와 오키나와의 역사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국가주의적 성장전략에 의해 타율적 존재로 제주와 오키나와를 바라보고 있다. 손지연·김동현의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특수한 제주라는 공간의 인식을 넘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섬이 본토로부터 갖는 동아시아 예외공간으로서의 섬지역의 식민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정영신(2015)과 손지연·김동현(2020)의 연구 또한 앞서 이상철(1987), 오정준(2003)에 제기

했던 주장만으로는 '중앙 결정론'적 설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주지역 내부의 정치적 동학을 살펴본 보다 많은 연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 동향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주지역 신개발주의 주체로서 JDC를 분석하기 위해 JDC의 행위(개발사업)를 따져묻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제주는 '예외공간(또는 특구)'로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또 한국사회 개발주의(신개발주의)담론과 지역 내 정치적 동학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JDC의 개발사업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둔다. JDC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3)에 설정한 7대 선도 프로젝트(휴양형 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를 수행하고 있다.

JDC가 추진한 7개 사업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JDC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JDC의 신개발주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명칭	위치	목적 및 주요 시설
1.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시 예래동	•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 주거단지 - 콘도, 전원주택, 골프장,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
2.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시 중문동	•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지로 조성 - 상업시설, 해양공원
3.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시 송산동	• 서귀포항을 미항으로 개발 -호텔, 낚시 빌리지, 유람선접안시설, 면세쇼핑점
4.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시 아라동	• 생명공학연구 등 교육·연구·창업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 생명공학시설, 농업연구시설,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창업보육센터, 주거시설 등
5.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제주시 용담2동	• 항공물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 제조·가공시설, 면세쇼핑시설, 오피스빌딩 등
6. 쇼핑아울렛 개발	미정	•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쇼핑아울렛 설치
7.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미정	• 제주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 조성

표 1 제주국제자유도시 1차 종합계획-7대 선도프로젝트(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1)

그렇다면 왜 이 사업들을 검토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2015년 몇몇 토지주들이 제기한 부당매입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사업이 전면 폐기되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JDC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제주도민들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에서 정부의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생태신화역사공원은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후속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주의 생, 문화적 가치를 살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신화월드라는 대규모 위락시설(리조트 및 카지노 운영)이 운영되면서 하수처리 시설문제, 위락시설의 운영주체가 외지자본이라는 점에서 관광수입의 역외유출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JDC의 추진 사업과 그 성격을 분석한 연구논문, 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JDC를 탄생시킨 동아시아, 한국사회의 공간성과 한국/제주지역 사회 개발주의의 특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개발주의(신개발주의)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신개발주의의 주요 주체로서 JDC의 역할과 성격을 확인하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중에도 JDC가 수행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 중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JDC의 성격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지역 신개발주의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JDC와 신개발주의 태생의 연원으로 중앙 결정론적 논지를 거부하고 지역 내 주체들의 다양한 태도와 영향력(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담론,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조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강상중, 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도서출판 책과함께
강원택 외, 2014.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 사회평론아카데미
데이비드 하비(최병두 옮김), 2007.『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
데이비드 하비(최병두 옮김), 2017.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창비
미셸 푸코 외,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미셸 푸코 외, 1994.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미셸 푸코, 2011.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도프랑스 강의 1977~78년』. 도서출판 난장
미즈오카 후지오 편저, 2013, 『세계화와 로컬리티의 경제와 사회』. 논형
박배균 이승욱 조성찬, 2017. 『특구 :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알트

박재묵, 1995. 『제3세계사회발전론』. 창작과비평사
부만근, 2012.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사카이 다카시(오하나 옮김), 2011. 『통치성과 '자유'-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그린비출판사
신행철, 1995. 『제주 사회론』. 한울아카데미
심세광, 2015. 『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푸코로 읽는 권력, 신자유주의, 통치성, 메르스』. 길밖의길
에드워드 사이드(김성곤, 정정호 옮김), 1995.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이진경, 199., 『맑스주의와 근대성』. 그린비출판사
장석준, 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조명래 외, 2005.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환경과생명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도서출판 한울
최현 외, 2016. 『공공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진인진
최현 외, 2016.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진인진
홍성태, 2000. 『개발과 파괴의 사회학』. 도서출판 중원문화
홍성태,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아카데미
홍성태, 2007.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도서출판 당대
홍성태, 2011.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도서출판 한울
Aihwa ong,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Duke University Press
M. 고트디너, 레슬리 버드, 2013. 『도시연구의 주요개념』.라움

■ 연구논문

김건우, 2009. “1964년의 담론 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0(22) 71-90
김경필, 2007.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12), 1201-1221
김동노, 2017. “만주에서 한강으로 : 식민주의 개발체제의 전이” 한국사회학 51(2) 267-272
김동완, 2009. “1960년대 광주 지방의 지역개발담론과 아래로부터 지역주의” 정신문화연구 32(4) 247-279
김동현, 2019.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65호 45-72
김석준, 2017. “제주도 ‘척박성 담론’의 재검토” 탐라문화 제54호 45-65
김신덕 정수연, 20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의 토지가격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0(4) 51-68
김종태, 2014.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경제와사회 2014년 가을호 166-195
김철규, 2007. “87년 체제의 해체와 개발주의의 부활” 한국사회 제8집 2호(2007) 33-54
문상빈, 2014. “제주의 개발주의와 환경정치, 그리고 괸당” 진보평론(60) 95-120
박노영, 2004. “개발주의와 환경 갈등” 경제와사회 63 6-9

박재욱, 1997. “대기업도시의 성장연합과 권력엘리트 – 울산과 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KWP) vol. 13 no. 1 61-88
박재욱, 1998. “도시성장정치의 위기와 반성장연합의 등장 – 대기업도시 울산 , 포항의 사례 –” 정치비평, vol. 4 no. 0 pp. 123-148
서영표, 2013. “한국적 공간-사회 이론 세우기” 환경사회학연구 ECO 17(1) 235-241
서영표, 2017. “제주에서 사회학하기 -사회학의 존재이유 되찾기” 탐라문화 제54권 67-104
서영표, 2016. “상품화된 일상과 붕괴된 연대, 하지만 희망을 상상해야 한다” 내일을 여는 역사 65 83-100
손지연 김동현, 2020, “개발과 근대화 프로젝트 : 제주와 오키나와가 만나는 방식” 한림일본학 제36집 117-150
염미경, 2007,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 중문관광단지 인근마을공동체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41집, 1-31
오윤정 이강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및 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 제20호
오정준, 2003, 제주도 지역개발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지역학연구, 제37권, 139-154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서설-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이상철,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호
이상철, 2000,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 제주도연구, 제18호
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269-287
이재섭, 2019, 병문천 복개 과정을 통해 본 탑동 매립 반대 운동 이후 30년, 탐라문화, 제61호, 123-163
이해진, 2007, 지역개발정치의 위기-갈등구조와 주민운동의 대응전략, 농촌사회, 17(2), 1-2.
임동근, 2006, [정책비판]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분권과 개발주의의 만남, 문화과학, 제45호, 280-291
장훈교, 2019, 제주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 :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제60호, 265-303
장훈교, 2020,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정영신, 2015, 제주 역사의 근대 정치동학 : 4·3에서 강정까지, 문화과학, 제81호,132-155
정진아, 2012,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 321-364
조명래, 2000, New Territor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1)
조명래, 2015, 개발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201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2015권0호
조성윤 문형만, 2005,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 제주도 송악산 군사 기지 설치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2005년 겨울호, 9-30

조희연, 2010, 외재하는 적에서 내재하는 적과의 각축으로. 경제와사회, 39-68
최병두, 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82-103
함한희, 2009,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문화적 조건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3-297
황진태 고민경, 2008, 지역 주도의 개발주의 관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36, 213-244
Karl R. E, Reviewed work: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by Aihwa Ong, The China Quarterly 189, 188-190

■ 학위논문
김현영, 2019, 제주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구좌읍 월정리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한종범, 201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양상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봉득, 제주국제자유도시 평가지표 재구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고서
제주도,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07,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간행물
예래동 환경연구회보, 예래환경연구회 편
예래동 환경연구회 활동자료 및 신문자료 모음, 1997, 예래동 환경연구회 편
[칼럼] 이영웅, 2020, 개발주의로 회귀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의소리
[기사] 김호천, <지역 이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판결 일파만파, 연합뉴스, 2015년 4월 20일

■ 기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www.jdcenter.com)